

제1장

한국의 인구주택총조사 발전

김민경

(통계청)

I. 머리말

국가의 각종 사회·경제 정책 및 계획 수립과 평가를 위해서는 인구의 규모와 구조 및 제 사회·경제적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작업이 중요하다. 이와 같은 인구관련 통계는 정태통계와 동태통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인구정태통계는 부단히 변모하는 인구를 일정 시점에서 파악하는 반면, 인구동태통계는 일정기간의 변동을 파악한다. 인구정태통계를 작성하기 위한 자료원으로 인구주택총조사(센서스), 주민등록부, 그리고 인구추계가 있으며, 인구동태통계의 자료원으로 인구동태신고제도와 주민등록부가 있다. 이러한 인구통계의 종류나 자료원과 관계없이 인구주택총조사는 모든 인구통계의 근간이 되는 것으로 그 자체로서나 다른 자료원과의 관계에서도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II. 인구주택총조사의 특징과 다른 인구자료원과의 관계

세계 대부분 국가에서 실시되고 있는 인구주택총조사(이하 ‘인구센서스’로 표기)는 개별성, 완전성, 동시성, 주기성의 기본원칙 하에서 실시된다(UN, 1998). 인구센서스를 이러한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여 실시할 때에 그 결과는 정확하며 동시에 유용한 자료로 이용될 수 있는 것이다.

인구센서스는 일종의 벤치마크(benchmark)의 역할을 수행한다. 인구센서스결과는 실시연도의 인구 상황을 나타내어 이후 시점의 인구에 관한

통계 작성을 위한 기준이 된다. 인구센서스의 결과는 각종 표본조사에 있어서 기준이 될 뿐더러 다른 인구 자료 즉, 인구동태통계와 인구이동통계 그리고 인구추계의 기준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인구센서스와 다른 인구자료와의 관계를 좀더 살펴본다.

우선 인구동태통계는 일정기간 동안 인구변동요인인 출생, 사망, 혼인, 이혼 등 인구학적인 사상(事象,event)을 측정한 결과이다.¹⁾ 인구센서스는 인구동태통계와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 이상적으로 두 시점에 실시된 인구센서스의 결과와 그 사이 인구동태의 변동은 일치하여야 하나 현실적으로 이들 자료간에 불일치가 발생한다. 그 원인으로는 두 자료 중 한 자료 또는 두 자료 모두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인데, 인구센서스 자료의 정확도를 측정하기 위해 인구센서스와 인구동태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인구학적 분석을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 하나의 인구자료 원으로 시·도가 작성하는 주민등록인구통계가 있다.²⁾ 이 자료는 주민등록부를 집계하여 매년 인구통계를 행정구역별로 작성한 것으로 주민등록법(1962년 제정)에 근거하고 있다.

인구센서스 자료가 5년 단위로 작성되는데 반해, 주민등록인구통계는 매년 행정구역의 최하단위인 읍·면·동별로 작성된다. 이러한 이점으로 인해 연도별로 행정구역별 인구자료가 필요한 영역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 특히, 현실적으로 각종 행정(예를 들어, 병무, 취학, 선거 등)에 이용되고 있다. 또한, 주민등록부는 월·분기·연간 지역간의 인구 이동통계를

1) 인구동태통계는 1910년 조선총독부가 호적신고서를 집계하여 작성한 것이 그 시초이나 본격 작성은 1937년 '조선인구동태조사규칙'이 제정된 이후임. 정부수립 후 1949년 호적신고서와 인구동태조사신고서를 각각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1970년 인구동태신고서를 호적신고서와 일원화시키는 조치로 인구동태통계의 작성기반이 마련됨. 그 동안 신고제도의 개선 및 각종 사회제도의 발전으로 인구동태 신고율이 크게 향상되고 그 결과인구동태통계 자료의 질 수준도 크게 높아짐.

2) 주민등록인구통계가 작성되기 전에는 '상주인구조사'를 실시(시초는 1910년 '현주호구조사'이나 1956년 '연말상주인구조사'로, 1965년 '상주인구조사'로 명칭과 조사기준시점이 바뀜)하여 매년 인구통계를 작성하였음. 상주인구조사는 가구연기식 조사표를 사용하여 지방공무원이 각 가구를 방문·조사함에 따라 조사대상의 중복 및 누락 등으로 조사결과 신뢰성이 크게 낮아져 1992년에 폐지되고 매년인구통계는 주민등록인구통계로 대체됨.

생산하는 중요한 자료원이 되고 있다. 그러나 주민등록부는 위장전입, 지연 신고 또는 신고누락 등으로 지역별로 실제 거주인구와 주민등록부상의 인구간에 괴리가 있다는 단점이 지적되고 있다. <표 1>은 센서스인구와 주민등록인구간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인구센서스 자료는 주민등록인구와 비교하여 인구의 이동흐름과 소지역 인구를 파악하는데 상호 보완적으로 이용된다.

<표 1> 센서스인구 · 추계인구 · 주민등록인구비교 (단위: 천명, %)

	총조사인구 (각연도11.1.현재)	추계인구(A) ¹ (각연도11.1.현재)	주민등록인구(B) (각연도12.31.현재)	B/A(%)
1995	44,609	45,255	45,982	1.48
2000	46,136	47,130	47,977	1.67

주 1) 총조사인구에 누락률을 감안하여 추정된 인구

끝으로 중요한 인구자료의 원으로 인구추계를 들 수 있다. 인구추계는 인구센서스와 연계하여 1955년 센서스 이후 5년 주기로 실시되어 왔는데 인구센서스결과와 다른 인구자료 즉, 인구동태통계 및 주민등록인구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실시된다. 인구추계에서는 기준인구가 되는 센서스연도의 인구를 포함한 과거 5개년의 인구를 소급 확정하는 작업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가장 최근에는 2000년 인구센서스 결과를 이용하여 2000~2050년까지의 전국 및 시·도별 인구를 추계 하였다.

Ⅲ. 인구주택총조사의 발전

1. 개요

최초의 인구센서스는 일제하인 1925년에 「국세조사」라는 명칭으로 10월 1일 현재 조선 내에 현주하는 자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그 후 5년 주기로 1940년 센서스까지 실시되었고 일제시대의 마지막 센서스인 1944년 센서스가 5월 1일 기준으로 조기 실시되었다. 이들 조사의 주요 목적은

식민지인 조선에서 노동력 착취, 경제수탈을 위한 것으로 조사결과는 엄격히 비밀로 처리되어 일반 국민은 전혀 이용할 수 없었다.

1948년 정부수립 직후 각종정책수립을 위해 인구통계가 시급히 필요하다는 요구에 따라 1950년 실시예정인 인구센서스를 1년 앞당겨 1949년 5월 1일을 기하여 정부 수립 후의 제1회 총인구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는 이듬해 6·25동란으로 각 특성별로 집계되지 못하고 단지 총인구의 파악에 그쳤으며 속보자료를 제외한 일체의 조사자료가 소실 또는 분실되었다. 정부수립 후의 두 번째 센서스는 1955년 9월1일을 기준으로 간이총인구조사의 명칭으로, 내무부³⁾산하 지방행정기관을 동원하여 실시되었다. 당시 6·25사변직후의 사회적 혼란과 극심한 인구 유동으로 인하여 조사의 실시계획 및 운영관리 면에서 결함이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사를 통하여 전국인구를 처음으로 어느 정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고, 이 결과를 이용하여 처음으로 장래인구를 추계하기도 하였다.

1960년 센서스는 유엔의 ‘세계센서스계획’의 일환으로 실시되었으며, 우리나라의 진정한 근대적인 인구센서스를 시작하는 분수령이 되었다. 종전 센서스에서 현주(現住)인구를 조사하였던 것과 달리 당시 대부분의 국가에서 적용하던 상주(常住)인구를 조사하였고, 처음으로 주택부문을 추가하였으며, 센서스의 정확도를 평가하는 사후조사(PES)를 실시하였으며, 집계단계에 20%표본집계방법을 도입하는 등 조사기획에서 자료처리 및 평가에 이르기까지 근대적 센서스의 면모를 갖춰 오늘날 센서스의 발전을 가져오는 밑바탕이 되었다. 그러나 연령을 세는 나이로 조사하여 아쉬움을 남겼다.

1966년 센서스는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투자재원확보에 따른 예산부족으로 당초 1965년에 실시하려던 계획을 1년 연기하여 1966년 10월1일 기준으로 인구만의 조사를 실시하면서 자료수집에 확률표본기법을 도입하였다. 결과집계를 위해 컴퓨터(IBM 1401)를 처음으로 도입함으로써

3) 정부 수립 시 공보처소속이던 통계국은 1955년 2월17일자로 내무부로 이관됨. 내무부통계국에는 기획과, 국세조사과, 인구조사과가 설치됨.

우리나라 컴퓨터 발전사에 커다란 획을 긋는 계기가 되었다.

1970년 센서스에서 다시 주택부문을 포함하였으며, 1980년 센서스에서 센서스 기준일자를 11월 1일로 변경하였는데 이들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1985년에는 전(全) 항목을 모든 가구에 대해 전수조사로 실시하였으며 성씨와 본관을 처음으로 조사하였다. 1990년에는 다시 자료수집에 표본기법(10% 조사구)을 도입하여 이후 센서스에 계속되고 있고, 조사표 입력방식에 광학판독(optical mark reading, OMR)기법을 도입하여 입력기간을 단축하고 입력오차를 극소화하였다. 1995년 센서스에서는 증가하는 빈집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처음으로 빈집조사표를 사용하였다.

2000년 센서스에서는 조사표입력과 조사표 내용검토를 지방 분산화하여 12개 지역에서 개인용컴퓨터(PC)로 입력하고 에디팅함으로써 자료처리 시간을 크게 단축하였으며, 조사구의 설정에 수치지도(digital map)를 사용하여 조사결과 이용에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기법을 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2. 제도적 측면

가. 조직

인구센서스는 모든 인구와 가구를 일시에 조사하기 때문에 조직과 인력이 방대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인구센서스를 수행하는 조직은 본부와 하부기관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하부기관은 지방행정기관으로서 시·도, 시·군·구 및 읍·면·동에서 조사원 모집, 조사 지도 및 감독, 조사자료의 송부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⁴⁾ 그리고 최하위 조직으로서 조사원은 일반국민 중에서 선발하며, 이들은 훈련 후 조사기간동안 각 가구를 방문하여 실지조사업무를 수행한다.

인구센서스의 성패는 현장 조사에 달려 있으며, 그 만큼 지방행정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통계조직과 인력

4) 일반조사지역은 지방행정기관을 통하여 조사하나, 군부대, 교도소, 해외공관 등 특별조사지역은 국방부, 법무부, 외교통상부, 검찰청 등을 통하여 조사함.

이 계속 축소되어 인구센서스의 효율적인 실시가 어려워지고 있다. 과거에는 시·도의 통계업무 전담 부서인 통계담당관실 인구통계계에서 인구센서스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1994년부터 통계담당관실이 폐지되고 타 업무와 통합된 부서의 통계계에서 인구센서스를 포함한 모든 통계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더구나 2000년부터 읍·면·동의 통계기능이 시·군·구로 이관되었고 시·군·구의 통계조직은 타 업무와 겸임하고 있는 실정이다.⁵⁾

나. 법령 체계

인구센서스는 국민의 개인적인 사항을 조사하므로, 조사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동시에 강제적인 응답의무를 부여하기 위해 일정한 사항을 법령으로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일제 하에 실시된 1925년에서 1940년까지 4차례 센서스는 「국세조사에 관한 법률」(1902년 12월 공포, 일본법률 제49호)과 매회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조선총독부령에 의해 실시되었다.⁶⁾ 그리고 1944년 센서스는 전시 동원을 위한 「자원조사법」(1929년 12월 공포, 일본법률 제327호)에 의거하여 실시되었다.

해방 후 1949년에는 인구센서스의 법률적 기반으로 「인구조사법」이 특별법으로 제정되었다.⁷⁾ 아울러 매 센서스마다 조사일자, 범위,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시행령이 제정되었다.⁸⁾ 인구조사법이 1962년 통계법 제정으로 폐지되자 1966년 센서스를 위해 「인구센서스시행규칙」이 제정되었고 동 규칙은 1990년 센서스까지 적용되었으나, 이 또

5) 읍·면·동별로 통계담당(전담 또는 겸임)이 1명 있었으나 통계업무가 시·군·구로 이관됨에 따라 읍·면·동에 통계담당자가 없어짐.

6) 「1925년 간이국세조사에 관한 건」, 「1930년 조선국세조사시행규칙」, 「1935년 국세조사시행규칙」 등임.

7) 인구센서스 및 인구동태 등 인구조사를 위한 특별법(1949. 1. 27 공포)으로, 인구센서스 관련 내용으로는 1950년 이후 10년마다 총인구조사 및 사이연도 5자해의 간이조사, 필요시 수시 총인구조사 실시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조사 일자, 범위,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8) 1949년 센서스를 위해 「제1회 인구조사시행령」, 1955년 센서스를 위해 「간이총인구조사시행령」, 1960년 센서스를 위해 「국세조사령」이 제정됨.

한 1993년 통계법 개정 시 폐지되었다. 따라서 1995년 센서스는 통계법 상 지정통계의 하나로 실시되었다. 그러나 인구센서스를 보다 강력하고 일관성 있게 실시하기 위해서는 실시관련 법령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2000년 센서스에 앞서 「인구주택총조사 규칙」이 제정되었다.

3. 방법론적 측면

가. 조사 단위 개념

(1) 인구

일반적으로 인구센서스에서 조사대상으로 인구를 정하는 방법은 현주(現住)개념(de facto)과 상주(常住)개념(de jure)으로 구분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1925년부터 1955년 센서스까지는 현주개념을 적용하였다. 그러나 1955년 센서스의 경우 현역군인들을 그 부대가 위치한 지역의 인구에 포함시킴에 따라 경기도와 강원도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결과를 초래하여, 지역별 인구분포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각종 정책 및 행정에 이용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1960년 센서스부터는 인구의 이동 및 경제활동상태 분포를 파악하는데 더 유용한 상주개념을 채택하였다.

(2) 가구

일반적으로 인구센서스의 조사단위는 가구(household)이다. 가구는 가사단위개념 (housekeeping unit concept) 또는 주거단위개념 (household-dwelling concept)에 의해 정의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가사단위개념을 채택하여 가구를 ‘한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이 모여서 취사, 취침, 생계를 같이하는 단위’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가구의 분류와 명칭은 센서스마다 다르며, 가구관련 조사결과는 1960년 센서스부터 이용될 수 있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75년 센서스까지는 매 센서스마다 서로 다른 용어와 개념을 사용하였고, 1980년 센서스부터 가구의 분류와 용어가

고정되어 있다.

1980년 센서스이후에는 가구를 일반가구와 집단가구로 분류하고, 일반가구에는 혈연가구, 5인 이하 비혈연자가구, 1인 가구를 그리고 집단가구에는 집단시설가구와 6인 이상의 비혈연자가구를 포함시켰다.

향후에도 가구 내지 가족의 변화가 발생할 것이며, 이에 따라 적절한 가구의 개념과 분류를 도입할 필요가 있으나 시계열 분석을 위해 과거 센서스 자료와의 비교가 가능하도록 가구를 정의 및 분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표 2> 인구주택총조사의 가구구분

연도	1960	1966	1970, 1975	1980~2000
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가구 · 혈연가구¹⁾ · 1인가구 ○ 집단가구 · 집단시설 · 비혈연 5인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통가구 · 혈연가구 · 1인가구 (독립된 부역시설) ○ 준가구 · 1인가구 (독립된 부역시설 없음) · 기타 준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통가구 · 혈연가구 · 1인가구 ○ 준가구 · 집단시설가구 · 비혈연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가구 · 혈연가구 · 비혈연 5인이하 · 1인이하 ○ 집단가구 · 집단시설가구 · 비혈연 6인이상

주: 1) 비혈연 동거인은 4인까지는 주인집의 동거가구원으로 조사

· 1925-1955년은 보통가구와 준가구로 분류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각 연도

나. 자료수집 방법

인구센서스에서는 조사원면접조사방법(타계식)과 가구기입방법(자계식)을 주로 이용하여 조사단위인 가구로부터 자료를 수집한다.

일제시대에 실시된 센서스에서는 가구주 또는 조사원이 지정한 가구원이 소속 가구원에 관한 사항을 배부된 조사표(신고서)에 기재하는 일종의 자기기입방법을 적용하였다. 1949년과 1955년 센서스에서도 과거와 동일

한 자기기입방법을 채택하였으나, 조사원(주로 지방 일선행정기관 공무원)이 조사표를 대신 작성할 때에는 신고의무자성명아래 대서(代書)라고 기재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자기기입방법을 채택한 주요 이유로는 센서스를 국민 신고의무로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1960년 센서스부터는 조사결과와 질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조사원면접조사방법을 채택하고, 경우에 따라 가구기입방법을 병행하였다. 그러나 도시화와 산업화 특히,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증대 등에 따라 주간 부재가구가 증가하고, 사생활 보호의식 확산에 따른 면접조사 기피 등으로 인해 가구기입방법을 점차 확대하였으며, 이 때 조사원은 조사표 배부와 수집 및 검토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최근에 들어 1인 가구의 증가, 사생활 보호의식의 확산 등은 조사의 완전도와 정확도에 위협이 되고 있어, 사회 환경 변화에 적합한 조사방법의 개발에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다. 표본조사

인구센서스에서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많은 항목을 조사하게 되나 지나치게 많은 항목을 포함하는 것은 응답자와 조사원 모두에게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조사결과와 정확성과 시의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기본 항목은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항목은 일부 가구에 대해 표본조사를 실시하는 방법을 병행하고 있다. 표본기법의 적용은 시간과 비용의 절감, 응답자와 조사원 부담의 경감 등의 이점이 있는 반면, 소지역 또는 세부계층별로 통계 작성이 곤란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인구센서스에 표본기법이 처음 도입된 것은 미국의 1940년 센서스이며, 우리나라는 1966년 센서스이다. 1966년 센서스에서 표본기법 도입은 정부 예산의 부족이 주요 이유였다. 이후 2000년 센서스까지 표본기법을 도입하였는데, 표본규모는 1975년만 5% 조사구이며 나머지 연도는 10% 조사구이었다. 한편, 예외적으로 1985년 센서스에서는 전수조사만을 실시하였다.

4. 조사 내용적 측면

가. 조사항목의 변천

1925년 5개에 불과하던 항목 수가 꾸준히 늘어 왔는데 이는 조사당시의 정치, 사회, 경제분야 등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었다.

1925년 센서스에서는 당시 주요 관심이 인구의 총 규모와 이들의 연령 분포였던 관계로 성명, 성별, 생년월일, 혼인상태, 민적(또는 국적) 5개 항목만을 조사에 포함하였다. 1930년 센서스에서는 가구에 관한 통계 작성 이외 직업 및 문맹률 파악을 위해 가구주의 관계, 직업, 출생지, 읽고 쓰는 능력 등 항목을 포함 9개 항목을 조사하였다. 1935년 센서스에서는 1925년 항목에 상주지만을 추가한 6개 항목을 조사하였다. 1940년 센서스에서는 병역과 기능(지정직업과 지정학력)을 포함한 11개 항목을 조사하였으며 특히, 1930년 센서스와 달리 직업 외에 산업과 종사상 지위를 포함시켰다. 1944년 센서스는 일제가 전시 인력동원을 위한 자료수집이 주목적이었던 관계로 직업항목에 특수기능을 추가하고 지정기능 대신 학력을 조사항목에 포함시켜 10개 항목을 조사하였다.

정부수립 직후에 실시된 1949년 센서스에서는 인구의 기본적 항목에 직업 및 특수기능, 최초의 인구이동에 관한 항목인 해방당시(1945년 8월 15일 현재) 거주지, 군사경험(군의 국가 명, 최고계급, 병과), 징용경험(징용 개월 수) 등의 항목을 포함 11개 항목을 조사하였다.

1955년 센서스에서는 인구의 기본적인 항목이외에 인구항목으로 장애 상태를, 가구에 관한 항목으로 전입시기 및 전 거주지, 가구의 주거점유형태, 농가·비농가 구분 등 12개 항목을 조사하였다. 1960년 센서스는 주택 부문을 처음으로 조사함에 따라 조사항목이 크게 늘어나 36개 항목(인구 18, 가구·주택 18)을 조사하였다. 인구부문만을 보면 처음으로 출산력에 관한 항목인 총출생아수를 조사항목에 포함하였으며, 경제활동상태를 노동력 접근법을 채택하여 조사하였다. 1966년 센서스는 인구부문만 조사하면서 처음으로 표본기법을 도입하여 인구의 기본적 특성에 관한 8개 항목은 전수조사하고 출산력과 경제활동 항목 6개 항목은 전체 조사구의 10%

에 대해서만 표본 조사하였다.

1970년 센서스에서는 다시 주택부문을 포함하여 총 31개 항목(인구 17, 가구·주택 14)을 조사하였다. 인구의 도시 집중화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인구이동 항목으로 5년 전 거주지를 처음으로 조사하였다. 1975년 센서스에서는 불완전 고용을 분석하기 위하여 경제활동상태, 취업여부, 종사상 지위, 산업·직업 항목 이외에 취업시간, 추가취업희망, 개인소득을 추가하고 또한 초혼연령을 처음으로 포함하여 28개 항목(인구 19, 가구·주택9)을 조사하였다.

1980년 센서스에서는 교통난이 심각해짐에 따라 교통실태과약을 위해 통근·통학에 관한 조사항목을 처음으로 표본항목에 포함하여 45개 항목(인구 25, 가구·주택 20)을 조사하였다. 1985년 센서스는 처음으로 성씨와 본관을 포함하여 30개 전 항목(인구 16, 가구·주택 14)을 전수조사 하였다. 1990년 센서스에서는 광역 교통시책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통근·통학에 관한 항목을 전수로 조사하였으며, 가구소득을 처음으로 조사하였으나 조사부실로 결과를 집계할 수는 없었다. 2000년 센서스는 노령인구 및 정보화에 관한 항목, 성씨·본관을 포함하여 역대 센서스에서 가장 많은 50개 항목(인구29, 가구·주택21)을 조사하였다.

나. 주요 조사내용의 변천

(1) 인구이동에 관한 항목

인구이동에 관한 조사항목은 출생지, 직전거주지, 현 거주지에서의 거주기간, 특정연도이전의 거주지 등이 있다. 1930년과 1940년 센서스에서는 출생지, 1949년 센서스에서는 해방당시 거주지, 그리고 1955년 센서스에서는 전입시기 및 전거주지를 각각 조사하였다.

1960년 센서스부터는 출생지와 1년 전 거주지 및 5년 전 거주지를 주로 조사하였다. 출생지의 경우 1966년과 1975년 센서스를 제외한 매 센서스에서 조사하였는데, 1970년, 1980년, 1995년 센서스에서는 표본조사, 1960년, 1985년, 1990년, 2000년 센서스에서는 전수조사 하였다. 출생지의 행정단

위는 1960년 센서스에서 시·도 단위 그리고 1970년 센서스부터는 시·군·구 단위까지 조사하였다. 5년 전 거주지는 1970년 센서스부터 그리고 1년 전 거주지는 1980년 센서스부터 표본조사 하였다(단, 1985년 센서스에서는 전수조사). 이들 항목의 이동단위로는 시·군·구 경계를 기준으로 하였다.⁹⁾

인구이동에 관한 조사는 행정구역 변경에 의해 영향을 받아 시계열 분석에 있어서 어느 정도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1990년대 들어 통합시, 광역시 등 대규모 행정구역 변경은 시부·군부간 인구이동통계 작성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한편, 교통량의 증가가 사회비용을 증가시키는 등 중요한 사회문제로 등장함에 따라 통근·통학항목을 인구센서스에 포함시켜 1980년 센서스부터 만 12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조사하여 왔다(단, 1985년 센서스 제외). 주요 항목으로는 통근·학 여부, 통근·학 장소, 이용교통수단, 통근·학 소요시간 등이다. 이들 항목은 1990년 센서스에서 전수조사한 것을 제외하고는 표본조사 하였다.

(2) 출산력에 관한 항목

인구센서스에서는 인구의 출산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총출생아수, 지난 1년간 출생아수 등 출산력에 관한 항목을 표본조사하고 있다.

지난 1년간 출생아수를 조사한 센서스로는 1966년 센서스가 유일하다. 총출생아수는 1960년 센서스부터 표본조사(단, 1960년과 1985년은 전수조사)하였으며 특히, 영유아사망률의 간접추정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1975년, 1980년, 1985년, 1990년 센서스에서는 생존자녀수와 사망자녀수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예외적으로 1995년 센서스에서는 출산력 항목을 제외시켰는데, 그 이유로는 인구동태통계의 질 수준이 아주 높아진데다가 저출산 지속으로 인해 센서스에서의 조사 필요성이 적어진 한편, 항목수의 축소를 위해서였다. 그러나, 지역별·연령별 평균출산아수 등 센서스에서만 파악

9) 주민등록신고에 의한 인구이동통계는 읍·면·동 경계를 기준으로 함.

될 수 있는 출산지표의 작성, 저출산 경향과 다른 사회경제적 항목과의 연관분석의 필요성 등이 제기되어 2000년 센서스에서 다시 총출생아수를 포함하였다(김태헌, 1997).

(3) 경제활동에 관한 항목

경제활동항목은 다른 인구 속성과 연관하여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국가에서 인구센서스 항목으로 포함하고 있다.

1955년 센서스까지는 주로 유업자접근법을 채택하여 경제활동상태에 관한 조사 없이 일자리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직업, 산업, 그리고 종사상의 지위를 조사하였다.¹⁰⁾ 1960년부터 1980년까지 센서스에서는 노동력접근법을 채택하여 조사기준 기간동안(1 주간)의 주된 활동 상태를 조사하였다. 이는 활동상태에 따라 조사대상인구를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로 구분하기 위한 것으로 취업자로 파악된 사람에 대해 직업, 산업, 종사상의 지위를 조사하였다. 그러나 1985년, 1990년, 그리고 1995년 센서스에서는 조사기준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평상시 또는 1개월 등 기간을 다르게 적용하여 경제활동상태를 조사하였다.¹¹⁾ 이는 1983년부터 3년 주기로 실시한 고용구조통계조사가 대규모표본으로 지역별로 고용자료를 생산할 수 있게되자¹²⁾ 주로 직업과 산업만을 파악하여 다른 인구 속성과 연관하여 분석하는데 주안점을 두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과거 센서스의 결과와 시계열 분석이 곤란하게 되었으며, 인구센서스는 월별표본조사

10) 1930년대까지는 유업자접근법을 사용하였으나 1930년대 세계대공황을 계기로 실업자를 측정할 수 없는 동 접근법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자 실업자를 파악할 수 있는 노동력접근법이 고안되었음. 노동력접근법은 미국의 1940년 인구센서스와 경제활동인구조사(Current Population Survey)에 처음으로 채택되었음.

11) 1985년 센서스에서는 조사기준기간을 정하지 않고 '주로 무엇을 하고 있나?', 1990년 센서스에서는 '평소에 수입 있는 일(1년 중 30일 이상)을 하나?', 1995년 센서스에서는 '지난 1개월 (10.1-10.30)동안 주로 무엇을 하였나?'라고 각각 조사함.

12) 고용구조통계조사는 지역, 산업, 직종간의 노동력이동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대규모 표본으로 1983년부터 3년 또는 5년 주기로 1997년까지 5회 실시되었으나 월별로 실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조사항목 수 확대 및 표본확대로 다양한 고용자료와 지역별 자료작성이 가능해짐에 따라 2001년에 조사가 중단됨.

인 경제활동인구조사(노동력접근법을 채택)의 벤치마크 역할을 하여야 한다는 점 등이 지적되었다(김민경,1996). 따라서, 2000년 센서스에서는 일정한 기간동안(1 주간) 경제활동상태와 구직여부를 조사하였으며 특히 구직활동을 한 사람에게 일이 있었다면 일을 할 수 있었는가(currently available for work)를 조사하는 등 완전한 노동력접근법을 다시 적용하였다.¹³⁾

경제활동상태는 1960년과 1985년(전 항목 전수조사)을 제외하고 표본조사 하였다. 조사대상의 하한연령은 1980년 센서스까지 14세 그리고 1985년 센서스부터는 15세로 정하였다.

IV. 향후 발전 방향

인구센서스는 한 국가의 간접자본으로서 유·무형의 형태로 사회·경제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 이러한 인구센서스는 사회환경의 변화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방법론적 및 내용적인 측면 모두에서 변화를 추구한다. 그러한 변화는 당시에는 가장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여건의 변화에 따라 다른 시대에는 부적절할 수 있다. 특히, 인구센서스를 둘러싼 조사환경의 변화는 향후 인구센서스의 존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만큼 중대한 영향력을 가져오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치밀한 그리고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그 동안의 인구센서스의 발전 양상과 주요 특징을 토대로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제도적 측면이다. 향후 인구센서스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강력한 조직체계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향후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의 증가, 여가중심의 생활패턴의 증가 등으로 인해 일시적인 거주지 이탈현상이 증가할 것이며 개인의 사생활보호 의식, 방문 판매원이나 각종 광고물의 기피 경향은 더욱 심화 될 것이다. 이는 어떠한 방법을 채택할지라도 조사 자체를 어렵게 할 것이다. 따라서, 지역사회에

13) 노동력 접근법에서 취업자는 조사기준기간 중에 조금이라도 수입 있는 일에 종사한 사람이며, 실업자는 조사기준 기간 중 i)수입 있는 일을 하지 않았고, ii) 구직활동을 하였고, iii)일이 있었다면 일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을 말함.

서 신뢰성이 높은 공무원이 적극적인 자세로 주민에 조사 협조를 구할 필요가 있으며, 여기에는 조사실시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와 관련, 향후 인구센서스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범제화하는 한편, 지금까지의 중앙주도에서 벗어나 지방자치단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체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중앙조직에서는 조사기획, 관련 예산 확보 등 기본적인 업무만을 담당하고, 지자체별로 필요한 조사 항목의 추가, 조사구 설정, 홍보물제작, 그 이외의 집행업무 등 대부분의 업무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표준지침에 의거하여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조사 방법론적 측면이다. 여기에는 조사기법, 조사수단, 그리고 조사대체 수단 등이 포함된다.

우선 조사기법을 보면, 조사환경과 기술발전 등을 종합하여 효율적이면서도 응답자인 국민이 신뢰하고 용이하게 응답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외국에서도 전통적인 인구센서스의 실시에 혁신노력을 하고 있다. 유럽국은 등록센서스로 전환되었거나 전환을 검토하고 있고, 미국, 캐나다, 일본 등에서는 응답자 친화적인 조사, 자료공표의 신속성, 새로운 기술 등을 차기센서스에 도입하기 위한 연구를 이미 착수하였다.

조사수단으로는 신기술을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많은 국가에서 센서스실시와 관련하여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정보통신기술을 센서스에 도입하고 있다는 점이다. 새로운 기술의 도입은 장기적으로는 센서스 비용과 응답자 부담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자료수집 과정은 응답자의 요구에 따라 다양한 방법의 적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현 여건으로 볼 때 조사표의 배부는 조사원이 담당할 수밖에 없다해도 각 가구에서 응답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해야 하는데 종래의 방법에 추가하여 고려할 수 있는 것이 인터넷 응답방법이다. 이 경우 가구에서 인터넷응답을 선택하는 과정을 어떻게 조사실시기관이 자동적으로 인지하며 미응답가구 및 응답내용의 오류를 어떻게 확인 및 추적할 것인가 등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인

터넷조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조사대체 수단의 강구이다. 주민등록 전산화에 이어 최근 호적전산화, 토지대장전산화, 건축물대장 전산화가 진행되고 있어 이들 시스템을 연계하여 통계를 작성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아울러 국세청 자료, 건강보험관리공단 자료 등 행정자료시스템 수록자료의 질을 높이고 이들을 연계하여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한다면 국민의 부담을 줄이고 막대한 국가예산을 절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의 질이 한 단계 높아져 국가의 전반적 수준이 업그레이드 될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통계청만의 노력으로 할 수 없고 범 정부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셋째, 조사항목은 시대적 요구에 따라 새로이 추가하거나 소멸될 수도 있다. 인구센서스에서는 항목 수와 조사부담(정확도 등)이 서로 경쟁적인 관계에 있어 항목선정에 있어서 기본 원칙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하나의 방안으로 기본항목을 필수항목으로 하여 고정시키고, 일정한 범위 안에서 선택적으로 항목을 추가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센서스에서 조사가 어려운 항목, 타 표본조사로 작성하여도 결과 이용에 큰 문제가 없는 항목 등은 신규 항목 선정 시 배제될 필요가 있다. 한편 동일 항목에 대해 개념과 기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계열 비교의 가능성을 전제하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 자료처리방법에 관한 것이다. 자료입력과 조사오류수정(에디팅)의 자동화가 필요하다. 1990년과 1995년은 OMR(optical mark reading)입력을, 2000년은 지방 12개 장소에서 PC입력과 조사표 에디팅을 하였다. 2000년 센서스의 경우 많은 국가는 OCR(optical character reading)입력방식을 도입하였다. 2000년의 경우 장비도입에 따른 예산 등 경제성과 당시의 고실업 등 사회여건을 고려한 결정이었으나 차기센서스에서도 지방분산의 PC입력을 적용한다면 보완되어야 할 부문에 대해, 만일 OCR방법의 도입이 불가피할 경우 숫자 및 문자 인식을 제고를 위한 연구와 테스트 등 기술축적이 필요하다

끝으로, 향후 인구센서스에서는 본 조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충분한 연구사

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즉, 인구센서스 전반에 걸친 업무에 과감한 투자가 절실히 필요하다.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센서스실시를 위해서는 중점 과제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연구사업예산을 확보하여 체계적인 연구 수행이 중요하다. 지속적이고 일관된 연구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인구센서스 관련 정부 및 민간전문가를 배양하여, 일종의 인력 풀을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 하겠다.

참고문헌

- 경제기획원. 각연도. 『인구 및 주택센서스보고』. 경제기획원조사통계국
 _____ . 1962. “한국의 장래인구추계”. 『한국통계월보』 제9호:5-15.
 경제기획원조사통계국
 _____ . 1964. 『1960년 인구국세조사평가』. 경제기획원조사통계국
 _____ . 1974. 『1970년 인구센서스평가보고』. 경제기획원조사통계국
 _____ . 1984. 『제1차 고용구조특별조사결과보고』. 경제기획원조사통
 계국
- 고응린·박홍래·이동우·최지훈. 1974. 『인구통계세미나』. 대한통계협회
 공보처. 1949. “제1회 총인구조사지방사무처리규칙”. 『통계월보』 제2호
 :4-18. 공보처 통계국
- 김민경. 1996. “인구의 경제활동상태조사방법에 관한 소고”. 『한국인구학』
 19(1):73-92. 한국인구학회
 _____ . 2000. 『인구센서스의 이해』. 도서출판 글로벌
- 김태헌. 1997. “인구총조사의 방법과 평가”. 『한국인구학』 20(1): 27-46.
 한국인구학회
- 내무부. 1958. “인구추계”. 『통계월보』 제2호:25-37. 내무부통계국
 _____ . 1961. “미래의 한국인구추계”. 『통계정보』 3(1): 66-89.
 내무부 통계국
- 박재빈. 1961. “한인의 사망률과 사인에 관한 통계학적 관찰”. 『통계정보』

- 3(6·7):1-35. 내무부 통계국
- 장윤석. 1961. “1960년도 인구조사개요-상”. 『통계정보』 3(3·4):25-49.
내무부 통계국
- _____. 1961. “1960년도 인구조사개요-하”. 『통계정보』 3(6):21-44.
내무부 통계국
- 통계청. 각연도. 『인구주택총조사 보고서』. 통계청
- _____. 각연도. 『인구주택총조사 조사요령서』. 통계청
- _____. 1992. 『한국통계발전사 I, II』. 통계청
- _____. 2000. 『인구추계자료집1, 2』. 통계청 인구분석과 업무자료
- _____. 2002. 『2001년 인구동태통계연보』. 통계청
- _____. 2002. 『2001년 인구이동 통계연보』. 통계청
- 石南國. 1972. 『韓國の人口増加の分析』. 剋草書房
- 藤田 峰三. 1995. 『新國勢調査論』. 大藏省 印刷局
- 日本國 統計局. 1985. 『國勢調査の話』 (내부자료). 總務廳 統計局
- _____. 1990. 『國勢調査の話』 (내부자료). 日本統計協會
- Census Bureau, U.S. 2001. “American Community Survey”. Census Bureau
<http://www.census.gov/acs/www/AdvMeth/Papers/Papers 1. htm>
- Nancy M. Gordon. 2002. “Census 2000: The Last Long Form”. Paper presented in the 20th Population Census Conference. Ulaanbaatar, Mongolia
- United Nations. 1998. Principles and Recommendation for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es, Rev. 1, Statistical Papers Series M No. 67/Rev.1

제2장

인구의 성장과 변천

김 두 섭
(한양대학교)

I. 머리말

- 1910-2000년 기간의 한국인구의 추세, 각종 인구지표의 제시
- 한국이 왜,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인구변천을 겪게 되었는가를 설명
- 인구변천을 출산력, 사망력 및 인구이동의 수준에 따라 5단계로 구분
- 인구변천의 사회경제적 결정요인과 그 인과관계 메카니즘에 대한 설명
- 인구변천과정에서 출산력과 사망력, 인구이동간의 상호관계를 규명
- 한국인구가 지닌 주요 특징들을 세계, 선진국, 후진국과 비교
- 세계 속에서 한국인구가 차지하고 있는 위상에 대해서 살펴봄

II. 한국의 인구변천

1. 전통적 성장기 (1910년 이전)

- 1910년 한일합방 때까지 높은 출산력과 사망력
- 조선 말기까지 정체되고 전형적인 농업사회 - 인구증가는 매우 낮음
- 조선 전반기 - 사회경제적 안정과 기술개발로 비교적 빠른 인구증가
중기 이후 - 전염병, 기근, 전쟁 등의 사회경제적 곤란이 있으면
사망률은 상승, 인구 감소

- 조선시대에는 인구의 국제이동 미미 - 인구증가는 낮은 수준 유지
- 조선시대 500년 간 인구는 연평균 2‰ 정도의 완만한 속도로 증가

2. 초기변천기 (1910~1945년)

- 서구의 보건제도와 의술, 의약품이 한일합방 이후 전국적으로 확산
→ 1920년경부터 사망률 떨어지기 시작
- 출산력은 높은 수준 유지, 보건개혁과 서양의술의 확산으로 조출생률은 1920년대 초반까지 약간 상승 경향
- 인구증가 속도 급격히 상승 - 전통적 성장기에 2-3‰ 이던 자연증가율 1930년 이후 연평균 20‰ 상회
- 인구의 빠른 자연증가 → 토지에 대한 인구의 압력을 가중 → 대규모 이농현상 (만주와 일본)
- 대규모 해외이동, 사망률 저하 → 인구증가의 수준과 추세 결정인자
- 대규모 이농현상 → 도시화 촉진, 혼인연령 상승

3. 혼란기 (1945~1960년)

- 광복, 남북한 분단, 한국동란으로 인구현상, 인구변천에도 심각한 혼란
- 광복 후 귀환이동, 전쟁동안 피난민 유입 → 남한인구 급격증가
- 연평균 인구증가율: 1945-1950년 60.8%
1950년대 후반 '아기 붐' → 자연증가율: 1955-1960년 28.7%
- 한국동란 기간에 사망률 매우 높아짐
의약품(항생제) 대량 반입, 확산 → 1950년대 중반부터 사망률, 영아 및 유아사망률 급속히 저하
- 전쟁동안 부부 별거, 결혼 연기, 사별자 급증에도 불구하고 출산력 비교적 높은 수준 유지
- 1950년대 후반-1960년대 초 전쟁 후 '아기 붐' → 출산력 급격 상승

4. 후기변천기 (1960~1985년)

- 출산력 급격 감소, 사망력 계속 저하 → 인구증가율 빠른 감소
- 1962년 가족계획사업 출범, 사회경제적 발전 → 출산력 저하에 기여
- 경제발전, 생활수준 향상, 보건/의료시설 확장 → 사망력 감소 지속
- 1955년 이후 국제이동 미미한 폐쇄인구의 성격 유지

5. 재안정기 (1985년 이후)

- 1980년대 후반 인구변천 마치고 선진국형의 안정상태에 접근
- 장래인구추계: 2013년 5,000만 명 돌파, 2023년 5,068.3만 명의 정점 후 인구감소 시작, 2050년 4,433.7만 명
-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 → 2024년부터 여자인구 > 남자인구
2050년 성비 96.3으로 저하
- 1985년 이후 출산력 급격 저하 (남녀 차별의식, 남아선호사상에도 불구하고 사회경제적 발전으로 소가족가치와 규범 널리 전파)
2000년 조출생률 13.4, 합계출산율 1.47 - 대체수준, 선진국보다 낮음
→ 1990년대 기존 인구증가억제정책 폐지, 2002년 출산장려 정책전환
- 의료보험, 의료시설 혜택 확산 → 사망률 1980년대 후반 계속 저하
- 국제이동은 1970년대보다 낮은 수준 유지 - 2000년 순이민 1.0만 명

Ⅲ. 인구변천의 인과구조

1. 출산력 저하의 결정요인

- 출산력의 저하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연관된 조건들이 분계점에 도달하고, 사람들이 인구압력을 느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그들에게 주어진 기회를 극대화하려는 과정에서 시작
- 초기변천기(1910-1945년)의 급격한 자연증가

반응: 급속한 도시화 / 만주, 일본으로의 이동

- 1960년대 초 출산력변천의 시작; ‘자연출산력’ → ‘통제출산력’
조건: 사회경제적 여건의 성숙(영아사망률, 교육, 여성의 경제활동)
가족계획사업
- Davis 출산제한동기 - 기아나 절대빈곤의 위협 < 상대적인 박탈감
상승이동 욕구
- 도시에의 인구집중, 근대적 산업환경에의 노출, 자녀의 양육비
→ 저출산 지향의 규범, 가치관 및 태도가 형성
- 1960년대 초 남은 대안 → 혼인출산력의 통제
피임도구의 보급 - 1965년 이후 가장 중요한 요인
초혼연령의 상승과 인공유산의 증가 - 1960년대 초반의 중요 요인
급속한 도시화
가족구조의 전환 - 확대가족으로부터 핵가족으로
혼인구성의 변화 - 사별의 감소와 이혼의 증가
가임연령여성의 구성비율의 변화 - 1970년까지 조출생률 ↓
1970-80년대 말 조출생률 ↑

2. 사망률과 출산력의 관계

- 사회경제적 변화가 출산력과 인구이동에 상당한 영향력
사망률의 변화에는 영향력 미미
- 사망률과 출산력은 매우 미약하거나 또는 의사관계 유지

3. 인구이동과 출산력의 관계

- Davis는 인구이동을 인구변천의 주요 결정요인으로 포함
인구압력 → 가용한 모든 인구학적 수단을 동원
독신주의, 결혼의 지연, 피임, 인공유산, 국내/국외 이동
- 이동은 단기적으로 인구압력의 완화, 출산력 감소는 안전판

Goldscheider, Friedlander, Mosher: 영국, 스웨덴, 푸에르토리코 자료
출산력 저하의 시기와 정도는 이동의 기회와 반비례

- 일제하 만주와 일본으로 대량이주, 농촌-도시 인구이동 →
인구압력 완화, 출산력 저하의 지연
- 한국인들은 Davis의 인구변화와 반응이론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행동
즉 인구의 성장 속도가 높아지자 우선 국내외 이동이나 결혼의 지연,
인공유산 등의 반응이 나타났으며, 이 같은 선택의 여지가 고갈되면서
비로소 혼인출산력이 급격히 저하

IV. 세계 속의 한국인구

- 한국인구가 지닌 주요 특징들을 세계, 선진국, 후진국과 비교
- 세계 속에서 한국인구가 차지하고 있는 위상에 대해서 살펴봄
- 인구규모, 인구밀도, 도시인구비율, 중위연령, 부양인구비, 고령화지수,
인구증가율, 합계출산율, 평균수명
- 세계인구와 한국인구의 연평균 증가율의 추세, 1950-2050
- 세계인구와 한국인구의 추세, 1950-2050

V. 맺는 말

지난 20세기 초까지 고출산, 고사망의 전통적인 특성을 지니던 우리나라의 인구는 매우 빠른 속도로 변화하여 불과 70-80년 동안에 인구변천을 거의 마친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사회는 1960년대 이후 빠른 속도로 진행된 근대화 과정에서 출생률과 사망률이 급속히 감소하였으며, 1980년대 후반기에 들어오면서 이러한 동태율들이 선진국의 낮은 수준에 근접하였다. 특히 최근에는 출생률의 저하가 인구전문가들의 예측을 벗어나 급속한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국의 인구는 적어도 2020년대 초반

부터 상당히 빠른 감소를 보인 후 다시 안정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 장에서는 출산력, 사망력 및 인구이동의 수준과 정치, 경제, 사회적 특성을 고려하여 한국의 인구변천과정을 5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로 그 특성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인구변천의 사회경제적 결정요인과 그 인과관계구조에 대한 설명을 시도하였다. 이 장의 주목적은 한국이 왜, 그리고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인구변천을 겪게 되었는가를 설명하는 것이다. 또한, 이 장은 인구변천과정에서 인구성장의 3대 구성요소, 즉 출산력과 사망력, 그리고 인구이동간의 상호관계를 규명함으로써 인구변천이론의 보완과 정교화를 시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 장에서는 한국인구가 지닌 주요 특징들을 세계 다른 지역과 비교해보고, 세계 속에서 한국인구가 차지하고 있는 위상에 대해 살펴보았다.

우리나라가 금세기에 인구변천의 모든 단계를 거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서구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오랫동안 관찰된 일반화된 형태를 반복하며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나라에 따라 인구변천의 경로와 전개과정은 매우 다양하기 마련이며, 결정요인에 있어서도 유사성과 아울러 상이성이 광범하게 발견된다. 결국, 한국인들은 Davis의 인구변화와 반응이론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행동하였다고 할 수 있다. 즉 인구의 성장속도가 높아지자 우선 국내외 이동, 결혼의 지연, 인공유산 등의 반응이 나타났으며, 이 같은 선택의 여지가 고갈되면서 비로소 혼인출산력이 급격히 저하하였다.

지난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하여도, 한국 사회가 인구변천을 마치고 곧 새로운 안정기로 접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인구의 급격한 감소를 걱정하고, 이에 대한 대비를 서둘러야 하는 시점에서 있다. 현재 우리 사회의 출산력은 대체수준보다 훨씬 낮으며, 미국 등 일부 선진국보다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인구성장억제정책의 폐지라는 기존의 입장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출산을 장려하는 방향으로의 정책전환이 시급히 모색되어야 한다.

<표 2-1> 한국의 인구성장, 1910-2000

연도(월.일)	인구 (1,000명)	연평균 증가율(%)		
		자연증가	국제이동	총증가
<u>분단 이전</u>				
1910 (10.1)	17,427*			
1915 (10.1)	17,656*	4.0	-1.4	2.6
1920 (10.1)	18,072*	7.0	-2.3	4.7
1925 (10.1)	19,020	12.0	-1.8	10.2
1930 (10.1)	20,438	18.7	-4.3	14.4
1935 (10.1)	22,208	20.2	-3.6	16.6
1940 (10.1)	23,547	20.6	-8.9	11.7
1944 (5.1)	25,120	20.2	-2.2	18.0
<u>한국 (남한)</u>				
1945 (9.1)	16,136*			
1949 (5.1)	20,167	18.9	41.9	60.8
	19,904**			
1955 (9.1)	21,502	7.0	5.3	12.3
1960 (12.1)	24,989	28.7	-0.1	28.6
1966 (10.1)	29,160	26.6	-0.1	26.5
1970 (10.1)	31,435	19.0	-0.2	18.8
1975 (10.1)	34,679	20.2	-0.6	19.6
1980 (11.1)	37,407	15.9	-1.0	14.9
1985 (11.1)	40,420	16.4	-0.9	15.5
1990 (11.1)	43,390	14.9	-0.7	14.2
1995 (11.1)	44,554	10.7	-5.2	5.3
2000 (11.1)	45,985	9.0	-2.7	6.3

주: 1) * 추정인구; 2) ** 1955년 경계 추정인구; 3) 이 표에서 외국인은 제외되었음; 4) 이 표에 제시된 인구는 해당 연도의 인구센서스 결과로 얻어진 것이며, 각 인구센서스의 완전도가 차이 나기 때문에 연평균 증가율의 계산에 있어서 약간의 오차를 초래할 수 있음.

자료: Kwon et al.(1975: 7); 김두섭(1993); Kim(1994); 통계청(1997, 2001).

<표 2-2> 한국의 장래 추계인구, 2000-2050

(단위: 명, %)

연도	총인구	남자인구	여자인구	성비	연평균 인구증가율
2000	47,008,111	23,666,769	23,341,342	101.4	-
2010	49,594,482	24,932,771	24,661,711	101.1	5.4
2020	50,650,260	25,377,186	25,273,074	100.4	2.1
2030	50,296,133	25,046,468	25,249,665	99.2	-0.7
2040	48,204,474	23,836,935	24,367,539	97.8	-4.2
2050	44,336,997	21,751,590	22,585,407	96.3	-8.4

자료: 통계청(2001c).

<표 2-3> 한국 인구변천의 단계별 특성

단계	기간	인구증가	출산력	사망력	국제이동	정치, 경제, 사회적 요인
전통적 성장기	-1910	매우 낮은 상태로 안정됨	높음	높음 그러나 소폭변동	거의 없음	전형적 농업사회/ 기아, 질병, 전쟁에 의한 사망률 상승
초기 변천기	1910-1945	급격히 상승	높음	높은 상태에서 떨어지기 시작	일본과 만주로의 대량이동	일본의 식민지화/ 식민지 경제정책, 보건 의료시설 도입
혼란기	1945-1960	급격한 증가 그러나 1949-1955 기간은 정체	높음	중간 수준 그러나 1949-1955 기간은 높음	일본과 만주에서 대량귀환/ 북한에서 피난민 유입	광복, 남북한 분단, 한국전쟁, 사회적 혼란, 극심한 경제적 곤란
후기 변천기	1960-1985	증가율 계속 떨어짐	급격히 떨어짐	계속 떨어짐	1970년 이후 이민 약간 증가	근대화, 경제발전, 도시화, 인구정책의 실시
재안정기	1985-	계속 떨어짐/ 이론적 감소 상태 돌입	재생산수준 이하로 떨어짐	더욱 떨어짐	낮은 수준 유지	지속적 경제성장, 사회발전, 교육팽창, 생활양식의 변화, 의료보험 실시

자료: 권태환과 김두섭(2002: 260); 김두섭(1991, 1993); Kim(1994).

<표 2-4> 한국 도시인구의 성장, 1910-2000

연도	총인구 (1,000명)	도시의 수	도시인구 (1,000명)	도시인구 비율(%)	도시인구 증가율(%)
<u>분단 이전</u>					
1910 (10.1)	17,427*	-	-	-	-
1915 (10.1)	17,656*	-	-	-	-
1920 (10.1)	18,072*	-	-	-	-
1925 (10.1)	19,020	12	608	3.2	-
1930 (10.1)	20,438	14	889	4.4	76.0
1935 (10.1)	22,208	17	1,245	5.6	67.3
1940 (10.1)	23,547	20	2,377	10.1	129.4
1944 (5.1)	25,120	21	2,933	11.7	68.4
<u>한국 (남한)</u>					
1945 (9.1)	16,136*	15	2,081	12.9	-
1949 (5.1)	20,167	19	3,458	17.1	135.4
1955 (9.1)	21,502	25	5,263	24.5	66.3
1960 (12.1)	24,989	27	6,997	28.0	54.2
1966 (10.1)	29,160	32	9,780	33.5	57.4
1970 (10.1)	31,435	32	12,929	41.1	69.8
1975 (10.1)	34,679	35	16,770	48.4	52.0
1980 (11.1)	37,407	40	21,409	57.2	48.0
1985 (11.1)	40,420	50	26,418	65.4	42.0
1990 (11.1)	43,390	73	32,290	74.4	40.1
1995 (11.1)	44,554	73	34,992	78.5	16.1
2000 (11.1)	45,985	79	36,642	79.7	9.2

주: 1) * 추정인구; 2) 이 표에서 외국인은 제외되었음.

자료: <표 2-1>; 통계청(인구주택총조사 각 연도 보고서).

<표 2-5> 세계 속의 한국인구, 2000

인구지표	세계	선진국	후진국	한국
인구 (백만명)	6,057	1,191	4,865	47
인구밀도 (명/km ²)	45	23	59	472
도시인구비율 (%)	47.0	76.0	39.9	81.9
중위연령	26.5	37.4	24.3	31.8
부양인구비	58.4	48.3	61.1	38.7
고령화지수	23.1	78.2	15.5	35.0
1995-2000 인구증가율 (%)	13.5	3.0	16.2	7.8
1995-2000 합계출산율	2.82	1.57	3.10	1.51
1995-2000 평균수명	65.0	74.9	62.9	74.3

주: 1) 부양인구비={[(0-14세 인구)+(65세 이상 인구)]/(15-64세 인구)}×100.

2) 고령화지수={(65세 이상 인구)/(0-14세 인구)}×100.

자료: UN(2001).

<표 2-6> 세계인구와 한국인구의 추세, 1950-20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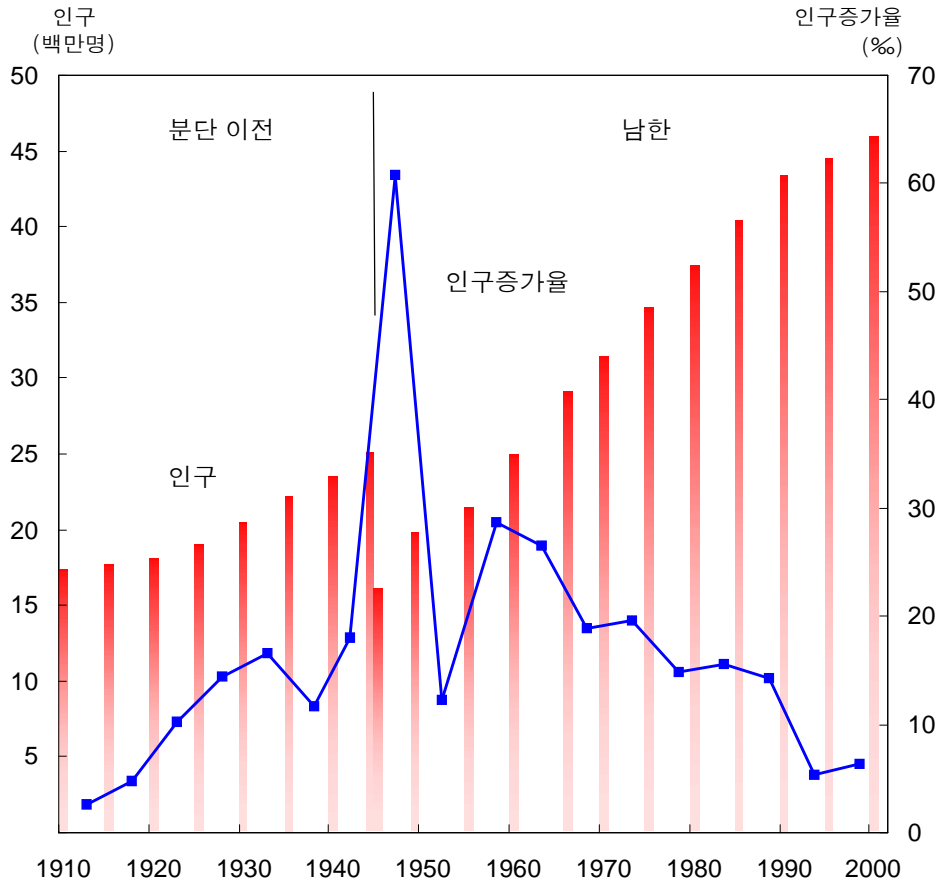
(단위: 백만명, %)

지역	1950	1975	2000	2025	2050
세계	2,519 (100.0)	4,066 (100.0)	6,057 (100.0)	7,937 (100.0)	9,322 (100.0)
선진국	814 (32.3)	1,048 (25.8)	1,191 (19.7)	1,219 (15.4)	1,181 (12.7)
후진국	1,706 (67.7)	3,017 (74.2)	4,865 (80.3)	6,718 (84.6)	8,141 (87.3)
한국	20.4 (0.81)	35.3 (0.87)	47.0 (0.78)	50.7 (0.64)	44.3 (0.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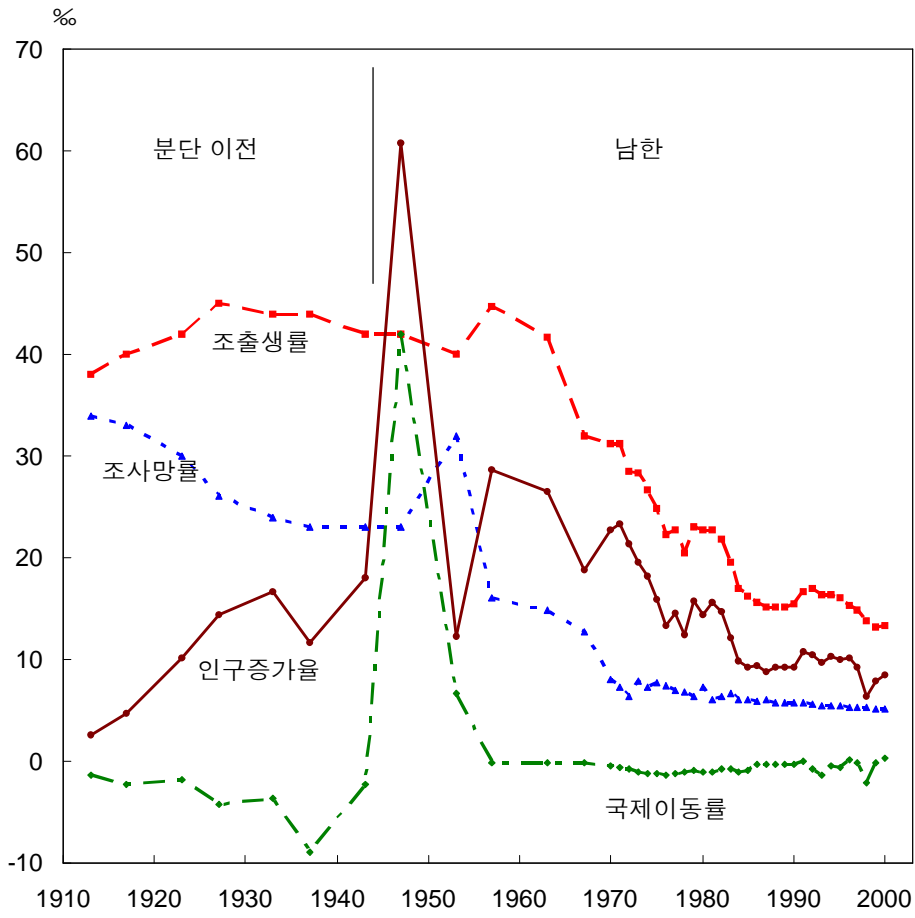
주: 2000-2050년의 한국인구는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자료를 활용하였고, 나머지는 UN의 인구자료임.

자료: UN(2001); 통계청(2001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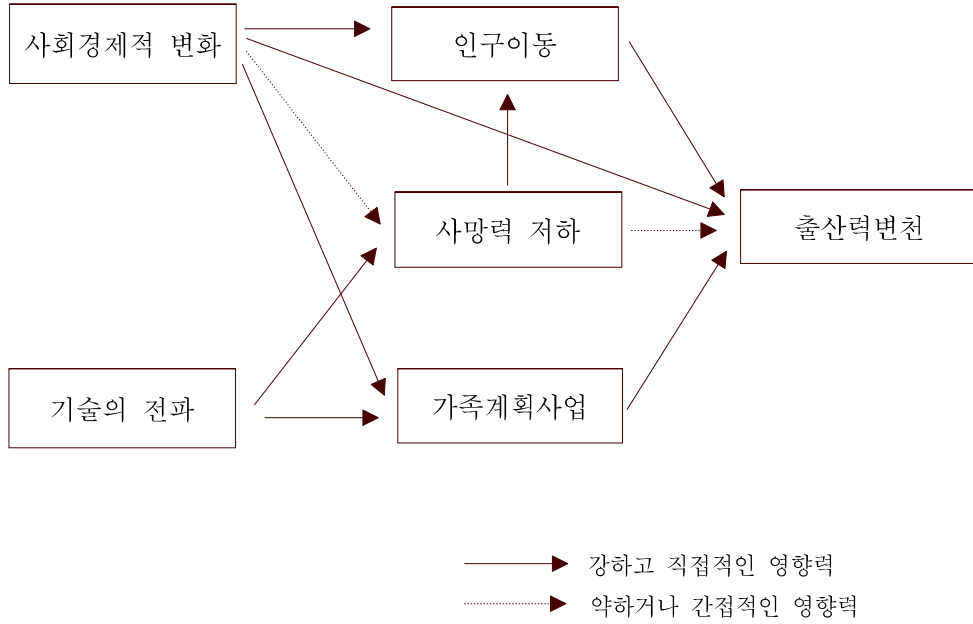
<그림 2-1> 한국의 인구성장 및 인구증가율의 추세, 1910-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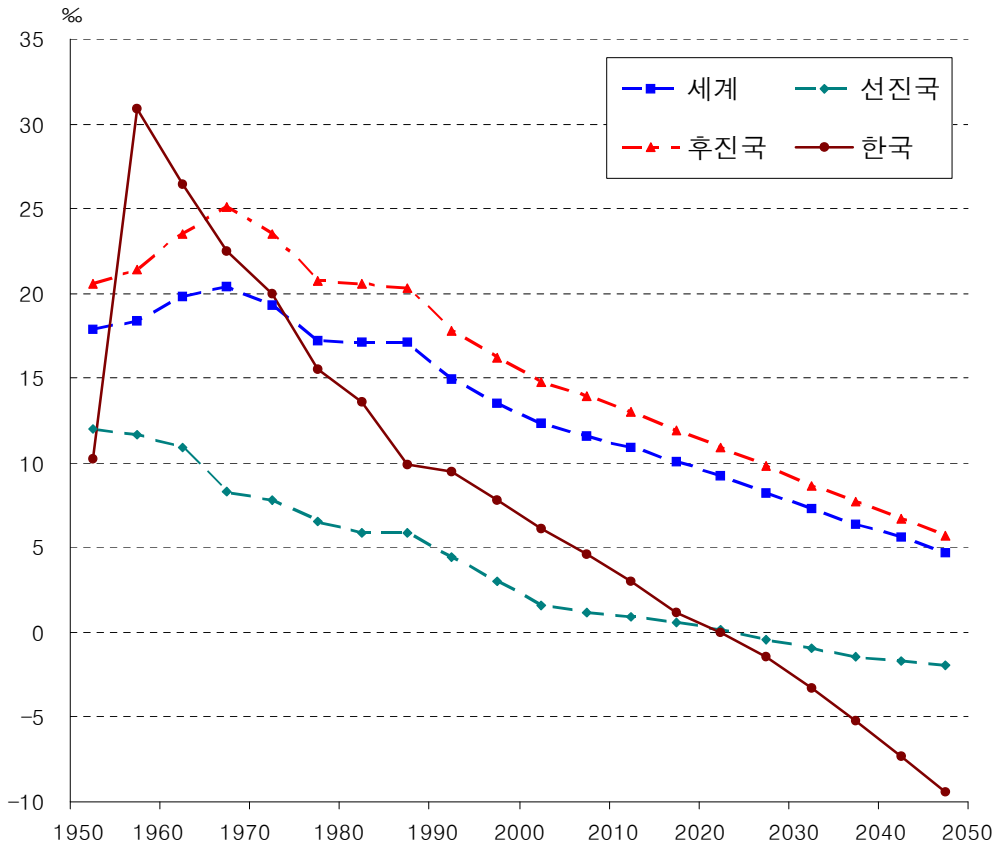
<그림 2-2> 한국의 인구증가율 및 그 구성요소의 변화추세, 1910-2000



<그림 2-3> 한국 인구변천의 인과구조



<그림 2-4> 세계인구와 한국인구의 연평균 증가율의 추세, 1950-2050



주: 2000-2050년 기간 한국인구의 연평균 증가율은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자료를 활용하였고, 나머지 인구증가율들은 UN의 추정값임.

자료: UN(2001); 통계청(2001c).

<요약자료>

인구의 성장과 변천

김 두 섭

(한양대학교)

지난 20세기 초까지 고출산, 고사망의 전통적인 특성을 지니던 우리나라의 인구는 매우 빠른 속도로 변화하여 불과 70-80년 동안에 인구변천을 마쳤다. 한국사회는 1960년대 이후 빠른 속도로 진행된 근대화 과정에서 출생률과 사망률이 급속히 감소하였으며, 1980년대 후반기에 들어오면서 이러한 동태율들이 선진국의 낮은 수준에 근접하였다. 출생률의 저하는 현재도 급속한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국의 인구는 2020년대 초반부터 상당히 빠른 감소를 보인 후 다시 안정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 연구에서는 출산력, 사망력 및 인구이동의 수준과 정치, 경제, 사회적 특성을 고려하여 한국의 인구변천과정을 5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로 그 특성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인구변천의 사회경제적 결정요인과 그 인과관계구조에 대한 설명을 시도하였다. 이 연구의 주목적은 한국이 왜, 그리고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인구변천을 겪게 되었는가를 설명하는 것이다. 또한, 이 연구는 인구변천과정에서 인구성장의 3대 구성요소, 즉 출산력과 사망력, 그리고 인구이동간의 상호관계를 규명함으로써 인구변천이론의 보완과 정교화를 시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에서는 한국인구가 지닌 주요 특징들을 세계 다른 지역과 비교해보고, 세계 속에서 한국인구가 차지하고 있는 위상에 대해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의 인구변천은 서구 유럽에서 관찰된 일반화된 형태를 반복하며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나라에 따라 인구변천의 경로와 전개과정은 매우 다양하기 마련이며, 결정요인에 있어서도 유사성과 아울러 상이성이 광범하게 발견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인구의 성장속도가 높아지자 우선 국내외 이동, 결혼의 지연, 인공유산 등의 반응이 나타났으며, 이 같은 선택의 여지가 고갈되면서 비로소 혼인출산력이 급격히 저하하였다.

지난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하여도, 한국 사회가 인구변천을 마치고 곧 새로운 안정기로 접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인구의 급격한 감소를 걱정하고, 이에 대한 대비를 서둘러야 하는 시점에서 있다. 현재 우리 사회의 출산력은 대체수준보다 훨씬 낮으며, 미국 등 일부 선진국보다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인구성장억제정책의 폐지라는 기존의 입장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출산을 장려하는 방향으로의 정책전환이 시급히 모색되어야 한다.

제3장

한국의 출산력: 추이와 전망

전 광 희

(충남대학교)

I. 머리말

이 글의 목적은 한국의 출산력 변천의 추이와 전망을 개괄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1) 출산력 변천을 단계별로 설명하면서 그것에 개입하는 중간변수의 특성을 살펴보고, (2) 출생성비 불균형과 차별출산력의 문제를 검토하고, (3) 최근의 대단히 낮은 출산율이 21세기의 전반부에도 그대로 지속될 것인가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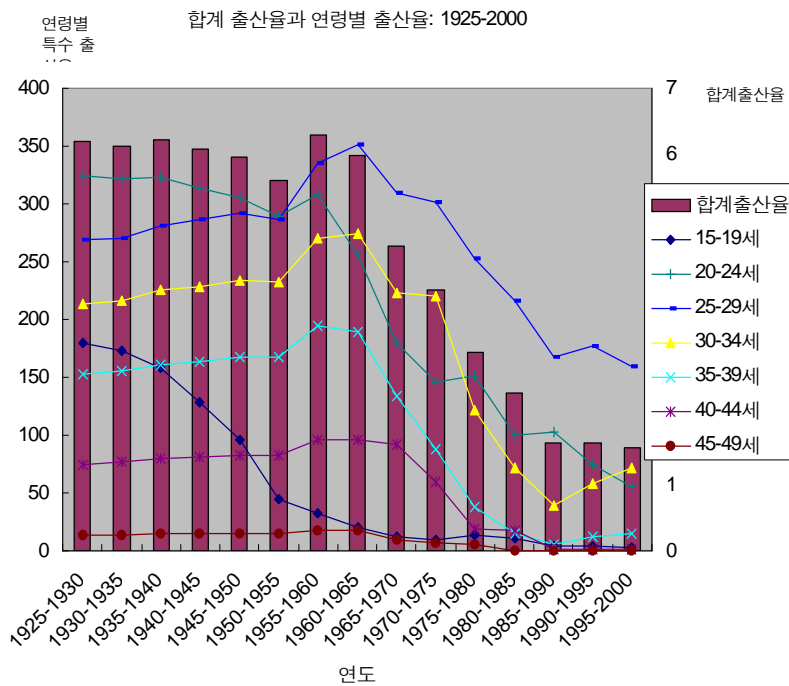
이 글의 목적은 한국의 출산력 변천의 추이와 전망을 개괄하는 것이다. 이 글은 일차적으로 한국의 출산력 변천에 개입하는 중간변수의 기여도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이 장의 끝 부분에서 출산촉진요인과 출산억제요인을 식별하기 위한 봉가르츠의 모형을 바탕으로, 제1단계의 출산력을 변천을 완료한 한국사회가 21세기 전반부에도 대체수준 이하의 출산율을 그대로 유지하게 될 것인가에 대하여 논의하게 될 것이다.

II. 출산력 변천의 단계

1. 출산력 변천의 준비기간

한국의 출산력 변천의 준비기간은 사망력 변천이 시작하는 1910년에서 1960년까지 50년 동안이다. 이 기간은 (1) 사망력 초기변천기(1910-45) (2) 정치적 혼란기(1945-60)로 나누어진다. 1910년의 한일합방은 근대적인 사망력 변천의 시작으로 초기변천기에는 합계출산율은 6.0명으로 연령별 출산율은 거의 변하지 않았다. 해방 후부터 1960년까지 한국사회는 민족분단, 6·25전쟁, 4·19혁명 등 제1단계의 출산력 변천에 선행하는 일련의

<그림 1> 한국의 합계출산율과 연령별 출산율: 1925-2000



정치적 사건을 경험하였다. 그러나, 이 기간에 일어났던 정치혼란, 사회불안, 경제의 황폐화에도 아랑곳없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6.3명으로 거의 변화하지 않았다.

2. 제1단계의 출산력 변천

1960년대는 제1단계의 출산력 변천이 시작하는 시기이다. 합계출산율은 1960~65년의 6.0명에서 1975년의 3.5명을 거쳐서, 1985년에는 1.7명으로 급격히 감소하였다.

1960~75년은 제1단계 출산력 변천의 전반부에 속하며, 출산력 저하가 근대화나 경제변동의 결과라기보다는 과거 인구의 새로운 상황에의 적응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 정부는 1962년 출산억제 정책의 일환으로서 가족계획사업에 착수하였다. 합계출산율은 1960년대 후반부에는 4.6명으로 저하하였다. 백말 띠의 해인 1966년에는 서울 등 대도시 지역에서 출산율이 갑자기 떨어지기 시작하였다. 도시에서는 인공유산이 만연하였으며, 1960년대 초반부터 피임약이 시장채널을 통하여 공급되었다. 농촌에서도 출산율은 1965년부터 급템포로 떨어지기 시작하였다.

합계출산율이 1970년에는 4.5명으로 출산율 감소의 템포가 둔화되지만, 1975년에는 합계출산율이 3.5명에 이르면서, 제1단계 출산력 변천의 후반부에 진입하였다. 제1단계 출산력 변천의 후반부는 젊은 부부들이 이상 자녀수, 희망자녀수, 출산규제, 자녀가치 등을 고려하면서 젊은 부부들이 출산행동에 “혁신”의 개념을 도입하면서 시작하였다. 이것은 제1단계 출산력 변천의 전반부와는 완전히 다른 의미를 지닌다. 1975년 전에는 부부들이 대부분 전통적 가족규범에 의하여 이미 사회화되었으며, 결혼 전에 자녀출산을 피임으로 조절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내면화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가지지 못하였다.

3. 제2단계 출산력 변천의 시대

1985년 이후, 정확히 1983년부터 인구학자의 일반적 예상과 달리, 출산율이 대체수준 이하로 떨어졌다. 합계출산율은 1980~85년의 2.38명에서 2000년의 1.47명으로 0.79명이 줄어들었다. 현재 관찰되고 있는 저출산으

로의 출산력 변천은 한국의 1980년대에 전개된 민주화 투쟁과는 완전히 다른 또 하나의 “무혈혁명”이라고 할 수 있다.

남아선호는 한국과 같이 남성중심의 사회에서 출산력의 지속적 감소에 장애물이 되지는 않았다. 오히려, 높은 피임 효율성과 인공유산이 안전하게 시술될 수 있는 상황에서, 성별·출생순위별로 나타나는 차별적 자녀선호사상은 한국의 출산력 저하의 템포를 오히려 가속화하는데 기여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한국의 제2단계 출산력 변천의 현 상태를 설명할 때, 우리는 저출산의 원인으로 한국사회의 지나친 과열경쟁, 고도 대중소비사회의 도래, 그리고 여성들의 자녀양육과 취업의 갈등 등등의 문제를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물론 이러한 대답들은 대학 입학시험에 관련된 부담에 관한 내용을 확인해 주지는 못하지만, 이들의 응답내용은 저출산 또는 출산력 감소의 이유로서 한국사회에서 만연된 치열한 생존경쟁을 드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Ⅲ. 출산력 변천의 메카니즘

1. 출산력 변천의 중간변수

<그림 1>은 1960년대 이후 출산력 변천의 과정에서 5세 간격의 거의 모든 연령집단에서 예외 없이 출산력이 저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출산율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연령은 15~24세와 35세 이상이다. 여성들의 결혼연기, 곧 혼인연령의 상승과 출산지연은 젊은 연령층의 출산력 감소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반면, 35세 이상 여성들의 출산 감소는 “원치 않은” 임신을 줄이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출산규제를 선택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표 1>은 1955~2000년의 지난 45년 동안 출산력변천의 과정에서 함께 출산율 변화를 설명하는 중간변수의 역할을 보여주고 있다. 제1단계의 출

〈표 1〉 합계출산율 퍼센트 변화의 구성요소: 1955-2000

연도 구성요소	1955-1960	1960-1965	1965-1970	1970-1975	1975-1980	1980-1985	1985-1990	1990-1995	1995-2000
합계출산율 변화율(%)	5.6	-16.8	-17.6	-13.4	-24.6	-25.7	-18.3	1.2	-5.4
(a) 혼인상태 별									
혼인	-3.9	-6.3	-3.7	-3.5	-5.6	-6.4	-6.5	-5.8	-9.9
구성	-6.9	-7.6	-3.4	-3.7	-4.9	-6.7	-7.9	-5.6	-9.6
결혼연령	3.0	1.3	0.5	0.2	0.7	0.3	1.4	-0.2	-0.3
이혼·사별									
(b) 연령별 유배우 출산율	9.5	-10.5	-14.1	-9.9	-19.1	-19.3	-11.8	7.0	4.5
유배우	---	-1.7	-9.5	-5.9	-23.0	-23.9	-13.4	-5.3	-7.4
출산율									
피임									
인공유산	-3.1	-5.1	-4.6	-4.0	3.9	4.6	1.6	12.3	11.9
기타	11.0	-3.8	---	---	---	---	---	---	---

산력 변천이 일어났던 1960~85년의 25년 동안에는 혼인연령, 인공유산, 피임 등이 거의 같은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들은 5년 간격으로 보면, 혼인연령, 인공유산의 증가가 1960~65년에는 출산력 변천을 주도하였으며, 피임과 인공유산은 1965~70년에 출산력 감소를 주도하는 두 핵심변수였다. 제2단계의 출산력 변천에서는 이들 구성요소의 상대적 중요성이 변하기 시작하였다. 불임수술을 포함한 피임실천의 효과가 1975~80년과 1980~85년의 두 시기에는 더욱 더 괄목할 만한 것이었으며, 1990~2000년의 10년 동안 혼인연령의 상승이 아울러 제2단계의 출산력 변천에서 합계출산율을 대체수준 이하의 저출산 상태로 유지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한편, 인공유산의 출산억제효과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유배우 출산율을 상승시키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2. 중간변수의 검토

1) 유배우율의 변화

평균초혼연령(SMAM)은 1960년의 21.5세에서 2000년의 26.5세로 지난

40년 동안 5.0세나 상승하였다. 물론, 1980년대 후반 초혼연령의 상승속도는 약간 둔화되기는 하였지만 그것의 종점(終點)이 어디가 될 것인가는 지속적인 관심의 대상이 된다.

평균초혼연령의 상승은 20대 초반과 후반의 미혼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데 따른 것이다. 예컨대, 20~24세의 경우는 유배우율이 1960년의 59.1%에서 2000년의 10.7%로 무려 48%나 감소하였다. 한편, 25~29세의 경우는 유배우율이 1960년의 93.1%에서 2000년의 59.1%로 34%나 감소하였지만, 30~34세의 경우는 유배우율이 1960년대의 91.7%에서 1970년과 1975년에 94.5%로 정점에 있다가, 최근에 이르러 87.0%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것은 전반적으로, 여성에 대한 교육과 취업의 기회 증대 등

<표 2> 연령별 유배우 여성의 비율 (K_≡): 1960~2000

연령 \ 연도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15~19	0.070	0.038	0.028	0.026	0.017	0.009	0.005	0.008	0.007
20~24	0.648	0.477	0.423	0.372	0.337	0.281	0.195	0.167	0.107
25~29	0.931	0.898	0.884	0.868	0.849	0.818	0.773	0.699	0.591
30~34	0.917	0.939	0.946	0.944	0.943	0.931	0.924	0.914	0.869
35~39	0.882	0.892	0.920	0.932	0.934	0.935	0.928	0.922	0.907
40~44	0.821	0.827	0.848	0.882	0.869	0.884	0.903	0.900	0.889
45~49	0.760	0.760	0.769	0.791	0.867	0.882	0.861	0.864	0.861
초혼연령 (SMAM)	21.5	22.9	23.3	23.7	24.1	24.7	24.8	25.4	26.5

근대화나 산업화를 통한 사회경제적 변동이 가져온 혼인연령의 상승에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사회는 근대화, 경제성장, 산업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평균초혼연령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왔지만, 한평생 결혼을 하지 않아도 좋다는 생각은 늘어나지 않고 있다. 최근에 가족개념의 다양성이 논의되고 생애미혼으로 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증가하고 있지만, 그것도 남녀 모두 여전히 1~2%에 머물고 있어서, 그 숫자는 구미 선진국의 6~15%과 비교할 때 상당히 낮은 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젊은 세대의 미혼율의 점진적 상승은 생애미혼율은 점진적으로

상승시킬 수 있는 전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평생 결혼할 의사가 없는 사람은 여전히 대단히 적고, 최근에도 생애독신의 지향이 그렇게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찾아보기 힘들다. 우리 사회에서는 여전히 모두가 결혼을 해야 한다고 하는 “보편혼(普遍婚)”의 관행이 큰 힘을 행사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2) 유배우 출산율의 변화

<표 3>의 연령별 유배우 출산율은 연령별 출산율과 비교할 때, 30대 미만에서는 큰 차이를 이루고 있지만, 30대 이상에서는 연령별 출산율과

<표 3> 연령별 유배우 출산율 (F_≡): 1960~2000

연령 \ 연도	1960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24	442	456	456	478	404	423	426	377	364
25~29	368	367	363	304	286	194	219	253	255
30~34	297	265	218	154	121	44	55	76	97
35~39	217	181	113	62	43	10	10	16	19
40~44	114	91	47	24	17	2	2	3	3
45~49	23	18	17	6	7	1	0	0	0
유배우 출산율 (20-49) (TMFR)	7.27	6.88	6.07	5.14	4.39	3.37	3.56	3.63	3.69

거의 일치한다. 이것은 앞에서 보았듯이 30대 이상의 여성 유배우율이 90% 이상으로, 그 기준이 되는 대상이 거의 같기 때문이다.

<표 3>에서 20-49세 여성의 유배우 출산율은 제1단계 출산력 변천의 시작인 1960년의 7.3명에서 제2단계의 출산력 변천의 시작인 1985년에는 3.4명으로 급격히 감소하였고, 1985~2000년의 15년 동안 3.60명을 기준으로 0.1명 정도 약간 밀돌거나 웃도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40년 동안 연령별 유배우 출산율의 변화를 보면, 20~24세는 1960년의 442‰에서 1975년에는 478‰으로 절정에 이르고 있으며, 그 비율은 2000년에 364‰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현상은 25~

29세, 30~34세, 35~39세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25~29세 여성의 경우, 1960년 의 368‰에서 1985년의 194‰로 급격히 감소하였다가, 2000년에는 255‰로 다시 상승하는 추세에 있다. 또 30~34세의 여성도 1960년의 297‰에서 1985년의 44‰로 급격히 감소하였으나, 2000년에는 97‰로 상승하는 추세에 있다. 35~39세의 여성은 1960년의 217‰에서 1985년 10‰으로 감소하였다가 2000년에는 19‰으로 약간 올라가고 있다.

우리는 시계열별 유배우 출산율 변화가 1980년대 이후 지속적인 결혼연령의 상승으로 20~24세와 25~29세의 유배우율이 낮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점을 무시할 수 없지만, 1985년 이후 시작된 제2단계의 출산력 변천 과정에서 출산 수준만이 아니라 출산 속도를 조절하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 단순한 억측은 아님이 분명하다. 또 결혼연령의 상승과 관련하여 실제로 개인 여성들의 혼전임신이 어느 정도 결혼시기를 앞당기고 있는가는 물론, 1997년 한국의 금융위기 이후의 경제상황이 여성들의 출산속도를 어떻게 조절하도록 하였으며, 이것이 어떻게 기간 합계출산율에 반영되는가에 대하여 심층적인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판단한다.

IV. 출생성비의 불균형과 차별출산력

1. 출생성비의 불균형

인구총조사의 자료에 따르면, 제1단계의 출산력 변천이 완료되는 1980년대의 전반부는 일반적으로 0~4세의 성비는 여자 100명당 남자가 약 105~108명 수준을 유지했고, 이의 연도별 차이는 미미했다. 그러나, 제2단계의 출산력 변천이 일어나고 있는 1985~2000년 동안 0~4세의 성비는 여자 100명당 남자 110~116명으로 나타났다.

<표 4>의 출생순위별 성비를 살펴보면, 즉 셋째 이상의 출생성비가 첫째나 둘째의 출생성비보다 훨씬 높다. 한편, 전체 유배우 여성 가운데 세 자녀 이상 출산은 대체수준 이하의 합계출산율이 지속되고 있는 1985년

이후 감소하여 2000년에 10% 미만에 이르러 전체 출생성비에 대한 영향이 별로 크지 않다. 그러나 자연출생성비로부터의 이탈현상이 장기적으로 지속된다면, 해당세대들의 사회화 과정에 수반되는 문제점 외에, 한국사회의 결혼제도, 가족제도, 여성의 지위변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통계청의 자료를 보면, 1997년 이후 첫째와 둘째의 출생성비는 약간씩 정상화되고 있다는 느낌을 주고 있으며, 기존 문헌이 지적하는 21세기

〈표 4〉 출생순위별 출생성비: 1985-2000

출생순위 연도	출생성비	첫째 자녀	둘째 자녀	셋째 자녀	넷째 이상
1985	109.5	106.0	107.8	129.0	146.8
1986	111.7	107.3	111.2	129.0	149.8
1987	108.8	104.1	109.1	138.5	148.0
1988	113.3	107.2	113.2	134.7	182.0
1989	111.7	104.1	112.5	164.5	198.0
1990	116.5	108.5	117.0	188.9	209.3
1991	112.4	105.7	112.5	179.8	194.6
1992	113.6	106.2	112.5	192.0	213.1
1993	115.3	108.5	117.0	189.2	235.8
1994	115.2	106.5	114.7	202.6	224.9
1995	113.2	105.8	111.7	177.5	204.3
1996	111.6	105.3	109.8	164.2	185.1
1997	108.2	105.1	106.3	133.6	153.9
1998	110.1	106.0	108.1	145.0	153.5
1999	109.6	105.6	107.6	142.1	154.7
2000	110.2	106.2	107.4	141.7	154.9

전반부의 결혼시장 혼란도 자연출생성비로부터의 이탈보다는 여성들의 결혼기피 현상과 아울러 결혼 적령기에 있는 상당수의 여성들 중에서 유흥업소, 특히 향락산업이나 윤락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최근 출생성비의 부분적인 개선은 계몽활동 및 관련법의 강화에 기인한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남아선호가 성감별에 의한 인공유산에 미치는 영향이 있음에도 약화되고 있기는 하지만, 남아선호를 가지고 있는 부인의 비율은 크게 변하지 않고 있으며 자녀 중 아들이 없는 경우 아들을 낳기 위한 목적으로 계속출산을 원하는 경향이 강하게 남아 있다. 따라서

자연출생성비의 복원에 다방면의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이것은 이상자녀 수를 넘어서는 “원치 않은” 출산의 증가를 가져옴으로써 현재 진행되는 대체수준 이하의 출산율을 어느 정도 상승시키는데 기여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간단하지 않다. 여기서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계층이 성감별을 통하여 선별출산을 계속한다면,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출산수준은 더욱 낮아지고, 계층별 출산수준의 격차는 더욱 확대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 그 정도가 지나치는 경우에는 인구구조의 불안정성은 물론 인구자질의 문제가 우생학적 관점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2. 차별출산력

<표 5> 모의 현거주지별 연령별 출생아수와 출생아 감소의 지표:
1970-2000 (1970=100)

연령 연도	15	20	25	30	35	40	45	50	평균	15-	20	25	30	35	40	45	50	평균
	-19	-24	-29	-34	-39	-44	-49	-54		19	-24	-29	-34	-39	-44	-49	-54	
	출생아수: 시 부									출생아 감소지표: 시 부								
1970	0.01	0.34	1.59	3.00	3.91	4.61	5.01	5.17	2.11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980	0.01	0.26	1.37	2.37	3.02	3.63	4.10	4.56	1.71	--	76.5	86.2	79.0	77.2	78.7	81.8	88.2	81.0
1990	0.00	0.13	0.95	1.73	2.18	2.63	3.14	3.69	1.42	--	38.2	59.7	57.7	55.8	57.0	62.7	60.7	67.3
2000	0.00	0.06	0.59	1.47	1.81	1.91	2.16	2.53	1.25	--	17.6	37.1	49.0	46.3	41.4	43.1	41.8	59.2
	출생아수: 읍 부									출생아 감소지표: 읍 부								
1970	0.02	0.48	2.01	3.59	4.65	5.40	5.71	5.69	2.85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980	0.01	0.40	1.67	2.78	3.63	4.38	4.86	5.21	2.25	--	83.3	83.1	77.4	78.1	81.1	85.1	91.6	78.9
1990	0.00	0.19	1.17	1.94	2.55	3.17	3.77	4.38	1.78	--	39.6	58.2	54.0	54.8	58.7	66.0	77.0	62.5
2000	0.00	0.13	0.91	1.69	1.94	2.05	2.50	3.07	1.53	--	27.1	45.3	47.1	41.7	38.0	43.8	54.0	53.7
	출생아수: 면 부									출생아 감소지표: 면 부								
1970	0.02	0.58	2.39	3.95	5.03	5.76	6.02	5.92	3.38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980	0.01	0.45	1.92	3.18	4.12	4.88	5.34	5.63	2.91	--	77.6	80.3	80.5	81.9	84.7	88.7	95.0	86.1
1990	0.00	0.20	1.27	2.13	2.84	3.48	4.18	4.77	2.20	--	34.5	53.1	53.9	56.5	60.4	69.4	80.6	65.1
2000	0.01	0.16	0.94	1.74	2.02	2.24	2.73	3.28	1.75	--	27.6	39.3	44.1	40.2	38.9	45.4	55.5	51.8

1) 거주지와 출산율

<표 5>은 1970~2000년의 지난 30년 동안 “면부”의 농촌여성은 “읍부”의 도시여성보다 자녀수가 많으며, “읍부”의 도시여성은 “시부”의 도시여성보다 자녀수가 많았다. 예컨대, 2000년에도, 자녀수는 시읍면부 별로 살

펴보면 15~55세의 평균 출생아수는 1.25명, 1.53명, 1.75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출산경력을 종료했거나 종료할 준비를 하고 있는 40~54세 여성들에게 확실하게 나타나는데, 40~44세의 경우 시읍면별로 자녀수는 1.91명, 2.05명, 2.24명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출산율의 감소 속도가 도시보다 농촌에서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다는 사실이다. 1970년대 15~54세 여성 전체의 연령집단의 출생아 수를 100으로 할 때, 15~54세 여성 전체의 출산율은 “시부”는 1980년 81, 1990년 67, 2000년 59이고, “읍부”는 1980년 79, 1990년 63, 2000년 53으로 나타나며, “면부”는 1980년 86, 1990년 65, 2000년 51로 나타나 농촌이 도시보다 출산력의 감소 폭이 처음은 완만하였지만, 1985년 이후 더욱 빨라지기 시작하였음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2) 교육과 출산율

<표 6>에 의하면, 1970년대 15~54세 여성의 출산율은 불취학·초등학교 졸업자의 경우 3.36명, 중·고등학교 졸업자의 경우 1.27명, 전문·초급대학 이상 졸업자의 경우 1.05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당시 제1단계의 출산력 변천이 진행 중이던 1970년대에는 여성들의 교육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았기 때문에 불취학·초등학교 졸업자와 중·고등학교 졸업자의 출생아수를 비교해보면, 약 2명 정도의 차이가 난다. 이러한 차이도 모의 현거주지 변수와 마찬가지로 상당부분 젊은 층의 혼인연령 상승과 고연령층의 피임·인공유산 등에 의한 출산억제 때문이다.

우리는 <표 6>에서 교육수준이 낮다고 해서 출생자녀수가 더욱 느린 속도로 감소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1970년대 15~54세 여성 전체의 연령집단의 출생아수를 100으로 할 때, “불취학·초등학교” 학력의 여성은 1980년 92, 1990년 89, 2000년 77이고, “중·고등학교” 학력의 여성은 1980년 90, 1990년 93, 2000년 108로 나타나며, “대학교(초급·전문대학)” 학력의 여성은 1980년 131, 1990년 96, 2000년 76으로 나타나,

<표 6>> 모의 교육수준별 연령별 출생아수와 출생아 감소의 지표: 1970-2000
(1970=100)

연령 연도	15-19	20-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평균	15-19	20-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평균	
	출생아수 불취학·초등학교									출생아 감소지표 불취학·초등학교									
1970	0.02	0.60	2.26	3.73	4.73	5.41	5.70	5.68	3.36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980	0.02	0.59	1.97	2.98	3.75	4.43	4.89	5.20	3.09	--	98.3	87.2	79.9	79.3	81.9	84.2	91.5	92.0	
1990	0.00	0.55	1.56	2.18	2.72	3.21	3.78	4.33	2.98	--	91.7	69.0	57.7	57.5	59.3	66.3	76.2	88.7	
2000	0.12	0.43	1.04	1.66	1.96	2.22	2.59	3.01	2.60	--	71.7	46.0	49.0	41.4	41.0	45.4	53.0	77.4	
	출생아수 중·고등학교									출생아 감소지표 중·고등학교									
1970	0.00	0.27	1.42	2.82	3.68	4.31	4.73	4.98	1.27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980	0.00	0.22	1.32	2.31	2.89	3.41	3.82	4.26	1.14	--	81.5	93.0	81.9	78.5	79.1	80.8	85.5	89.8	
1990	0.00	0.14	1.06	1.77	2.19	2.58	3.01	3.45	1.19	--	51.9	84.6	57.7	59.5	59.9	63.6	69.3	93.7	
2000	0.00	0.16	0.87	1.63	1.88	1.94	2.17	2.50	1.38	--	59.3	61.3	49.0	51.1	45.0	45.9	50.2	108.7	
	출생아수 대학교(초급·전문대학 포함) 이상									출생아 감소지표 대학교(초급·전문대학 포함) 이상									
1970	0.00	0.11	1.00	2.21	2.86	3.50	4.00	4.12	1.05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980	0.01	0.09	0.85	1.94	2.43	2.82	3.03	3.46	1.38	--	81.8	85.0	87.8	85.0	80.6	70.5	84.0	131.4	
1990	0.00	0.05	0.59	1.47	1.87	2.20	2.52	2.82	1.01	--	45.5	59.0	66.5	65.4	62.9	55.0	68.4	96.2	
2000	0.00	0.02	0.37	1.28	1.73	1.77	1.92	2.15	0.80	--	18.2	37.0	57.9	60.5	50.6	44.3	52.2	76.2	

지난 30년 동안 고학력 여성들은 상당부분 출산력 감소의 속도에서 약간의 파국효과를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35-44세의 여성들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오히려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보다 출산력 감소의 폭이 크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VI. 장래 출산력의 예측

우리는 대체수준 이하의 출산력 변천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본 연구의 <부록>에 소개된 봉가르츠의 희망자녀수(DFS)와 합계출산율(TFR)의 격차를 설명하는 모형을 바탕으로, 한국의 장래 출산율을 예측하는 방법을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현재 지속되고 있는 대체수준 이하의 출산력은 이들의 외면적 관찰보다는 복잡한 요인들의 결과물이며, 이것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부록>에 언급되는 봉가르츠 연구모형에서 제시된 기대자녀수와 같은 “자녀수요”와 이것을 출산력과 연계하는 2개의 변수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1) 이상자녀수 또는 기대자녀수(DFS) <표 7>에서 보듯이, 한국에서 1960년의 기간 합계출산율은 6.0명이었지만, 15-44세 여성의 이상자녀수는 5.0명이었다. 이것은 자녀의 “잠재적 공급”이 자녀의 “잠재적 수요”를 1.0명 수준에서 앞선 경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자녀공급이 자녀수요를 초과하는 상황이 제1단계의 출산력변천이 완성

<표 7> 기간출산율, 이상자녀수, 그리고 코호트 출산율: 1960~2000

기간 출산율 (Period TFR)		이상자녀수		코호트 출산율 (Cohort TFR)	
연도	합계출산율	15~44세 여성	25~29세 여성	출생연도	합계출산율
1960	5.99	5.0		1935	5.14
1966	5.29	3.9		1940	4.31
1974	3.58	2.8		1945	3.21
1982	2.69	2.5	2.2	1950	2.50
1984	2.09	2.0	1.9	1955	2.17
1987	1.62	2.0	1.9	1960	2.07
1990	1.59	2.1	1.9		
1993	1.67				
1994	1.67	2.1	2.1		
1997	1.54	2.2	2.1		
1999	1.42				
2000	1.47	2.2	2.1		

되는 1983년까지 지속된다(권태환, 1997). 그러나, 1984년 이후에는 상황이 역전되어 자녀수요가 자녀공급을 초과하게 된다. 한마디로 한국의 여성들은 1955년과 1960년의 출생코호트는 이상자녀수에 거의 근접하는 실제 합계출산율을 보이고 있지만, 1985년 이후 제2단계의 출산력 변천이 시작되면서, 이 기간에 관찰되는 합계출산율은 이상자녀수 2.1명을 훨씬 밑돌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최근의 출산력 표본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한국 여성 대부분의 이상자녀수가 2명, 보통 아들 1명과 딸 1명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보건사회연구원, 1997, 2000). 물론 대중소비사회의 도래와 극단적인 개인주의 생활방식이 자녀생육에 관한 비용관념에 전면적 변화를 초래하여,

“잠재적 자녀수요”가 2명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

<표 8> 출생순위별 합계출산율, 평균초혼연령과
평균출산연령: 1985~2000

출생순위	1985	1990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합계출산율(여자 1명 당)								
1	0.85	0.83	0.79	0.76	0.75	0.72	0.72	0.70
2	0.64	0.61	0.71	0.67	0.65	0.61	0.57	0.62
3+	0.21	0.13	0.14	0.15	0.15	0.15	0.13	0.15
합계	1.70	1.57	1.64	1.58	1.55	1.48	1.42	1.47
평균초혼연령(세)								
	24.1	24.8	25.4	25.5	25.7	26.1	26.3	26.5
평균출산연령(세)								
1	24.9	25.9	26.5	26.7	26.9	27.2	27.4	27.9
2	26.5	28.0	28.8	28.9	29.1	29.3	29.4	29.7
3+	29.6	30.3	31.9	32.0	32.1	32.2	32.3	32.4
합계	26.0	27.1	28.0	28.1	28.3	28.5	28.7	29.1
수정합계출산율(여자 1인당)								
1	0.94	1.04	0.90	0.84	0.94	1.02	0.90	1.40
2	0.71	0.87	0.85	0.74	0.81	0.76	0.63	0.89
3+	0.23	0.15	0.16	0.17	0.19	0.17	0.14	0.17
합계	1.88	2.06	1.91	1.75	1.94	1.95	1.67	2.46

다. 현재로서는 한국사회가 어떤 유형의 사회정책, 특히 가족정책을 추진 할 것인가와 사회경제적 여건과 생활방식이 개인주의화하느냐에 따라 한국사회의 현 부부들이 생각하는 “잠재적 자녀수요”는 변화할 가능성도 있음을 지적하여야 할 것이다.

(2) “원치 않은” 출산율(F_{1p}) 제1단계 출산력 변천의 후반부에 이르면, 부부들 사이에서 “원치 않은” 출산율은 감소하는데, 그 이유는 효율적인 피임방법과 그것을 보완하는 인공유산의 활용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추세는 제2단계의 출산력 변천이 계속되는 21세기의 전반부에도 그대로 지속될 것이라고 예측되는데, 그것은 새로운 피임방법의 개발로 완전 피임사회에 근접할 개연성이 높아질 것이다. 또, 현재보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술방법이 개발된다면, 인공유산에 대한 의존도도 결코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결국, 출산력을 잠재적 수요수준으로 제한할 수 있는 능력은 21세기의 전반부에도 지속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크며, “원치 않은” 자녀의 출산은 매우 희귀한 현상이 될 것이다. 물론, 이러한 추이에 대한 예외적인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겠는데, 그것은 “모성보호(母性保護)” 또는 “자연출생성비의 회복”이라는 명분으로 인공유산완전히 불법화하여, 서비스 자체에 대한 접근을 완전히 봉쇄하는 경우가 될 것이다.

(3) 출산연령의 상승(F_t) 출산연령의 출산억제효과는 출산연령이 올라가는 한 항상 나타나게 마련이다. 출산연령이 상승하지 않는다는 가정 아래 구해진 <표 8>의 출산속도의 효과를 제거한 수정합계출산율(TFR')은 실제로 관찰되고 있는 기간합계출산율(TFR)보다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실제로 출산속도의 효과를 제거한다면, 우리가 현재 우려하고 있는 장래의 노동력 부족이나 고령화사회에 대한 우려는 거짓일 수 있을 것이다. 어쩌면, 원칙적으로 출산연령의 상승은 과거 수십년 동안 출산억제효과를 가져 오는데 기여하였지만,

<표 9> 봉가르츠 모형에서의 합계출산율과 희망가족수의 관계: 1985~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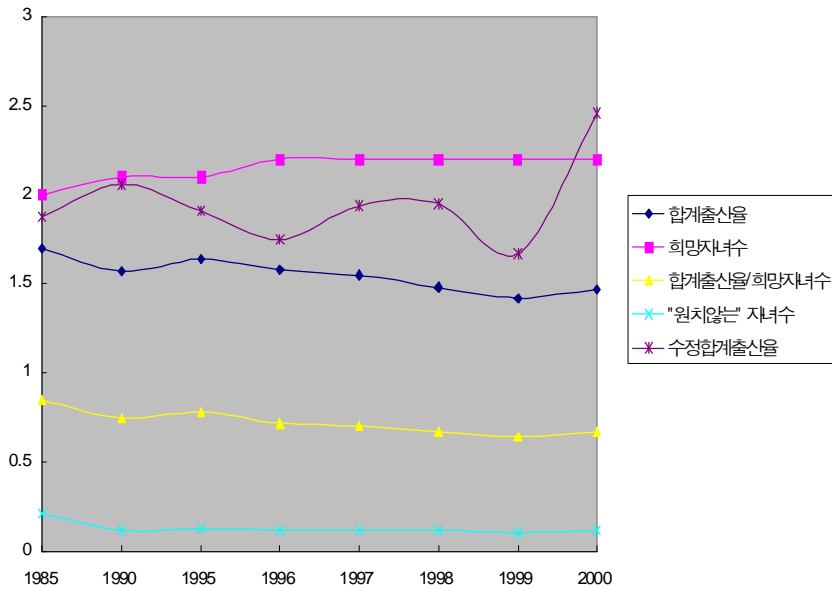
	1985	1990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1) 합계출산율(TFR)	1.70	1.57	1.64	1.58	1.55	1.48	1.42	1.47
(2) 희망자녀수(DFS)	2.00	2.10	2.10	2.20	2.20	2.20	2.20	2.20
(3) 합계출산율/희망자녀수 (TFR/DFS) [(2)/(1)]	0.850	0.748	0.781	0.718	0.705	0.673	0.645	0.668
(4) “원치않는” 자녀수 (UWIFR)	0.220	0.117	0.126	0.120	0.120	0.120	0.104	0.120
(5) “원하는” 합계출산율 (WIFR) [(1) - (4)]	1.490	1.453	1.514	1.460	1.430	1.360	1.316	1.350
(6) 출산속도 효과를 제거한 수정합계출산율 (TFR')	26.0	27.1	28.0	28.1	28.3	28.5	28.7	29.1
출산억제(축진)요인의 추정효과								
(7) “원치않는” 자녀수의 출산축진효과(F_u) [(1)/(2)]	1.141	1.081	1.083	1.082	1.084	1.088	1.079	1.089
(8) 출산속도의 출산억제효과 (F_t) [(1)/(3)]	0.904	0.762	0.859	0.903	0.799	0.759	0.850	0.598
(9) 기타변수의 출산억제효과 (F')[(1)/((2)*(7)*(8))]	0.824	0.908	0.840	0.735	0.814	0.814	0.703	1.027

주: “원치 않은” 자녀수의 출산축진효과(F_u), (8) 출산속도의 출산억제효과 (F_t), 기타변수의

출산억제효과 (F')는 부록에 있는 방정식 (5), (6), (9)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함.
 합계출산율(TFR)은 <그림 1>, 희망자녀수는 <표 7>, 출산속도를 제거한 수정합계출산율은 <표 8>을 참고할 것.

궁극적으로 출산연령이 더 이상 상승하지 않을 것이고, 그 때에는 이 요인의 출산억제효과가 제거되면서 출산율은 상승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은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으며, 이것의 구체적 현실성을 가족정책, 또는 좀 더 넓은 사회정책의 맥락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림 2> 합계출산율과 희망자녀수의 관계



우리는 이 글의 앞에서 합계출산율과 희망자녀수의 관계를 설명하는 봉가르츠의 모형을 제시하면서 논의한 내용을 <표 9>에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여기서 “원치 않은” 자녀수의 출산촉진효과는 1985년의 14%의 최고 수준에서 1990년부터 2000년까지 8%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것은 제1단계의 출산력 변천이 진행 중이었던 당시의 “원치 않은” 자녀수가 20%대를 넘는 것과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다. 어쩌면, 21세기 전반부에 피임이나 인공유산에 더욱 더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서 이상자녀수를 만족스럽게 실현할 수 있다면, “원치 않은” 자녀수의 출산촉진효과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고, 현재 관찰하고 있는 저출산은 더욱 더 낮은 저출산 상태의 부정적 결과를 야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다음은 출산속도의 출산억제효과인데, 이것은 혼인연령의 상승과 출생순위별 출산연령이 상승이 있는 연도에 강하게 나타나는데, 예컨대 2000년에는 출산속도의 지연이 기간출산율을 40%나 감소하는데 기여하였으며, 1990년과 1997년에도 약 25%대의 기간출산율을 감소시켜, 기간출산율이 대단히 낮은 형태로 표현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한편, 기타요인의 출산억제효과는 1999년에 26%와 30%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당시의 사회경제적 여건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추측되며, 2000년의 기타요인은 3% 정도의 출산촉진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이른바 “새 천년”을 맞이하여 봉가르츠의 모형이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약간의 경쟁적 선호요인이 출산율을 올리는 방향으로 결과라고 생각된다.

이제 우리가 위에서 기타요인으로 간주된 영유아사망률(F_r), 성선회의 문제(F_g), 경쟁적 선호 및 비자발적 요인(F_i)에 대해서는 여전히 그것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가정하였다. 여기서는 이것들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에서 이들 3개 요인이 희망자녀수와의 관계에 어떠한 작용을 할 것인가를 간단히 언급하고자 한다.

(1) 영·유아 사망률 (F_r) 한국의 경우, 0세의 사망률은 10% 이하이며, 최근의 사망동태통계는 영아사망률이 약간씩 올라가서 의료사고문제의 빈발을 예시하고 있지만, 그것이 출산율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다. 1~4세의 사망률은 1% 수준으로 구미 선진국과 비교해도 결코 높은 편은 아니다. 한국의 경우에도 1970년대를 지나면서 현재 평균수명은 비약적으로 증가하여 남자 71.7세, 여자 79.2세로 평균 75.6세에 이르고 있다(통계청, 2002). 한국도 신생아들 중 성년에 이르기 전에 사망하는 경우는 2~3%에 불과하며, 이것이 21세기 전반부의 합계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은 무시하여도 별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2) 성선회의 문제 (F_g) 남아선호의 문제는 한국 출산력 변천의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출산력 저하를 저해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1975년

에는 “가족계획을 넘어서(beyond family planning)”라는 표현을 사용하기 까지 하였다. 최근 페미니즘 사회운동이 발전하면서 아들과 딸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한국인의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 남아선호사상이 완전히 구시대적 유산이 될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다. 물론, 성선별 인공유산은 남아선호사상으로 인한 다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상당부분 제거하였다. 성선별 인공유산의 관행은 출생성비를 왜곡하는 경우가 있어서 사회문제로 비약하고 있지만, 이것은 오히려 출산율을 낮추는데 절대적 기여를 하여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물론 이것 앞에서 지적인 것처럼, 한국의 부부들에게 이상자녀수, 곧 자녀에 대한 잠재적 수요가 줄어들고 셋째 자녀가 아니라 둘째 자녀나 심한 경우에는 첫째 자녀에서부터 성선별 인공유산을 실천에 옮기는 경우에는 현재 관찰되고 있는 기간 합계출산율을 낮추고, 따라서 대체수준 이하로의 출산력 저하 현상을 더욱 가속화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3) 비자발적 출산억제 요인과 경쟁적 선호들(F₁) 한국사회에서 제 1단계 출산력 변천을 완료하고, 제2단계의 출산력 변천으로 진입하면서, 출산개시연령과 생애미혼율은 상승하여 왔다. 이혼율도 예외는 아니다. 이러한 추이는 신혼부부들이 출산의 고령화로 인한 가임력의 조기후퇴나 이혼·사별 등의 혼인해소로 “이상자녀” 또는 “기대자녀”의 수를 실현할 수 있다.

<요약자료>

한국의 출산력: 추이와 전망

전 광 희

(충남대학교)

이 연구는 (1) 한국의 출산력 변천을 단계별로 설명하면서 그것에 개입하는 중간변수의 특성을 살펴보고, (2) 출생성비 불균형과 차별출산력의 문제를 검토하고, (3) 최근의 대단히 낮은 출산율이 21세기의 전반부에도 그대로 지속될 것인가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는 장래 출산율의 예측과 관련하여 합계출산율과 희망자녀수의 관계를 설명하는 봉가르츠의 모형을 제시한다. 여기서 “원치 않은” 자녀수의 출산촉진효과는 1985년의 14%의 최고수준에서 1990년부터 2000년까지 8%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것은 제1단계의 출산력 변천이 진행 중이었던 당시의 “원치 않은” 자녀수가 20%대를 넘는 것과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다. 어찌면, 21세기 전반부에 피임이나 인공유산에 더욱 더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서 이상자녀수를 만족스럽게 실현할 수 있다면, “원치 않은” 자녀수의 출산촉진효과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고, 현재 관찰하고 있는 저출산은 더욱 더 낮은 저출산 상태의 부정적 결과를 야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다음은 출산속도의 출산억제효과인데, 이것은 혼인연령의 상승과 출생순위별 출산연령이 상승이 있는 연도에 강하게 나타나는데, 예컨대 2000년에는 출산속도의 지연이 기간출산율을 40%나 감소하는데 기여하였으며, 1990년과 1997년에도 약 25%대의 기간출산율을 감소시켜, 기간출산율이 대단히 낮은 형태로 표현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한편, 기타요인의 출산억제효과는 1999년에 26%와 30%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당시의 사회경제적 여건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추측되며, 2000년의 기타요인은 3% 정도의 출산촉진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이른바 “새 천년”을 맞이하여 봉가르츠의 모형이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약간의 경쟁적 선호요인이 출산율을 올리는 방향으로 결과라고 생각된다.

사 망 력

김 태 헌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I. 연구목적 및 배경

이 연구는 우리 사회의 발전이 국민의 보건 또는 인구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밝히는 데 필요한 시계열적인 사망력 지표의 작성과 경제사회현상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에서는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인구관련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사망력의 변화와 패턴을 분석하여 인구현상의 변화를 이해할 것이다. 그리고,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인구의 특성별 차별사망력을 분석하여 인구 특성별 인구집단의 보건과 사망순준의 차이를 밝힘으로써 인구현상의 변화를 이해하고, 국민 모두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사망원인을 분석함으로써 사망률의 감소와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도록 노력하였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자료

이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용할 수 있는 주요 자료는 다음과 같다. 이 자료들 외에도 사망의 특성이나 추세의 변동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는 정부의 공식통계를 중심으로 별도 활용할 것이다.

1)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 2) 인구동태통계
- 3) 1995 및 2000년 기준 장래인구추계
- 4) 사망원인통계
- 5) 한국인의 생명표

2. 연구 범위

이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 중에는 1925년부터 이용이 가능한 경우가 있지만 인구총조사나 사망신고자료의 직접 이용이 가능한 경우는 1960년 이후의 총조사결과와 1970년 이후의 사망신고자료, 그리고 1980년 이후의 사망원인자료이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특별히 자료를 보완하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위의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여 우리 나라 사망력의 변화와 패턴을 분석하였다. 여기에는 보통사망률을 이용하여 우리 나라의 사망력 변천을 연구하고, 성, 연령별 사망률의 변화를 이용하여 우리 나라 사망력 유형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사망력의 변동원인을 규명하고 장래 사망력변천연구를 위한 차별사망력분석에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인구학적 변인(성, 연령)과 사회적 변인(교육정도, 혼인상태)으로 한정하였으며, 대상 연령은 자료의 신빙도와 분석결과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25세부터 64세까지로 한정하였다.¹⁾ 끝으로, 사망원인의 특성과 변화에 대한 분석에서는 17대분류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설명과정에서 필요할 때에만 중분류 자료를 이용하였다. 그리고, 사망원인별 차별사망력분석에서 이용한 인구 및 사회경제적 요인은 위의 차별사망력분석에 준하였다.

1) 사회경제적 자료의 해당 연령은 변인별로 5세(교육정도) 또는 15세(직업, 혼인상태) 이상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24세까지는 대부분 교육중이며, 사망자수도 극소함으로 차별사망력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그리고, 65세 이상에서는 사망자료의 정확성 문제(지연신고, 낮은 의사 진단율 등)가 있고(T.H.Kim, 1990 참조), 사망자수가 어떤 특성에 편중(예, 무직, 사별, 초등졸 등)되기 때문에 분석의 효과가 낮아진다.

III. 사망력의 변화

1. 사망력 변천

Omran (1971 및 1977)은 사망력의 변화를 세가지의 역학변천모델 - 고전 또는 서구모델(classic or Western model), 가속모델(accelerated model), 지연모델(delayed model) -을 이용하여 설명하고 있다. 고전 또는 서구모델은 과거 200여년 동안 서구사회에서 사망력이 점진적으로 낮아진 경우이며, 가속모델은 사망력 변천이 늦게 시작하였지만 고전모델 보다 빨리 떨어지는 경우이다. 지연모델은 사망률이 2차 대전 이후에 현대의술과 대량의 예방약품공급으로 급속히 떨어졌지만 1970년대 말 현재 선진국의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개발도상국의 사망유형에 해당된다.

사망력 변천을 설명한 위의 모델들을 중심으로 사망력의 변천유형을 <표 1>에 재 정리하였다. 개발도상국중에서 1980년대 이후 서구사회의 사망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 평균수명 70세 이상에 도달한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를 구분하여 위의 세 가지의 모델을 네 가지의 유형(type)으로 구분하였다. 현대의학의 발달이 이루어지기 전 사망률의 감소는 사회경제적 발달과 생활환경의 개선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 후, 특히 선진국에서는 의학의 발달이 사망률의 감소를 더욱 촉진시켜 주었다. 그러나, 늦었지만 사망률의 감소가 빨리 진행되고 있는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에서는 사망력의 변천이 처음에는 보건정책과 서구의 현대의술의 도입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다음으로 사회경제적 발달의 영향을 받았다.

한국의 사망력 변천은 1900년경부터 시작되었다. 평균수명의 남녀 평균이 1906-10년에 23년 정도(Ishi, 1972)였으나 1955-1960년에는 52년(고갑석, 김일현, 1964)으로 증가하였다. 1980년대 말에는 남녀 평균 70년을 넘어섰다(통계청, 1999:54). 한국의 사망력 변천은 <표 1>에서 유형 II와 IV의 특성을 포함하고 있는 유형 III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표 1> 사망력 변천과정

	사망변천 유형			
	I	II	III	IV
지 역	서유럽, 북미 호주, 뉴질랜드	동과 남유럽 일본	‘경제사회개발 주도’ 개발도상국	기타 개발도상국
사망률감소의 주요원인	생활수준의 향상	사회경제개발후 공중보건향상	공중보건향상후 사회경제개발	현대의술의 도입과 확산중
사망력변천의 시기				
시작(평균수명 30-50년)	18세기말에서 19세기초까지	19세기	19세기말에서 20세기초까지	20세기 초
변천(평균수명 50-70세)	1920년대에서 1950년대초까지	1930-1950년대	1950년 이후	1950년 이후
끝(평균수명 70세)	1950년대	1950-1960년대	1970년대 이후	(진행중)

자료: Kim (1990: 143, Table 5-1)을 보완.

2. 보통사망률

보통사망률의 추이로도 우리 나라 사망률의 변천이 1900년대에 들어오면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10-15년에 우리 나라의 보통사망률이 인구 1,000명당 33.7이던 것이 산업화가 시작되어 1960-65년에는 3분의 1 이하인 10.5로 추정하고 있다(<표 2> 참조). ‘베이비 붐’으로 높아진 출산율이 낮아지기 시작한 1960년대 후반에 들어와서 보통사망률이 인구 1,000명당 10이하로 낮아지면서 가장 높은 인구증가률을 기록하였다. 이후에도 보통사망률은 조금씩이나마 계속 감소하여 1990년에 5.8에 도달한 후 6.0미만에서 머무르고 있는 반면에 출생율은 계속 낮아져서 인구증가폭은 출생률의 감소정도 만큼씩 낮아졌다.

<표 2> 보통사망률의 추이, 1910-2000

연 도	보통사망률(1000명당)	연 도	보통사망률(1000명당)
1910-15	33.7	1970	8.0
1920-25	29.5	1975	7.7
1930-35	23.3	1980	7.3
1940-45	19.5	1985	6.0
1950-55	14.3	1990	5.8
1960-65	10.5	1995	5.4
		2000	5.2

자료: 1) 1910-1965: 조사통계국 추정치(공세권 외, 1983: 62).

2) 1970 이후: 통계청(2001b: 28).

3. 성, 연령별 사망률의 변화

사망신고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한 연령별 사망률은 <표 3>과 같다. 남녀 모두 모든 연령층에서 크게 감소하고 있다. 1970년 이후 30년 동안 남자의 보통사망률이 37% $\{1-(9.2/5.8)\}$ 감소한 반면에 여자의 경우는 31% 감소하였다. 연령별 사망률의 경우는 남녀 모두 20대까지 사망률의 감소속도가 빨랐으며(15-19세에서 남녀 각각 83%와 88% 감소), 30대 이후에는 감소속도가 서서히 둔화되었지만 감소의 속도는 남자보다 여자의 경우가 빨랐다. 그러나 40대 이후부터 남녀의 차는 점차 줄어서 70-74세에서 지난 30년간 사망률의 감소는 남녀 각각 54%와 52%로 비슷해졌다.

4. 성, 연령별 기대여명

1960년대까지의 생명표 추정을 위한 기초자료나 추정방법의 차이 때문에 직접 비교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나 그 당시의 주요 추정결과를 정리하였다. 그리고 사망신고자료의 신뢰도가 높아진 1990년대의 자료를 이용하여 통계청(1999 및 2001a)에서 1971년 이후의 생명표를 작성하였으며 그

시계열을 <표 4>에 수록하였다.

<표 3> 성·연령별 사망률

(단위 : 천 명당)

	남 자			여 자		
	1970	1990	2000	1970	1990	2000
전체	9.2	6.6	5.8	6.8	5.0	4.7
0~4	4.7	3.7	1.3	4.5	3.2	1.2
5~9	2.6	0.7	0.3	2.3	0.5	0.2
10~14	2.1	0.6	0.2	1.7	0.4	0.2
15~19	3.5	1.2	0.6	2.5	0.5	0.3
20~24	4.2	1.5	0.9	3.5	0.7	0.4
25~29	3.8	1.9	1.1	3.7	0.8	0.5
30~34	4.0	2.5	1.4	3.3	1.0	0.7
35~39	5.5	3.7	2.2	4.1	1.4	0.9
40~44	9.1	5.4	3.6	5.3	2.0	1.3
45~49	14.9	9.0	5.5	7.0	3.4	1.8
50~54	22.4	12.3	7.9	10.0	4.7	2.7
55~59	33.1	17.1	12.7	14.2	6.9	4.5
60~64	47.5	26.7	18.2	20.4	11.1	7.0
65~69	72.9	40.8	26.3	31.9	18.5	12.0
70~74	95.5	64.4	43.7	49.1	33.0	23.8
75~79	225.2	97.0	74.6	179.2	55.9	44.0
80+	-	187.0	152.1	-	137.1	121.2

주 : 1970년의 75~79세는 75세 이상임.

자료 : 통계청, 『2000인구동태통계연보』, 2001b.

IV. 사망유형

1. 성, 연령별 사망유형

<표 5>에서도 유사한 유형의 성별 사망률의 유형을 볼 수 있었다. 사망률의 추정방법상의 차이로 사망률의 성비의 절대 수준이 권태환·김태현(1990)의 결과와 다르지만 5-9세와 25-29세의 성비가 극히 낮은 현상을 볼 수 있다. 5-9세에서 성비가 낮은 것은 전통적으로 남아에 대한 선호가 강한 사회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며, 20대에서 낮은 것은 출산수준이 높고,

의료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회에서 모성사망률이 높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들은 출산수준이 낮아지고, 사회경제발전이 이루어질 때 사라지게 된다. <표 5>에서 보면 1980년경부터 이러한 현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으며, 성비는 연령별로 차이는 있으나 40대와 50대에서 성비가 300 전후의 높은 수준까지 상승하고 있다.

<표 4> 연도별 평균수명의 추이, 1971-99 (단위 : 연)

연도	남자	여자	차(여자 - 남자)
1955-60	51.10	53.70	2.60
1960-65	52.70	57.70	5.00
1966	59.70	64.10	5.60
1971	58.99	66.07	7.08
1973	59.61	67.03	7.42
1975	60.19	67.91	7.72
1977	60.75	68.74	7.99
1979	61.28	69.51	8.23
1981	62.28	70.54	8.26
1983	63.21	71.47	8.26
1985	64.45	72.82	8.37
1987	65.78	74.04	8.26
1989	66.84	75.08	8.24
1991	67.74	75.92	8.18
1993	68.76	76.80	8.04
1995	69.57	77.41	7.84
1997	70.56	78.12	7.56
1999	71.71	79.22	7.51

- 자료 : 1) 1955-60: 고갑석, 김일현(1964).
 2) 1960-65: 이동우(1973).
 3) 1966: 조사통계국(1971)
 4) 통계청. 『1971~1997년 생명표』. 1999.
 5) 통계청. 『1999년 생명표』. 2001a.

<표 5> 여자 사망률에 대한 남자 사망률의 비

	1970	1980	1990	2000
전체	134.5	135.1	133.3	122.9
0~4	104.0	100.1	117.3	107.4
5~9	114.1	106.6	128.4	147.6
10~14	124.2	108.8	139.2	143.8
15~19	139.2	136.6	225.7	196.8
20~24	120.1	153.5	199.2	225.0
25~29	102.3	142.3	220.8	223.4
30~34	120.9	150.5	250.3	210.6
35~39	133.6	180.0	265.7	250.0
40~44	171.1	212.1	264.5	281.3
45~49	211.0	220.2	264.5	313.6
50~54	225.0	227.6	263.1	294.4
55~59	232.9	247.3	248.9	279.7
60~64	233.3	245.9	240.8	259.3
65~69	228.1	227.5	220.8	218.6
70~74	194.5	216.5	195.4	183.3
75~79	125.7	205.3	173.3	169.3
80+	-	183.4	136.4	125.5

주 : 1) 사망률의 성비=(남성사망률/여성사망률)×100임

2) 1970년의 75~79세는 75세 이상임.

자료 : 통계청. 『2000인구동태통계연보』, 2001b.

2. 한국 사망유형과 모델 생명표

<표 6>은 우리 나라의 1971, 1981 및 1991년의 생명표에 나타난 생잔율을 Coale-Demeny의 서부모델생명표의 생잔율과 비교하고, 그 생잔율의 수준에 맞는 level을 정리한 것이다. 1971년의 유형을 보면 35-39세의 level(19.7)을 정점으로 빠르게 낮아지고 있다. 즉, 10-14세부터 30대까지는 level 18-19를 유지하였으나 40대 이후에 낮아지는 level은 50대에서 level 14.2까지 떨어졌다. 이러한 유형은 사망률이 낮아지면서 변화하였다. 1981년의 경우 40대 이후의 감소현상이 뚜렷하지 않았으며, 1991년에는 50대 이후에 level이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우리 나라의 남자 사

망유형이 극동모형으로 그 특성이 뚜렷하였으나 사망수준이 낮아지면서 선진사회의 평균모형으로 접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6> 한국 남자 사망유형과 Coale-Demeny의 서부모델의 비교, 1971-1991

기대수명	1971	1981	1991
0	149	170	201
5	160	195	220
10	187	215	232
15	182	205	221
20	177	206	221
25	188	202	220
30	190	201	216
35	197	195	208
40	180	187	209
45	170	184	208
50	160	182	214
55	142	181	225
60	145	189	224
65	140	175	231
70	176	175	234
75+	125	143	211

주 : '75+'는 T_{75}/T_{80} 으로 생산율을 계산하여 비교하였음.

V. 차별 사망력

1. 교육정도별 차별 사망력

우리 나라의 성인(25-64세) 사망률은 교육수준이 높아질 수록 낮아지는 역의 관계를 갖고 있다(<표 7>참조). 이 사망수준과 교육정도의 역의 관계는 55-64세를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강하게 나타났으며, 25-34세 연령층을 제외하면 1970-72 이후 2000년까지 모두 여자보다 남자에게서 강하였다.

<표 7> 성, 연령(10세 계급) 및 교육정도별 사망비의 변화,
25-64세, 1970-2000

연령 및 교육정도	남자				여자			
	1970 ¹⁾	1980 ²⁾	1990	2000	1970 ¹⁾	1980 ²⁾	1990	2000
25 - 34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무 학	3.41	8.51	6.48	8.16	2.20	8.55	14.77	15.58
초 등	1.58	2.30	4.42	7.15	1.12	1.49	3.03	8.54
중·고	.58	.63	.96	1.35	.44	.46	.74	1.11
초대이상	.35	.32	.40	.48	.29	.38	.50	.57
35 - 44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무 학	1.53	3.35	4.69	4.40	1.15	2.41	4.06	4.59
초 등	1.38	1.77	2.81	4.64	1.09	1.07	1.64	2.86
중·고	.60	.58	.78	1.07	.50	.51	.67	.89
초대이상	.36	.30	.33	.36	.37	.33	.44	.45
45 - 54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무 학	.96	1.47	1.77	2.41	.95	1.17	1.28	2.07
초 등	1.32	1.34	1.67	2.17	1.19	1.02	1.19	1.39
중·고	.65	.65	.77	.89	.66	.62	.20	.79
초대이상	.41	.39	.43	.43	.52	.55	.49	.54
55 - 64 ³⁾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무 학	.84	.92	1.08	1.32	.89	.91	.92	1.09
초 등	1.54	1.29	1.32	1.37	1.70	1.27	1.16	1.13
중·고	.69	.74	.84	.90	1.02	.88	7.63	.77
초대이상	.45	.50	.54	.57	.46	.78	.53	.52

주 : 1) 1970 - 1972 년간의 평균치임. 2) 1979 - 1981 년간의 평균치임.
3) 1990년은 55-59세 자료임.

자료 : 1) 통계청(해당연도). 『인구동태 통계연보』
2) 통계청(해당연도). 『인구주택 총조사 보고』 3) Kim (1990 : 65).

3. 혼인상태별 차별 사망률

우리 나라의 결혼상태별 사망수준의 차이의 유형은 지난 30년 동안 뚜렷이 변화하고 있다(<표 8>참조). 유배우 인구와 미혼 인구간의 사망수준

<표 9> 측정사망률과 표준화 사망률의 성 및 혼인상태별 사망비,
45-54, 2000

성 및 혼인상태	측정사망률의 비 ¹⁾	표준화사망률의 비 ²⁾
<남 자 45 - 54>	1.00	1.00
미 혼	4.10	3.31
유배우	.83	.85
기 타 ³⁾	2.62	2.38
<여 자 45 - 54>	1.00	1.00
미 혼	3.46	4.39
유배우	.92	.86
기 타 ³⁾	1.85	1.50

- 주 : 1) 사망신고자료를 직접 이용하여 작성한 성 및 혼인상태별 사망률의 비 임.
 2) 45-54세 전체 사망자의 성 및 교육정도별 구성비를 기초로 혼인상태별 사망률을 표준화하여 계산한 것임.
 3) 사별, 이혼 및 별거를 포함.

<표 9>에서 대표적인 연령계층인 45-55세의 성 및 혼인상태별 사망비를 표준화하여 측정자료와 비교하였다. 교육수준의 영향을 제거한 후에도 남녀 모두 미혼자와 사별·이혼 및 별거자의 사망률이 유배우자의 사망률에 비하여 약 2배(기타 여자)에서 약 4배(미혼남자)나 높은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혼인상태별 사망률의 차이는 교육정도별 차이와 함께 우리 나라 사망수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4. 교육정도와 혼인상태별 인구구성비의 변화가 사망수준에 미치는 영향

<표 10> 은 2000년에 측정한 10세 연령계급별, 교육정도별 및 혼인상태별 사망률에 대한 추정사망률(2000년의 특성별 인구구성비가 1980년

의 구성비와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 계산)의 상대적 사망비와 2000년에 추정사망률로부터 측정사망률의 증감정도(백분비)를 보여주고 있다.

교육정도별 인구의 구성비에 기초를 둔 상대적 사망률의 비는 가장 젊은 연령계급인 25-34세에서 남자의 경우 약 2.5배이고, 여자의 경우 약 4.1배나 되었으며, 연령이 높아지면서 이 비는 급격히 떨어져서 남·여 모두 1.1-1.3배 정도에 이르게 된다. 남·여 모두 젊은 연령계층에서 사망수준의 감소정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표 3> 참조)은 최근 교육수준의 향상이 사망수준의 감소에 강력하게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며, 남·여 모두 연령이 높아지면서 백분비의 차이가 감소하는 것은 연령과 함께 교육수준의 향상의 영향이 감소한다는 것을 뜻한다고 하겠다.

<표 10> 교육수준 및 혼인상태별 1980년의 연령계급별 인구구성비의 변화에 따라 2000년의 사망률의 상대적 비와 사망수준의 변화정도

연령 계급	교육수준 ¹⁾				혼인상태 ²⁾			
	남자		여자		남자		여자	
	$R_j^{(3)}$	$P_j^{(4)}(\%)$	$R_j^{(3)}$	$P_j^{(4)}(\%)$	$R_j^{(3)}$	$P_j^{(4)}(\%)$	$R_j^{(3)}$	$P_j^{(4)}(\%)$
25-34	2.521	-60.3	4.083	-75.5	0.879	13.8	0.910	9.9
35-44	2.203	-54.6	2.363	-57.7	0.781	28.0	0.952	5.0
45-54	1.550	-35.5	1.531	-34.7	0.897	11.5	1.019	-1.9
55-64 ⁵⁾	1.295	-22.8	1.108	-9.7	0.986	1.4	1.049	-4.7

주 : 1) 4계급 : 무학, 초등, 중·고, 초대이상

2) 3계급 : 미혼, 유배우, 기타

3) 2000년의 계급별 인구구성비가 1980년과 같고 2000년의 측정된 사망률을 1.0으로 놓았을 때 2000년의 연령계급의 사망률의 상대적 비.

4) 1980년 각 특성별 인구 구성비의 비율의 변화에 따른 연령계급 j의 사망률의 상대적 비(R_j)로부터 2000년에 측정된 사망률의 상대적 비(1.0)로 변화한 정도(%).

5) 교육수준의 분석자료는 55-59세의 연령계층을 대상으로 하였음.

교육정도에 의한 결과와는 반대로, 혼인상태별 인구구성비에 기초를

둔 상대적 비는 남자의 경우 모든 연령계층에서, 여자의 경우 25-44세 연령계층에서 1.0이하였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이 비는 약간씩 증가하여 가장 연령이 높은 계층(남자 55-64세와 여자 45-64세)에서 약 1.0에 도달하였다. 그러므로 이 상대적 비를 기준으로 사망수준의 변화를 보면 오히려 실측치보다 더 높게 되는데, 이것은 혼인상태별 인구구조의 변화가 오히려 사망수준을 높여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배우 인구의 경우 사망수준이 다른 혼인상태의 인구에 비하여 낮으므로, 우리 나라 남·여의 미혼 인구구성비의 증가는 오히려 사망수준을 높여주는 결과가 된다는 것이다. 혼인상태별 인구구성비의 변화가 사망수준에 미치는 영향도 교육정도별 인구구성비의 변화와 같이 연령이 높아지면서 흐려지고 있다.

VI. 사망원인별 사망력

1. 사망원인의 유형과 변화

1938-42년의 사망원인(권이혁, 1968)을 제 7차 개정 국제질병분류로 재분류하여 보면 소화기계(IX) 호흡기계(VIII), 신경계(VI),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I)에 속한 질병으로 사망한 인구가 전체의 3분의 2(66%)에 해당하였으며(<표 11> 참조), 증상·증후 및 불명확한 병태(XVI)를 제외하면 전체 사망자의 87%가 이들 질병으로 사망하였다(Kim. 1990 : 73-74). 1966년의 사망원인의 유형도 1938-42년과 유사하였다. 중심 사망원인의 질병분류는 VIII, IX, VI 그리고 I 이었으나, 이 4대 분류의 사망자 구성비가 감소한 반면에 'II. 신생물'과 'VII. 순환기계의 질환'에 의한 사망자의 수가 뚜렷하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사망원인의 구조는 1980년 이후 선진국의 유형으로 전환되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특성은 더욱 뚜렷해 졌다.

<표 11> 사망원인(17대 분류)별 사망자 구성비의 변화,
전 연령, 1938-2000

사망원인 ¹⁾	1938-42 ²⁾	1966 ³⁾	1980-81 ¹⁾	1990 ¹⁾	2000 ¹⁾
평균수명	42.6	55.2	66.2	70.8	75.6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I	14.38	11.39	4.41	2.86	2.53
II	.79	4.57	11.87	20.15	24.10
III	.19	.23	.17	.17	.19
IV	.53	2.50	1.00	2.50	4.82
V	.05	1.03	.74	.56	2.63
VI	15.77 ⁴⁾	11.52 ⁴⁾	1.41	1.09	1.17
VII	.99	3.91	28.35	29.86	23.91
VIII	16.80	15.06	5.02	3.98	6.58
IX	19.46 ⁵⁾	15.10 ⁵⁾	8.42	8.10	6.08
X	3.38	1.21	.97	.82	.16
X I	.75	.37	.13	.05	.87
X II	.17	.03	.06	.02	1.28
X III	.23	.37	.36	.44	.02
X IV	.01	-	.25	.61	.54
X V	.51	.01	.05	.06	.38
X VI	23.96	29.21	26.62	13.25	12.93
X VII	2.03	3.49	10.16	15.44	11.79

- 주 : 1) 제 9차 개정 국제질병분류(ICD)를 기초한 제 2 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1979)의 17대 분류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제 10차 개정 국제질병분류를 기초한 제 3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1995)의 눈과 귀의 질환을 ‘VI. 신경계 및 감각기의 질환’에 포함하였음.
- 2) 원래 제 5차 개정 국제질병분류를 기초로 분류한 것(Ishi, 1972 : 153)을 제 7차 개정 국제질병분류에 따라 재분류하였음(Kim, 1990 : 74).
- 3) 제 7차 개정 국제질병분류에 따라 분류한 것임.
- 4) 제 2차 개정 한국표준질병분류의 ‘VII. 순환기계 질환’에 속한 ‘중추신경에 영향을 주는 순환기계 장애’를 포함.
- 5) 제 2차 개정 한국표준질병분류의 ‘I.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에 속한 ‘신생아의 설사’를 제외한 ‘장염·대장염’을 포함.

자료 : 1938-42 : 권이혁(1968 : 50) 1966 : 조사통계국(1968 : 84)
1980-81 : NBOS(1982 : 18) 1990 & 2000 : 통계청(1991 & 2001b)

사망원인의 유형변화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연도별 10대 주요 사망원인을 비교하였다(<표 12> 참조), 1966년에 가장 중요한 사망원인은 폐렴과 결핵이었다. 이러한 질병의 순위는 1980-81년에 크게 바뀌어 가장 중요한 사망원인이 악성 신생물과 고혈압성 질환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1966년에 10대 주요 사망원인이었던 위염 등과 독감, 홍역은 빠지고(1980-81년에), 사고, 간질환, 자살 등이 새로 10대 주요 사망원인으로 포함되었다. 1990년 이후의 주요 사망원인은 악성 신생물,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그리고 운수사고가 4대 원인으로 고정되었다.

<표 12> 10대 주요 사망원인의 변화, 전 연령, 1966-2000

순위	1966 ¹⁾	1980-81 ²⁾	1990 ³⁾		2000 ³⁾	
			사인	사망률 ⁴⁾	사인	사망률 ⁴⁾
1	폐렴	악성신생물	악성신생물	110.4	악성신생물	122.1
2	결핵 ⁵⁾	고혈압성질환	뇌혈관질환	75.6	뇌혈관질환	73.2
3	중추신경계 질환	순환기계질환	심장질환	47.4	심장질환	38.5
4	악성신생물	사고 ⁶⁾	운수사고	39.7	운수사고	25.4
5	위염,장염등	심장질환	고혈압성질환	35.6	간질환	22.9
6	사고 ⁶⁾	결핵 ⁵⁾	간질환	33.8	당뇨병	22.6
7	독감	간질환	당뇨병	11.8	만성하 기도질환	16.8
8	심장질환	기관지염 및 천식	호흡기계결핵	11.0	자살	14.6
9	홍역	폐렴	만성하 기도질환	10.5	고혈압성질환	8.9
10	기관지염	자살	자살	9.8	폐렴	8.2

주 : 1) 제 7 차 개정 ICD 50대 항목 기준. 2) 제 9 차 개정 ICD 55대 항목 기준
 3) 제 2 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사인 순위 선정을 위한 선택 56항목
 의 사망원인 기준 (통계청,2001c : 270-272).

- 4) 5세 이상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입.
- 5) 모든 결핵 포함. 6) 모든 사고 포함.

자료 : 1966 : NBOS(1968)
 1980-81 : NBOS(1982)
 1990 & 2000 : 통계청 (2001c : 8)

2. 성, 연령별 사망원인

1981년 가장 중요한 사망원인은 ‘VII. 순환기계의 질환’이었다(<표 13> 참조). 남녀 모두 전 연령층에서 가장 높은 사망구성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1990년 이후 가장 높은 사망구성비를 보이는 질병분류는 젊은 연령층(35-54세 또는 35-64세)에서 ‘II. 신생물’이었으며, 그 후에는 질병분류 VII의 구성비가 높았다. 또한 2000년 남자 35-54세의 경우에는 ‘XVII. 손상 및 중독’의 사망구성비가 가장 높았다.

성별 사망원인의 전반적인 유형은 비슷하지만 연도별로 연령별 사망원인의 구성비의 차이가 뚜렷한 부분을 찾을 수 있다. 성별 구성비의 차이가 가장 큰 사망원인은 ‘IX. 소화기계의 질환’이었으며, 64세 이하에서 그 차이가 뚜렷하였고 이러한 현상은 2000년까지 동일하였다. 이것은 사망률의 감소와 함께 소화기계 질환에 의한 사망도 감소하였으나 남자의 경우 간질환에 의한 사망률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표 14> 참조).

남자 40-49세의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441.0이었으며, 이것은 여자(148.7)의 2.9배에 해당되어 전체 연령계층에서 사망률의 성비가 가장 높았다. 이때 남자 사망의 5대 주요원인은 악성 신생물, 간질환, 운수사고, 심장질환, 및 뇌혈관 질환이었다. 이 중에서 사망률 성비가 가장 높은 것은 간질환(876.9)이었으며, 운수사고(395.5)와 심장질환(390.6)도 전체평균(296.6)보다 높았다. 40대 전체의 사망률 성비를 1.0으로 놓았을 때 위의 세 질병에 의한 사망률의 상대적 성비는 1.3보다 높았으며, 특히, 간질환

의 경우는 평균 성비의 3배에 해당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상대적 성비는 1980-81년 35-44세의 간질환(4.17)이나 각종 사고(2.81)(Kim, 1990 : 80) 보다 크게 낮아졌다. 이것은 1980년대 이후 우리 나라 남자 사망유형이 극동모형에서 세계 평균 모델인 서부모델에 접근하는 이유라고 할 수 있다.

<표 13> 성, 연령 및 사망원인별 사망자 구성비의 변화,
35세 이상 (10세 계급), 17대 분류, 1981-2000

사망 원인 ¹⁾	1981				1990				2000			
	35-54	55-64	65-74	75+	35-54	55-64	65-74	75+	35-54	55-64	65-74	75+
<남자>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I	5.91	4.71	2.74	1.22	4.31	3.64	3.01	1.94	3.47	2.73	2.77	3.04
II	16.16	16.90	10.36	3.63	24.35	34.34	25.58	10.98	24.86	38.04	36.59	20.42
VII	25.92	30.18	29.10	22.30	21.30	30.06	34.53	35.55	15.74	21.28	25.73	25.20
VIII	1.91	2.60	4.00	4.88	2.13	3.67	4.84	6.23	2.54	4.80	8.21	11.99
IX	14.34	10.59	6.68	4.24	18.57	12.24	6.88	4.49	16.05	9.87	5.48	3.84
XVI	18.30	26.81	42.45	60.64	.59	.77	15.27	33.43	3.65	1.84	4.70	21.59
XVII	13.23	4.99	2.32	1.12	23.51	9.93	5.29	3.25	25.28	11.93	6.51	3.72
기타	4.23	3.22	2.35	1.97	5.24	5.35	4.6	4.13	8.41	9.51	10.01	10.2
<여자>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I	4.86	2.52	1.47	1.11	3.25	1.81	1.50	1.27	2.57	2.01	1.93	1.94
II	22.00	17.22	8.83	2.83	33.69	31.79	19.14	6.47	39.32	36.36	26.45	10.72
VII	29.31	34.02	31.59	22.88	29.74	40.72	42.11	37.21	17.74	28.52	35.03	28.49
VIII	1.81	2.68	4.12	4.44	2.18	2.59	3.83	5.64	2.45	3.54	5.26	8.26
IX	8.75	7.64	5.08	3.96	7.72	6.43	4.44	3.59	6.24	5.23	4.06	3.01
XVI	19.42	28.00	43.90	61.98	.51	.75	17.32	38.80	2.24	1.50	5.45	31.16
XVII	8.26	3.92	2.33	.96	15.75	8.48	4.82	2.52	20.55	9.63	5.54	2.90
기타	5.59	4.00	2.68	1.84	7.16	7.43	6.84	4.50	8.89	13.21	16.28	13.52

주 : 1) 제 3 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제 3 차 개정분류의 '눈과 귀의 질환'을 'VI.신경계질환'에 포함하여 총 17개 분류로 조정하였음.

자료 : 1981 : 조사통계국(1982)
1990 : 통계청(1991)
2000 : 통계청(2001a)

〈표 14〉 남자의 연령별 주요 사망원인별 사망률의 성비, 30-59세(10세계급),
56항목, 2000

연령 및 사망원인 ¹⁾	사망률 ²⁾		사망률 성비 (여자 :100.0)	상대적 성비 (전체성비 :1.00)
	남자	여자		
30 - 39전체	179.0	77.2	231.8	1.00
1) 악성 신생물	25.3	23.8	106.3	.46
2) 간 질 환	16.4	2.1	780.9	3.37
3) 운 수 사 고	32.7	8.2	398.8	1.72
4) 심 장 질 환	10.7	3.4	314.7	1.36
5) 뇌혈관 질환	7.8	3.8	205.2	.88
40 - 49전체	441.0	148.7	296.6	1.00
1) 악성 신생물	98.2	57.1	171.9	.58
2) 간 질 환	68.4	7.8	876.9	2.95
3) 운 수 사 고	43.9	11.1	395.5	1.33
4) 심 장 질 환	33.2	8.5	390.6	1.31
5) 뇌혈관 질환	31.0	14.6	212.3	.71
50 - 59전체	1007.3	355.6	283.2	1.00
1) 악성 신생물	341.8	136.7	250.0	.88
2) 간 질 환	117.3	19.1	614.1	2.17
3) 운 수 사 고	61.1	19.2	318.2	1.12
4) 심 장 질 환	76.8	23.9	321.3	1.13
5) 뇌혈관 질환	99.7	53.1	187.7	.66

주 : 1) 남자 40-49세의 사망원인 상위 5항목을 기준으로 연령별 성비의 변화를 비교하였음.

2) 2000년 사망신고자료와 추계인구를 이용하여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로 계산하였음.

자료 : 통계청(2001b, 2001d & 2001e)

3. 주요 사망원인별 사망률과 기대여명에 미치는 영향

〈표 15〉에서 1990년이래 주요사망원인에 의한 사망률의 변화를 성별로 비교하였다. 순환기계질환과 각종 사고사에 의한 사망률은 남녀 모두 22~29% 감소하였으나 각종 암에 의한 남녀의 사망률은 각각 14%와 6%씩 증가하였다. 각종 암의 사망률이 증가한 것은 대장암과 폐암에 의한 사망률이 위암과 간암의 사망률 감소분을 초과하였기 때문이다. 반면, 고혈압성

질환과 심장질환에 의한 사망률 감소로 순환기계 질환에 의한 사망률이 낮아졌고, 운수사고와 익수사고에 의한 사망률의 감소로 각종 사고사의 사망률이 낮아졌다.

<표 15> 성 및 주요 사망원인별 사망률의 변화, 1990-2000

(단위: 인구 10만 명당)

주요 사망원인	1990		2000		증감율(%)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각종 암¹⁾	136.9	82.9	155.8	88.2	14.0	6.4	
위암	39.1	23.6	31.3	17.2	-19.9	-27.1	
대장암	4.4	4.5	9.4	8.3	113.6	84.4	
간암	35.4	12.0	32.5	10.0	-8.2	-16.7	
폐암	20.8	7.7	36.1	12.6	73.6	63.6	
순환기계 질환²⁾	165.8	163.9	119.0	127.4	-28.2	-22.3	
고혈압성질환	36.8	34.7	6.7	11.2	-81.8	-67.7	
허혈성심장질환	11.3	9.6	24.0	19.0	112.4	97.9	
뇌혈관질환	75.0	77.3	69.4	77.1	-7.5	-0.3	
기타심장질환	37.4	36.9	16.2	17.8	-56.7	-51.8	
각종 사고사³⁾	121.3	45.7	85.8	35.5	-29.3	-22.3	
운수사고	57.9	20.3	36.8	13.9	-36.4	-31.5	
추락사고	5.5	1.6	7.7	3.8	40.0	137.5	
익수사고	6.6	1.6	5.4	1.5	-18.2	-6.3	
자살	13.2	6.3	20.3	8.9	53.8	41.3	
기타	호흡기 결핵	16.0	5.7	9.7	3.8	-39.3	-33.3
주요	당뇨병	12.9	10.8	22.5	22.7	74.4	110.2
사망	만성하기도질환	10.9	10.3	18.9	14.6	73.1	41.7
원인	간질환	53.1	13.0	36.9	8.7	-30.5	-33.1

주 : 1) 췌장암, 유방암, 자궁암 및 전립선암을 포함.

2) 류마치스성 심질환, 기타심장질환 및 동맥경화증을 포함.

3) 화재사고, 중독사고, 피살 및 기타 사고사를 포함.

자료 : 1) 통계청(2001b).

우리 나라의 사망률은 꾸준히 감소하여 1999년에 0세에서 기대여명(평균수명)은 남녀 각각 71.7 년과 79.2 년이었다(통계청, 2001a). 이것은 4

년전에 비하여 남녀 각각 2.1년과 1.8년이 증가한 것이다. 이러한 사망률의 감소와 기대여명이 증가한 데는 대부분의 사망원인별 사망률이 감소한 결과이다. 그러나, 사망원인별 사망률의 감소정도가 서로 상이하고, 어떤 사망원인의 경우에는 사망률이 증가함으로써 전체 기대여명의 증가폭을 둔화시키고 있다.

<표 16> 특정사인 제거시 연령별 증가 기대여명. 1995 및 1999

(단위: 년)

사망원인	1995				1999			
	남자		여자		남자		여자	
	0	65	0	65	0	65	0	65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	0.44	0.35	0.14	0.07	0.57	0.45	0.23	0.13
결핵	0.26	0.23	0.02	0.00	0.43	0.36	0.14	0.08
각종 암(악성 신생물)	4.72	3.67	2.46	1.55	5.01	3.94	2.60	1.62
위암	0.92	0.83	0.44	0.29	1.16	1.05	0.61	0.44
간암	0.98	0.67	0.21	0.11	1.17	0.84	0.34	0.22
폐암	1.01	0.99	0.25	0.19	0.99	0.97	0.30	0.24
내분비, 영양 및 대사 질환	0.68	0.62	0.59	0.52	0.64	0.58	0.56	0.47
당뇨병	0.63	0.59	0.54	0.49	0.59	0.55	0.51	0.41
순환기계 질환	3.62	3.21	3.08	2.64	4.45	4.12	3.79	3.20
뇌혈관 질환	2.06	2.02	1.88	1.66	2.50	2.53	2.26	1.97
고혈압성 질환	0.12	0.15	0.13	0.12	0.52	0.56	0.50	0.45
심장 질환	1.23	1.01	0.84	0.70	1.29	1.07	0.92	0.75
호흡기계 질환	0.89	0.95	0.41	0.37	0.90	0.92	0.52	0.44
폐렴	0.18	0.20	0.04	0.02	0.17	0.14	0.11	0.07
소화기계 질환	1.42	0.87	0.37	0.23	1.99	1.30	0.57	0.40
간 질환	1.16	0.66	0.20	0.08	1.64	1.00	0.35	0.20
각종 사고사(사망의 외부요인)	3.00	1.27	1.15	0.40	3.82	1.56	1.56	0.54
운수사고	1.24	0.52	0.41	0.13	1.97	0.83	0.75	0.28
자 살	0.62	0.28	0.22	0.02	0.48	0.22	0.23	0.07

주) 심장 질환은 허혈성 질환을 포함한 모든 심장 질환임

자료 : 통계청 (1997 및 2001a)

우리 나라의 3대 사망원인인 각종 암, 순환기계질환 및 각종 사고사에 의한 사망을 제거한다면 1999년에 남자의 경우 평균수명이 13.28년이 증가

하게 되고, 여자의 경우에는 7.95년이 증가하게 된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1999년 우리 나라 인구의 평균수명은 남녀 각각 85.0년과 87.2년으로 증가하며, 남녀의 평균수명의 차이도 크게 감소하게 된다. 우리 나라 남녀 수명의 차이가 큰 것은 위의 3대 질환에 의한 성별 사망률의 차이에서 연유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할 수 있다.

VII. 요약 및 결론

우리 나라 사망력의 변화와 유형을 검토한 결과 첫째, 우리 나라의 사망력은 공중보건향상으로 사망률이 낮아지기 시작하여 사회경제개발의 성공으로 1980년대에 평균수명이 70세를 넘어서면서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였다. 다음은, 우리 나라의 보통사망률이 빠르게 낮아졌으나 1990년대 이후 6.0미만에서 정체하고 있다. 이것은 앞으로 노령화와 함께 다시 상승할 것으로 쉽게 예상할 수 있다. 끝으로, 남자 40대의 사망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특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나라의 남자 사망유형은 1980년대 이후 그 특성이 약해지고, 서구의 평균유형에 접근하고 있다.

교육수준은 생활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므로 교육수준에 따라 사망률이 차이가 난다. 이것은 의료나 보건 등의 서비스 혜택이 모든 사람들에게 고르게 돌아가지 않는 데에 그 원인이 있다. 교육정도별 사망위험의 상대적인 차이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증가하였는데, 특히 젊은 연령계층(25-34 및 35-44)에서 증가현상이 뚜렷하였다. 35-44세 남자의 경우 무학 자의 사망률이 초대이상 자 보다 1970년에 약 4배 높았으나 2000년에는 12배로 높아졌다. 여자의 경우도 같은 기간에 3배에서 10배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현상을 연령이 높을수록 그 증가폭이 둔화되기는 하지만 학력별 사망률의 차이가 커졌으며, 남녀 모두 동일한 유형을 보였다.

우리 나라의 결혼상태별 사망수준의 차이는 뚜렷하였다. 평균 초혼연령

은 꾸준히 높아지면서 유배우 인구와 미혼 인구간의 사망수준의 차이는 모든 연령 계급에서, 그리고 남·여 모두에게서 점차 작아지고 있다. 1970년 미혼자의 사망률이 유배우 자에 비하여 남녀 각각 2.9배와 10.3배이던 것이 2000년에는 각각 1.9배와 1.8배로 낮아졌다. 미혼여자의 사망률감소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나타나는 것은 이 연령층 미혼율의 상승속도가 남자보다 빠르기 때문이다.

교육정도의 차이에 따른 영향을 제거한 후 혼인상태별 사망률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대표적인 연령계층인 45-55세의 성 및 혼인상태별 사망비를 표준화하여 측정자료와 비교하였다. 교육수준의 영향을 제거한 후에도 남녀 모두 미혼자와 사별·이혼 및 별거자의 사망률이 유배우자의 사망률에 비하여 약 2배(기타 여자)에서 약 4배(미혼남자)나 높은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혼인상태별 사망률의 차이는 교육정도별 차이와 함께 우리 나라 사망수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정도별, 혼인상태별 사망수준의 차이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하고, 교육정도 및 혼인상태별 인구구조는 경제·사회개발과 함께 변화하므로, 사망수준과 이들 구성비의 변화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교육수준의 향상에 따라 나타나는 사망수준의 감소정도가 큰 것은 교육수준의 향상이 사망수준의 감소에 강력하게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교육정도에 의한 결과와는 반대로, 혼인상태별 인구구성비에 기초를 둔 상대적 비는 남자의 경우 모든 연령계층에서, 여자의 경우 25-44세 연령계층에서 1.0 이하였다. 이것은 우리 나라 남·여의 미혼 인구구성비의 증가는 오히려 사망수준을 높여주는 결과가 된다는 것이다.

사망력의 변천과정에서 개별 사망의 원인과 전체 사망원인의 유형이 함께 변한다. 1966년에 가장 중요한 사망원인은 폐렴과 결핵이었다. 그러나, 1980-81년에는 가장 중요한 사망원인이 악성 신생물과 고혈압성 질환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1990년 이후의 주요 사망원인은 악성 신생물,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그리고 운수사고가 4대 원인으로 고정되었다.

우리 나라의 사망률은 꾸준히 감소하여 1999년에 0세에서 기대여명(평균수명)은 남녀 각각 71.7 년과 79.2 년이었다. 이것은 4년 전에 비하여 남녀 각각 2.1년과 1.8년이 증가한 것이다. 이러한 사망률의 감소와 기대여명이 증가한 데는 대부분의 사망원인별 사망률이 감소한 결과이다. 우리나라의 3대 사망원인인 각종 암, 순환기계질환 및 각종 사고사에 의한 사망을 제거한다면 1999년에 남자의 경우 평균수명이 13.28년이 증가하게 되고, 여자의 경우에는 7.95년이 증가하게 된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1999년 우리 나라 인구의 평균수명은 남녀 각각 85.0년과 87.2년으로 증가하며, 남녀의 평균수명의 차이도 크게 감소하게 될 것이다.

<참고 문헌>

- 고갑석.김일현 (1964) 'An abridged life table for the Republic of Korea', *한국통계월보*, 6(7-8): 12-26,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 공세권 등 (1983) *한국의 사망력과 사망원인*, 한국인구보건연구원.
- 권이혁 (1968) '한국의 사망유형', *한국의학회지*, 11(12): 972-980.
- 권태환.김태현 (1990) *한국인의 생명표: 1970-85년의 사망유형분석을 중심으로*,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박경애 (1995) '한국인의 사망원인 구조, 1983-1993' *한국인구학회지*, 18(1): 167-193.
- 조사통계국 (1968) *1966 인구동태통계*,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 조사통계국 (1971) *한국인의 생명표*,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 조사통계국 (1982) *1981 사망원인통계연보*,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 통계청 (1991) *1991 사망원인통계연보*, 통계청.
- 통계청 (1997) *1995년 생명표*, 통계청
- 통계청 (1999) *1971-97년 생명표*, 통계청.
- 통계청 (2001a) *1999년 생명표*, 통계청.
- 통계청 (2001b) *2000 인구동태통계연보*, 통계청.
- 통계청 (2001c) *2001 한국의 사회지표*, 통계청

통계청 (2001d) *장래 인구 추계*, 통계청
통계청 (2001e) *사망원인 통계연보*, 통계청

- Ishi, Yoshikuni (石南國) (1972) *An Analysis of Population Growth in Korea* (in Japanese) Tokyo: Keisousobo Co.
- Kim, T. H. (1990) *Mortality Transition in Korea, 1960-1980*, The Population and Development Studies Center,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 Lee, Dong Woo (1973) 'Construction of life tables from the recent Korean censuses', *인구문제연구*, 16: 65-80.
-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1982) *The Life Table of Korea (1978-79)*,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Economic Planning Board.
- Omran, A. (1971) 'The epidemiologic transition', *Milbank Memorial Fund Quarterly*, 49 (4): 509-538.
- Omran, A. (1977) 'Epidemiologic transition in the United States', *Population Bulletin*, Vol. 32, No. 2.

제5장

해외 한인 사회의 형성과 변화

권 태 환
(서울대학교)

I. 머리말

한국은 전통적으로 폐쇄 사회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20세기 초 일제의 침략 전까지만 해도 한국은 중국의 영향을 받기는 했지만 오랜 동안 문화적으로 독특한 특성을 유지해 왔다. 한국인은 독특한 언어를 사용했으며, 생계체계나 친족조직, 의식주 생활 등 모든 영역에서 중국이나 일본 문화와는 매우 다른 속성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문화적 특성은 전통 한국에서 국경을 넘어선 인구의 이동이 거의 없었던데 힘입은바 크다고 하겠다. 거꾸로 문화적 폐쇄성은 한국인의 국제 이동을 막는데 기여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여하간 인구이동의 폐쇄성은 전통 한국 사회의 핵심적인 성격의 하나로 이는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성격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인구 이동의 폐쇄성은 19세기 후반부터 무너지기 시작한다. 연이은 흉작과 사회적 불안으로 인해 굶주린 백성들이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아 만주와 연해주로 이동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20세기초부터는 한국이 일제의 식민지가 되면서 한반도를 넘어서는 인구의 이동이 폭발적으로 일어난다. 반대로 1945년 우리 나라가 일체로부터 독립하면서 한반도에는 다시 막대한 인구의 유입이 발생한다. 이들은 주로 남한지역으로 유입되었다. 그리고 남북한의 분단으로 두 지역은 각기 다른 인구과정을 겪게

되었다.

1950년에서 1960년 사이에는 한국 동란으로 발생한 남북한 사이의 이동을 제외하면 국제 이동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1960년대부터 남한에서는 새로운 세계를 향한 이동이 다시 시작된다. 주로 노동과 농업 이민으로 규정되는 독일과 남미를 그 시발점으로 하여, 1960년대 후반부터는 미국의 이민법 개정으로 미국으로의 대량이민이 발생하여 그 곳에 새로운 한인 사회가 형성하게 된다. 그리고 기존의 중국과 일본, 러시아의 체류자들은 1950년 이후 각각의 지역에서 독자적이고 독특한 민족 공동체를 이루어 삶을 유지하여 왔다. 그러나 오늘날 이들 공동체는 세대 교체 및 국제적인 상황의 변화와 함께 근본적인 변화에 직면하고있다. 이 글은 이러한 해외 한인 사회의 성격을 이해하는데 기초가 되는 해외 한인 사회 형성과 변화의 인구학적 배경과 정체성 변화에 대해 간략하게 서술하고 있다.

II. 해외 이주의 개관

1860년까지만 해도 거의 없던 외국 거주자는 한일방방의 해인 1910에는 25만 명을 넘어선다. 그리고 1945년에는 일제의 패망 직전에는 그 수가 총 한인의 13%에 해당하는 400만 명으로 늘어난다. 아마도 35년 사이에 발생한 해외로의 이동으로는 세계적으로 드문 경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일제의 패망 직후 해외 한인의 수는 170-180만 정도로 줄었다. 그리고 그들은 대부분이 중국의 만주 지역과 일본, 그리고 중앙아시아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국인 공동체를 형성하여 한반도와는 거의 단절된 생활을 하며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해 왔다.

한국(남한)에서 인구의 국제적 이동이 다시 시작된 것은 1960이후이다. 해방이후 해외 한인의 대규모 유입으로 엄청난 인구압력에 시달리던 한국인에게 해외 진출의 기회가 열리기 시작한 것은 광부와 간호원으로 구성된 독일로의 노동 이민과 남미에로의 농업이민이었다. 그러나 보다 본격적인 신천지를 향한 새로운 이동은 196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미국으로의

이민에 의해 촉발되었다. 미국 센서스 자료에 따르면 1940년 8,568명, 1970년 65,150명에 불과하던 한국인은 2000년에는 1,076,872명으로 집계되었다. 한국 공관을 통해 집계된 자료에 따르면 미국 영주 한국인은 176만 명이 넘고, 일시 거주자까지 합하면 210만이 넘는다. 이 자료에 따르면, 이미 미국은 세계적으로 가장 한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국가가 된 셈이다. 다음이 중국, 일본, 독립국가연합의 순서로 되었다. 이를 국가의 한인 거주 인구는 각각 50만을 넘고 여기에 해외 한인거주자의 91.5%가 집중되어 있다. 다음이 캐나다로 14만, 브라질의 48만, 호주의 47만 명 수준으로 떨어진다. 한국 정부는 2000년 말 현재 562만 정도의 해외 한인 인구가 150여 국에 퍼져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1970년까지만 해도 해외 거주 한인의 수는 중국 일본 소련과 미국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이들 기타 국가의 한인 수는 1991년에는 246,000명으로 그리고 1000년에는 481,000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마디로 오늘날 해외 한인인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거주 국가의 집중성에도 불구하고 세계 곳곳으로 분산되어 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960년대 ‘새로운 세계’(New World)로 향한 이동은 초기에는 국가의 정책으로 추진되었다. 1962년 정부는 지탱하기 어려운 많은 인구와 빠른 인구증가가 한국의 경제 발전의 가장 중요한 장애 요인으로 보고 인구증가 억제 정책을 채택하였다. 가족계획을 통한 출산력 억제와 함께 정부는 인구의 해외 이민을 추진하였다. 또한 국내의 실업을 줄이고 외화를 벌어들이기 위해 정부는 독일, 우간다, 말레시아 등과 접촉하여 노동자 파견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이동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1963-78년에 걸쳐 이루어진 광부와 간호사의 독일 파견이었다. 총 계약 이동자는 21,000에 달하였고, 이들은 거의가 귀국하지 않고 독일과 다른 서방국가에 정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정부는 남미에 대규모 이동을 세워 추진하였다. 1960년대 초, 정부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에 미개발 숲을 구매해 그곳을 개간하여 농지로 만들고 그곳에 한인 공동체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천에 옮겼다. 그러나 사전 준비 없이 실시된 이 계획은 완전 실패로

끝났다. 농업은 실패했고 이주자들은 원래의 정착지를 떠나 대도시로 옮겼고, 후에 많은 사람이 미국과 캐나다로 재 이주하였다. 이러한 배경 아래 1960년대에 한국을 떠난 사람들은 대부분이 고등 교육을 받고 해당 직업 경력이 별로 없는 중산층 배경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점에서 예외가 간혹 있었다. 즉 당시 이주자들의 1차 목표는 극도로 가난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한국으로부터의 탈주였다.

한편 미국 이민은 1965년 새 이민법이 제정되고 1969년 시행되면서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한국전쟁의 영향으로 1950년대 중반 이후 매우 제한적이긴 하지만 미국 이주가 이미 시작되었다. 당시 이주의 기회는 미국의 한국전쟁 개입의 부산물로도 볼 수 있다. 1950년대 중반부터 1960년대 후반에 이르는 이주는 몇 가지 유형을 보인다. 그 첫째가 소위 전쟁 신부(war brides)라 일컫는 미국 군인과 결혼한 한국 여성들의 이주이다. 다음은 주로 대학원 과정을 밟기 위해 미국에 유학을 한 사람들이다. 이들 초기 유학생들은 귀국하지 않고 미국에서 영주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즉 두뇌유출이 두 번째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세 번째는 한국에 거주한 미국 군인들과 한국 여인 사이에서 태어나 버려진 아이들로 주로 구성된 전쟁 고아들(war orphans)의 이동이다. 여하간 1964년까지 2 000명 정도였던 미국 이민자 수는 새 이민법이 실시되기 시작한 1968년에는 3,800명으로 늘었다.

1952년에 채택된 과거의 이민법은 각 국가별로 이민자 수를 할당하였고, 한국에 할당된 수는 매년 105명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1965년에 채택된 새 이민법은 국가별 할당제를 폐지하고 대신 가족관계를 기초로 직계 존 비속의 이민을 허용하고, 고용과 관련된 기술을 이민의 주 고려 사항으로 정하였다. 새 기준의 적용으로 미국에서 1969년부터 한국인 이민은 급증하였다. 미국 이민통계에 따르면, 1969년 한국인 이민자의 총수는 6000명으로 증가하였고, 1971년에는 14,300, 1977년에는 30,900명, 그리고 1981년에는 32,700명으로 늘었다. 한편 미국 센서스에 의하면 한국인 수는 1970년에 70,000, 1990년에는 800,000명으로 늘어 1970-90년의 20년 동안

11배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러한 미국 이민자의 급격한 증가는 대부분이 가족 초청 이민에 의해 설명된다. 가령 1977년 가족 초청이민은 총 이민의 91%를 차지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는 미국의 한국 이민자의 특성의 변화를 의미한다. 과거 미국 병사와는 혼인이 주류를 이루었을 때에는 이민자 가운데 여성의 매우 비율이 높았으나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성비도 상당히 정상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가족 초청이 이민의 주를 이룬다는 것은 또한 미국 한인들 사이에 친족 연결망이 중요한 사회적 자원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뜻한다.

Ⅲ. 중국 조선족 공동체

중국 조선족 사회의 지식인들은 조선족 공동체의 자동적 해체를 크게 우려하고 있다. 신 중국 형성 이후 아직까지 조선족은 계속 인구의 증가를 경험하였다. 그러나 현재 조선족은 중국에서 가장 낮은 출산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적어도 2010년경부터는 인구의 급격한 감소가 일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연변의 경우 이미 1996년부터 조선족 인구는 총 성장에서는 물론 자연 성장에서도 감소 추세로 접어들었다. 연변이 중국 조선족 거주지의 중심임을 고려할 때 다른 주변부의 사정은 더 나쁠 것으로 보아 틀림이 없을 것이다. 낮은 출산율의 심각성은 1974년 1.74, 1891년 1.81이던 연변 조선족의 총 출산율이 1999년에는 1.1로 떨어진 것으로도 추측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가만히 놔두어도 기존의 전통적인 조선족 공동체는 약화되고 결국 해체되리라는 전망이 가능하다. 그러나 해체의 요소는 이에 그치지 않는다. 젊은이들의 이농향도 현상, 중국의 여러 도시로의 진출, 한국으로의 진출, 한족 인구의 조선족 집거지로의 유입, 조선족 여성의 한족 남성과의 혼인 증가 및 한국 농촌 총각과의 혼인 등도 해체를 부추기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인구 이동이 조선족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다양하다. 그 가운데 조선족 인구성장과 구조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은 남한 남성

과 조선족 여성의 결혼을 통한 조선족 여성의 남한으로의 이주이다. 1992년경부터 시작된 남한의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의 일환으로 시작된 중국 조선족 여성들의 혼인 이주는 신고된 것만 1992-2001년의 10년간 45,000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센서스에 따르면 1990년 20-29세 조선족 여성 인구가 총 195,000명이었음을 고려할 때 혼인을 통한 조선족 여성의 한국 이민이 중국 조선족 인구성장에 대해 갖는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는 또한 조선족 혼인 시장에 혼란을 가져오고 조선족 총각들을 농촌에서 밀어내는 힘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조선족의 이동은 혼인 이동을 제외하고는 대개가 노동이동의 성격을 갖는다. 그리고 이동은 단계적 성격이 강하다. 우선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농촌에서는 도시 인근 농촌으로, 인근 농촌 사람들은 인근 조선족 도시로, 그리고 도시에서는 중국의 주업 도시나 한국으로 진출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여성과 미혼자의 이동이 남성과 기혼자의 이동에 앞서는 경향도 나타난다. 기혼자들의 단독이동도 광범하게 발견된다. 이러한 이동의 추세는 조선족 공동체와 가족에 엄청난 충격과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부부의 장기적인 별거와, 자녀의 경우 한 부모 또는 부모 없이 할머니와 생활하는 경우가 일반화된 상태이다. 또한 부부의 장기적인 별거는 이혼을 부추겨 이혼율이 급속히 올라가고 있다. 그러나 조선족 농촌 마을의 해체는 조선족 공동체 자체의 해체를 뜻하지는 않는다. 흑룡상성과 같은 곳에서는 전에는 한족 중심 도시였던 곳에 인근 농촌의 조선족이 모여 새로운 집거지와 조선족 학교가 생기는 경우가 많이 발견된다. 이러한 새로운 조선족 도시 공동체는 길림성과 요녕성에서도 새로운 조선족 발전 모형으로 추진되기도 한다. 또한 북경과 같은 중국의 대도시나 조선족이 많이 모이는 청도나 위해와 같은 연안 도시에도 조선족 학교와 조선족 집거지가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다. 한마디로 조선족의 삶이 도시 중심으로 바뀌면서 공동체의 모습도 바뀌고 새로운 공동체가 등장하고 있다.

IV. 재일 동포 사회

같은 식민지 시대에 주로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 한반도를 떠난 이주민이었지만 중국의 조선족과 일본의 재일 동포 사이에는 이주 후 그들의 삶은 완전히 다른 궤도를 걸었다. 먼저 귀환이동의 규모에 있어 커다란 차이를 보인다. 중국의 조선족과는 일본의 조선인은 3/4 이상이 귀환하였다. 그 배경에는 중국의 조선인들이 대부분 농업에 종사한 반면 일본의 조선인들은 대부분이 노동자였다는 것과 일본의 경우 이주의 역사가 비교적 짧았고 강제 동원자가 많았다는 사실이 중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차대전후 최초의 일본 자료에 따르면 등록된 재일 한인의 수는 1946년 3월 현재 647,000이었다. 그러나 1950년 자료에 따르면 그 수는 545,000으로 줄어든다. (여기 10여만 명의 차이는 아마도 1946년 3월 이후 귀환자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여하간 이들 귀환하지 않은 재일 동포는 거의가 고향에 돌아가도 있을 집도 경작지도 없는 사람으로 일본에서 어느 정도 생활 기반을 닦아놓은 사람들로 알려져 있다. 그들은 거의가 도시에 거주하며 비농 직업에 종사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지속되어 1993년 자료에 의하면 재일 동포의 40%가 오사카와 도쿄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85% 가량이 대도시권에 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일본에 거주하는 재일 동포 인구는 1950-90년 기간 계속 증가해 왔다. 그러나 그 증가 속도는 매우 느렸다. 1950년 545,000 명이던 등록자 수는 1970년에는 614,000 명으로, 1990년에는 688,000 명으로 증가했다. 반면 1990년 이후에는 인구의 감소현상이 나타나고 그 추세는 최근에 올수록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재일 동포수의 증가 속도는 일본 전체 인구 증가 속도와 비교해 볼 때 매우 느리다. 1950-90년의 40년 동안 일본 인구는 48%가 증가했는데 비해 재일 동포의 수는 26% 증가하는데 그쳤다. 즉 증가의 속도가 일본 인구의 55%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재일 동포 인구의 자연증가에 의해 설명되지는 않는다. 일반적으로 재일동포 인구는 일

본인구에 비해 젊은 연령층의 인구비율이 높아 상대적으로 조출생률은 높고 조사망률은 낮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재일 동포의 평균 자녀수도 일본 평균보다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재일 동포 인구의 느린 증가는 인구이동이나 제3의 요인에 의해 설명되어 질 수밖에 없다. 인구이동에 의한 대규모 감소는 1959-84년에 걸친 북한으로의 송환이 대표적인 경우에 해당된다. 이 기간 총 북한 송환자는 93,339명이었고, 그 가운데는 일본인 처도 포함되어 있었다. 1차 송환은 1959-67에 걸쳐 행해졌으며 송환자 총수는 88,611 명에 달하였다. 그 가운데서도 최초 3년에 송환이 집중되어 있었다.

제3의 요인에는 일본인과의 혼인, 일본인 남편 또는 부인에게서 태어난 자녀들의 일본국적 취득 등이 속한다. 과거 재일 동포 사회에서는 일본인과의 혼인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고, 심지어 일본인과의 혼인을 민족에 대한 배신으로까지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즉 민족 내혼 규범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그러나 현실적 상황은 이러한 규범은 적용을 어렵게 하였다. 특히 일본문화에 익숙하고 한국어를 거의 모르는 2-3세대가 증가하면서 민족 내혼 규범은 의미를 계속 상실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현실은 재일 동포의 혼인 배우자의 민족구성의 변화에 잘 반영되어있다. 1960년에 약 80%에 달하던 민족 내혼은 1980년에는 60% 정도로 줄어든다. 민족 내혼 규범의 와해 속도는 더욱 빨라져 1990년에는 30% 선으로 떨어지고 이후에도 해체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 일본인과의 혼인은 초기에는 남성 가운데 많았으나 1970년부터 그 추세가 바뀌어 점점 여성 위주가 되어가고 있다. 1990년경부터는 일본인배우자와 혼인하는 재일 동포의 70% 이상은 여자이다. 이러한 일본인과의 혼인에 있어 성 불균형의 심화는 재일 동포 남성들에게는 혼인 시장 축소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한국 여성들과의 혼인에 의해 상당 부분 해소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일본 국적 취득을 뜻하는 귀화는 1983년 이전까지만 해도 매우 어려웠고 배우자가 일본인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일본인과의 혼인에 따른 자녀

출생의 경우에 부인이 일본인이면 자녀는 남편의 국적에 따라 일본 국적이 거부되었다. 그러나 1985년 남녀 평등을 기초로 한 새로운 국적법이 실시되면서 이러한 부계 혈통 규정은 폐기되었고 어머니가 일본인인 경우 그 자녀의 일본 국적 취득이 가능해졌다. 이러한 규정의 변경은 재일 동포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와 재일 동포의 자녀 가운데 '신청'에 의해 자동 국적 취득자가 새로운 법이 시행된 3년간 3만 명에 달했다. 여하간 1952년 일본국적을 상실한 재일 동포들 가운데 1993년까지 일본국적을 취득한 총수는 18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일본에서 전국적으로 관찰되는 인구 재생산 수준 이하로의 출산수준의 감소와 함께 혼인과 관련된 일본 국적취득 및 국적 변경의 문제로 재일 동포 인구는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빠른 감소를 보이기 시작한다. 가령 1990년 688,000명에 달하던 재일 동포의 수는 1994년에는 659,000명, 2000년에는 552,000명으로 줄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재일 동포 사회의 해체에 대한 위기의식으로 연결되기도 한다.

V. 미국의 한인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의 수는 자료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 미국 센서스 자료와 한국 공관을 통해 수집된 자료 사이에는 무려 1000만 명의 차이가 난다. 재외 공관을 통해 수집한 재미 한인의 수는 2000년 말 현재 2,123,000명에 달하고, 그 가운데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만 1,764,000명으로 집계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자료의 질에 대한 평가도 다양하다. 대체적으로 미국 센서스 자료는 상당한 정도 과소 보고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한국 외교통상부의 자료는 과대 보고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 정부 자료는 미국의 각 지역의 한인 단체의 추정치나 수치를 수집하여 작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단체의 추정 값은 보통 센서스 값의 2배 내지 3배에 달한다. 한편 센서스 자료의 질은 여러 연도의 수치를 종합해 판단하면 그 윤곽의 파악이 가능하다. 가령 총인구의 증가와 증가의 구성을 살펴보

면 센서스에 어느 정도의 문제가 있는지 짐작할 수 있다. 1940년 이후 센서스에 나타난 미국 한인 추세를 보면 인구학적인 상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각각 다른 방법으로 수집된 총인구수에서 이민 입국자수를 뺀 나머지를 자연증가 분으로 가정할 때, 1940년 이후 자연 증가는 약간의 굴곡은 있으나 매우 합리적인 수준과 추세를 보이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1940-60년 사이의 미국 한인의 연 평균 자연증가율은 0.3%, 1960년대에는 1.9%가 된다. 그리고 1970년대는 1.4%, 그리고 1980년대는 2.0%, 1990년대는 1.1%로 나타난다. 다시 말해 센서스 자료의 질이, 상당한 정도의 과소 보고는 있으나, 한국 정부의 수집자료보다 현실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인구학자들은 미국 한인의 과소 보고의 수준을 20%를 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경우 미주 한인의 수는 120-130만 명 정도로 추정된다. 센서스 과소보고는 불법이민자와 유학생의 센서스 참여율 저조, 노인이나 최근 이민자 등 미국 문화에 익숙되지 않아 조사를 기피하는 사람, 백인과의 혼인자와 그 자녀들의 백인으로서의 분류 등에 의해 주로 야기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00년 미국 센서스에 따르면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Korean)의 수는 107만 7천명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미국 총인구(281,420,000)의 0.4% 그리고 아시아계 인구(10,243,000)의 10.5%의 규모에 해당한다. 또한 1990년 한인 수에 비해 48% 증가한 규모이다. 인구 증가율로 볼 때, 1910년에서 1940년까지의 한인 인구의 증가는 매우 완만한 자연 증가의 수준을 넘지 못하는 정도에 머물러 있었다. 1950-65년 사이에는 한국 전쟁과 관련된 이민 즉 전쟁 신부와 전쟁 고아의 이민으로 인구 증가의 속도가 빨라진다. 그러나 급격한 증가는 새로운 이민법이 제정되고 실시되는 1960년대 후반 기부터 본격화된다. 센서스 성장률에 따르면 1960-70년 사이에 미국의 한인 인구는 연 6.8%의 높은 성장률을 보인다. 그리고 이 기간 한인 이민자의 총증가 인구에 대한 비율은 72.4%에 이른다. 이는 인구 증가의 3/4정도가 이민에 의한 것임을 말해준다. 이민 비자 입국 한인은 1970년대와 1980년대에 급격히 증가한다. 1971-80년 사이에는 이 기간에 증가한 한인 총

증가수의 91.6%에 해당하는 268,000명이, 그리고 1981-90년에는 75.6%인 334,000명이 입국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러한 이민에 의한 한인 인구 증가 추세는 1990년대부터 급속히 완화된다. 1991-98년 사이에는 이민 이주자가 약 절반으로 감소하여 증가 인구수에 대한 비율도 63.4%로 낮아졌다.

VI. 해외 한인의 정체성

이민자의 정체성은 대체로 이민자의 배경, 이민의 동기, 이민 사회의 정책과 문화, 이민자의 세대구성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19세기 후반과 일제 시대의 대규모 해외 이주자들은 낯선 곳으로 생계를 찾아, 또는 독립 운동을 위해 정든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다. 그들은 이들의 이동은 한마디로 디아스포라로 규정하여 무리가 없다. 따라서 이들 이주자들은 강한 디아스포라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의 꿈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으며, 이주지에서 생활은 일시적인 나그네 생활이었다. 즉 이들 초기 이주 1세대들은 “나그네”(sojourner)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 1945년 일본이 패망하고 조국이 해방되자 일본과 중국에 가 있던 400만 가까운 이주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귀국한 것도 상당한 부분 이러한 디아스포라 정체성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후 중국과 일본 거주 한인들은 각기 다른 정체성을 발전시켰다.

중국의 조선인 정체성은 세대에 따라 큰 차이가 없다. 그들은 국가 정체성과 문화 정체성을 명백히 구분한다. 국가적으로는 중국인임을 자부하고 문화적으로는 조선인임을 강조한다. 물론 이러한 현상은 민족 문화와 언어를 중시하는 중국의 소수민족 정책에 힘입은바 크다. 현재 가치관에 있어서 세대 사이에 갈등이 심하다. 그들은 고향을 떠나 도시로 몰리고 한족과의 결혼에 비교적 호의적이고 중국 주류 사회에서 성공하기를 바라기도 한다. 그러나 그들의 조선족 정체성은 이전 세대와 크게 다르지 않다.

한편 일본의 재일 동포들의 정체성은 중국의 조선족과 다르며, 현재 빠른 변화를 겪고 있다. 그들에게는 일본 국적이 주어지지 않았고, 법적으로

는 한국인 또는 조선인이다. 제일 동포 1세대들은 일본에 대해 강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고 또한 일본 국가와 사회로부터 심한 차별을 받았다. 이러한 배경에는 일본 사회의 단일 민족, 단일 문화의 관념이 중요한 작용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그들은 강한 나그네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2,3 세대의 경우는 다르다. 그들의 일본의 단일 문화 정책 때문에 대부분이 일본 학교에서 교육을 받았고, 학교는 물론 일상생활에서 일본 문화를 익혔다. 즉 문화적으로는 일본 사회에 동화되었다. 중국 조선족과는 반대로 국가 정체성은 한국이나 조선인으로 취급되고 문화적으로는 일본인이 된 셈이다. 이들의 일본 문화의 적극적 수용은 최근에 올수록 급격히 증가하는 일본인과의 혼인을 통한 일본 국적 취득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2, 3세대 가운데 새로운 정체성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가령 민족 이름 찾기 운동이나, 일상 생활에서 친구나 가까운 사람에게 자기의 민족 정체성을 밝히는 것 등이 그 예에 속한다.

미국의 경우는 아직도 1세대가 다수를 점하고 있고, 새로운 이주자가 계속 유입되고 있다. 1세대의 경우 한국으로부터의 이주자들은 다양한 사회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은 그들의 한인 사회에 대한 태도와 정체 의식에 차이를 가져온다. 1960년대 후반부터 대량 유입된 가족 이주자들은 한국인으로 살아간다. 그들은 문화적 동화를 거부하고 주로 한국 정치와 경제, 문화에 관심을 보인다. 그들의 생활 세계도 한인 사회에 국한되어 있는 경우가 흔하다. 한마디로 그들은 한국인(Korean)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1,5세대와 2세대의 경우는 부모들을 통해 주어지는 한국 문화보다는 미국 주류 문화에 빠른 동화를 보인다. 거기에는 부모들의 “자식을 통한 아메리칸 드림의 꿈을 이루고자하는 부모의 기대와 지원도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들은 일본의 2, 3세대와 마찬가지로 민족언어를 상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들은 미국인(American) 정체성을 키워나가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한인 사회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던 1992년 LA

폭동은 1.5세대와 2세대에는 그들의 정체성에 의문을 품게 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들은 부모 세대인 1세대와 유대감과 함께 자기들도 미국 사회에 각인된 한인의 관념적 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자신이 민족적으로 한인임을 부정하지 않고 거기에 자부심을 가지는 한인 미국인(Korean American)의 정체성을 발전시켰다.

VII 맺는 말

한국 외교통상부 자료에 따르면 1970년대 이래 해외 한인의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가령 1970년 당시 수교가 없었던 중국과 소련을 제외한 세계 여러 나라에 거주한 한인은 703,000명 정도로 집계되었다. 그 숫자는 1989년 2,322,000명으로 19년 사이에 3배 이상의 증가를 기록하였다. 한편 중국과 독립국연합을 포함한 해외 한인의 수는 1990년 4,832,000명에서 2000년 5,654,000명으로 늘었다. 이러한 지속적인 증가의 1차적인 원인은 1960년대 말부터 시작된 미주로의 대량 이주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해외 거주 한인 가운데 일시체류자의 급속한 증가도 중요한 몫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일시 체류자의 증가는 최근에 올수록 빠르게 증가한다. 가령 1994년 일시거주자의 수는 총 해외 거주자의 5.6%인 290,000명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2000년에는 영주 거주자 수는 약간 줄어든 데 비해 일시 거주자는 14.1%인 798,000명으로 늘고 있다. 이러한 일시 거주자의 증가 현상은 세계화의 추세와 함께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지속될 전망이다.

한편 주요 국가별 한인 사회의 성격은 빠르게 변화고 있다. 중국 조선족 사회는 농촌 공동체 중심에서 도시 공동체 위주로 바뀌고, 조선족 인구의 지역적 분산과 집중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 또한 활발한 외지로의 노동이동은 전통적 지역 공동체 뿐 아니라 가족의 해체를 가져오고 있다. 거기에 더하여 조선족 여성의 한국 남자와의 혼인,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출산 수준 등으로 인해 조선족 인구는 급격한 감소기에 접어들었다. 조선족

들은 얼마안가서 연변 자치주는 자치주의 위상을 상실하고, 조선족 인구는 50년 후에는 현재의 절반이하로 줄어들고, 궁극적으로 조선족은 소멸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일본의 재일 동포는 2세와 3세가 주류를 이루게 되면서 급속한 일본 문화로의 동화를 경험하고 있다. 혼인을 통한 귀화와 그 자녀들의 일본 국적 취득으로 1990년이래 재일 동포의 수는 감소기에 접어들었다. 한 때 외국인 가운데 재일 동포의 비율은 90%를 넘었다. 그러나 이제는 50%이하로 떨어졌으며, 아직도 계속 줄고 있다. 한마디로 일본에서는 문화적 동화와 일본인과의 혼인으로 재일 동포 사회의 해체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의 한인 공동체는 그 속도가 전 같지 않지만 아직도 계속 확장되고 있다. 거주지역 역시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 한인 사회는 다른 나라의 한인 사회와는 달리 다양한 구성원 배경을 가지고 있다. 대표적인 구성 요소로는 미군의 신부나 양자로 이주한 사람들, 유학 후 정착하게 된 사람들, 가족 초청 이민자 등을 꼽을 수 있다. 배경에 따라 직업과 생계활동, 생활 세계도 다르다. 그러나 미국의 한인들은 일반적으로 “한인 등우리”, 또는 미국 속의 한국“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 주류 사회는 물론 소수 인종들로부터의 차별과 이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서도 저항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한마디로, 정치세력화는 한인 사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의 하나로 언급되고 있다.

한국의 국제적 위상과 해외 동포 정책은, 과거에도 그러했지만, 앞으로 해외 한인 사회에 더욱 중요한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그것은 이민 2-3세대의 한인 정체성은 불가피하게 그들의 삶에 한국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에 따라 다르게 형성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해외 한인이 세계화 시대 한국의 국제 경쟁력에 중요한 자원이 되고 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까지만 해도 한국 사회에서 해외 한인에 대한 관심은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비교적 역사가 긴 중국의 조선족과 일본의 재일 동포 사회가 해체의 위기에 직면해 있음을 고려할 때 이들에 대한 정책적

고려는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해인 한인 사회의 또 하나의 중요한 현상은 일시 체류자의 급격한 증가다. 이들은 사실상 해외 한인 사회에 속하지 않거나 주변인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들과 해외 영주자들 사이에는 접촉이 불가피하며, 접촉의 양식에 따라 심한 갈등의 소지도 있다. 이 문제도 중요한 정책의 고려 사항의 하나로 판단된다.

참고 문헌

- 고승제. 1973. 한국 이민사 연구. 장문사.
- 권태환. 1996. 세계의 한민족: 중국, 서울: 통일원.
- 김강일·허명철. 2001. 중국조선족: 사회의 문화우세와 발전전략, 연길: 연변인민출판사.
- 이광규, 1994. 재중한인, 일조각.
- 이문웅 1996. 세계의 한민족: 일본, 통일원
- 정신철, 1999. 중국 조선족사회의 변천과 전망, 심양: 료녕민족출판사.
- 최협·박찬웅. 1996. 세계의 한민족: 미국·캐나다. 통일원.
- 한상복·권태환. 1993. 중국 연변의 조선족,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 Barringer H.R. & S-N Cho. 1989. Koreans in the United States: A Fact Book. Honolulu: Center for Korean Studies, University of Hawaii.
- Chang, E.T. 1999. 'The post-1992 Los Angeles riot Korean American Community: Challenges and prospects', *Korean and Korean American Studies Bulletin* 10-1 & 2.
- Kashiwazaki, Chikako 2000. 'To be Korean without Korean nationality: Claim to Korean identity by Japanese nationality holders', *Korean and Korean American Studies Bulletin* 11-1.
- Kim, Shin & Kwang Jung Kim. 2000. 'Korean immigrant churches', *Korean and Korean American Studies Bulletin* 11-2.
- Lim, Luke. 1999. 'The 1.5 Generation and its self-identity development', *American Studies Bulletin* 10-1 & 2.
- Ryang, Sonia. 'Diaspora and beyond: There is no home for Koreans in Japan', *The Korean Studies Review* 4-2.
- Yoon I-J. 2001. 'Korean American experience: Ethnic mobilization as a mode of incorporation, *The Review of Korean Studies* 4-2.

제6장

우리나라 인구의 성과 연령구조

조 남 훈 · 변 용 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목 차 -

- I. 연구목적 및 배경
- II. 자료
- III. 기존 연구 검토
- IV. 분석결과
- V. 결론
- VI. 참고문헌

I. 연구목적 및 배경

1960년 합계출산율(TFR)이 6.0이던 것이 1984년 인구대치수준인 2.1에 도달한 후 2000년 1.47까지 감소하여 우리 나라도 저출산국가가 되었다. 이러한 출산율의 감소는 선진국에서도 유례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었고, 그 결과 인구 고령화 등 새로운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즉, 저출산의 지속은 인구고령화를 촉진하여 사회복지후생비를 증대시키며, 연료한 노동력은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초래하여 경제성장을 둔화 또는 후퇴시킬 우려가 있다. 또한 이러한 저출산 수준의 지속과 함께 성감별 기술의 개발이 남아선호사상과 결합하면서 성 선택적 출산이 크게 늘어나 성별 인구분포의 불균형을 초래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 실정이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복지, 교육, 노동 시책 등은 이러한 인구의 구조 변화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정부의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인구의 성·연령 구조의 변화 추이를 세밀히 분석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1925년부터 2000년까지의 인구 총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우리 나라 인구의 성 및 연령 구조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나타나는 새로운 사회문제에 대한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II. 자료

성 및 연령구조 분석에는 인구 총조사 자료, 인구동태통계자료, 그리고 미래의 성 및 연령구조의 분석을 위해서는 장래인구추계 자료 등이 흔히 사용되고 있다. 성 및 연령 구조를 분석하는 본 장에서는 우리 나라에서 근대적 의미의 인구 총조사가 처음으로 실시된 1925년부터 가장 최근에 수행된 2000년까지의 인구 총조사 자료를 토대로 분석하고 있다.

Ⅲ. 기존 연구 검토

성 및 연령 구조에 대한 연구 문헌으로는 조남훈 등(1995)과 장영식 등(1996년)을 들 수 있다. 특히 조남훈 등(1995)의 연구는 1991년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결과를 토대로 분석하였으며, 급격한 출산률의 감소에 의한 인구의 노령화와 노동인력의 부족 등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동 연구는 향후의 출산률 변동예측과 더불어 저출산 시대에 접어든 우리 나라의 인구변화가 사회경제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향후 인구정책의 방향과 대응전략을 모색한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적정 인구규모를 파악하기 위하여 출산력 뿐만 아니라 노동인력, 환경문제, 주택문제, 교육문제 등 여러 영역에 걸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아울러 인구자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제언을 하고 있다. 이 연구는 인구조절정책에서 인구자질 향상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우리 나라의 신인구정책 마련에 기초가 되었다.

한편, 장영식 등(1996)은 1996년 발표된 장래인구추계결과를 토대로 우리 나라 인구변동의 특징, 향후 인구규모 및 구조에 대한 전망, 성비불균형 문제, 그리고 인구변동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 등을 심층 분석하고 있으며, 노동력문제, 노인복지문제, 가구구조의 변동 문제 등에 대한 정책제언을 하고 있다.

1980년대 중반 이후 초음파 검사방법의 확대에 따라 나타나기 시작한 성비불균형 문제는 조남훈·서문희(1994)에 의해 연구가 이루어졌다. 성비의 불균형문제는 남아선호관, 피임 및 인공임신중절의 보편화, 태아 성감별을 위한 의학기술의 발달 등이 상호작용하여 나타난 결과임을 지적하면서, 국민 홍보를 통한 의식의 전환, 학교교육의 강화 등 국민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의 강화, 가족법의 개정, 여성고용평등법의 준수, 탁아 및 육아시설의 증설 및 지원, 남녀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의 탈피 등 여성지위향상, 의료인의 윤리의식의 개선, 의료윤리에 대한 학교교육 및 사회교육의 강화 등 의료인의 의식개혁, 그리고 불법 의료에 대한 감시체계의 강화 등을 주요 정책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IV. 분석결과

1. 성 및 연령별 구조의 변화 추이

가. 성·연령별 인구 규모의 변화 추이

1962년부터 강력하게 추진하여 온 가족계획 사업 위주의 인구증가억제 정책과 사회경제적 발전의 영향으로 0~14세 유소년 인구는 1970년 정점에 도달한 후 계속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15~64세의 청장년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그 증가율은 점차 둔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65세 이상의 고령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955년 714천명에서 계속 증가하여 1970년 1,039천명으로 백만 명을 돌파하였으며, 1990년에는 2백만 명을, 그리고 2000년에는 3백만 명을 돌파하여 3,374천명에 이른 것으로 집계되었다.

인구의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75세 이상의 후기 고령인구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1955년 163천명에 불과하던 것이 1985년 526천명, 그리고 2000년에는 1,079천명으로 백만 명을 돌파하게 되었다. 후기 노인인구의 증가율은 65세 이상인구보다 더 빠른 추세로 늘어나고 있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후기 고령인구는 신체적으로 노쇠해 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보건복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표-4> 연도별 연령계층별 인구규모의 변화

(단위: 천명)

연도	총인구	0~14	15~64	65 +	75 +
1925	19,020	7,551	10,729	741	144
1930	20,438	8,160	11,491	788	168
1935	22,208	9,090	12,278	840	210
1940	23,547	9,856	12,834	857	209
1944	25,120	10,850	13,295	976	248
1949	20,167	8,392	8,641	1,076 ¹⁾	-
1955	21,502	8,865	11,924	714	163
1960	24,989	10,153	13,886	935	233
1966	29,160	12,684	15,514	961	257
1970	31,435	13,241	17,154	1,039	289
1975	34,679	13,208	20,264	1,207	339
1980	37,407	12,656	23,305	1,446	401
1985	40,420	12,095	26,575	1,750	526
1990	43,390	11,134	30,094	2,162	667
1995	44,554	10,236	31,678	2,641	834
2000	45,985	9,639	32,973	3,374	1,079
연평균 증가율					
1925 ~ 1930	1.5	1.6	1.4	1.3	3.3
1930 ~ 1935	1.7	2.3	1.4	1.3	5.0
1935 ~ 1940	1.2	1.7	0.9	0.4	-0.1
1940 ~ 1944	1.7	2.5	0.9	3.5	4.7
1944 ~ 1949	-	-	-	-	-
1949 ~ 1955	1.1	0.9	6.3	-5.6 ²⁾	-
1955 ~ 1960	3.2	2.9	3.3	6.2	8.6
1960 ~ 1966	2.8	4.2	2.0	0.5	1.7
1966 ~ 1970	2.0	1.1	2.6	2.0	3.1
1970 ~ 1975	2.1	0.0	3.6	3.2	3.5
1975 ~ 1980	1.6	-0.8	3.0	4.0	3.7
1980 ~ 1985	1.6	-0.9	2.8	4.2	6.2
1985 ~ 1990	1.5	-1.6	2.6	4.7	5.4
1990 ~ 1995	0.5	-1.6	1.1	4.4	5.0
1995 ~ 2000	0.6	-1.2	0.8	5.6	5.9

주: 1) 60세 이상 인구임.

2) 1949년 총조사는 60세 이상 인구이고, 1955년의 경우 65세 이상 인구가 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임.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보고서』, 각년도.

나. 성·연령별 인구 구성비의 변화 추이

1960년대 초 시작된 가족계획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 결과 1970년대 이후부터 우리 나라의 인구 구조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유소년 인구비중의 감소, 청장년 인구비중의 점진적 증대, 그리고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급격한 증대 등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980년까지는 약 4% 수준 내외에서 안정적인 분포를 보이다가 1985년 4.3%, 1990년 5.0%, 그리고 1995년 5.9%, 2000년에는 7.3%에 도달하였다.

<표-7> 연도별 인구 구성비의 변화 추이, 1925~2000.

(단위: %)

연도	총인구	0-14	15-64	65+	75+
1925	100.0	39.7	56.4	3.9	0.8
1930	100.0	39.9	56.2	3.9	0.8
1935	100.0	40.9	55.3	3.8	0.9
1940	100.0	41.9	54.5	3.6	0.9
1944	100.0	43.2	52.9	3.9	1.0
1949	100.0	41.6	42.8	5.3 ¹⁾	0.0
1955	100.0	41.2	55.5	3.3	0.8
1960	100.0	40.6	55.6	3.7	0.9
1966	100.0	43.5	53.2	3.3	0.9
1970	100.0	42.1	54.6	3.3	0.9
1975	100.0	38.1	58.4	3.5	1.0
1980	100.0	33.8	62.3	3.9	1.1
1985	100.0	29.9	65.7	4.3	1.3
1990	100.0	25.7	69.4	5.0	1.5
1995	100.0	23.0	71.1	5.9	1.9
2000	100.0	21.0	71.7	7.3	2.3

주: 1) 60세 이상 인구에 대한 구성비임.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보고서』, 각년도.

노년인구 1인을 부양하는 생산가능인구의 규모 즉 잠재적 노년부양비 (Potential Support Ratio)는 1975년 16.8명으로서 정점에 있다가 그 후 감소하는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즉 1975년에는 생산가능인구 약 17명이 노년인구 1인을 부양하면 되는 인구구조에서 2000년 현재에는 생산가능인구 약 10명이 노년인구 1인을 부양해야 하는 수준으로 낮아 졌다. 이러한 추세는 계속되어 2030년에는 2.8명 수준까지 낮아지는 것으로 통계청(2001)은 전망하고 있다. 즉 생산가능인구 약 3인이 노년인구 1인을 부양해야 인구구조로 변화하는 것이다. 즉 그만큼 노인복지 부담이 늘어나게 됨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UN에서 추정한 저출산국가의 잠재적 노년부양비를 비교하여 볼 때, 1998년 우리 나라의 잠재적 노년부양비는 10.03 수준으로 비교국가에 비해 매우 높으나, 2050년에는 비교국가와 유사한 수준이며, 특히 미국에 비해서는 더 낮은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다. 비교국가의 경우 약 50년 동안 약 절반수준으로 낮아지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약 1/4수준이어서 그만큼 인구의 고령화가 급속한 점을 반영하고 있다. 이는 우리 나라의 출산율 수준이 이들 비교 국가에 비해 급속히 낮아져 증가하는 노인의 부양부담이 크게 높아질 것임을 의미한다 하겠다.

<표-10> 주요국의 잠재적 노년부양비 비교

국가	1998	2050	국가	1998	2050
한국	10.03	2.40	러시아	5.57	2.41
프랑스	4.19	2.26	독일	4.08	1.75
이태리	4.42	1.52	영국	4.07	2.36
일본	4.26	1.71	미국	5.37	2.57

자료: UN, *Replacement Migration: Is It A Solution to Declining and Ageing Populations?*, ESA/P/WP. 160, NY, 2000.

다. 지역별(도시·농촌) 인구구조 변화 추이

2000년 현재 읍·면 지역 인구 구조는 15세~64세의 청장년인구와 0~14세 유소년 인구의 구성비는 동 지역보다 적은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구성비는 동부의 경우 전체인구의 5.4% (2,001천명)이나 읍·면 지역의 경우 동 지역보다 9.3% 포인트가 높은 14.7% (1,371천명)로 나타나 우리나라 읍·면 지역의 고령화가 전국 평균보다 월등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전국적으로는 2000년 현재 우리나라가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으나, 읍면지역의 경우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하였음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노령화지수를 보면 동 지역의 경우 25.3인데 비하여 읍·면 지역은 78.7로 동 지역보다 53.4% 포인트가 높아 읍·면 지역의 고령화 정도가 심각함을 보여 주고 있다. 이는 그동안 젊은 연령층을 중심으로한 離村向都型 인구가동과 읍·면 지역의 도시 편입 때문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11> 동·읍면지역 인구구조

(단위 : 천명, %)

구분	1960년			2000년		
	계	동지역	읍면지역	계	동지역	읍면지역
전국	24,989	6,997	17,992	45,985	36,642	9,343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0-14세	10,153	2,735	7,419	9,639	7,897	1,742
(%)	(40.6)	(39.1)	(41.2)	(21.0)	(21.6)	(18.6)
15-64세	13,901	4,089	9,812	32,973	26,743	6,230
(%)	(55.6)	(58.4)	(54.5)	(71.7)	(73.0)	(66.7)
65세이상	935	174	761	3,372	2,001	1,371
(%)	(3.7)	(2.5)	(4.2)	(7.3)	(5.4)	(14.7)
노령화지수	9.2	6.4	10.3	35.0	25.3	78.7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보고서』, 각년도.

3. 성비 불균형

가. 출생시 성비 불균형

우리 나라에서 출생성비 불균형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중반이후부터이다. 출생성비의 불균형은 남아 선호관, 소자녀 가치관, 태아 성감별을 위한 의료기술의 보급, 그리고 성 선택적 인공임신중절의 보편화 등의 요인이 동시에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대체로 1970년까지는 106정도로서 정상에 가까웠으나, 1975년에는 108까지 상승하였고, 1985년 이후부터는 110을 상회하게 되었다. 특히 1990년에는 여아 100명에 비해 남아가 112.5명이나 되었고, 1995년에는 이 비율이 더욱 상승하여 여아 100명당 113.8명을 기록하였다. 인구 총조사에 여아보다는 남아의 보고비율이 높다는 일반적인 경향을 감안하더라도 0세 아동의 성비가 113까지 이른 것은 커다란 사회적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다만, 그동안의 지속적인 홍보 등의 노력 결과 2000년에는 0세 아동의 성비가 111.5로 1995년에 비해 소폭 하락하였다.

<표-12> 영세 인구의 성비 추이

(단위: 명, 여자 100명당 남자수)

연도	계	남자	여자	성비
1940	842,947	428,879	414,068	103.58
1944	970,641	481,897	488,744	98.60
1966	843,369	436,968	406,401	107.52
1970	816,020	420,811	395,209	106.48
1975	698,362	362,718	335,644	108.07
1980	754,560	392,305	362,255	108.30
1985	611,070	320,689	290,381	110.44
1990	632,402	334,829	297,573	112.52
1995	655,707	349,050	306,657	113.82
2000	599,073	315,765	283,308	111.46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보고서』, 각년도.

우리 나라 출생시 성비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특징은 시·도간에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2000년 현재 출생시 성비가 111을 넘고 있는 지역을 보면,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로서 경상도 지역에서 높은 출생시 성비의 불균형을 보이고 있다. 특히, 1991년의 경우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의 출생시 성비는 각각 124.9와 122.7로서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남아선호관이 강하고 태아의 성감별 및 이에 따른 성 선택적 인공임신중절의 시술이 일부 의료기관에서 음성적으로 성행하고 있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표-14> 지역별 출생성비의 분포

(단위: 여자 100명당 남자수)

지역	1991	1993	1995	1997	1999	2000
전국	112.4	115.3	113.2	108.2	109.6	110.2
서울	110.1	113.2	110.8	106.3	107.8	108.9
부산	115.9	118.3	117.2	110.9	111.0	112.8
대구	124.9	124.6	116.9	111.5	113.1	113.4
인천	108.1	112.2	112.6	107.2	110.0	108.7
광주	110.8	110.8	107.5	106.6	108.5	110.0
대전	113.4	118.3	114.4	106.1	108.8	107.2
울산 ¹⁾	-	-	-	112.9	114.6	112.6
경기	109.4	112.6	111.5	107.9	108.9	109.4
강원	109.7	115.2	112.3	106.4	108.9	110.7
충북	112.4	116.1	114.7	105.8	108.9	112.5
충남	112.5	114.2	111.5	107.4	110.6	109.9
전북	107.2	110.4	112.3	107.7	107.3	108.1
전남	110.4	112.8	111.7	106.0	109.6	109.3
경북	122.7	124.1	118.3	112.6	112.9	113.6
경남	117.1	121.2	119.2	111.8	110.8	112.7
제주	103.7	108.1	112.0	108.9	110.8	105.6

주: 1) 울산광역시의 경우 1997년 7월 광역시로 승격되었기 때문에 1997년부터 자료가 별도로 집계되고 있으며, 그 이전 자료는 경상남도에 포함되어 있음.

자료: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 각년도.

나. 노인 성비 불균형

1925년 65세 이상 인구의 성비는 83.6이던 것이 그 후 점차 낮아져서 1980년 59.4까지 감소하고 있다. 그 후 65세 이상 인구의 성비는 소폭이지만 조금씩 높아져 2000년에는 61.8로 개선되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여자의 연령별 기대여명이 남자보다 높은 데서 오는 결과이며 이러한 성별 인구수의 불균형 상태는 노인 인구층의 결혼상태와 직결되는 동시에 노인의 성문제, 노후의 고독 등 노후 생활에 있어서의 여러 문제들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

<표-15> 연도별 연령계층별 성비

(단위: 여자 100명당 남자수)

	계	0-14	15-64	65+	75+
1925	104.6	105.6	105.6	83.6	74.4
1930	103.6	104.8	104.3	82.8	73.2
1935	103.1	104.5	103.5	83.0	72.1
1940	101.1	104.1	100.2	82.7	69.9
1944	99.4	103.6	97.5	81.9	69.2
1949 ¹⁾	102.1	103.8	102.9	82.4	-
1955	100.0	108.3	96.1	72.9	64.6
1960	100.8	107.5	98.6	70.1	62.5
1966	101.4	107.4	99.5	64.8	54.8
1970	100.8	107.2	98.9	62.1	49.7
1975	101.2	107.4	100.3	61.2	45.1
1980	100.5	106.9	100.3	59.4	41.2
1985	100.2	107.2	100.4	59.4	41.8
1990	100.7	108.0	101.8	60.0	43.4
1995	100.7	110.0	102.3	58.5	45.3
2000	100.7	111.8	102.5	61.8	47.2

주: 1) 60세 이상 인구임.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보고서』, 각년도.

4. 성·연령 구조 변화의 사회적 의미 및 정책적 함의

지금까지 논의한 성·연령구조의 변화는 크게 유소년 인구의 감소,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증가, 그리고 출생시 및 노인인구의 성비 불균형 문제로 요약할 수 있다. 노인 성비 불균형 문제는 노인복지와 연계되어 있으므로 노인 복지 수준의 향상과 함께 다루기로 한다.

가. 유소년 인구 감소

유소년 인구의 감소는 출산력의 감소에 기인하고 있다. 출산력의 감소는 그 동안 가족계획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에 힘입은 바 크지만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소자녀 규범의 확산, 사교육비의 증대에 따른 아동 양육비의 증대, 그리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에 따른 결혼연령의 상승과 출산 기피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그 결과 아동인구의 감소는 신규 노동력의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1세기 노동공급 여건의 변화와 관련하여 대두되는 정책과제로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증대와 인구노령화에 따른 노령인력의 활용이다. 앞으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고학력화 추세가 빠르게 진전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젊은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력 부족이 전망되는 상황에서 여성인력의 활용과 고령자 활용 대책은 고용정책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복지정책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1) 기혼 여성 취업 확대를 위한 보육시설 확충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결정하는 요인은 복합적이고 다양한 것으로

로 분석되고 있다. 사회구조적 요인, 인적자본과 관련된 변수, 가족형성의 주기 등이 영향을 준다. 특히 취학전 자녀 유무는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변수 중 하나이다. 취학전 자녀가 있는 경우 경제활동참여는 크게 제한을 받을 수 밖에 없으며 보육시설이 미비할수록 더욱 그러하게 된다. 기혼 취업 여성의 가장 큰 어려움이 자녀양육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증가되는 기혼여성의 사회진출과 취업모의 자녀양육 문제는 더 이상 개인적인 문제로 방치될 수 없는 실정이며 보육사업을 위한 사회적 대응책이 요구되고 있다.

일본의 엔젤 플랜을 보면 일본도 맞벌이 가구의 증가와 핵가족화의 진전에 대응하여 아동보육시설을 크게 확충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육아 휴직급여의 실시, 다양한 보육서비스의 확충을 통한 여성의 자녀양육과 일에 대한 양면적 지원, 지역의 자녀양육지원센터 확충, 모자보건의료체계의 충실화를 통한 자녀양육 지원 등을 정책의 골자로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아동보육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보육시설이 확충되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할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시설의 양적 확대와 함께 질적 개선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현재의 영세한 시설운동을 탈피하여 보다 전문화된 시설과 이들 시설에서 일할 인력의 대폭적인 확충이 요구된다. 아동보육의 사회화 추이에 따라 민간시설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도 확대되어야 한다.

2) 고령자 취업 확대 및 정년 연장

조기정년퇴직이 이제 사회문제의 하나가 되고 있다. 평균수명이 연장되어 건강하고 일할 수 있는 노인이 많은 실정이지만, 우리 나라는 대부분의 직장이 55세를 전후하여 정년을 정하고 있어 생애주기로 보면 자녀의 결혼 등 경제적 부담이 큰 50대에 조기 정년퇴직을 하고 있다. 정년퇴직자들의 대부분이 정년 후에도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며 계속 일을 하겠다는 의욕이 강하지만 기업의 일반적 인식은 젊은 노동력을 구하고 정년 후 재취업 등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으나 임금 부담 때문에 주저하

는 실정이다. 따라서 정년을 단계적으로 연장하되 일정 연령이 지나면 임금 수준을 체감하는 등 합리적으로 조정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퇴직 정년의 단계적 연장은 향후 사회보험 재정의 안정화와 노동력 부족의 완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지만, 현재 우리 나라 사회 전반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 구조조정 시책으로 인하여 당장 실현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인구정책의 장기적인 안목에서 사회가 안정되는 일정 시기부터는 전직종 종사자에 대한 점증적인 퇴직 연령의 상향 조정은 정책적으로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고령자의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생산활동에 활용하고 적당한 일을 통하여 노인의 경제적, 심리적 안정과 함께 건강을 증진함으로써 활력 있는 고령사회 건설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나. 급속한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인 복지의 확충

급속한 노령화 추세와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에 따른 노인복지 수요의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가족-이웃-지역사회-국가」로 이어지는 복지공동체를 구축하여 대응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즉 노인의 기본적인 욕구는 국가가 책임을 지되, 그 외의 욕구에 대해서는 가족이나 지역사회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먼저, 우리 나라의 전통적인 가족복지가 보다 활성화되고 가족제도의 건강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사회경제적 유인제도가 마련되어야 하겠다. 사회의 기초단위인 가정이 건강해야 나라가 건강해 지기 때문이다. 건강하지 못한 저소득층 노인에 대해서는 국가지원을 통한 소득·보건의료 등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노인을 위해서는 취업 기회를 확대한다. 중산층 이상 노인을 위해서는 실버산업의 육성을 통해 유료요양시설 등을 확충하는 한편, 여가 및 자원봉사 기회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종전의 시설보호를 위주로 하는 정책보다는 가정에서의 노인보호를 위해 재가노인 복지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노령인구의 증가에

따른 복지수요의 증가, 그리고 복지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대한 욕구 증대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선결과제로서 노인복지 재정을 확충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민간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의 실버산업 등에 대한 복지투자를 유도하고, 자원봉사자의 발굴·육성 및 관리체계를 개선한다.

다. 출생시 성비 불균형 대책

1990년에 접어들면서 사회문제의 하나로 부각되어 온 성비불균형은 태아의 성감별을 위한 의료행위를 금지토록 한 의료법의 개정 등 정부의 시의 적절한 제도적인 장치와 더불어 민간단체 중심의 홍보교육활동의 지속적인 전개, 성비불균형의 심각성에 대한 언론매체의 대대적인 보도, 의료기관 스스로의 자율적 규제활동 등에 힘입어 출생시 성비는 1994년의 115.2를 고비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1996년 10월에는 태아감별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이 다수 구속 기소된 사건을 계기로 출생시 성비는 당분간 계속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남아선호관은 우리의 의식구조상 단기간에 불식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제도적인 통제기능이나 관련 홍보활동이 약화될 경우 출생시 성비 불균형이 다시 증가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성비의 불균형 문제가 완전히 정상 상태로 환원되도록 하기 위한 대처 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장영식 외, 1996). 첫째로, 남아선호와 태아의 성감별과 관련된 국민의 전통적 의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홍보교육활동은 지속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 둘째로, 남아선호관을 불식시키기 위한 사회제도의 개선과 여성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시책이 계속 강화되어야 한다. 셋째로, 태아의 성감별을 위한 의료행위는 의료인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의식개혁운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로, 태아 성감별에 따른 불법 의료에 대한 처벌 및 감시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끝으로 태아의 성감별을 통한 선별적 인공임신중절은 모자보건과 직결된 사항이므로 기존 모자보건법에도 태아의 성감별을 위한 의료행위를 규

제하는 내용의 조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성비의 불균형을 야기하는 근본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남아선호관은 단기간에 근절될 수 없는 전통적 의식구조이기 때문에 이를 완화하기 위한 각종 사회지원시책의 꾸준한 추진과 더불어 태아의 성감별을 통한 인공임신중절을 근절하기 위한 대국민 홍보계몽활동을 강력히 추진하고 의료인과 관련 단체의 자율적인 자정 노력과 감시 활동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성비의 불균형은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삶의 질」의 향상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상치되는 반사회 윤리적 행위의 결과라는 사실을 국민 모두가 깊이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언론, 종교 및 각종 사회 단체가 공동 협력하여 국민의 의식을 개혁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V. 결론

성 및 연령구조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인 대안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기혼 여성 취업 확대를 위한 보육시설 확충, 고령자 취업 확대 및 정년연장, 급속한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인 복지의 확충, 그리고 출생시 성비 불균형 대책을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연령구조는 저 출산의 지속으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노령화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성 및 연령구조의 변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여파를 극소화하기 위하여 사회보험, 정년제도, 가족제도, 여성 및 노인복지, 인력개발 등 사회경제 모든 부문에 걸친 총체적인 대응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사회경제적 대응전략이 향후 우리 나라 인구정책의 주류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제7장

가족 및 가구변화의 센서스분석¹⁾

김 정 석
(동국대학교)

I. 머리말

현대 한국사회에서 가족은 여전히 개인의 삶과 행위의 준거로서, 그리고 사회의 기본단위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가족은 급격한 사회 변동 속에서 그 형태와 구조 또한 심대한 변화를 겪어 왔다. 흔히 가족(family)은 혈연, 혼인, 입양 등을 통해 형성된 관계로서 주거단위를 넘어서 유지되는 반면, 가구는 물리적 생활공간을 함께 사용하는 주거공동체로 그 구성원에는 가족이 아닌 사람들도 포함된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경우, 현실적으로 가구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대다수는 가족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가구 내에 거주하는 가구원들간의 관계분석은 가족생활의 많은 측면들을 고찰할 수 있는 작업이 된다.

이 글은 지난 20년 동안 한국 가족구조의 변화를 파악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1980년도에서 2000년도에 이르기까지의 센서스 표본자료를 이용하여 가구형태(household type)와 거주형태(living arrangements)를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이 글은 일인가구 및 부부가구의 증가, 아동과 노인들의 거주형태 변화, 여성가구주 증가 현상 등을 주목하고 있는데, 이 주제들은 가구 및

1) 이 보고서는 원래 보고서의 압축본이다. 원래 보고서는 1980년도, 1985년도, 1990년도, 1995년도, 2000년도 자료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으나 여기서는 주로 1980년도와 2000년도 자료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가구형태의 전반적 변화 추세는 생략하고 있다.

거주형태와 관련된 여러 주제 중에서도 그것이 갖는 사회적, 정책적 중요성이 매우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의 가구 및 가족변화에 관한 대부분의 기존 연구나 발표는 가구를 단위로 이루어져왔다. 이에는 전체 가구수 중에 특정형태의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한 예로, 2000년도 총 가구 중 단독가구 비율이 15.5%)이나 가구수의 증가 등을 보여주는 보고서 등이 속하며, 가족 혹은 가구형태 변화를 알 수 있는 유용한 지표로서 제시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해 한국 인구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떤 형태의 가족 혹은 가구를 구성하고 있는가, 그리고 한국인구의 가족 및 가구는 어떻게 변하여 왔는가에 대한 질문에 직접적인 대답을 구하기는 어렵다. 이 글에서는 분석단위를 가구가 아닌 개인, 즉 가구원으로 두고 가구형태와 거주형태를 분석한다.

II. 일인 및 부부가구 거주 인구비율

1. 전반적 가구형태변화

이제 1980년도에서 2000년도 사이에 일반가구¹⁾에 거주하는 사람들(이하, 가구원)이 어떠한 가구형태에 속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자. 여기에 제시하는 가구형태는 일인가구(일인만이 거주하는 가구), 부부가구(직계가족이 없이 부부가 함께 사는 가구), 2세대가구(직계관계에 있는 두 세대의 가족으로 구성된 가구), 3세대이상가구(직계관계에 있는 3세대 이상의 가족으로 구성된 가구) 및 기타일반가구(앞의 네 가지 형태를 제외한 가구)로 정의한다. 이 다섯 가지 형태의 가구 중에서 특히 일인가구와 부부가구를 중심으로 논의를 이끌어간다.

다음의 <표 1>은 1980년도에서 2000년도까지 가구원들이 다섯 가지의

1) 일반가구는 주로 혈연관계에 있는 친족가구로 이루어지며, 5인 이하의 비친족가구도 포함된다. 한편 집단가구는 집단시설가구와 6인이상의 비친족가구가 포함된다. 인구비율로 볼 때 집단가구에 속하는 비율은 극소수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일반가구에 속하는 인구만을 다루기로 한다.

가구형태에 속하는 상대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이 표에 의하면 지난 20년 동안 일인가구와 부부가구에 속하는 가구원 비율은 꾸준히 증가해 온 반면, 3세대 가구에 속하는 가구원 비율은 꾸준히 감소해 왔음을 알 수 있다. 가령, 1980년도에는 일인가구에 거주하는 가구원의 비율은 1.1%로 전체 가구원 100명당 1명 정도가 일인가구에 거주하였지만 2000년도에는 해당 가구원 비율이 5.1%로 상승하여 전체 가구원 100명당 5명의 꼴로 일인가구에 거주하고 있다.

<표 1>여기에

2. 결혼상태별 일인가구 및 부부가구 형성비율

가구원들이 일인가구에 거주하는지, 부부가구에 거주하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들의 결혼상태를 고려해야 한다. 미혼, 사별 혹은 이혼 등으로 인해 배우자가 없는 경우(이하 무배우자)는 부부가구 자체를 형성하지 못한다. 또한 결혼한 사람(이하 유배우자)인 경우, 거의 대부분이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일인가구를 형성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또한 일인가구와 부부가구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연령이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는 15세 이상의 연령층에 한정해서 무배우자 및 유배우자로 나누어 일인가구 및 부부가구에 속하는 비율을 분석하기로 한다.

1) 15세 이상 무배우자들의 일인가구 형성비율

우선 15세 이상 무배우자 중에서 일인가구에 속하는 비율을 살펴보자. 다음의 <표 2> 는 1980년도와 2000년도에 무배우자 중에서 일인가구에 거주하는 비율을 성, 거주지역, 결혼상태 및 연령대별로 제시하고 있다. 성의 경우, 15세 이상 무배우자들 중에서 일인가구에 거주하는 여성들의 비율이 남성들의 비율보다 꽤 높게 나타나며, 이러한 남녀간의 비율차이는 1980년도

에서 2000년도 사이에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무배우자들 내에서의 도시거주자와 농촌거주자의 차이는 1990년도에 이르러서 보여지기 시작하는데, 이후부터는 농촌거주자들에게서 일인가구에 속하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2000년도 현재, 15세 이상 무배우자중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일인가구에 속할 비율은 14%에 이르지만, 농촌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일인가구에 거주할 비율은 22.2%로 나타난다.

<표 2>여기에

무배우자들의 결혼상태별 일인가구 거주비율을 살펴보면, 각 연도에 있어서 일인가구 거주비율이 이혼한 사람에게서 가장 높게 나타나며, 사별자, 미혼자의 순으로 나타난다. 1980년도에 이혼한 사람들의 16.8%, 사별한 사람들의 8.3%, 그리고 미혼자들의 2.3%가 일인가구에 거주하고 있었다. 이후 이 비율들은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해, 2000년도에는 이혼한 사람들의 32.2%, 사별한 사람들의 30.6%, 미혼자들의 10.1%가 일인가구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2000년도 현재, 사별하거나 이혼한 사람들은 10명중 3명, 미혼인 사람들은 10명중 한 명 정도가 일인가구를 형성함을 의미한다. 미혼자들에게서 일인가구 거주비율이 높아진 현상은 부모에게서 독립하여 별개의 가구를 형성하는 한편, 결혼을 미루거나 아예 하지 않은 젊은이들이 늘어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연령대별로 보면 일인가구에 속하는 무배우자들의 비율은 각 연도에 있어서 저연령층에서 고연령층으로 가면서 높아지다가 55~64세를 정점으로 낮아지고 있다. 이러한 유형은 특히 2000년도에 뚜렷한데, 25~34세중 일인가구에 속하는 무배우자 비율은 17.5%, 다음 연령대인 35~44세에서는 해당 비율이 30.4%로 오르고 55~64세에서는 다시 36.2%로 오르고 나서 65세 이상에서는 33.7%로 약간 내려가고 있다. 1980년도와 2000년도 사이 저연령층 무배우자들의 일인가구 거주비율의 증가는 주로 미혼인 사람들 내에서의 일인 가구거주 경향이 늘어났음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한편, 고

연령층에서의 일인가구 거주 유배우자들의 증가는 이혼이나 사별한 사람들에게서의 일인가구 거주 경향이 높아짐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2) 15세 이상 유배우자들의 부부가구 형성비율

15세 이상 유배우자들에서 부부가구에 거주하는 비율은 다음의 <표 3>에 제시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유배우자내에서 성별로 살펴보는 작업이 무의미하기 때문에 성별 비율은 제시하지 않는다. <표 3>에 의하면 유배우자들이 부부가구에 거주하는 비율은 1980년도에 도시에서나 농촌에서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1985년도 이후로는 그 차이가 커지고 있다. 도시에 비해 농촌에 거주하는 유배우자들에게서 부부가구에 거주하는 비율이 점차 더 높아지고 있는데, 이는 성인자녀들이 농촌에서 도시로의 이주하면서 농촌에 남은 고연령층 부모들이 부부가구에 거주하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표 3> 여기에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유배우자 중 부부가구에 거주하는 비율은 15~24세에서 높게 나타나다가 25~34세부터 적어지면서 45~54세부터는 다시 높아지고 있다. 이는 젊은 부부가 자녀 없이 부부가구를 형성하다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면서 부부가구를 벗어났다가 자녀들이 성인이 되어 떠나면서 다시 부부가구로 돌아오는 현상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생애주기별 부부가구의 형성은 1980년대보다 2000년도에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

Ⅲ. 특정 연령층의 거주형태

연령별 인구를 고려할 때 15세미만의 아동들(이하 아동)과 65세 이상의 노인들은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인구계층이라 볼 수 있다. 이 절에서는 이

두 연령층의 거주형태를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아동층에서는 이들이 양부모와 함께 한 가구 내에 살고 있는가가, 그리고 노인층에서는 이들이 성인 자녀와 함께 살고 있는가가 중요한 주제가 될 것이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가구형태보다는 거주형태를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한다.

1. 아동들의 거주형태

다음의 <표 4>는 15세미만 아동들의 거주형태를 나타낸다. 특기할 사항은 이 표에서 양부모와 함께 사는 경우는 부모의 결혼상태가 아니라 가구내에 부모가 함께 존재하는 경우로 정의한다. 이는 부모의 결혼상태보다 실제 가구내에서 부모가 함께 살고 있는가가 아동에게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표 4>여기에

<표 4>에 의하면 양부모와 함께 사는 비율은 1980년도와 2000년도 사이에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고, 90%정도에 머무르고 있다. 어머니 없이 아버지와 사는 비율은 1~2% 정도, 아버지 없이 어머니와 사는 비율은 3~6% 정도이며, 부모가 없는 비율은 2~5% 정도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가구내에 조부모가 함께 거주하는 아동들의 비율은 1980년도 24.1%에서 2000년도 15.3%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이는 3세대이상의 가구에 속하는 비율이 적어짐을 반영한다. 아동들이 거주하는 가구내 15세미만 아동들의 평균인원수도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출산률의 감소를 반영하는 것이다.

거주지역별로 보았을 때,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비록 비율이 적기는 하나 아버지 없이 어머니와 함께 사는 아동비율이 농촌보다는 도시에서 높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각 연도에서 발견되고 있는데, 이는 홀로 된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는 일거리가 많은 도시로 이동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가구내에 어느 부모와도 함께 살지 않는 비율은

각 연도에서 도시보다는 농촌에서 높게 나타난다. 이는 부모가 도시에서 일하는 동안 자녀를 농촌의 조부모에게 위탁한다든지, 부모를 잃어버린 아동들이 농촌의 조부모나 친지에게 맡겨지는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된다.

조부모와 함께 사는 비율의 도시-농촌간의 차이는 확연하다. 각 연도에 있어 도시보다는 농촌에서 조부모와 함께 사는 아동들의 비율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 한편, 조부모와 함께 사는 아동들의 비율은 농촌보다는 도시에서 더 크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가구내 15세미만 평균인원수는 각 연도에 있어서 도시보다는 농촌에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도시와 농촌간의 출산력 차이를 반영한 것이다. 이를 통해 볼 때 농촌의 아동들이 도시의 아동들보다 양부모와 함께 사는 비율은 약간 적지만 조부모와 함께 사는 비율이 높고 동일연령대의 아동들이 있을 확률도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보인다.

아동들의 연령별로 살펴보면, 각 연도에 있어서 아동들의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 양부모와 거주하는 비율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가령, 2000년도의 경우 0~4세사이의 아동들이 양부모와 함께 사는 비율은 94.5%이지만 5~9세에서는 91.5%, 그리고 10~14세에서는 87.6%로 낮아지고 있다. 이는 아동들이 성장과 함께 부모들이 사망, 별거, 이혼할 가능성이 많아짐을 반영한다.

2. 노인들의 거주형태

다음의 <표 5>는 65세 이상 노인들의 거주형태를 노인들의 성, 거주지역 및 결혼상태별로 제시하고 있다. 거주형태 중에서 자녀 없이 사는 비율, 기혼자녀와 사는 비율 및 미혼자녀와 사는 비율에 관한 추가설명이 필요하다. 먼저 기혼자녀와 사는 비율은 노인들이 사는 가구내에 적어도 일인이상의 기혼자녀가 있는 경우(미혼자녀의 유무에 관계없이)로 정의하였고, 미혼자녀와 사는 비율은 가구내에 기혼자녀가 없이 미혼자녀가 적어도 일인이상 있는 경우로 정의하였다. 따라서 자녀 없이 사는 비율, 기혼자녀와 사는 비

율, 미혼자녀와 사는 비율은 합계는 전체경우가 된다. 한편, 자녀 없이 사는 비율 속에는 일인가구에 거주하는 비율과 부부가구에 거주하는 비율 등이 포함되며, 자녀이외의 친족이나 비친족과 함께 사는 비율도 포함된다.

<표 5> 여기에

위의 <표 5>에 의하면 1980년도에서 2000년도 사이에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자녀 없이 사는 비율은 크게 증가하는 한편, 기혼자녀와 사는 비율은 크게 감소하였다. 기혼자녀와 동거하는 비율에 비해, 미혼자녀와 동거하는 비율은 다소 완만하게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노부모들이 아직 사회적으로 독립된 생활을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미혼자녀들을 데리고 함께 사는 경향은 강하게 남아있지만, 일단 결혼한 자녀들은 분가해 별개의 가구를 형성하는 경향이 강해짐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자녀 없이 사는 노인들의 증가, 즉 자녀와 독립적인 가구를 형성하는 노인들의 증가는 이들이 가구주 혹은 가구주의 배우자가 되는 비율의 증가에도 반영된다. 자녀 없이 사는 노인의 비율이 20%미만인 1980년도의 경우, 노인들의 41.3%가 가구주 혹은 가구주의 배우자, 49.4%가 가구주의 부모로 나타난다. 그러나 자녀 없이 사는 노인비율이 50%를 넘어서는 2000년도에는, 노인들의 67.1%가 가구주 혹은 가구주의 배우자인 한편, 31.1%가 가구주의 부모로 나타난다. 자녀, 특히 기혼자녀와 함께 사는 비율의 감소는 노인들이 가구주의 위치를 자녀에게 줄 기회가 없이 그대로 지속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노인들의 거주지역, 성 및 배우자유무별로 거주형태의 차이를 살펴보자. 먼저 거주지역별로 보면 1980년도와 2000년도 동안에 자녀 없이 사는 노인들의 비율은 도시보다는 농촌에게서 항상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차이는 최근으로 올수록 커지고 있다. 이는 농촌의 성인자녀들이 교육이나 직장 등의 이유로 도시로 이주하면서 농촌에 노부모들만 남게 되는 현상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가구주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항목에서는 자녀(기혼 및 미

혼)와 동거하는 비율이 높은 도시에서 노인들이 가구주의 부모가 되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성별로 노인들의 거주형태를 보면 1980년도와 2000년도 사이에 자녀 없이 사는 노인들의 비율은 여성노인보다는 남성노인에게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자녀 없이 사는 노인비율을 구성하는 요소들인 일인가구 거주비율과 부부가구 거주비율을 살펴보면 남성노인과 여성노인간에 뚜렷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각 연도에 있어서 일인가구에 거주하는 노인비율은 남성노인보다는 여성노인에게서, 그러나 부부가구에 거주하는 노인비율은 여성노인보다는 남성노인에게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자녀 없이 사는 노인들이라 할지라도 여성노인들은 홀로 사는 경우가 많으며, 남성노인들은 배우자와 함께 부부가 사는 경우가 많음을 의미한다. 가구주가 되는 비율은 연도에 관계없이 여성노인보다는 남성노인들에게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1980년도와 2000년도 사이에 여성노인에게서 가구주의 배우자가 되는 비율이 늘어나는 것은 부부가구 노인비율의 증가로 인한 것으로 보여진다.

결혼상태별 차이는 무배우자와 유배우자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는데, 대부분의 무배우자들은 사별한 상태이며, 이혼과 미혼은 소수에 속한다. 자녀 없이 사는 비율은 연도에 상관없이 유배우자에게서 높게 나타난다. 이는 무배우자에 비해 유배우자들이 연령이 상대적으로 낮아 경제적으로 신체적으로 독립적인 생활을 할 능력이 많음을 반영하는 것일 수 있다. 또한 자녀와 별거하면서 부부가구에 거주하던 노인들이 자신의 배우자를 잃고 난 후에 자녀들과 함께 동거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무배우자들의 자녀별거 비율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다음의 <표 6>은 65세 이상 노인들의 연령대별로 거주형태를 제시하고 있다. 이 표에 의하면 연도에 관계없이 노인들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자녀 없이 사는 노인비율은 감소하는 반면, 기혼자녀와 사는 노인들의 비율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또한 가구주 혹은 가구주 배우자의 비율도 기혼자녀와의 동거비율 상승과 함께 연령대가 높을수록 감소되고 있다.

<표 6> 여기에

연도별로 살펴보면, 1980년도에 비해 2000년도에 65~69세 연령층의 자녀 없이 사는 비율이 훨씬 높으며, 동시에 90세 이상의 최고령층에서도 그 비율이 여전히 높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결국 지난 20년간 노인들이 자녀와 동거하는 비율은 자신들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기는 하지만, 최근으로 올수록 최고령층에서 여전히 자녀와 함께 살지 않은 경우가 더욱 많아졌다고 하겠다.

IV. 성별 가구주의 형성비율과 특성

여기에서는 남성과 여성을 구분한 후, 각 성별로 가구주가 되는 비율이 어떻게 다른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를 이어 가구주의 성별에 따라 이들의 인구학적 특성이 어떻게 다른가를 알아본다.

1. 성별 가구주가 되는 비율

다음의 <표 7>은 거주지역, 결혼상태 및 연령대별로 가구주가 되는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 표에 의하면 1980년도와 2000년도 사이에 남성들 중에서 가구주가 되는 비율은 59.2%에서 69.9%로 상승한데 비해, 여성들 중에서 가구주가 되는 비율은 8.3%에서 15.0%로 늘어났다. 여성들 내에서 가구주가 되는 비율의 증가는 여성가구주 가구의 증가와 일치하는 현상이다.

<표 7> 여기에

여성들 내에서 가구주가 되는 비율을 거주지역별로 보면, 1980년도에는 해당 비율이 도시에서 높았으나, 2000년도에는 농촌에서 높게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는 도시에 비해 농촌에서 고령층의 여성들이 많고 이들 중 사별

한 여성들이 자녀와 별거하면서 독립적인 가구를 형성하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현상은 남성들 내에서 가구주가 되는 비율에서도 관찰되고 있다.

결혼상태별로 보면 여성들 내에서 가구주가 되는 비율은 사별이나 이혼한 여성들에서 가장 높으며, 결혼중인 여성의 경우는 여전히 소수에 지나지 않고 있다. 한편, 미혼여성들 내에서 가구주가 되는 비율은 지난 20년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미혼여성들이 일인가구를 형성하는 경향과 일치하는 현상이다. 남성들의 경우에는 결혼한 남성의 대부분이 가구주가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연령별로는 여성들이 가구주가 되는 비율은 연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1980년도에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가구주가 되는 비율도 함께 증가하다가 55~64세를 정점으로 해서 65세 이상에서는 그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여성들이 노년기에 접어들어 기혼자녀의 가구에 흡수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남성들의 경우에는 각 연도에 있어 이와 유사한 연령대별 유형이 발견된다. 그러나 2000년도에는 여성들 내에서 가구주가 되는 비율이 다른 연령층에서보다도 65세 이상층에서 더 높게 나타나는데, 65세 이상 여성의 31.6%가 자신의 가구를 이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고령층의 여성들이 자녀와 별거하면서 자신의 가구를 이끌어 가는 경향이 강해짐을 의미한다.

2. 가구주의 성에 따른 특성

앞에서는 여성들 내에서 가구주가 되는 비율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여성가구주와 남성가구주의 결혼상태 및 연령의 구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다음의 <표 8>은 가구주의 성 및 거주지역에 따라 결혼상태 및 연령의 분포를 제시하고 있다.

<표 8> 여기에

이 표에 의하면 남성가구주의 경우는 대부분이 결혼한 남성이며, 최근으로 올수록 미혼남성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여성가구주의 경우 사별한 여성이 가장 많으며, 최근으로 올수록 미혼과 이혼한 여성들의 상대 비중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특히 여성가구주중에서 이혼한 여성들의 비중은 1980년도에는 3.8%에 지나지 않았으나 2000년도에는 11.7%에 이르고 있다. 여성가구주내 이혼녀들의 증가는 전체 인구 중에서 이혼여성이 증가한 측면도 있겠지만, 이혼한 여성들이 독립적으로 자신의 가구를 형성하고 살아가는 경향이 강해진 면도 반영하고 있다.

도시의 여성가구주와 농촌의 여성가구주들의 결혼상태분포를 보면, 농촌 여성가구주의 대부분이 사별한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시여성가구주에게서도 사별여성이 많기는 하지만 농촌여성가구주에 비해서는 훨씬 적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도시여성가구주들의 상당수는 미혼이거나 결혼중인 여성들인 것으로 나타난다. 연도별 변화를 보면, 도시여성 가구주들 중 미혼과 이혼한 여성들의 비중이 크게 증가해왔음을 알 수 있다.

남성가구주들과 여성가구주들은 연령분포에서도 차이가 분명하다. 남성가구주들에 비해 여성가구주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연령층에 더 많이 집중되어 있다. 특히 연도별 변화를 보면 여성가구주들이 고령층에 속한 비율은 최근으로 올수록 더 많아짐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여성가구주들의 고령화를 의미한다. 도시여성가구주들과 농촌여성가구주들의 연령분포에서는 농촌 여성가구주들이 도시여성가구주들에 비해 높은 연령층에 더 많이 집중되어 있으며, 최근으로 올수록 농촌여성가구주들이 고령층에 집중되어지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V. 요약 및 정리

이 연구에서는 1980년도에서 2000년도까지의 센서스 자료를 분석을 통해 일반가구원들이 속한 가구형태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가구를 단위로 한 가구 및 가족형태변화에 관련된 기존의 통계발표에서와 마찬가지로 지난 20

년간 한국의 인구들은 그 가구형태에 있어 많은 변화를 겪어온 것으로 확인된다. 서론에서 제기되었던 주요 질문별로 분석결과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일인가구와 부부가구에 속하는 인구비율은 크게 증가한 반면, 3세대 이상 가구에 속하는 비율은 크게 감소하였다. 배우자유무별로 일인가구와 부부가구에 속하는 인구비율을 살펴보면, 무배우자 중에서 일인가구에 거주하는 비율은 남성보다는 여성에게서, 도시거주자보다는 농촌거주자에게서 높으며 이러한 남녀간, 도시-농촌간 차이는 최근으로 올수록 심화되었다. 결혼상태별로 보면, 이혼이나 사별한 사람들이 미혼보다 일인가구 거주비율이 높지만, 지난 20년 간 일인가구 거주비율의 증가는 미혼자에게서 가장 빠르게 이루어졌다. 유배우자들이 부부가구에 속하는 비율은 연령대별로 차이를 보이는데, 특히 성인자녀가 떠난 후에 부부가구로 돌아오는 비율이 최근으로 올수록 증가하고 있다.

다음으로 15세미만 아동들의 거주형태를 보면 아동들의 연령이 높을수록 양부모와 함께 사는 비율이 낮아지기는 하지만, 아동전체를 고려할 때 이 비율은 지난 20년 간 90% 정도 수준에 머물렀다. 한편, 조부모와 함께 사는 비율은 꾸준히 감소해 오는데, 이러한 현상은 농촌아동보다는 도시아동에게서 심하게 나타났다. 65세 이상 노인들의 거주형태에서는 자녀 없이 사는 노인비율의 급속한 증가현상이 두드러졌다. 이러한 노인비율은 여성노인보다는 남성노인에게서 높지만, 자녀 없이 사는 남성노인들은 부부가구를 형성하는 한편 자녀 없이 사는 여성노인들은 일인가구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다는 점이 부각되었다.

마지막으로 지난 20년 간 여성들이 가구주가 되는 비율이 남성들에 비해 급속히 증가했는데, 이는 최근으로 올수록 미혼여성들과 고령여성들이 일인가구의 가구주로 등장하는 현상으로 설명된다. 남성가구주에 비해 여성가구주들은 사별, 이혼 및 미혼의 비율이 높으며, 상대적으로 고령층에 몰려 있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표 1> 일반가구의 가구형태별 구성비, 1980-2000

(단위:%)

	1980년도	1985년도	1990년도	1995년도	2000년도
일인가구	1.1	1.7	2.6	3.9	5.1
부부가구	3.2	3.9	5.2	7.3	8.8
2세대가구	69.1	70.0	71.0	71.2	70.4
3세대이상가구	24.3	21.6	18.7	15.5	13.6
기타	2.3	2.7	2.4	2.2	2.1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2> 무배우자들의 성, 거주지역, 결혼상태 및 연령대별 일인가구 거주비율, 1980-2000

(단위:%)

	1980년도	1985년도	1990년도	1995년도	2000년도
전체	3.7	5.4	8.0	12.3	15.6
성					
남성	2.6	4.1	6.8	10.7	13.2
여성	4.7	6.6	9.1	13.5	17.5
거주지역					
도시	3.6	5.3	7.7	11.1	14.0
농촌	3.8	5.6	9.1	16.8	22.2
결혼상태					
미혼	2.3	3.7	5.5	8.3	10.1
사별	8.3	11.5	16.4	23.9	30.6
이혼	16.8	20.8	26.1	30.1	32.2
연령대					
15~24	1.6	2.2	2.5	3.7	3.9
25~34	6.5	9.6	14.4	17.2	17.5
35~44	8.6	13.0	19.4	27.0	30.4
45~54	8.2	10.2	15.1	22.1	29.0
55~64	11.1	15.2	21.6	29.3	36.2
65+	8.1	11.8	17.3	25.4	33.7

<표 3> 유배우자들의 거주지역 및 연령대별 부부가구 거주비율, 1980-2000

(단위:%)

	1980년도	1985년도	1990년도	1995년도	2000년도
전체	7.5	8.8	11.1	14.7	17.5
거주지역					
도시	7.4	7.8	9.1	14.8	13.7
농촌	7.7	10.5	16.8	14.6	30.4
연령대					
15~24	24.3	28.2	36.4	38.1	37.3
25~34	7.7	8.4	10.4	12.3	15.0
35~44	1.6	2.0	2.4	3.7	4.3
45~54	4.4	5.5	7.3	10.9	13.1
55~64	13.0	17.2	23.8	32.1	35.2
65+	22.0	27.2	36.5	50.0	55.8

<표 4> 15세미만 아동들의 거주지역 및 연령별 거주형태, 1980년도와 2000년도

(단위:%)

	전체	도시	농촌	0~4	5~9	10~14
<u>1980년도</u>						
가구내 양부모와 함께 사는 비율	89.0	88.8	89.2	93.2	90.0	84.4
가구내 아버지만 함께 사는 비율	1.1	1.0	1.2	0.5	1.1	1.6
가구내 어머니만 함께 사는 비율	6.0	6.8	5.2	3.0	5.8	8.9
가구내 부모가 없는 비율	3.9	3.4	4.5	3.3	3.1	5.2
가구내 조부모와 함께 사는 비율	24.1	17.9	31.4	26.4	23.8	22.5
가구내 부모없이 조부모가 있는 비율	0.6	0.4	0.9	0.3	0.7	0.8
가구주의 자녀인 비율	90.7	92.5	88.4	87.5	92.4	91.6
가구주의 손자녀인 비율	7.1	5.2	9.5	11.4	6.3	4.3
가구내 15세미만 평균아동수	2.7	2.5	3.0	2.5	3.0	2.7
<u>2000년도</u>						
가구내 양부모와 함께 사는 비율	91.2	91.6	89.4	94.5	91.5	87.6
가구내 아버지만 함께 사는 비율	2.0	1.9	2.6	1.0	2.0	3.1
가구내 어머니만 함께 사는 비율	4.2	4.5	3.1	2.2	4.2	6.4
가구내 부모가 없는 비율	2.5	2.0	4.9	2.3	2.4	2.9
가구내 조부모와 함께 사는 비율	15.3	12.9	26.0	15.5	15.1	15.5
가구내 부모없이 조부모가 있는 비율	0.9	0.6	2.2	0.7	0.9	1.2
가구주의 자녀인 비율	93.6	95.0	87.7	92.2	94.0	94.7
가구주의 손자녀인 비율	5.4	4.1	10.9	7.1	5.1	4.0
가구내 15세미만 평균아동수	1.9	1.9	2.0	1.8	2.1	1.8

<표 5> 65세이상 노인들의 성, 결혼상태 및 거주지역별 거주형태, 1980년도와 2000년도
(단위: %)

	전체	남자	여자	무배우	유배우	도시	농촌
<u>1980년도</u>							
자녀없이사는 비율	19.5	22.8	17.6	13.1	27.3	15.2	22.2
일인가구 거주비율	4.8	1.5	6.8	8.1	0.9	3.3	5.8
부부가구 거주비율	10.1	18.0	5.4	---	22.0	6.5	12.3
기혼자녀와 함께 사는 비율	61.7	48.2	69.6	74.3	46.3	63.5	60.5
미혼자녀와 함께 사는 비율	18.8	29.0	12.8	12.6	26.3	21.3	17.3
가구주 비율	32.2	71.3	9.2	13.8	54.6	31.4	32.7
가구주 배우자 비율	9.1	0.1	14.4	---	20.1	7.0	10.4
가구주(배우자) 부모인 비율	49.4	25.3	63.6	70.9	23.3	53.6	46.7
<u>2000년도</u>							
자녀없이사는 비율	50.9	58.1	46.6	39.0	61.9	42.5	62.6
일인가구 거주비율	16.8	5.9	23.5	33.7	1.4	13.8	21.0
부부가구 거주비율	29.2	47.5	18.0	---	55.8	23.5	37.1
기혼자녀와 함께 사는 비율	35.7	24.3	42.7	50.6	22.0	41.0	28.3
미혼자녀와 함께 사는 비율	13.4	17.6	10.8	10.4	16.1	16.5	9.1
가구주 비율	51.1	82.9	31.6	45.7	56.1	47.3	56.3
가구주 배우자 비율	16.0	0.9	25.2	---	30.6	13.8	18.9
가구주(배우자) 부모인 비율	31.1	15.5	40.7	50.8	13.0	36.7	23.4

<표 6> 65세 이상 노인들의 연령대별 거주형태, 1980년도와 2000년도

(단위: %)

	전체	65~69	70~74	75~79	80~84	85~89	90+
<u>1980년도</u>							
자녀없이사는 비율	19.5	22.8	20.7	15.7	10.7	8.9	5.3
일인가구 거주비율	4.8	5.0	4.9	5.0	3.6	4.5	2.4
부부가구 거주비율	10.1	12.8	10.3	7.1	4.5	2.5	0.4
기혼자녀와 함께 사는 비율	61.7	52.0	63.1	71.9	77.5	80.3	83.0
미혼자녀와 함께 사는 비율	18.8	25.1	16.2	12.4	11.8	10.7	11.7
가구주 비율	32.2	41.2	32.2	22.1	16.0	11.5	7.7
가구주 배우자 비율	9.1	13.9	7.9	4.2	2.1	0.4	
가구주(배우자) 부모인 비율	49.4	37.8	51.6	62.4	67.8	67.1	62.8
<u>2000년도</u>							
자녀없이사는 비율	50.9	56.0	54.7	47.8	37.1	25.6	18.8
일인가구 거주비율	16.8	14.3	19.2	20.2	17.2	13.8	7.3
부부가구 거주비율	29.2	36.4	30.6	23.2	16.0	7.9	5.7
기혼자녀와 함께 사는 비율	35.7	24.6	34.0	44.3	56.3	67.9	73.4
미혼자녀와 함께 사는 비율	13.4	19.4	11.3	7.9	6.6	6.5	7.9
가구주 비율	51.1	56.6	53.9	48.6	38.3	25.3	15.4
가구주 배우자 비율	16.0	23.9	15.5	8.3	4.0	1.9	0.8
가구주(배우자) 부모인 비율	31.1	18.6	29.3	41.0	53.8	67.0	72.2

<표 7> 남성과 여성들의 거주지역, 결혼상태 및 연령대별 가구주가 되는 비율,
1980년도와 2000년도

(단위: %)

	1980년도 남성 중 가구주비율	1980년도 여성 중 가구주비율	2000년도 남성 중 가구주비율	2000년도 여성 중 가구주비율
전체	59.2	8.3	69.9	15.0
거주지역				
도시	58.8	9.3	69.2	14.4
농촌	59.7	6.9	72.7	17.2
결혼상태				
미혼	6.0	4.1	17.5	13.5
결혼	91.0	3.9	94.4	4.3
사별	50.2	33.3	66.7	56.7
이혼	49.4	45.0	79.6	82.4
연령대				
15~24	6.2	3.2	6.9	6.8
25~34	66.5	4.5	60.7	9.2
35~44	93.0	10.1	92.3	12.2
45~54	95.7	17.1	96.5	18.6
55~64	93.3	17.3	95.0	23.6
65+	71.3	9.2	82.9	31.6

<요약자료>

가족 및 가구변화의 센서스분석

김 정 석

(동국대학교)

1980년에서 2000년에 이르는 인구센서스 자료 분석결과, 한국인구의 가족 및 가구형태는 심대한 변화를 겪어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우선, 일인가구와 부부가구에 속하는 인구비율은 크게 증가한 반면, 3세대 이상 가구에 속하는 비율은 크게 감소하였다. 배우자유무별로 일인가구와 부부가구에 속하는 인구비율을 살펴보면, 무배우자 중에서 일인가구에 거주하는 비율은 남성보다는 여성에게서, 도시거주자보다는 농촌거주자에게서 높으며 이러한 남녀간, 도시-농촌간 차이는 최근으로 올수록 심화되었다. 결혼상태별로 보면, 이혼이나 사별한 사람들이 미혼보다 일인가구 거주비율이 높지만, 지난 20년 간 일인가구 거주비율의 증가는 미혼자에게서 가장 빠르게 이루어졌다. 유배우자들이 부부가구에 속하는 비율은 연령대별로 차이를 보이는데, 특히 성인자녀가 떠난 후에 부부가구로 돌아오는 비율이 최근으로 올수록 증가하고 있다.

다음으로 15세미만 아동들의 거주형태를 보면 아동들의 연령이 높을수록 양부모와 함께 사는 비율이 낮아지기는 하지만, 아동전체를 고려할 때 이 비율은 지난 20년 간 90% 정도 수준에 머물렀다. 한편, 조부모와 함께 사는 비율은 꾸준히 감소해 오는데, 이러한 현상은 농촌아동보다는 도시아동에게서 심하게 나타났다. 65세 이상 노인들의 거주형태에서는 자녀 없이 사는 노인비율의 급속한 증가현상이 두드러졌다. 이러한 노인비율은 여성노인보다는 남성노인에게서 높지만, 자녀 없이 사는 남성노인들은 부부가구를 형성하는 한편 자녀 없이 사는 여성노인들은 일인가구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다는 점이 부각되었다.

마지막으로 지난 20년 간 여성들이 가구주가 되는 비율이 남성들에 비해 급속히 증가했는데, 이는 최근으로 올수록 미혼여성들과 고령여성들이 일인가구의 가구주로 등장하는 현상으로 설명된다. 남성가구주에 비해 여성가구주들은 사별, 이혼 및 미혼의 비율이 높으며, 상대적으로 고령층에 몰려 있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제8장

교육정도

이 장 영

(국민대학교)

I. 한국인과 교육

1. 정부 교육예산의 증가
2. 한국인의 전통적 교육관

II. 교육수준의 변화

1. 교육수준에 따른 학생 수의 변화
2. 학력구성의 변화

III. 교육수준과 인구

1. 교육과 출산
2. 교육과 소득
3. 교육과 정보화

IV. 정책적 함의

1. 사회변화와 교육
2. 요약 및 함의

I. 한국인과 교육

이 글은 전체적으로 세 부분으로 이루어졌다. 전반부에서는 우리나라 정부의 교육예산의 변화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교육관에 대해서 다루었다. 대체로 거시적 수준이며 우리나라 인구의 교육적 측면에서의 성과 또는 변화가 주된 내용이다. 중반부에서는 교육수준에 따른 인구학적 특성이 어떤지 다루었다. 주로 교육수준에 따른 출산, 소득, 정보화가 주된 내용이다. 이 글의 후반부에서는 미시적 수준에서 우리나라 가계와 교육비를 다루었다.

1. 정부 교육예산의 증가

우리나라에서 국민들의 교육수준 향상과 교육받은 인구의 증가는 우리의 교육열과 더불어 정부의 교육에 대한 투자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정부의 교육에 대한 투자를 요약하면 정부투자가 예산의 증가와 더불어 꾸준히 증가하였다는 것이다. <표 1-1>에 나타나 있듯이 1980년 정부예산은 5.8조원이었고 1990년에는 약 4배 증가하여 22.7조원에 이르렀고 2000년에는 약 16배 증가하여 약 94조원에 이르렀다. 이렇게 경제규모가 커짐에 따라 정부예산 중에서 교육에 투자되는 교육부 예산도 증가하였다. 1980년에는 정부예산 중 18.7%인 1.4조원이 교육부 예산으로 배정되었고 1990년에는 22.3%인 5조원이 그리고 2000년에는 23.3%인 19조원이 투자되었다.

이 기간동안 교육부에 배정되는 예산의 특징은 전체예산 중에서 교육부에 투자하는 비중이 1995년까지 꾸준히 증가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교육에 대한 국민의 요망과 이를 예산에 반영시킨 정부정책에 기인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2000년에는 교육부 예산이 절대액수에서는 증가하였지만 정부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감소하였다.

<표 1-1> 정부예산 대비 교육부 예산 (단위: 10억원)

	정부예산(A)	교육부예산(B)	B/A
1980	5,804	1,099	18.9
1985	12,275	2,492	20.3
1990	22,689	5,062	22.3
1995	54,845	12,496	22.8
2000	93,937	19,172	20.4

자료: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2. 한국인의 전통적 교육관

우리나라 국민들의 교육수준 향상에는 국가의 공급과 국민의 수요가 적절하게 작용하였다. 세계의 여러 나라 중에서 이스라엘과 우리나라가 교육에 관한 관심이 매우 높다는 것은 잘 알려진 이야기다. 인구학적으로 보면 과거에는 대개 자녀들이 많았고 그것이 가계에 보탬이 되었다. 그리고 생활이 힘들었기 때문에 ‘제 먹을 것은 가지고 난다’는 말을 믿고 많이 낳았고, 또 피임방법도 확실하지 않아서 원치 않는 아이도 태어났다.

부모가 자녀교육에 열성적인 이유는 학벌이 많은 것을 결정하는 한국 사회에 대한 인식이다. 우리나라는 대학교를 어디에서 나왔는지가 그 사람의 일생을 거의 지배하다시피 한다. 이런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부모들은 따라서 초·중·고등학교 때 자신들의 역량을 최대한 자식에게 쏟아 붓는 것이다. 그래서 이 아이가 좋은 대학을 가면 아이의 그 다음 인생이 훨씬 풍족해 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사회구조가 학연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데 출신학교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모든 사람들이 잘 알고 있다. 교육에 대한 집중 투자가 부모로서는 합리적인 선택이 되는 것이다.

II. 교육수준의 변화

1. 교육수준에 따른 학생 수의 변화: 1945-2000

우리나라는 1945년 일본으로부터 해방을 맞은 후 도시화와 더불어 인구의 증가를 이루어 왔다. 인구증가와 함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숫자도 늘어갔다. 1945년 이래로 우리나라 정부는 교육기회의 팽창을 시도하였으며, 이에 따라 1948년 초등학교에서 의무교육이 시작되었다. 의무교육의 실시로 교육기회의 확대가 이루어졌다. <표 2-2>는 각 학급에 따른 취학률과 졸업생의 진학률을 나타낸 표이다.

<표 2-2> 학교 수준별 취학률 및 졸업생의 진학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취학률	취학률	진학률	취학률	진학률	진학률	
1970	100.7	51.2	66.1	28.1	70.1	26.9	
1975	105.0	71.9	77.2	41.0	74.7	25.8	
1980	102.9	95.1	95.8	63.5	84.5	27.2	
1985	99.9	100.1	99.2	79.5	90.7	6.4	
1990	101.7	98.2	99.8	88.0	95.7	33.2	
1995	100.1	101.6	99.9	91.8	98.5	51.4	
2000	98.7	99.5	99.9	95.6	99.6	68.0	

국가가 국민 모두에게 필요한 교육을 적절하게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다. 장애인 교육은 이런 면에서 국가의 가치를 실현하는 한 부분이다. 장애인 교육에 대한 자료는 <표 2-4>에 나타나 있듯이 장애인 취학자 수는 1990년 19,971명에서 1995년 21,607명 그리고 2000년 23,605명으로 꾸준히 증가하였다.

<표 2-4> 장애자 취학자수(%)

	시각장애	청각	정신지체	지체부자유	합계
1990	7.7	22.1	57.5	12.7	19,971
1995	6.2	15.7	65.5	12.6	21,607
2000	5.3	10.5	80.0	12.2	23,605

2. 학력구성의 변화: 1980-2000

우리나라의 교육열과 정부의 교육에 대한 지원으로 우리나라 인구의 전반적인 교육수준이 향상되었다. 1980년부터 2000년까지 우리나라 6세 이상 인구의 학력구성을 살펴보면 <표 2-5>와 같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 기간동안 인구증가와 교육시설의 확충으로 교육받은 자 숫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을 알 수 있다. 남녀를 합한 합계를 보면 1980년에서 2000년까지 전체 학위 소지자들 중에서 초등학교 졸업자와 중학교 졸업자의 비율이 38.9%와 25.3%에서 각각 14.8%와 13.6%로 줄어들었다. 1980년을 보면 초등학교 졸업 이하가 전체 졸업자 인구에서 가장 많은 38.9%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학교 졸업자는 25.3%, 고등학교 졸업자는 27.4%, 초대전문대 졸업자는 1.6%, 그리고 대학 이상 졸업자는 6.7%이다. 이런 추세는 2000년에는 변하여 초등학교 졸업자가 14.5%, 중학교 졸업자는 13.6%, 고등학교 졸업자는 44.8%, 초대전문대 졸업자는 9.6%, 그리고 대학이상 졸업자는 17.2%를 차지하고 있다. 고등학교 졸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1995년 46.1%를 최고로 2000년에는 44.8%로 감소하고 있다. 초대전문대졸업자들은 1980년 1.6%에서 2000년 9.6%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대졸자의 과잉공급으로 학력 인플레이션 현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오히려 취업이 더 유리한 초급대나 전문대의 선호가 나온 결과로 보인다. 대학이상 졸업자는 1995년 20.0%를 거쳐 2000년에는 17.2%로 감소하고 있다.

이 시기의 학력 구성비 변화의 특징은 초등학교 중학교 졸업자 비율의 감소와 고등학교 졸업자 비율의 현상유지와 초대전문대 졸업자의 꾸준한

증가이다. 남자들은 대졸이상 학력자들이 1995년부터 약 22% 정도로 유지 되는 반면 여자들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표 2-5> 6세 이상 인구의 학력 구성비 (단위: %)

	초졸	중졸	고졸	초대전문대	대학이상	합계
합계						
1980	38.9	25.3	27.4	1.6	6.7	17,632,940
1985	28.3	24.4	35.7	3.0	8.6	20,167,007
1990	20.8	19.9	43.8	3.3	12.3	24,151,014
1995	16.8	15.6	46.1	4.6	20.0	26,439,565
2000	14.8	13.6	44.8	9.6	17.2	27,232,550
남자						
1980	31.1	24.5	32.3	2.2	9.9	8,908,066
1985	22.2	22.1	39.6	3.9	12.2	10,115,606
1990	15.9	17.5	46.3	3.7	16.6	12,179,394
1995	12.5	13.6	47.2	4.8	21.9	13,216,800
2000	11.0	12.1	45.1	10.0	21.8	13,417,267
여자						
1980	46.9	26.2	22.4	0.9	3.5	8,729,874
1985	34.5	26.8	31.8	2.0	4.9	10,051,401
1990	25.8	22.3	41.3	2.8	7.8	11,971,620
1995	21.1	17.5	45.0	4.3	12.0	13,222,765
2000	18.4	15.0	44.5	9.2	12.8	13,815,283

1980년부터 2000년까지 우리나라 성인들의 교육수준의 향상은 이 기간 동안 인구의 절대수가 증가하는 가운데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변화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교육자와 교육시설의 증가가 필수적이어야 한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총인구는 1980년 3,800만 명에서 1990년 4,300만 명 그리고 2000년에는 4,700만 명으로 증가하였다(통계청, 2001). 교원수와 학교수의 증가를 살펴보면 <표 2-6>과 같다.

이 기간동안 초등학교, 고등학교, 초급대·전문대 경우 교원수가 증가

하였고, 중학교와 대학·대학원은 1995년까지 증가하였다가 2000년에는 감소하는 추세이다. 20년 동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초급대·전문대는 교원수가 약 2 배정도 증가하였고 대학·대학원은 약 3 배정도 증가하여 고등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의 수가 더 많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Ⅲ. 교육수준과 인구

1. 교육과 출산

인구학에서 다루는 주제 중 하나는 교육과 출산의 관계이다. 여기서는 어머니의 교육수준과 자녀수를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에서 어머니의 교육 정도에 따라서 출생아 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아보아 <표 3-1>로 정리하였다.

이러한 변화를 요약하면 1980년까지도 큰 비중을 차지하던 불취학 또는 초등학교 졸업자 모의 출생아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중고등학교 졸업자 모의 출생아 수는 1990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00년에는 초대전문대 이상 학력자 모의 출생아 수가 비율과 함께 증가하고 있다. 이는 이 기간동안 전체적인 교육수준의 향상과 특히 여성 교육 수준의 향상에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표 3-1> 모(母)의 교육 수준별 출생아수 (단위: 1,000명, %)

	1980		1990		2000	
	총 출생아수	평균 출생아수	총 출생아수	평균 출생아수	총 출생아수	평균 출생아수
불취학	12,830 (40.0)	5.05	10,077 (28.9)	4.88	7,481 (21.4)	4.40
초등학교	12,709 (39.5)	3.66	11,449 (32.8)	3.71	9,366 (26.8)	2.54
중고등학교	6,089 (18.9)	2.29				
중학교			5,901 (16.9)	2.43	5,014 (14.4)	2.42
고등학교			6,072 (17.4)	1.82	9,532 (27.3)	1.88
초대전문대이상	540 (1.7)	1.98				
초대전문대학			264 (0.8)	1.48	1,303 (3.7)	1.56
대학교			1,071 (3.1)	1.66	2,034 (5.8)	1.65
대학원			46 (0.1)	1.58	192 (0.5)	1.50
합계	32,168 (100.0%)	3.59	34,880 (100.0%)	2.96	34,921 (100.0%)	2.54

출생아는 15세 이상의 기혼여자가 낳은 아이의 수로서 생존아와 사망아를 포함함.
 평균출생아수는 총출생아수를 15세 이상 기혼 부인수로 나누었음.
 학력미상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음.

다음은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른 가구별 출생아수의 분포를 알아 보아 <표 3-2>로 정리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대구, 경북지방의 성비 (sex ratio)가 다른 지역보다 높은데(김한곤, 1997), 이와 유사하게 교육수준과 가족 구성이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2000년 전국을 보면 어머니가 학교를 안 다닌 경우 자녀가 4명 이상이 67.4%로 1980년에 비해서 감소하였고 경북지방의 경우도 70.6%로 줄어들었다. 초등학교 졸업의 경우는 자녀를 2-3명 가진 가족의 비율이 증가하였고, 대신 4명 이상의 자녀를 가진 가족의 구성이 50%에서 44.4%로 줄어들었다.

들었다. 그러나 경북지방의 경우는 4명 이상 자녀의 비율이 49.6%로 1980년과 별 차이가 없다. 초대전문대 이상은 자료를 시계열로 직접 비교할 수가 없지만 전국과 경북을 비교하면 비슷한 추세로 한 명 또는 두 명의 자녀를 가진 비율이 늘었다. 전체적으로 전국과 경북의 출생자녀수 구성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다. 전체적으로 4명 이상의 자녀비율이 시간적으로도 줄어들고 교육수준이 높아짐에 따라서 줄어드는 추세이다.

2. 교육과 소득

다음은 교육 수준에 따른 월평균 임금에 관한 내용으로 <표 3-4>에 정리되어 있다. 기존의 연구를 보면 우리나라 임금 근로자들의 학력간 임금 불평등은 감소되고 있는 추세이다(박세일, 1983; 이정우, 1991; 이장영, 1992; 석현호, 1997; 방하남, 1999).

학력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1980년 고졸자 임금수준을 100으로 하였을 경우 중졸 이하는 68.8%, 초대졸 자는 146.3% 그리고 대졸 이상자는 228.5%로 대졸 이상자의 임금이 고졸자보다 약 2.3배 많아서 그 격차가 매우 큼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격차는 1990년에 감소하였다. 1990년 고졸자에 비해 중졸 이하는 83.8%를 그리고 대졸자는 185.5%의 임금을 받았다. 2000년에는 그 격차가 더 감소하여 중졸 이하는 86.3%를 그리고 대졸 이상자는 158.9%를 받았다. 전체적으로 경제규모가 커 짐에 따라 교육수준에 관계없이 임금 액수가 상승하고 있으며 고졸자 임금을 기준으로 볼 때 학력간 임금격차가 줄어들고 있다.

<표 3-4> 교육 수준별 월평균 임금(단위: 원, %)

	중졸이하	고졸	초대졸	대졸이상
1980	124,435	180,919	264,762	413,318
1985	226,272	303,049	393,450	686,490
1990	476,949	569,394	668,200	1,055,950
1995	959,087	1,100,306	1,192,628	1,715,411
2000	1,261,618	1,461,083	1,508,493	2,321,652
1980	68.8	100.0	146.3	228.5
1985	74.7	100.0	129.8	226.5
1990	83.8	100.0	117.4	185.5
1995	87.2	100.0	108.4	155.9
2000	86.3	100.0	103.2	158.9

위에서 언급되었듯이 우리나라의 교육인구는 각급 학교에서 양적인 팽창을 이루었고 특히 고등교육 인구는 1980년 교육개혁 조치 이후 급격한 증가를 이루었다. 그 중에서도 대학생들의 증가는 비슷한 상황을 경험한 유럽 선진국들의 증가보다 훨씬 크다. 이러한 교육의 팽창은 고학력자를 양산하여 국가가 필요로 하는 산업부분에 공급됨으로써 성장에 기여한 면이 있는 반면에 교육수준의 질적 저하와 취업난을 가중시켰고 학력간 임금격차를 감소시킨 면이 있다(김혜영, 1992).

대학졸업자는 많은데 이들을 받아들이는 산업시설은 충분하지 못한 고학력자의 공급과잉 상태는 고학력자가 예전의 고임금 직종에 취직하지 못하고 낮은 임금 직종에 취직함으로써 자신들의 임금도 낮아졌을 뿐만 아니라 저학력자들도 낮은 임금에 묶이게 되었다. 이런 교육 인플레이 현상은 결국 고용주들에게 유리한 입지를 제공하였고 고용주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으로 고학력자들을 고용할 수 있게 되었고 학력간 임금격차를 줄이는 한 역할을 하였다.

2000년 센서스를 가지고 교육 수준별 종사상 지위를 보면 아래 <표

3-5>와 같다.

<표 3-5> 교육 수준별 종사상 지위, 2000년(단위: %)

	임금, 봉급 근로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	고용원을 둔 사업주	무급가족 종사자	합계
불취학	16.2	51.0	0.8	32.0	14,187
초등학교	32.7	40.5	2.1	24.6	43,701
중학교	50.5	32.1	4.5	12.9	43,737
고등학교	65.6	20.8	6.9	6.7	145,672
초대전문대학	78.6	11.0	7.4	3.1	39,627
대학교	76.7	10.2	11.1	1.9	62,723
대학원 석사	81.6	6.4	11.4	0.7	9,539
대학원 박사	86.5	2.4	10.8	0.3	2,652

국가간 경쟁이 심화되는 현대사회에서는 산업변화에 따른 노동력의 수급을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박준경·김정호, 1992; 최강식, 2000). 근대에 들어 우리나라는 급속한 산업화를 추진하면서 각 산업 분야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변할 뿐만 아니라 각 산업에 종사하는 인구도 변하고 있다. 최강식(2000)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향후 노동력 공급은 생산가능인구의 증가세가 둔화되고, 고령화, 고학력화, 여성노동력의 증가가 예상된다고 한다. 노동력 수요에 있어서는 향후 경제가 지식기반산업 또는 정보화에 비중을 두고 진행됨에 따라 지식정보 관련 산업의 비중이 커지고 고용역시 이 부문 산업의 비중이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노동시장에서 고기술 산업 및 고학력 직종의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문기술 직종이 증가하고 정보통신인력의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교육수준에 따라서 변화하는 산업구조에 15세 이상의 인구가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를 <표 3-6>에 제시하였다.

<표 3-6> 교육 수준별 산업분포(단위: %)

1980년	불취학	초등	중	고등	초전문대	대학교	대학원
농수임업	83.1	52.5	17.1		2.8		
광업	0.3	1.0	0.6		0.3		
제조업	3.7	18.2	31.4		22.0		
전기가스수도	0.0	0.1	0.4		0.9		
건설업	2.4	5.6	5.9		5.6		
도소매및음식숙박	7.6	14.2	21.0		15.1		
운수창고및통신	0.3	2.6	7.2		3.9		
금융보험부동산	0.2	0.6	3.4		6.9		
사회개인서비스	2.3	5.2	13.0		42.5		
1990년							
농수임업	78.6	51.2	18.4	6.8	3.5	1.7	0.5
광업	0.1	0.6	0.6	0.3	0.2	0.1	0.0
제조업	6.3	16.8	33.7	34.8	25.7	24.1	15.9
전기가스수도	0.0	0.0	0.0	0.5	0.8	0.9	0.7
건설업	3.4	7.5	9.4	7.1	6.3	6.0	2.8
도소매및음식숙박	8.0	14.9	21.1	23.7	19.6	16.7	7.3
운수창고및통신	0.4	2.5	6.5	7.1	5.6	4.0	1.9
금융보험부동산	0.5	1.4	2.5	6.8	8.6	11.3	9.7
사회개인서비스	2.6	5.0	7.1	12.6	29.6	35.0	60.9
2000년							
농수림업	74.3	45.9	16.2	4.8	1.8	1.2	0.5
어업	1.8	2.3	1.4	0.4	0.1	0.0	0.0
광업	0.0	0.1	0.2	0.1	0.1	0.0	0.0
제조업	5.0	13.4	23.5	26.9	20.5	17.8	11.1
전기가스수도	0.0	0.1	0.1	0.4	0.7	0.9	0.6
건설	2.2	6.4	9.6	8.3	7.0	6.4	3.0
도소매	6.0	9.3	13.6	19.6	17.4	15.3	5.3
숙박음식	4.0	8.6	12.6	9.0	5.1	3.1	0.8
운수	0.5	2.6	6.8	6.5	3.9	3.2	1.1
통신	0.0	0.1	0.4	1.1	2.1	2.2	1.7
금융및보험	0.2	0.8	1.5	4.0	5.0	6.5	3.9
부동산및임대업	0.8	1.6	2.0	2.0	1.6	1.8	0.8
사업서비스업	0.9	1.7	1.9	3.0	7.2	8.5	12.1
공공행정국방	1.2	1.5	1.4	3.2	5.5	6.8	7.1
교육서비스업	0.2	0.8	1.2	1.9	9.9	16.3	33.5
보건및사회복지	0.3	0.6	0.5	1.5	6.0	3.5	8.2
오락문화운동관련	0.2	0.5	0.9	1.9	2.7	2.8	2.1
기타수리,개인서비스	1.5	2.9	5.2	5.0	3.6	3.0	8.1
가사서비스	0.6	0.8	0.7	0.3	0.1	0.2	0.1
국제및외국기관	0.0	0.0	0.0	0.0	0.0	0.1	0.0

1980년 중은 중고등학교를, 그리고 초전문대는 초급대·전문대 이상임

3. 교육과 정보화

현대사회에서 각 분야에 걸친 정보화 진전에 관한 논의가 한창이다. 정보사회는 정보나 지식의 생산, 유통, 분배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회구조이다. 지금 전지구의 사회구조가 이렇게 변하고 있다는 것이다. 웹스터(Webster, 1995)에 의하면 정보사회는 자본의 요구를 반영하여 각 분야 즉 기업, 계급, 성의 영향력에 따라서 통신시설의 확보가 결정된다. 또 카스텔은 최근 정보산업의 발달에 따라 계급형성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정보부자와 정보빈자가 구별된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보화 실태에 대해서 초보적이지만 몇몇 연구가 발표되고 있으며, 이들 연구를 보면 정보화에 대한 인식이나 준비는 어느 정도 성숙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방명숙 외, 1999; 유지열 외, 2000). 정숙경·김영미(2002)에 의하면 우리나라 청소년의 경우는 남녀에 따라서 그리고 분야에 따라서 정보격차 현상이 나타난다고 한다.

이런 면에서 정보관련 사항은 중요하며 2000년 센서스의 컴퓨터 사용 자료는 <표 3-7>에 나타나 있고 이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표 3-7> 교육 수준별 컴퓨터 활용상태, 2000년(단위: %)

	1주일에 1번이상			1달에 1번이상		2-3달에 1번 사용하나 매달 사용하지는 않음	사용하지 않음	합계
	매일사용	사용하나 매일 사용하지는 않음	매일 사용하나 매달 사용하지는 않음	매주	매달			
불취학	52	43	07	02	89.6	129,299		
초등학교	27.2	10.5	1.3	0.4	60.7	164,449		
중학교	25.2	9.0	1.9	0.8	63.1	112,301		
고등학교	27.0	17.2	4.8	1.8	49.2	279,854		
초대전문대학	52.5	21.7	4.4	1.6	20.1	70,579		
대학교	62.1	17.8	3.4	1.2	15.4	111,183		
대학원 석사	73.3	15.3	2.5	0.9	8.1	12,506		
대학원 박사	82.7	9.7	1.4	0.5	5.8	3,044		

<표 3-8> 교육 수준별 인터넷 활용상태, 2000년(단위: %)

	1주일에 1번이상		1달에 1번이상		2-3달에 1번		사용하지 않음	합계
	매일사용	사용하나 사용하지는 않음	사용하나 사용하지는 않음	매일	매주	매달		
불취학	1.4	1.5	0.3	0.1	96.7	129,299		
초등학교	15.4	8.4	1.4	0.6	74.2	164,449		
중학교	19.4	8.3	1.6	0.7	69.9	112,301		
고등학교	20.9	14.4	3.7	1.4	59.6	279,854		
초대전문대학	42.5	21.5	4.1	1.5	30.3	70,579		
대학교	54.0	18.9	3.4	1.2	22.5	111,183		
대학원 석사	64.0	18.6	2.9	1.1	13.4	12,506		
대학원 박사	73.7	14.5	2.0	0.7	9.2	3,044		

<표 3-9> 교육 수준별 개인용 통신기기 소유, 2000년(단위: %)

	이동전화기	무선호출기	이동전화기 및	없음	합계
	(휴대폰, 차량전화)	(삐삐)	무선호출기 모두		
불취학	1.7	0	0	98.2	129,299
초등학교	11.7	0.1	0.2	88.0	164,449
중학교	35.7	0.2	0.4	63.6	112,301
고등학교	63.7	0.2	0.6	35.5	279,854
초대전문대학	81.4	0.2	0.8	17.6	70,579
대학교	84.7	0.2	0.6	14.5	111,183
대학원 석사	89.7	0.3	0.8	9.2	12,506
대학원 박사	87.9	0.4	1.6	10.1	3,044

IV. 정책적 함의

1. 사회변화와 교육

향후 미래를 정보가 지배하는 사회 정보사회라고 예견한다. 정보사회의 사회구조는 분명 산업사회와 다를 것이다. 정보를 생산하고 유통하고 분배

하는데 영향력을 가진 계층이 사회 전체를 통제할 가능성이 크다. 국가로서도 이런 능력이 있는 나라가 세계 속의 다른 나라보다 경쟁력이 더 클 것이다. 국가 전체로는 이런 향후 사회 변화에 따른 정보화 교육의 전반적인 확대가 필요하다. 산업사회에서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교육이 기여하였듯이 정보사회에도 그에 맞는 적절한 교육의 공급이 필요하다.

2. 요약 및 함의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교육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 부모들은 자신의 체면과 만족을 위해서 그리고 자녀들의 행복을 위해서 교육에 아낌없이 투자하는 대단한 교육열을 지니고 있다. 우리 사회는 과거 농경사회에서 현대산업사회, 정보사회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급격한 사회변동을 겪었다. 많은 사람들의 자녀관이 바뀌었으며 자녀를 양육하는 환경도 변화하였다. 과거에는 생활도 넉넉하지 못했고 대개 많은 수의 자녀를 두었기 때문에 자녀 한사람 한사람에게 일일이 신경을 쓰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대개 각 가정마다 한 두 명의 자녀를 두기 때문에 그 소수의 자녀에게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많은 관심을 두게 되었다. 그래서 많은 정성을 자녀 교육에 쏟아 넣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교육은 인생의 많은 부분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해방 후부터 지속적으로 교육에 투자하여 전 국민의 교육수준을 높였다. 그래서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의 인구가 먼저 급속도로 증가하였고 그 다음 순차적으로 대학생들의 인구가 증가하였다. 중고등학교 인구는 대략 1980년대에 정점을 이루고 대학생들은 2000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인구정책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요소로 교육수준에 따른 자녀수를 들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부터 2000년까지 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총출생아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반대로 평균출생아 수에서는 감소하고 있다.

교육수준과 출생수, 출생 비율을 보면 초등학교 졸업자의 출생수와 출생비율이 감소하였다. 중고등학교 졸업자의 경우는 1990년대까지 증가하였다가 2000년에 감소하고 있으며, 초대-전문대 졸업 이상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교육에 따른 임금을 보면 경제규모가 확장됨에 따라서 임금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 단순하게 비교하면 임금의 절대값에 있어서는 학력이 낮을수록 크게 증가하였다. 그리고 학력수준에 따른 임금격차가 크게 줄어들고 있다. 즉, 중졸자, 고졸자, 대졸자 간의 임금격차가 줄어들었다.

교육수준과 정보화를 보면 학력에 따라서 컴퓨터나 인터넷 활용에 심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고학력자들은 정보를 쉽게 얻고 만들 수 있는 이런 도구들을 잘 활용하지만 저학력자들은 그렇지 못한 상황이다. 교육간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교육수준의 증가에는 정부예산의 증가가 필수적이다. 1981년부터 1998년까지를 보면 교육부의 예산이 1조 4천억 원에서 18조원으로 늘어나 예산의 증가를 알 수 있다. 정부예산과 각 가정의 교육에 대한 투자 역시 증가하였다. 1978년부터 1999년까지 도시가구에서는 일년에 7만 8천원에서 192만원으로 증가하였고, 같은 기간 농가에서도 10만원에서 166만원으로 증가하였다.

우리나라 교육에서 심각한 문제는 정부의 지속적인 교육투자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각종 과외비로 지출되는 비용 때문에 많은 가구가 이를 부담스러워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주도하는 학교교육의 질적 향상을 이루어야 한다. 양질의 교육을 받은 인구는 그 사회의 중요한 자산이며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가는 핵심적인 요소다. 우리나라의 교육이 올바른 사람을 만드는 것과 사회가 꼭 필요로 하는 인재를 육성하여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하는 인재를 양성하는데 보다 효과적인 정책을 펴야 할 것이다.

<요약자료>

교육 정도

이 장 영
(국민대학교)

인구와 교육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교육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으며 많은 정성을 자녀 교육에 쏟아 넣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교육은 인생의 많은 부분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국민들의 교육수준 향상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였다.

교육에 따른 임금을 보면 경제규모가 확장됨에 따라서 임금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 단순하게 비교하면 임금의 절대값에 있어서는 학력이 낮을수록 크게 증가하였다. 그리고 학력수준에 따른 임금격차가 크게 줄어들고 있다. 즉, 중졸자, 고졸자, 대졸자 간의 임금격차가 줄어들었다.

교육수준과 정보화를 보면 학력에 따라서 컴퓨터나 인터넷 활용에 심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고학력자들은 정보를 쉽게 얻고 만들 수 있는 이런 도구들을 잘 활용하지만 저학력자들은 그렇지 못한 상황이다. 교육간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교육수준의 증가에는 정부예산의 증가가 필수적이다. 1981년부터 1998년까지를 보면 교육부의 예산이 1조 4천억 원에서 18조원으로 늘어나 예산의 증가를 알 수 있다. 정부예산과 더불어 가정의 교육에 대한 투자 역시 증가하였다. 1978년부터 1999년까지 도시가구에서는 일년에 7만 8천원에서 192만원으로 증가하였고, 같은 기간 농가에서도 10만원에서 166만원으로 증가하였다.

정부가 주도하는 학교교육의 질적 향상을 - 특히 지식 정보 분야의 - 이루어야한다. 양질의 교육을 받은 인구는 그 사회의 중요한 자산이며 우

리 사회를 이끌어 가는 핵심적인 요소다. 우리나라의 교육이 올바른 사람을 만드는 것과 사회가 꼭 필요로 하는 인재를 육성하여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하는 인재를 양성하는데 보다 효과적인 정책을 펴야 할 것이다.

제9장

한국의 경제활동: 직업과 산업

은 기 수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 연구목적과 대상

1. 연구목적

사람들의 일상생활은 크게 일과 여가로 구분될 수 있다. 생존하기 위해서 인간은 누구나 일을 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일하지는 않는다. 누군가는 일을 하고, 누군가는 일을 하지 않지만, 일하지 않는 사람은 일하는 사람들의 수고의 대가로 살아간다.

일의 종류와 내용은 사회마다 다 다르다. 전통사회와 근대사회의 일의 성격이 다르다. 대표적으로 농업을 위주로 하는 사회에서 일의 성격과 상업과 산업을 위주로 하는 사회에서의 일의 성격, 그리고 소위 서비스업이 주가 되는 사회에서의 일의 성격이 다 다르다. 이는 역사의 변천에 따라 산업의 내용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 일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21세기에 접어든 오늘날 일의 성격은 과학기술, 특히 컴퓨터 기술의 발달로 인해 사회의 성격이 달라지면서 일의 성격도 급속히 변하고 있다. 사람들은 모두 일을 하고 살지만, 사회의 변천에 따라 일의 성격이 변하고, 이제 한 사람이 일생동안 하게 되는 일의 성격도 고정되어 있지 않고 변하는 세상에 적응하여 다양한 일을 해야만 살 수 있는 세상이 되고 있다.

이 연구는 격변의 시기인 20세기에 한국인들은 어떻게 경제활동을 영위했었는지, 직업과 산업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이 연구는 한국인들의 직업과 산업의 모습을 가장 잘 분석할 수 있는 인구센서스 자료를 통해 밝혀보고자 한다.

2. 연구대상

이 연구는 한국인의 직업과 산업구조를 밝힌다. 따라서 한국인의 경제활동상태를 시기별로 살펴보고, 직업구성을 성, 연령, 교육수준, 종사상의 지위 등의 측면에서 살펴보며, 산업구조의 최근 변화를 밝히고자 한다.

이 연구는 20세기 후반기 한국의 직업과 경제활동의 변화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함을 연구목적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이미 1995년까지 홍두승 외(1997, 1999)를 통해 이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나와 있고, 이들이 이용한 자료가 통계청에서 발간한 공식통계자료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는 이들의 연구성과를 최대한으로 존중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들이 1955년 혹은 1960년부터 1995년까지 밝힌 한국의 직업과 경제활동에 관한 자료를 그대로 활용하고 2000년 인구센서스 2% 표본 원자료를 분석하여 2000년 현재까지의 변화를 추적하고자 한다.

II 직업구조의 변화: 1955-2000

1. 직업분포의 변화

2000년까지 지속된 직업구조의 변화의 특성은 전문직과 관리직의 지속적인 증가 및 농림수산업의 대폭적인 감소로 요약할 수 있다.

<표 2-1> 직업구성의 변화, 1955-2000¹⁾

(단위: %)

직업군	1955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²⁾	1990	1995	2000 ³⁾
전문직	1.6	2.4	2.8	3.2	3.3	4.5	5.8	7.4	10.5	16.3
관리직	1.2	1.3	0.9	1.0	0.8	1.1	1.5	2.1	4.3	4.6
사무직	2.4	2.6	4.3	5.9	6.7	9.5	11.5	15.4	14.5	14.3
판매직	4.5	8.3	10.7	10.2	10.5	12.1	15.5	14.0	15.8	12.7
서비스직	2.1	5.2	5.4	6.7	6.5	7.1	10.8	8.8	11.8	9.7
생산직	8.7	13.4	19.2	21.8	23.0	28.1	30.3	31.6	27.0	28.8
농·림·수산업	79.5	66.7	56.8	51.2	49.2	37.6	24.6	20.7	16.1	13.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각 년도 인구및주택센서스 조사보고서, 홍두승·김병조·조동기 (1997); 통계청(2001).

먼저, 전문직에 종사하는 비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1990년에 7.4%, 1995년에 10.5%의 전문직 종사자 비율이 2000년에는 16.3%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관리직의 비율도 증가하고 있다. 1990년의 2.1%였던 관리직 비율이 1995년에 4.3%로 크게 증가하였고, 2000년에도 관리직이 차지하는 비율이 4.6%로 약간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2000년의 직업구성에서 전문직과 관리직을 합하면 21%로 전체 직업을 가진 사람들 다섯 명 가운데 한 명이 전문직 또는 관리직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농림수산업에 종사하는 비율은 1990년에 21%에서 1995년에 16%로 감소한 이후 2000년에 다시 13.6%로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사무직, 판매직, 서비스직의 비율도 감소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사무직의 경우 1995년과 거의 비슷하지만 0.2% 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판매직은 2000년에 12.7%로 1985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서비스직도 1995년에 11.8%까지 증가했던 비율이 2000년에는 9.7%로 다시 전 직업 가운데 10% 미만의 비율의 차지하고 있다.

1990년에 31.6%까지 증가추세를 보이다 1995년에 27%로 감소추세로 돌아섰던 생산직의 비율은 2000년에 다시 28.8%로 약간 증가하는 추세를 기록하고 있다.

2. 연령별 직업분포의 변화

2000년에 한국 사회는 고령화사회로 접어들었다. 전체 인구가 조금씩 나이 먹은 인구구조로 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첫 직장으로 이행하는 시기도 조금씩 늦어지고 있다. 국민들의 교육수준이 높아지면서 첫 직장으로 이행하는 시기가 늦어지고, 이는 결국 각 직업군에 종사하는 연령구조가 나이 든 구조로 바뀌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한국의 직업분포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먼저, <표 2-2>를 통해 직업군별로 남성들의 연령분포를 살펴보자. 분석의 일관성을 위해서 2000년 자료에서도 직업군별로 중위연령(median)을 구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전체적으로 각 직업군에 종사하고 있는 남성들의 연령도 조금씩 나이들어 가고 있다. 1995년까지 취업하고 있는 남성들의 중위연령은 37세로 30대였지만 2000년에는 중위연령이 40세로 증가하였다. 1995년과 2000년 사이에 중위연령 <표 2-2> 직업별 연령 중앙값의 변화, 1955-2000¹⁾ (남성) (단위: %)

직업군	1955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²⁾	1990	1995	2000 ³⁾
전체	35	-	34	34	34	35	36	37	37	40
전문직	32	-	35	35	36	36	36	36	36	37
관리직	31	-	42	42	42	42	44	43	43	43
사무직	27	-	36	34	34	33	34	35	35	35
판매직	37	-	37	36	36	36	38	42	42	39
서비스직	30	-	30	31	33	35	37	39	39	38
생산직	36	-	27	31	31	31	33	34	34	39
농·림·수산업	35	-	35	33	37	42	46	50	50	57

자료: <표 2-1>과 동일.

이 크게 상승하여 남성노동력이 고령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남성들이 취업하고 있는 직업군에서 가장 고령화된 직업군은 역시 농림수산업이다. 1995년까지 50세 불과했던 중위연령이 2000년에는 57세로 농림수산업에 종사하는 남성들이 급속도로 고령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남성들의 직업군에서 두 번째로 평균연령이 높은 직업군은 관리직이다. 2000년 현재 관리직에 종사하고 있는 남성들의 평균연령은 43세이다. 그러나 2000년까지 평균연령의 변화추세를 보면 관리직 남성들의 평균연령은 별 다른 변화가 없다. 1966년 이래 남성 관리직 취업자의 평균연령은 42세부터 44세 사이의 아주 좁은 연령대에서 진동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전문직에 종사하는 남성들의 연령분포도 큰 변화가 없다. 또 사무직에 종사하는 남성들의 평균연령도 수십년간 큰 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다.

남성들의 직업군 가운데 농림수산업을 제외하고 고령화현상이 두드러지는 직업군은 생산직이다. 남성들 가운데 가장 많은 비율의 남성이 취업하고 있는 생산직은 1995년까지 34세에 머물렀던 평균연령이 2000년에 39세로 꺾충 뛰고 있다. 5년 사이에 평균연령이 5세나 뛰었다면 매우 큰 고령화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판매직이나 서비스직에 종사하고 있는 남성들의 평균연령은 오히려 조금 낮아졌다. 판매직의 경우 1995년 42세까지 증가하던 평균연령이 2000년에는 39세로 3살이나 낮아졌다. 서비스직에는 1990년과 1995년에 39세까지 증가하던 연령구조가 2000년에는 38세로 한 풀 꺾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 <표 2-3>은 여성들의 경우 직업별 중위연령을 보여주고 있다.

<표 2-3> 직업별 연령 중앙값의 변화, 1955-2000¹⁾ (여성) (단위: %)

직업군	1955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²⁾	1990	1995	2000 ³⁾
전체	33	-	33	33	33	34	36	35	37	39
전문직	23	-	26	26	26	27	27	27	28	29
관리직	30	-	39	35	42	42	42	39	35	41
사무직	22	-	23	22	22	22	22	23	24	27
판매직	37	-	39	38	37	37	38	36	36	39
서비스직	21	-	22	22	24	32	37	38	40	41
생산직	28	-	24	22	20	21	30	29	38	42
농·림·수산업	37	-	36	37	39	43	47	51	55	58

자료: <표 2-1>과 동일.

직업을 가지고 있는 여성들의 평균연령은 40세이다. 남성들과 마찬가지로 가장 고령화가 진행된 직업군은 여성의 경우에도 농림수산업이다. 이 직업군에 종사하는 여성들의 평균연령은 57세이다. 1995년까지 평균 50세까지 상승했던 여성들의 평균연령이 남성들과 마찬가지로 2000년에 57세로 급상승하고 있다.

여성들의 평균연령이 두 번째로 높은 직종은 생산직이다. 2000년 현재 생산직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들의 평균연령은 42세로 나타나고 있다. 1995년 38세에 비해서도 2000년 현재 42세로 네 살이나 증가하여 생산직 여성의 고령화가 크게 진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지만, 1966년 이래의 추세를 살펴보면 생산직 여성의 고령화가 얼마나 심각한지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 여성의 평균연령이 높은 직업군은 관리직과 서비스직이다. 2000년 현재 이 두 직업군의 여성의 평균연령은 41세이다. 관리직의 특성상 여성들의 평균연령도 높을 수밖에 없다. 1975년부터 1985년까지 관리직 여성의 평균연령이 42세로 정점을 이루다 1990년에는 39세, 1995년에는 35세로 감소하였는데,

2000년에는 다시 41세로 평균연령이 증가하고 있다.

반면에 서비스직 여성들의 평균연령은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1966년에 22세였던 서비스직 여성들의 평균연령은 1980년에 32세로 크게 높아진다. 그 뒤 1985년에는 37세, 1990년에는 38세로 증가하고, 1995년에는 평균연령이 40대에 진입하게 된다. 그 결과 2000년에 41세까지 증가한 것이다.

전문직, 판매직, 사무직에 종사하는 여성들의 평균연령은 큰 변화가 없다. 먼저 전문직의 경우 여성들의 평균연령은 26세부터 29세까지 사이에서 변화하고 있다. 2000년에 28세로 1995년에 비해 한 살정도 평균연령이 높아졌다.

그에 반해 사무직은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인다고 말할 수 있다. 1995년까지 22세부터 24세까지 증가하던 평균연령이 2000년에는 27세로 평균 세 살이나 증가하였다. 1995년까지는 큰 증가를 보이지 않던 사무직 여성의 평균연령이 1995년부터 2000년 사이에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3. 교육수준별 직업구성의 변화

취업자의 교육수준은 전반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표 2-4>는 전문관리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교육수준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다.

<표 2-4> 전문·관리직 종사자 학력구성의 변화, 1960-2000 (단위: %)

교육수준	1960 ¹⁾	1966 ²⁾	1970	1975	1980	1985 ¹⁾	1990	1995	2000 ⁴⁾
불취학	7.3	1.7	1.3	0.9	0.6	4.3	0.2	0.1	0.1
초등학교	19.0	6.8	7.4	5.7	2.4		1.3	0.9	1.0
중학교	12.3	45.0	39.3	34.1	31.3	5.3	3.0	2.3	2.1
고등학교	35.8					28.8	20.4	24.4	21.7
초급대학	25.7	46.5	52.0	59.2	65.7	61.6	11.9	10.5	18.5
대학이상							63.2	61.9	56.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표 2-1>과 동일.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전문관리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교육수준은 대단히 높다. 2000년 현재 전문관리직에 종사하는 사람들 가운데 57%가 대학이상의 학력을 지니고 있으며 19%는 초급대학의 학력을 지니고 있

다. 초급대학 이상의 학력을 지닌 사람들이 전문관리직에서 75%를 차지하고 있다. 이 비율은 이미 1990년대에 관찰되었던 비율이다. 그러다 1995년에 초급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이 전문관리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62%로 약간 감소하였다가 2000년에 다시 65%로 증가하고 있다. 고등학교의 학력을 가진 비율도 22%에 달하고 있지만 고등학교 학력을 가진 사람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전문관리직에 중학교 이하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의 비중은 매우 미미하다.

사무·판매·서비스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학력수준도 계속 높아지고 있다.

다음 <표 2-5>는 사무·판매·서비스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학력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표에서 쉽게 알 수 있듯이 사무·판매·서비스직에서도 중학교 이하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의 비율은 계속 감소하고 있다. 중학교 이하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이 사무·판매·서비스직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8%에 불과하다. 반면에 고등학교 학력을 가진 사람들의 비율은 1990, 1995, 2000년에 걸쳐 비슷하게 약 49-50%를 유지하고 있다.

<표 2-5> 사무·판매·서비스직 종사자 학력구성의 변화, 1960-2000 (단위: %)

교육수준	1960 ¹⁾	1966 ²⁾	1970	1975	1980	1985 ¹⁾	1990	1995	2000 ⁴⁾
불취학	24.8	15.9	9.0	7.2	4.9	24.1	1.8	1.4	1.1
초등학교	41.7	38.1	35.0	31.1	22.8		10.4	9.1	6.5
중학교	12.9	36.2	43.5	49.0	60.7	19.0	14.5	12.7	10.3
고등학교	15.0					43.8	49.0	50.0	49.0
초급대학	5.6	9.8	12.5	12.8	11.6	13.0	6.5	6.0	13.7
대학이상							17.9	20.9	19.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표 2-1>과 동일.

그러나 초급대학과 대학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의 비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1990년에 초급대학과 대학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의 비율은 24%였고, 1995년에는 27%로 증가하며, 2000년에는 33%로 다시 증가하고 있다. 사무·판매·서비스직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 10명 중 3명 이상이 최소한 초급대학 이상의 학력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사무·판매·서비스직도 고학력자 중심의

취업구조로 전환되고 있다.

생산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교육수준은 전문관리직이나 사무·판매·서비스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교육수준보다 낮다.

<표 2-6> 생산직 종사자 학력구성의 변화, 1960-2000 (단위: %)

교육수준	1960 ¹⁾	1966 ²⁾	1970	1975	1980	1985 ¹⁾	1990	1995	2000 ⁴⁾
불취학	26.2	17.3	9.0	5.9	3.8	32.4	2.1	1.3	1.9
초등학교	53.9	50.6	48.1	44.9	34.6		16.1	13.6	12.8
중학교	11.6	30.2	39.9	46.3	59.3	33.6	28.9	22.4	19.9
고등학교	6.9						32.0	47.3	54.3
초급대학	1.1	1.8	3.0	2.8	2.2	2.1	2.8	3.4	6.4
대학이상							2.9	4.9	5.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표 2-1>과 동일

<표 2-6>에서 알 수 있듯이, 생산직 종사자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은 차지하는 학력은 고등학교 학력이다. 1985년에는 중학교 학력자와 고등학교 학력자가 생산직에 취업하고 있는 비율이 비슷했다. 이후에는 점차 고등학교 학력자는 증가하고, 반면에 중학교 학력자가 생산직에 취업하고 있는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그 결과 2000년에는 중학교 학력소지자는 20%인 반면 고등학교 학력소지자는 54%로 대폭 늘어났다. 생산직에서 중학교 학력과 고등학교 학력을 합한 비율이 1985년에는 65.6%였지만, 2000년에는 73%로 증가한다.

그러나 생산직에서도 고학력의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1985년까지만 해도 초급대학 이상의 학력소지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에 불과했다. 그러나 1990년에는 초급대학 이상의 학력소지자가 거의 6%로 증가하고, 1995년에는 8%로 증가하던니 2000년에는 다시 12%로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모든 직종의 고학력화 현상은 생산직에서도 예외가 아닌 것이다. 사실상 고학력이 별로 필요가 없는 생산직에서도 종사자 1/2은 고등학교 학력소지자 이고, 또 12%는 초급대학 이상의 학력소지자라는 점에서 한국의 생산직은 매우 고학력화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III. 직업 및 산업구조의 변화: 1995-2000

직업 및 산업구조의 변동은 지난 수년 사이에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통계청은 직업과 산업분류체계를 1995년 이후 다시 개정하였다. 이 절에서는 직업과 산업구조의 급속한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 2000년 1월에 이루어진 직업과 산업의 새로운 분류체계에 따른 직업 및 산업구조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절의 분석은 2000년에 개정된 직업 및 산업분류체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1995년의 분류도 2000년의 분류체계에 따라 재분류하여 비교한다.

<표 3-1> 직업구조의 변화, 1995-2000 (단위: %)

직업분류	1995	2000
의회의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4.3	4.6
전문가	5.7	8.9
기술공 및 준 전문가	11.1	7.4
사무 종사자	11.5	14.3
서비스 종사자	8.6	9.7
판매 종사자	12.6	12.7
농업, 임업 및 어업 숙련 노동자	16.0	13.6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3.7	10.6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10.8	10.6
단순노무 종사자	5.5	7.6
합	100.0	100.0

자료: 1995, 2000년 인구센서스 표본 원자료.

1995년부터 2000년 사이에 전문가는 직업을 가지고있는 사람들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이 5.7%에서 8.9%로 3%포인트 이상 증가하였다. 사무종사자도 2.8%, 단순노무자도 2.1%포인트 등이 증가하고 있다. 의회의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서비스종사자, 판매종사자 등도 크기는 적지만 5년 사이에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각각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증가한 직업군이다. 반면에 농업, 임업 및 어업 숙련 노동자 직업군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4% 포인트 줄어들었고,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3.1%포인트나 줄어들었다. 기술공 및 준전문가도 감소한 직업군에 속한다.

고위직, 전문가 등의 사회적 지위가 높은 직업군과 판매 및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에 일차산업에

종사하는 인구 및 기술공 및 준 전문가, 기능원 등의 인구는 줄어드는 양상임을 알 수 있다.

<표 3-2>는 직업구조의 변화를 성별로 보여주고 있다. 먼저 2000년을 기준으로 직업군의 성별 구성을 살펴보면 남자의 경우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14.3%로 가장 높다. 그 다음은 기능공(13.6%), 사무직(13%), 농림어업(13%), 판매직(10.7%)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자들의 경우에는 농림어업직(17.2%)에 가장 많이 종사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판매직(16.6%), 사무직(16.3%), 서비스직(16.1%)에 비슷한 비율로 분포하고 있다. 그러나 남자들이 고위직에 6.9%나 분포하고 있는 반면, 여자들은 전체 여성의 1%에도 못미치는 비율로 분포하고 있다.

<표 3-2> 직업구조의 성별 변화, 1995-2000 (단위: %)

직업분류	남자		여자	
	1995	2000	1995	2000
의회의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6.32	6.90	0.61	0.88
전문가	5.67	8.32	5.84	9.80
준 전문가	12.39	8.37	8.72	5.93
사무 종사자	9.75	13.05	14.76	16.32
서비스 종사자	5.25	5.80	14.83	16.12
판매 종사자	10.71	10.38	16.16	16.6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12.91	11.34	21.65	17.22
기능공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6.98	13.56	7.75	5.61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14.16	14.33	4.74	4.44
단순노무자	5.85	7.94	4.94	7.09
합	100.00	100.00	100.00	100.00

자료: 1995, 2000년 인구센서스 표본 원자료.

1995년부터 2000년 까지 5년간의 변화를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사무직이 차지하는 비율이 3%포인트 증가하고 있다. 전문직도 2.6%포인트 정도 증가하고 있다. 반면에 단순노무자도 2%포인트 이상 증가하였다. 그러나 기능직, 판매직, 농림어업직의 비율은 감소하고 있다.

여성들도 전문직에서 3%포인트가 증가하고, 사무직에서도 1.6%포인트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또한 여성들의 경우에는 서비스직에서도 1.3%포인트의 증가량을 보여준다. 단순노무직에서도 2% 포인트이상이 증가하고 있다. 그

러나 여성들의 경우에도 농림어업, 준전문직, 기능직 등에서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상적으로는 직업을 택할 때 성에 따른 차별이 없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직업 선택에 성에 따른 차별이 존재한다. 200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직업군에서 남성이 절대적으로 우위인 직업군은 고위 관리직으로 성비가 1283.8이다. 즉 여자 100명당 남자는 1283명이 있다는 셈이다.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직에도 여자 100명당 남자는 530명이 있어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은 직업군이다. 반면에 판매직이나 농림업직에는 남녀가 거의 비슷한 규모를 이루고 있다 (표 3-3 참조).

<표 3-3> 직업별 성비 변화, 1995-2000

직업분류	1995	2000
의회의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1904.4	1283.8
전문가	176.9	139.4
기술공 및 준 전문가	259.3	231.7
사무 종사자	120.5	131.3
서비스 종사자	64.6	59.1
판매 종사자	120.9	102.6
농업, 어업 및 어업 숙련 노동자	108.7	108.1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399.5	397.0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544.4	530.1
단순노무 종사자	215.7	183.7

자료: 1995, 2000년 인구센서스 표본 원자료.

직업군 가운데 여성이 남성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직업군은 서비스직이다. 여자 100명당 남자는 59명에 불과하다. 서비스직을 제외하고는 모두 현재 남자가 여자보다 훨씬 더 많이 종사하고 있다.

그러나 1995년부터 2000년 사이에 성비의 불균형은 거의 모든 직업군에서 개선되고 있다. 고위관리직도 성비가 1904에서 1283으로 개선되고 있다. 전문직도 성비가 177에서 139로, 기술직도 259에서 232로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사무직의 경우에는 성비가 120에서 131로 높아져 성비의 불균형이 더 심해진 직업군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음은 1995년부터 2000년까지 5년 동안의 산업구조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 <표 3-4>는 2000년에 개정된 산업분류체계에 따라

1995년과 2000년 자료를 정리한 결과이다.

1995년과 2000년 모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종사하고 있는 산업분야는 제조업으로 1995년에는 23.4%, 2000년에는 20.7%의 사람들이 종사하고 있다. 그 다음은 도매 및 소매업으로 1995년과 2000년에 각각 16.9%,

<표 3-4> 산업구조의 변화, 1995-2000

산업분류	1995	2000
농업 및 임업	15.6	13.1
어업	0.8	0.7
광업	0.2	0.1
제조업	23.4	20.7
전기, 가스, 수도사업	0.5	0.5
건설업	8.6	7.2
도매 및 소매업	16.9	15.7
숙박 및 음식점업	6.4	7.5
운수업	4.6	4.8
통신업	0.8	1.2
금융 및 보험업	3.6	3.7
부동산 및 임대업	1.5	1.7
사업서비스업	2.9	4.3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3.8	3.9
교육서비스업	5.3	6.0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1.7	2.3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1.3	1.8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	1.8	4.3
가사 서비스업	0.3	0.4
국제 및 외국기관	0.1	0.1
합	100.0	100.0

자료: 1995, 2000년 인구센서스 표본 원자료.

15.7%가 종사하고 있다. 세 번째로 많이 종사하고 있는 분야는 농업 및 어업분야로 15.6%와 13.1%가 종사하고 있다.

그러나 1995년부터 2000년 사이에 가장 많이 종사하고 있는 산업분야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크게 감소하고 있다. 제조업분야가 차지하는 비율은 2.7%포인트나 감소하고 있고, 농업 및 임업은 2.5%포인트, 그리고 도매 및 소매업은 1.2%포인트가 감소하고 있다. 1, 2, 3차 산업의 대표적인 부문에 종사하는 인구가 전체 일하는 사람들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크게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비율은 1995년에 1.8%에서 4.3%로 2.5% 포인트가 증가하고 있다. 사업서비스업은 5년

사이에 1.4%포인트 증가하고 있고, 교육서비스업도 0.7% 포인트 증가하고 있다.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그리고 통신업 등에서도 0.4~0.5% 포인트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간단히 요약하면 농림어업,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등 1, 2, 3차 산업의 전통적이고 대표적인 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이 1995년부터 2000년 사이에 크게 줄어들고 있다. 대신 개인서비스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등 새로운 서비스업이 팽창하고 있다. 이러한 산업구조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자면 하드웨어 중심의 산업구조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의 산업구조로 변하고 있는 현상을 나타내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다음 <표 3-5>는 산업구조의 성별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표 3-5> 산업구조의 성별변화, 1995-2000

산업분류	남자		여자	
	1995	2000	1995	2000
농업 및 임업	12.37	10.73	21.63	17.06
어업	0.89	0.79	0.59	0.60
광업	0.28	0.20	0.06	0.03
제조업	25.85	23.31	18.96	16.45
전기, 가스, 수도사업	0.65	0.65	0.11	0.14
건설업	12.13	10.52	2.14	1.58
도매 및 소매업	16.38	14.51	17.78	17.77
숙박 및 음식점업	3.72	4.28	11.32	12.83
운수업	6.54	7.00	1.02	1.12
통신업	0.93	1.40	0.50	0.89
금융 및 보험업	2.75	2.86	5.12	5.01
부동산 및 임대업	1.76	2.18	0.92	1.02
사업서비스업	3.26	5.00	2.18	3.10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4.88	4.99	1.92	2.04
교육서비스업	3.84	4.02	7.84	9.36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1.01	1.27	2.93	4.02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1.31	1.90	1.23	1.59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	1.31	4.27	2.82	4.33
가사 서비스업	0.05	0.06	0.89	1.01
국제 및 외국기관	0.09	0.07	0.05	0.04
합	100.00	100.00	100.00	100.00

자료: 1995, 2000년 인구센서스 표본 원자료.

1995년과 2000년에 걸쳐 남자들이 가장 많이 종사하고 있는 산업분야는 제조업이고 그 다음은 도매 및 소매업이다. 농림업업과 건설업은 거의 비슷한 비율을 보인다. 반면에 여자들이 가장 많이 종사하고 있는 산업분야는 1995년과 2000년 사이에 큰 변화를 겪었다. 1995년에 여자들이 가장 많이 종사하고 있는 산업분야는 농업 및 임업(21.6%)이고 그 뒤를 제조업(19%), 도매 및 소매업(17.8%), 숙박 및 음식점업(11.3%)이 이었다. 그러나 2000년에는 도매 및 소매업(17.8%)에 여자들이 가장 많이 종사하고 있고 그 다음이 농업 및 임업(17%), 제조업(16.4%)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남자나 여자 모두 농업 및 임업,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등에 종사하는 비율이 감소하고 있지만 특히 농림어업 분야에서 여성들의 비율의 감소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남성이나 여성을 막론하고 서비스업에서의 비율의 증가가 눈에 띄게 두드러지고 있다. 남성들은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사업서비스업에서 3% 포인트의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고, 사업서비스업에는 1.7% 포인트의 증가가 이루어졌다. 여성들은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등의 산업부문에서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다.

남성이나 여성 모두 새로운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지만 남성들보다는 여성들에게 새로운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더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은 산업부문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성비 분석을 통해 더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다음 <표 3-6>은 산업분야별 성비를 보여주고 있다.

직업의 성비변화에서 살펴보았듯이 산업분야에서도 성비의 불균형이 완화되는 방향으로 변화하리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표 3-6>은 1995년부터 2000년까지 산업별로 성비의 변화가 일률적으로 일어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광업분야에서는 남성중심의 성비가 훨씬 더 높아져서 2000년에는 여자 100명당 남자 1100명이 종사하고 있다. 건설업의 성비도 1040에서 1099로 더 높아졌다. 운수업의 경우는 성비가 1995년에 1176에서 2000년에 1032로 낮아졌지만 여전히 남성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보여준다.

주목할 점의 하나는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이 1995년에는 성비가 85로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이 종사하고 있는 산업분야였지만 2000년에는 성비가 163.2로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이 종사하고 있는 산업분야로 바뀐 점이다. 남성들이 종사하고 있는 산업분야의 비율에서도 <표 3-6> 산업별 성비변화, 1995-2000

산업분류	1995	2000
농업 및 임업	104.9	103.8
어업	277.8	216.8
광업	811.4	1095.0
제조업	250.1	234.1
전기, 가스, 수도사업	1098.5	786.4
건설업	1040.4	1098.5
도매 및 소매업	169.0	134.8
숙박 및 음식점업	60.3	55.1
운수업	1175.7	1032.4
통신업	345.7	258.8
금융 및 보험업	98.6	94.2
부동산 및 임대업	349.6	353.3
사업서비스업	274.9	265.9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466.4	403.9
교육서비스업	89.7	71.0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63.1	52.0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195.1	197.4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	85.2	163.2
가사 서비스업	10.2	9.5
국제 및 외국기관	321.2	281.4

자료: 1995, 2000년 인구센서스 표본 원자료.

이 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이 크게 높아졌는데, 종사하는 인구의 성비구조 까지 바뀔 정도로 남성들이 이 산업분야에 1995년부터 2000년 사이에 많이 유입되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가사서비스업 등 서비스업의 여성화가 더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성별 산업분포에서 남성들도 새로운 서비스업에 진출하는 비율이 늘고 있는 점이 관찰되고 있었지만,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훨씬 더 많이 새로운 서비스업에 진출하고 있고, 그 결과 이들 새로운 서비스업 분야는 여성화가 심화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IV. 요약 및 결론

한국사회는 지난 20세기 후반에 세계 역사사상 유례없는 압축적 성장을 이루었다.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산업사회에서 후기 산업사회 혹은 지식정보사회로 숨가쁘게 이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장을 통해 한국의 직업구조가 성, 연령, 학력구조, 종사상의 지위에 따라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살펴보았고, 1995년과 2000년의 직업 및 산업분류체계에 따라 직업과 산업구조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남성들은 생산직, 관리직에 여성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여성들은 반면에 서비스직에서 남성보다 절대적으로 많은 수가 종사하고 있다. 연령의 측면에서도 거의 모든 직업에서 종사자들의 연령이 증가하고 있지만 직업군별로 남성과 여성의 평균연령을 비교해보면 비교적 직업적 위세가 높은 직업군에는 남성들이 많이 몰려있고, 남성들의 평균연령이 높은 반면, 직업적 위세가 낮은 직업군에는 여성들이 많이 몰려있고, 여성들의 평균연령이 높게 나타난다.

교육수준의 전반적인 상승에 따라 모든 직업군에서 종사자들의 학력이 급속도로 상승하고 있는 현상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농림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학력이 가장 낮은 반면, 관리직, 전문직, 사무직, 생산직 등 그 외의 모든 직업군에서는 교육수준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2000년의 직업 및 산업분류체계에 따라 1995년과 2000년의 직업 및 산업구조를 살펴본 결과 직업과 산업 모두 전통적인 1, 2, 3차 산업의 비율이 줄고 있고 그에 해당하는 직업이 차지하는 비율도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직업에서는 기술공, 기능직, 장치, 기계조립직 등 제조 및 생산직의 직업이 감소하고 있는 경향이 뚜렷하다. 산업부문에서도 농림어업, 제조업, 도소매업 등 전통적인

산업분야의 퇴조가 뚜렷하고 대신 새로운 서비스업의 증가가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다.

참고문헌

- 홍두승·김병조·홍두승. 1997. 『한국사회 직업구조의 특성과 변화분석』 1995 인구주택총조사 종합분석사업 보고서(7-7). 통계청.
- 홍두승·김병조·홍두승. 1999. 『한국의 직업구조』 서울대 출판부.
- 통계청. 2000. 『한국표준직업분류, 2000』 통계청.

<요약자료>

한국의 경제활동: 직업과 산업

은 기 수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 2000년까지 지속된 직업구조의 변화의 특성은 전문직과 관리직의 지속적인 증가 및 농림수산업의 대폭적인 감소로 요약할 수 있다.
2. 전체적으로 각 직업군에 종사하고 있는 남성들의 연령도 조금씩 나이들어 가고 있다. 1995년까지 취업하고 있는 남성들의 중위연령은 37세로 30대였지만 2000년에는 중위연령이 40세로 증가하였다. 2000년 현재 취업하고 있는 여성들의 중위연령은 39세이다. 남녀 모두 취업자의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3. 사회전반적인 고학력화의 추세에 따라 모든 직업군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교육수준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 전문직뿐만 아니라 사무·판매·서비스직 그리고 생산직에서도 고학력화 현상을 낳고 있다.
4. 2000년에 개정된 직업 및 산업분류 체계에 따라 1995년부터 2000년까지의 5년 사이에도 직업 및 산업구조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위직, 전문가 등의 사회적 지위가 높은 직업군과 판매 및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5. 1995년과 2000년 모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종사하고 있는 산업분야는 제조업으로 1995년에는 23.4%, 2000년에는 20.7%의 사람들이 종사하고 있다. 그러나 제조업분야가 차지하는 비율은 2.7% 포인트나 감소하고 있고, 농업 및 임업은 2.5% 포인트, 그리고 도매 및 소매업은 1.2%포인트가 감소하는 등 1, 2, 3차 산업의 대표적인 부문에 종사하는 인구가 전체 일하는 사람들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크게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6. 주목할 점의 하나는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이 1995년에는 성비가 85로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이 종사하고 있는 산업분야였지만 2000년에는 성비가 163.2로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이 종사하고 있는 산업분야로 바뀐 점이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가사서비스업 등 서비스업의 여성화가 더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제10장

노동력

민경희

(충북대학교)

이 장에서는 1930년부터 2000년까지의 역대 인구센서스 자료에 기초하여 우리 나라 노동력의 변화를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1930년부터 1975년까지는 역대 인구센서스보고서 자료에 의존하여 분석하였으며 1980년부터 2000년까지는 5회에 걸친 『인구주택총조사』의 2% 표본자료들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네 분야로 구분해서 제시하였다. 제1부에서는 노동력의 개념과 측정의 문제를 살펴보았다. 특히 1980년 이후 여러 번 바뀌어온 경제활동 측정문항들이 제기하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제2부에서는 경제활동참가율의 변화를 추적하였으며 노동력의 구조를 연령, 성, 교육정도, 결혼상태, 도시와 농촌, 도시규모, 그리고 거주지 이동과 관련하여 분석하였고 노동력 생명표에 관한 논의를 첨가하였다. 제3부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에 초점을 두고 1980-2000년 기간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도시와 농촌을 구분하여 가족에서의 여성의 위치가 여성의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가구주와의 관계 및 자녀양육과 관련하여 고찰하였다. 또한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처음으로 수집한 아동보육상태 자료를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여성의 취업과 연관시켜 분석하였다. 제4부에서는 1970년대 이후로 많은 논의가 진행되어 온 비공식부문을 다루었다. 비공식 부문은 구체적으로 정의되지 않은 채 많이 사용되는 용어이기 때문에 정의의 문제를 다루었으며 ILO가 제시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비공식부문에 종사하는 노동력의 규모를 추정하였다.

<목차>

I. 노동력의 개념과 측정

II. 노동력의 추이

1. 경제활동참가율의 변화
2. 성별-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3. 남녀 노동력의 연령구성
 - 3-1. 연령별 노동력의 성별구성
4. 교육정도별 경제활동참가율
5. 결혼상태별 경제활동참가율
6. 도시-농촌간의 경제활동참가율의 차이
7. 도시규모에 따른 경제활동참가율
8. 거주지 이동에 따른 경제활동참가율
9. 노동력 생명표

III. 여성의 경제활동

1. 여성의 경제참가율의 변화, 1980-2000
2. 가족에서의 위치와 여성의 경제활동
3. 자녀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에 미치는 영향
 - 총출생아 및 동거자녀(아동)수와 여성의 경제활동
 - 아동보육상태와 여성의 경제활동

IV. 비공식부문

1. 비공식부문의 조작적 정의
2. 2000년 도시 비공식부문의 추정

경제활동참가율은 20세기 후반에 상당히 증가해 왔다. 경제활동참가율은 1966년의 45.0%에서 2000년의 61.1%로 증가했으며 이런 증가의 대부분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의 증가에 의한 것이다. 전체 노동력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1966년의 27.7%에서 2000년의 41.3%로 증가하였다. 지난 20년 동안 남녀 청소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은 감소해 왔다. 20세 이상에서는 남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이 감소해온 반면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증가해 왔다.

교육수준과 경제활동참가율을 보면, 최근으로 올수록 높은 교육수준이 경제활동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결혼상태별로 보면, 남성은 유배우자들이 가장 높은 경제활동참가율을 보여주고 있으며, 여성은 최근으로 오면서 과거와는 달리 유배우자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아지고 있다. 지역별로는 도시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보다 농촌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이 항상 훨씬 높다. 도시규모별로 2000년 자료를 보면, 남성 경제활동의 정점을 이루는 35-44세에서는 도시별로 별 차이가 없지만 18-19세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은 거대도시나 극소도시보다 중간규모의 도시들에서 더 높게 나타나고, 45세 이후의 장년층은 작은 도시보다는 큰 도시에서 더 빨리 은퇴하고 있다. 여성들을 보면, 거대도시 여성들은 전형적인 M-곡선에서 벗어나서 25-34세 여성들이 다른 여성들보다 더 높은 경제활동참가율을 보여주고 있다. 장년층을 보면 거대도시 여성들이 가장 낮은 비율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며 작은 도시에서는 높은 비율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 거주지 이동이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남성들에게는 긍정적이고, 여성들에게는 도시에서는 별 영향이 없으나 농촌에서는 부정적이다. 일반적으로 젊은층에서는 긍정적이고 장년층에서는 부정적이다. 평균노동력 여명을 보면, 1999년 15세 남성은 약 40년, 여성은 약 28년의 노동력여명을 기대할 수 있었다. 2000년에 비공식부문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전체 노동력의 40.8%로 추정된다.

여성의 경제활동은 가족 구성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다. 도시의 1세대 가구들에서 여성가구주들이 가장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하고 있고, 가구

주의 배우자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저조했으나 최근으로 올수록 배우자들과 다른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의 차이가 줄어들고 있다. 특히 장년층 아내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증가하고 있다. 2000년의 농촌에서는 배우자들이 가장 높은 경제활동참가율을 기록했고, 가구주, '기타' 여성의 순서로 낮아지고 있다. 가족규모 때문에 같은 연령층이라도 가족에서의 위치가 아내인가, 며느리인가, 딸인가에 따라 경제활동참가율이 현저히 달라지고 있다. 자녀수가 여성의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도시와 농촌에서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가구주인가 배우자인가에 따라 다르고, 연령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전학령기 동거자녀(아동)의 수가 많을수록 경제활동참가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취업여성들은 전학령기 아동 보육을 조부모, 어린이집, 유치원에 많이 의존하고 있고, 초등학교 아동의 보육방법으로는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관계없이 학원의 중요성이 드러나고 있다.

노동력의 시대적 추이를 보면 여성노동력은 남성노동력보다 더 역동적인 변화를 보여준다. 전체적인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아졌을 뿐 아니라 연령, 교육정도, 결혼상태, 거주지역, 거주지 이동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변화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남성들에게 경제활동은 성역할이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이 거의 모든 남성들이 수행해야 하는 활동이므로 시대적으로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나 여성들은 사회변화와 더불어 전통적인 성역할(가사노동, 자녀양육 등) 이외에 사회참여라는 새로운 역할을 추구하고 있으며 경제활동은 사회참여의 중심이 되고 있다. 여성들의 이러한 의식의 변화는 여성의 노동력에 대한 사회적 요구의 증가와 맞물려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을 증가시키고 있다. 그러나 경제활동은 전통적인 성역할과 갈등관계에 있기 때문에 여성개인의 삶의 조건이나 생애 사건들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들이 여성노동력의 역동성을 증가시키고 있다.

21세기 정보화 사회의 특징들 중의 하나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이다. 인력교체, 부분고용, 임시고용 등이 증가한다. 이는 생산과정에서의 잦은 기술

혁신이 수시로 조정될 수 있는 노동조직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또한 정보화 사회는 수요자의 취향에 민감한 고급 여성전문인력의 수요를 증가시킨다. 이와 동시에 출산율 감소에 따른 노동인구의 감소는 여성을 노동시장으로 끌어내는 요인이 되고 있다. 다른 한편 남녀평등을 향한 여성들의 의식변화는 여성노동공급을 증가시킨다. 또한 여성들은 비시장적 노동을 통해서 사회의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바를 인정해주기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들은 모두 노동력의 측정방법이 20세기와는 달라야 하며, 다양화되고 있는 경제활동행위들을 측정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 모색되어야 하고, 특히 여성들의 노동력 공급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표 1> 경제활동인구 규정에 관한 각 연도 『인구주택총조사』 지침

센서스 연도	연령기준	준거 기간	경제활동 최소 기준시간	경제활동인구 규정 내용
1980년	14세이상(만나이인지 세는 나이인지 불분명)	1주간 (10월 25일-31일)	조금	1. 돈벌이 또는 생업에 종사. 2. 조금이라도 수입을 위해 일함. 3. 구직활동 함.
1985년	상동	불분명 (주로 한 활동)	없음	1. 일하고 있음. 2. 틈틈이 일하고 있음. 3. 구직활동 함.
1990	만15세 이상	평소	1년중 30일 이상	1. 돈벌이 또는 생업에 종사. 2. 틈틈이 일함. 3. 직장(사업)있으나 사정에 의해 쉬고 있음. 4. 구직활동 함.
1995	세는 나이 16세 이상	1개월 (10월 1일-31일)	주로 한 활동	1. 주로 일함. 2. 틈틈이 일함. 3. 일하여 왔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잠시 쉬. 4. 구직활동 함.
2000	상동	1주일 (10월 22일- 28일)	조금 (1시간)	1. 수입있는 일을 했음. 2. 일해왔으나 휴가 등으로 잠시 쉬. 3. 구직활동 함. 4. 지난 주에 일이 있었다면 할 수 있었음.

<표 2> 성별 경제활동참가 현황, 1966-2000

(단위: 천명, %)

연도	노동력				경제활동참가율			취업률			노동력 증가율 (%)			
	전체	취업자	실업자	여성비율(%)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연도	전체	남자	여자
2000	22,164	21,366	797	41.3	61.1	74.0	48.9	96.4	95.8	97.2	1995-2000	4.7	3.5	6.5
1995	21,164	20,785	379	40.6	62.4	76.6	49.1	98.2	97.9	98.6	1990-1995	12.4	12.5	12.4
1990	18,822	18,388	434	40.6	60.6	74.5	47.5	97.7	97.3	98.3	1985-1990	19.0	14.2	26.8
1985	15,816	15,245	570	38.1	56.9	73.0	41.9	96.4	95.4	97.9	1980-1985	24.7	16.0	42.2
1980	12,679	11,876	803	33.4	51.3	70.8	33.2	93.7	92.5	95.9	1975-1980	23.7	15.7	35.5
1975	10,248	9,806	442	30.5	48.4	69.6	28.6	95.7	94.7	97.9	1970-1975	18.3	20.7	13.0
1970	8,665	8,224	441	31.9	49.2	70.8	29.8	94.9	94.2	96.3	1966-1970	18.5	11.6	36.6
1966	7,312	6,997	615	27.7	46.0	70.0	24.2	95.6	91.4	92.0				

출처: <http://kosis.nso.go.kr>: 『경제활동인구조사』 > 각 연도. 15세 이상 인구; 1966년부터 1980년까지는 해당 연도의 4/4분기자료이고, 그 이후는 해당 연도의 11월 자료임. 11월 자료를 선택한 이유는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와 비교하기 위한 것임.

<표 3> 경제활동참가율 비교: 『인구주택총조사』와 『경제활동인구조사』, 1966-2000

(단위: % in the labor force)

연도	남 자		경제활동 인구조사	여 자		경제활동 인구조사
	인구주택총조사			인구주택총조사		
	보고서	2%표본		보고서	2%표본	
2000	-	70.9(a)/ 74.4(b)	74.0	-	39.2(a)/ 46.0(b)	48.9
1995	71.6	77.5	76.6	36.6	38.9	49.1
1990	68.3	73.8	74.5	32.6	34.2	47.5
1985	-	71.5	73.0	-	32.1	41.9
1980	72.4	72.0	70.8	38.4	37.4	33.2
1975	77.8	-	69.6	45.7	-	28.6
1970	72.5	-	70.8	37.6	-	29.8
1966	78.6	-	70.0	31.5	-	24.2

a: 조사기준 기간(2000년 10월 22일-28일)에 수입 있는 일을 한 적이 있거나, “일을 하여 왔으나 휴가 등으로 잠시 쉬고 있는” 사람들과 구직활동을 한 사람들 중 “직장이 있었다면” 일할 수 있었다고 응답한 사람들을 포함.

b: 조사기준 기간에 수입 있는 일을 한 적이 있거나, “일을 하여 왔으나 휴가 등으로 잠시 쉬고 있는” 사람들과 구직활동을 한 사람들을 모두 포함; “직장이 있었다면”일을 할 수 있었는지의 여부는 무시

출처: <http://kosis.nso.go.kr>; 각 연도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인구주택총조사』 각 연도의 2% 표본 원시자료. 『인구주택 총조사』 조사 기준일은 1966년부터 1975년까지는 10월 1일이고, 1980년부터 2000년까지는 11월 1일임.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는 1966년부터 1980년까지는 해당 연도의 4/4분기 자료이고, 1985-2000년에는 해당 연도의 11월 자료임.

<표 4> 성별,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1980- 2000

(단위: % in the labor force)

연도, 성	19세 이하					20세 이상						
	전체	16세 미만	16-17세	18-19세	전체	20-24세	25-34세	35-44세	45-54세	55-64세	65+	
남자												
2000a	6.5	.5	2.3	14.1	78.6	38.8	86.0	93.9	89.3	69.0	39.0	
2000b	11.1	3.1	6.1	20.5	82.0	45.8	89.2	95.9	92.3	73.4	42.9	
1995	10.6	.8	3.8	25.0	86.1	58.4	94.6	98.2	95.0	78.6	40.5	
1990	12.4	1.6	5.1	25.3	84.1	53.3	93.8	97.6	93.4	74.8	37.0	
1985	12.7	1.7	8.7	31.7	85.5	61.5	94.3	97.9	94.3	75.5	40.0	
1980	21.4	5.5	18.2	42.4	85.8	71.0	94.1	96.4	92.1	75.9	40.5	
여자												
2000a	7.8	.2	1.8	17.0	42.5	48.9	44.2	49.6	47.7	37.5	18.9	
2000b	12.9	2.8	5.7	24.3	49.5	57.0	51.9	57.1	54.6	43.6	23.5	
1995	11.9	.5	2.7	28.7	42.0	61.3	39.2	44.4	46.7	40.2	16.8	
1990	16.1	1.4	5.1	34.0	36.9	57.2	31.2	39.2	44.2	34.8	11.5	
1985	13.9	2.1	9.0	35.0	35.7	49.4	28.1	38.8	46.3	35.2	10.7	
1980	25.1	7.4	22.4	47.8	40.1	51.2	31.9	46.0	50.2	38.3	12.4	

2000a: 취업자들과 구직활동을 했고, 일이 있었다면 일을 할 수 있었다고 응답한 사람들을 경제활동인구에 포함.

2000b: 취업자들과 구직활동을 한 사람들을 모두 포함하고, 즉각적 취업 가능성 여부는 고려하지 않음.

출처: 『인구주택총조사』 각 연도 2% 표본 원시자료.

<표 5> 남녀 노동력의 연령구성, 1980-2000

(단위: %)

연도	전체 노동력	19세 이하				20세 이상							
		전체	16세 미만	16-17세	18-19세	전체	20-24세	25-34세	35-44세	45-54세	55-64세	65+	
남자													
2000a	100.0	1.0	.0	.1	.8	99.0	4.1	28.2	32.2	19.8	10.4	4.3	
2000b	100.0	1.6	.1	.3	1.2	98.4	4.6	27.9	31.4	19.5	10.6	4.5	
1995	100.0	1.6	.0	.2	1.3	98.4	7.1	31.4	29.1	17.3	10.2	3.2	
1990	100.0	2.4	.1	.4	1.9	97.6	7.6	34.8	26.0	17.9	8.5	2.7	
1985	100.0	3.4	.2	.8	2.4	96.6	9.9	34.0	24.2	18.0	7.8	2.7	
1980	100.0	6.4	.6	1.8	4.0	93.6	12.1	30.2	24.7	16.0	8.0	2.6	
여자													
2000a	100.0	1.9	.0	.2	1.7	98.1	11.5	24.8	28.2	17.5	10.5	5.6	
2000b	100.0	2.7	.1	.5	2.1	97.3	11.5	24.8	27.6	17.0	10.4	6.0	
1995	100.0	3.2	.0	.3	2.9	96.8	18.1	24.4	23.5	15.6	11.0	4.2	
1990	100.0	6.1	.1	.8	5.2	93.9	20.5	23.6	20.1	17.0	9.8	2.9	
1985	100.0	7.1	.4	1.5	5.2	92.9	20.7	21.4	19.5	19.2	9.6	2.5	
1980	100.0	12.0	1.3	3.5	7.2	88.0	20.3	18.4	21.0	17.4	8.6	2.4	

2000a: 취업자들과 구직활동을 했고, 일이 있었다면 일을 할 수 있었다고 응답한 사람들을 경제활동인구에 포함.

2000b: 취업자들과 구직활동을 한 사람들을 모두 포함하고, 즉각적 취업 가능성 여부는 고려하지 않음.

출처: 『인구주택총조사』 각 연도 2% 표본 원시자료.

<표 6> 연령별 노동력의 성별구성, 1980-2000 (여성의 비율)

(단위: %)

연도	전체 노동력	19세 이하				20세 이상						
		전체	16세 미만	16-17세	18-19세	전체	20-24세	25-34세	35-44세	45-54세	55-64세	65+
2000a	37.4	53.4	27.5	41.1	55.3	37.2	62.7	34.5	34.4	34.6	37.6	44.2
2000b	40.1	52.8	46.1	46.4	54.9	39.9	62.4	37.4	37.1	36.9	39.7	47.2
1995	35.1	52.4	39.0	40.7	54.2	34.7	57.8	29.5	30.4	32.8	37.0	41.4
1990	33.2	55.4	45.6	48.2	57.0	32.4	57.3	25.3	27.8	32.1	36.5	34.4
1985	32.4	50.0	53.0	47.8	50.4	31.5	50.0	23.1	27.8	33.0	36.9	30.8
1980	36.0	51.3	55.1	52.2	50.4	34.6	48.5	25.5	32.3	37.9	37.8	34.2

2000a: 취업자들과 구직활동을 했고, 일을 할 수 있었다고 응답한 사람들을 포함.

2000b: 취업자들과 구직활동을 한 사람들을 모두 포함하고, 즉각적 취업 가능성 여부는 고려하지 않음.

출처: 『인구주택총조사』 각 연도 2% 표본 원시자료.

<표 7> 성별, 교육정도별 경제활동참가율, 1980-2000

(단위: % in the labor force)

연도, 성	무학	초등학교	중학교	인문고등학교	실업고등학교	초대·전문대	대학이상
남자							
2000a	49.4	68.3	67.6	-----	72.2 -----	71.5	73.6
2000b	53.9	72.7	71.4	-----	75.5 -----	75.5	76.5
1995	54.7	78.7	78.0	-----	78.9 -----	80.0	77.0
1990	55.5	81.2	78.6	-----	71.5 -----	76.1	73.5
1985	63.2	87.3	68.2	-----	69.2 -----	70.6	67.0
1980	69.9	88.5	66.7	62.1	67.1	66.9	72.4
여자							
2000a	28.7	43.3	40.7	-----	37.4 -----	45.0	41.7
2000b	33.8	49.4	47.6	-----	44.8 -----	52.3	48.1
1995	31.2	46.3	37.8	-----	36.8 -----	47.2	39.8
1990	29.8	43.4	31.4	-----	31.9 -----	41.6	32.7
1985	34.1	43.9	24.7	-----	28.2 -----	38.3	24.7
1980	41.8	47.5	28.6	26.4	36.3	43.0	25.6

2000a: 취업자들과 구직활동을 했고, 일을 할 수 있었다고 응답한 사람들을 포함.

2000b: 취업자들과 구직활동을 한 사람들을 모두 포함하고, 즉각적 취업 가능성 여부는 고려하지 않음.

출처: 『인구주택총조사』 각 연도 2% 표본 원시자료.

<표 8> 성별, 결혼상태별 경제활동참가율, 1980-2000

(단위: % in the labor force)

연도	남자					여자				
	전체	유배우	사별	이혼	미혼	전체	유배우	사별	이혼	미혼
2000a	71.2	85.2	39.0	75.6	43.3	39.3	40.9	27.5	60.3	39.8
2000b	74.7	87.5	44.7	83.2	48.9	46.1	47.7	33.6	72.3	46.7
1995	77.6	91.0	46.7	88.1	51.3	38.9	36.8	30.3	70.2	47.2
1990	73.8	90.4	42.7	86.2	44.7	34.2	31.0	28.4	70.7	42.9
1985	74.1	91.4	43.8	85.1	45.6	33.1	31.1	28.5	60.9	39.2

2000a: 취업자들과 구직활동을 했고, 일을 할 수 있었다고 응답한 사람들을 포함.

2000b: 취업자들과 구직활동을 한 사람들을 모두 포함하고, 즉각적 취업 가능성 여부는 고려하지 않음.

출처: 『인구주택총조사』 각 연도 2% 표본 원시자료.

<표 9> 성, 연령, 도시-농촌 구분에 따른 경제활동참가율, 1980-2000

(단위: % in the labor force)

연도	전체 노동력	19세 이하			20세 이상						
		전체*	16-17세	18-19세	전체	20-24세	25-34세	35-44세	45-54세	55-64세	65+
남자											
도시											
2000a	70.2	6.5	2.3	13.8	78.1	37.9	85.8	93.9	88.9	65.5	30.5
2000b	73.9	11.0	6.0	20.2	81.6	45.1	89.0	96.0	92.1	70.4	34.8
1995	77.0	10.0	3.6	23.3	85.8	56.4	94.4	98.3	94.8	75.2	31.8
1990	73.1	11.3	4.6	22.7	83.7	50.8	93.7	97.7	92.5	65.2	20.5
1985	70.0	11.6	8.0	27.2	84.1	56.9	93.7	97.8	92.6	61.2	21.6
1980	69.5	19.8	15.9	36.7	83.2	63.8	93.3	95.6	88.0	58.7	22.9
여자											
2000a	37.2	7.9	1.8	16.9	40.4	48.6	44.0	48.0	44.3	29.0	12.2
2000b	44.3	13.0	5.8	24.4	47.8	56.8	51.8	55.8	51.6	36.0	17.0
1995	36.5	12.0	2.7	28.3	39.4	61.1	38.5	41.8	41.4	30.6	10.6
1990	29.7	16.1	4.5	33.4	31.7	57.2	28.6	33.2	32.0	17.4	3.8
1985	24.9	15.2	9.3	35.4	26.9	49.4	22.1	27.1	26.4	13.8	3.0
1980	28.1	27.6	22.6	47.8	28.2	49.3	22.5	28.6	26.5	14.3	2.7
남자											
농촌											
2000a	76.0	7.4	2.9	17.3	82.3	47.8	89.2	94.0	92.2	85.1	62.5
2000b	78.5	12.1	7.2	23.6	84.7	53.1	91.9	95.6	93.9	87.1	65.2
1995	81.0	15.0	5.4	38.9	88.1	72.8	96.0	97.6	95.8	89.6	60.7
1990	75.7	15.7	6.8	33.7	85.4	61.1	94.3	97.2	95.4	88.8	53.7
1985	74.3	14.9	10.1	41.6	88.1	70.9	96.0	98.2	96.8	89.3	52.9
1980	75.3	23.8	21.7	52.5	89.2	82.4	95.9	97.7	96.1	88.1	49.8
여자											
2000a	53.4	6.3	1.3	17.4	57.0	52.5	47.1	65.9	72.4	70.0	38.6
2000b	57.8	11.0	5.4	24.1	61.4	59.4	53.1	70.6	76.2	73.2	42.6
1995	52.5	10.9	2.6	31.8	56.8	63.3	45.4	64.5	73.5	68.7	32.9
1990	47.0	15.9	6.9	36.1	51.4	57.0	42.4	62.1	69.2	59.4	21.0
1985	45.8	11.3	8.4	33.7	52.4	49.3	44.5	65.2	71.8	57.5	17.5
1980	50.4	21.5	21.9	47.7	56.5	55.7	51.2	69.5	72.2	57.2	1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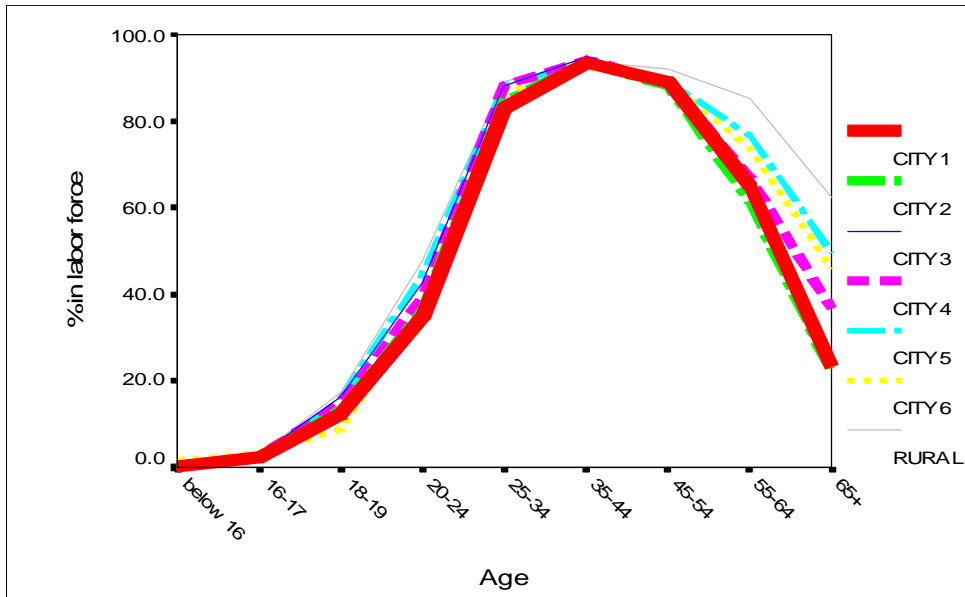
*16세 미만의 노동력도 포함함. 그러나 표에는 16세 미만 노동력을 따로 제시하지 않음.

2000a: 취업자들과 구직활동을 했고, 일을 할 수 있었다고 응답한 사람들을 포함.

2000b: 취업자들과 구직활동을 한 사람들을 모두 포함하고, 즉각적 취업 가능성 여부는 고려하지 않음.

출처: 『인구주택총조사』 각 연도 2% 표본 원시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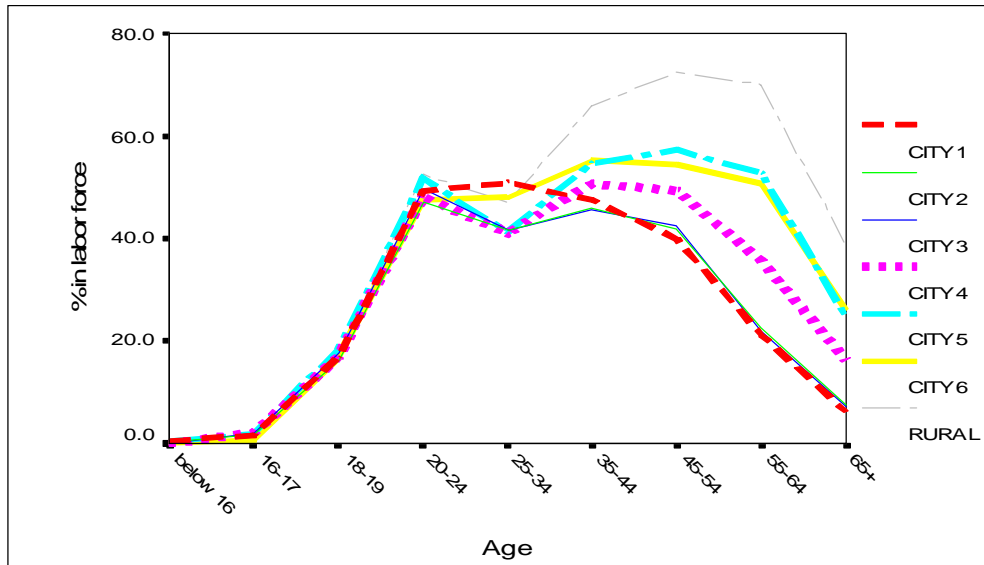
<그림 1> 도시규모별 남성 경제활동참가율, 2000



city1: 거대도시 (인구 5,000,000명 이상)/ city2: 대도시 (인구 1,000,000 - 4,999,999명)
 city3: 중도시 (인구 500,000-999,999명)/ city4: 중소도시 (인구 200,000 - 499,999명)
 city5: 소도시 (인구 100,000 - 199,999명)/ city6: 극소도시 (인구 100,000명 미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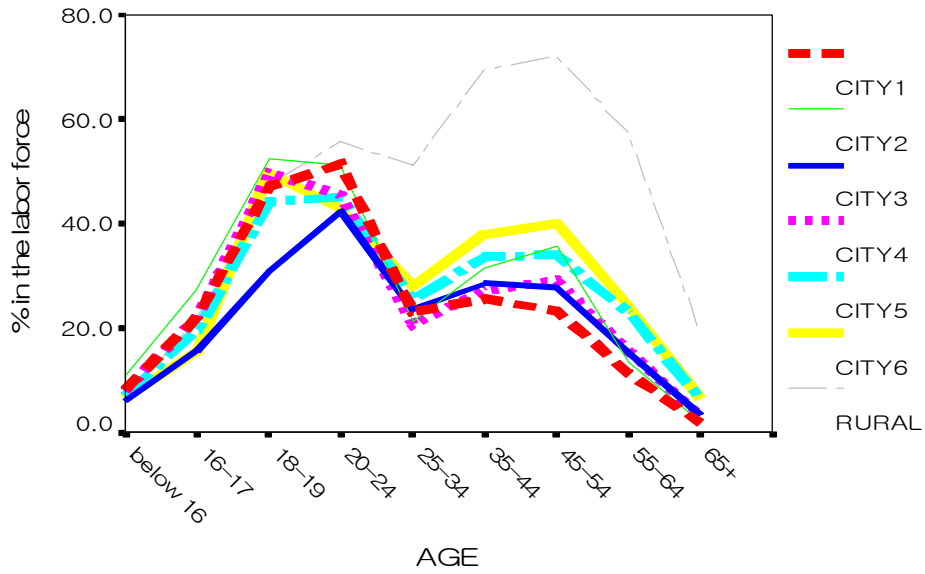
출처: 『인구주택총조사』 2000년 2% 표본 원시자료. 도시규모별,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에 관한 자료는 요청에 의해 제공할 수 있음.

<그림 2> 도시규모별 여성경제활동참가율, 2000



city1: 거대도시 (인구 5,000,000명 이상)/ city2: 대도시 (인구 1,000,000 - 4,999,999명)
 city3: 중도시 (인구 500,000-999,999명)/ city4: 중소도시 (인구 200,000 - 499,999명)
 city5: 소도시 (인구 100,000 - 199,999명)/ city6: 극소도시 (인구 100,000명 미만)
 출처: 『인구주택총조사』 2000년 2% 표본 원시자료. 농촌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비교의 목적으로 첨가했음.

<그림 3> 도시규모별 여성경제활동참가율, 1980



city1: 거대도시 (인구 5,000,000명 이상)/ city2: 대도시 (인구 1,000,000 - 4,999,999명)

city3: 중도시 (인구 500,000-999,999명)/ city4: 중소도시 (인구 200,000 - 499,999명)

city5: 소도시 (인구 100,000 - 199,999명)/ city6: 극소도시 (인구 100,000명 미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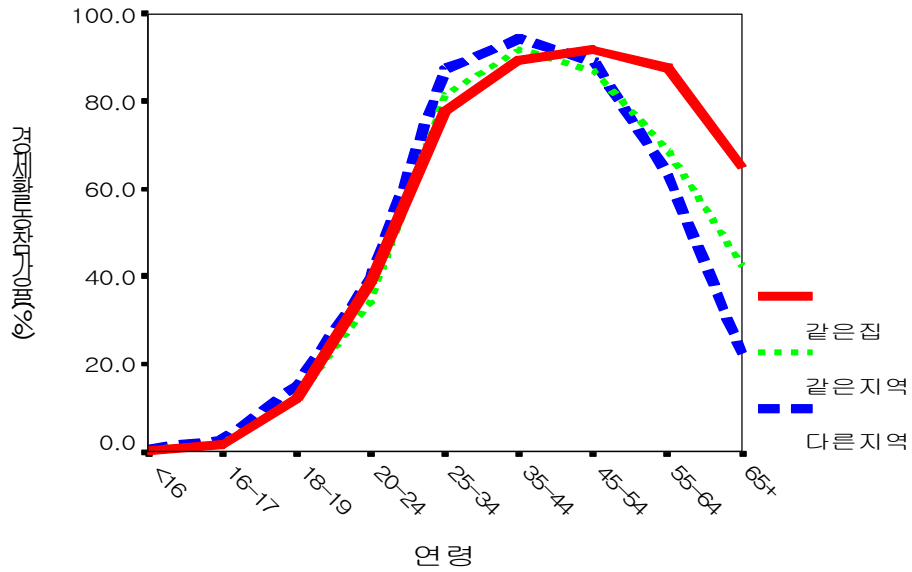
출처: 『인구주택총조사』 1980년 2% 표본 원시자료.

<표 10> 거주지 이동 횟수별 경제활동참가율(%), 2000

거주지 이동 횟 수	연령								
	전체	16-17	18-19	20-24	25-34	35-44	45-54	55-65	65+
남자	도시								
0	60.4	1.7	11.0	34.7	80.5	91.4	87.8	73.3	49.1
1	71.2	2.4	14.2	37.9	85.3	94.1	89.2	63.3	23.3
2	79.9	3.8	18.9	43.1	90.6	95.2	89.5	62.6	17.8
3	81.1	10.1	22.7	49.8	90.6	93.6	89.2	65.7	14.2
여자									
0	38.8	1.4	15.7	47.5	51.9	52.6	51.8	47.7	24.2
1	38.8	1.9	17.1	49.2	45.2	47.9	43.2	25.3	9.1
2	36.1	2.8	21.0	49.3	37.7	45.7	40.7	18.5	3.5
3	38.5	8.0	21.6	49.3	39.4	44.9	42.9	19.9	1.9
남자	농촌								
0	75.7	1.4	16.3	48.0	87.2	93.5	93.6	88.4	67.8
1	73.7	8.2	19.3	45.1	90.1	94.5	89.8	77.9	47.8
2	80.8	6.8	18.8	49.3	92.9	95.0	89.2	69.2	30.8
3	83.5	-	25.0*	53.4	90.2	94.0	83.7	74.3	40.0*
여자									
0	56.1	0.9	15.2	57.7	55.1	72.0	78.0	76.3	42.2
1	53.5	2.3	20.9	46.2	48.8	65.2	69.5	63.4	34.0
2	40.3	2.1	22.2	45.2	37.0	54.0	52.2	36.6	11.4
3	36.4	20.0*	46.2*	40.9	33.7	41.5	47.2	35.0*	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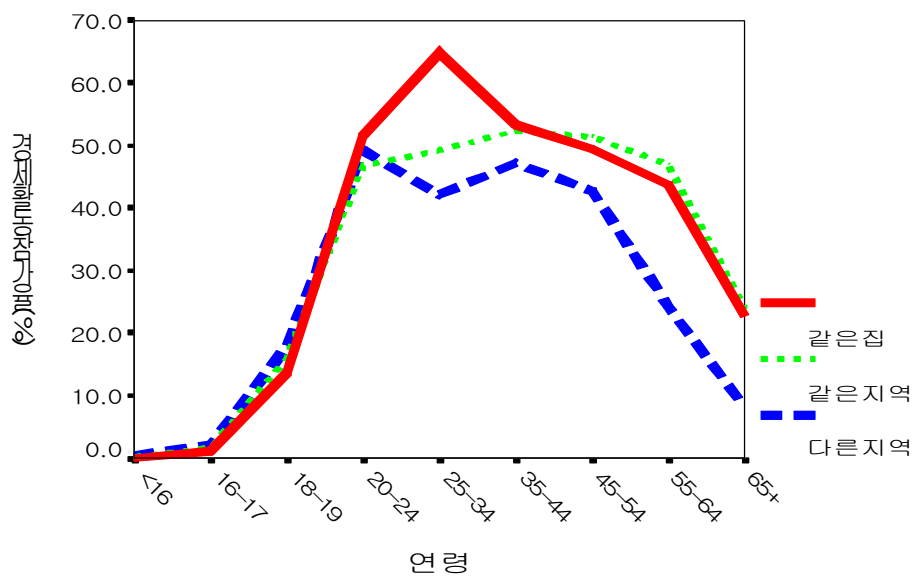
*표본규모 < 30. 출처: 통계청, 2000.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 원시자료.

<그림 4> 도시 남성의 현거주지-출생지별 경제활동참가율(%), 2000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00, 2% 표본 원시자료.

<그림 5> 도시 여성의 출생지-현거주지별 경제활동참가율(%), 2000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00, 2% 표본 원시자료.

<표 11> 가구주와의 관계별, 연령별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2000

가구주와의 관계*	연령							
	전체	<20	20-24	25-34	35-44	45-54	55-64	65+
	도 시							
(1)	51.9	31.6	64.1	74.2	69.6	59.8	38.6	17.5
(2)	37.3	32.7	30.5	32.0	44.5	40.8	28.4	21.7
(3)	32.6	6.1	46.7	67.5	54.6	43.4	25.0	0.0*
(4)	43.4	17.9*	27.8	41.7	53.5	50.4	29.4	18.8
(5)	21.2	6.0	47.3	58.0	50.5	-	-	16.7*
(6)	56.5	24.1	60.0	69.9	54.6	34.6	14.9	5.0
(7)	44.8	14.2	53.0	75.5	57.1*	50.0*	0.0*	0.0*
(8)	46.8	17.8	59.7	73.7	55.0	43.8	24.3	4.0
(9)	57.4	44.1	61.3	77.6	58.0	61.7	35.3	17.0
	농 촌							
(1)	56.5	23.6	61.0	78.6	76.3	77.2	71.7	39.5
(2)	62.7	36.4*	28.0	39.9	64.9	72.4	73.3	60.0
(3)	30.2	5.0	57.7	68.1	50.4	38.9*	44.4*	66.7*
(4)	52.3	11.8*	25.3	49.8	65.2	76.9	68.0*	60.0*
(5)	14.4	5.8	73.3	50.0*	75.0*	-	-	-
(6)	47.5	20.0*	57.1	56.7	51.4	22.2*	25.0*	30.0*
(7)	36.2	8.0*	83.3*	71.4*	-	-	-	-
(8)	33.6	16.0*	65.0*	45.5*	72.7*	25.0*	42.9*	11.8
(9)	60.1	34.5	71.8	86.4	88.5	67.7	54.9	12.5

*가구주와의 관계 부호들: (1) 가구주, (2) 가구주의 배우자, (3) 자녀, (4) 자녀의 배우자,
 (5) 손자녀·그 배우자, (6) 형제자매·그 배우자, (7) 형제자매의 자녀·그 배우자,
 (8) 기타 친인척, (9) 기타 동거인.

출처: 통계청, 2000 『인구주택 총조사』, 2% 표본 원시자료.

노동력

민 경 희

(충북대학교)

경제활동참가율은 20세기 후반에 상당히 증가해 왔다. 경제활동참가율은 1966년의 45.0%에서 2000년의 61.1%로 증가했으며 이런 증가의 대부분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의 증가에 의한 것이다. 전체 노동력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1966년의 27.7%에서 2000년의 41.3%로 증가하였다. 지난 20년 동안 남녀 청소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은 감소해 왔다. 20세 이상에서는 남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이 감소해온 반면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증가해 왔다.

교육수준과 경제활동참가율을 보면, 최근으로 올수록 높은 교육수준이 경제활동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결혼상태별로 보면, 남성은 유배우자들이 가장 높은 경제활동참가율을 보여주고 있으며, 여성은 최근으로 오면서 과거와는 달리 유배우자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아지고 있다. 지역별로는 도시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보다 농촌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이 항상 훨씬 높다. 도시규모별로 2000년 자료를 보면, 남성 경제활동의 정점을 이루는 35-44세에서는 도시별로 별 차이가 없지만 18-19세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은 거대도시나 극소도시보다 중간규모의 도시들에서 더 높게 나타나고, 45세 이후의 장년층은 작은 도시보다는 큰 도시에서 더 빨리 은퇴하고 있다. 여성들을 보면, 거대도시 여성들은 전형적인 M-곡선에서 벗어나서 25-34세 여성들이 다른 여성들보다 더 높은 경제활동참가율을 보여주고 있다. 장년층을 보면 거대도시 여성들이 가장 낮은 비율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며 작은 도시에서는 높은 비율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 거주지 이동이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남성들에게는 긍정적이고, 여성들에게는 도시에서는 별 영향이 없으나 농촌에서는 부정적이다. 일반적으로 젊은층에서는 긍정적이고 장년층에서는 부정적이다. 평균 노동력 여명을 보면, 1999년 15세 남성은 약 40년, 여성은 약 28년의 노동력여명을 기대할 수 있었다. 2000년에 비공식부문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전체 노동력의 40.8%로 추정된다.

여성의 경제활동은 가족 구성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다. 도시의 1세대 가구들에서 여성가구주들이 가장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하고 있고, 가구주의 배우자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저조했으나 최근으로 올수록 배우자들과 다른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의 차이가 줄어들고 있다. 특히 장년층 아내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증가하고 있다. 2000년의 농촌에서는 배

우자들이 가장 높은 경제활동참가율을 기록했고, 가구주, ‘기타’ 여성의 순서로 낮아지고 있다. 가족규범 때문에 같은 연령층이라도 가족에서의 위치가 아내인가, 며느리인가, 딸인가에 따라 경제활동참가율이 현저히 달라지고 있다. 자녀수가 여성의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도시와 농촌에서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가구주인가 배우자인가에 따라 다르고, 연령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전학령기 동거자녀(아동)의 수가 많을수록 경제활동참가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취업여성들은 전학령기 아동 보육을 조부모, 어린이집, 유치원에 많이 의존하고 있고, 초등학생 아동의 보육방법으로는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관계없이 학원의 중요성이 드러나고 있다.

제11장

노인인구의 변화

박경숙
(동아대학교)

I. 머리말

최근 고령화 및 노인 문제에 대한 학문적, 정책적 관심이 크게 고조되고 있다. 주지의 사실이듯이 한국 사회의 인구 구조는 급격하게 고령화되고 있다. 앞서 고령화를 경험한 선진사회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그 속도가 빨라서, 적절한 노인 정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주장되고 있다. 고령화는 기회가 아닌 사회적 부담으로 인식되고 있다. 경제학자들은 피부양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경제활동 인구의 부양부담은 심화되며, 근로의욕은 저하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의료 보험 재정 연구자는 노인 의료비의 급상승은 의료보험 재정에 주요 압박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추정하고 있다. 또한 노인의 삶의 질 변화에 주목하는 연구에서는 많은 노인이 빈곤, 질병, 고립, 소외의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많은 노인이 경제적으로 빈곤하며, 신체적으로 쇠약하며, 가족, 혹은 사회로부터 부양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어느덧 노인은 우리사회의 소외계층이며, 사회복지의 주요 목표 집단(target group)으로서 인식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예들만으로도 고령화, 노년기에 대하여 부정적 이미지를 가지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고령화에 대한 많은 주장이 경험적으로 검증된 것은 아니다. 노인문제의 심각성을 밝히는 연구들이 쇄도하면서, 역설적으로, 노년기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더욱 심화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 학자들이 사용하는 용어, 방법론 자체가 노인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을 전제하고 있다는 자기 성찰적 반성도 일어나고 있다.

필자가 여기서 수행하려는 연구가 지금까지의 노인연구와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을 가진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다만, 노인집단 내의 다양성을 좀 더 심층적으로 살펴보고, 현재의 노인 문제를 가족, 노동, 지역문제와 같은 우리 사회의 중심문제와 연결하여 이해하려는 시각을 견지하고자 한다. 각 절의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2절에서는, 노인 연구의 기존 동향과 자료를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다. 3절에서는 65세 이상 고연령층의 기본적인 인구학적 특성(성, 연령, 혼인상태)의 변화를 살펴볼 것이다. 다음에 이어지는 몇 개의 절에서는 노인 인구의 가족관계, 취업생활, 거주지 분포의 특성과 변화를 분석할 것이다. 분석에 활용된 자료는 인구 총조사 전수조사자료의 공식발표 자료, 1980년에서 2000년 2% 표본 조사 자료를 이용하였다.

II. 노인연구의 기존 동향

노인 관련 주제는 가족학, 인구학, 사회학, 사회복지, 보건학에 걸쳐 학제간 연구가 활발한 분야에 속한다. 노인 연구를 중심으로 다루는 전문 학회와 연구기관은 이미 1980년 이전에 조직되었다¹⁾. 그러나, 고령화, 노인 문제에 관한 학술적인 연구가 본격화된 것은 1990년대 이후부터가 아닌가 사료된다.

현재 우리사회는 고령화사회(Aging society)의 인구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지금으로부터 20년이 더 지나면, 노인 인구가 다시 배가 되며, 10년을 더 더한 시기에는 유소년보다 노인의 수가 많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변화라는 표현이 부족할 만큼, 혁명적인 인구구조의 변화이다.

장래 인구변화에 대한 우려가 널리 공감되고 있지만, 최근 정부, 학계, 민간 조직이 보이는 관심은 일시적 유행이 아닌가를 의심할 만큼, 단기간에 급상승하였다. 그동안 수행된 연구 성과물은 풍요 속의 빈곤상황으로 표현할 수 있다.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었지만, 대부분의 연구가 건강, 심리 부분과 가족부분으로 편향되어 있으며, 마치, 암묵적으로 상호 표절을 인정하듯이, 내용과 중복과 유사성이 크다. 또한 복지, 의료 부분을 제외하

1) 1979년 한국노년학회가 발족되었으며, 다음 해에 노인 연구 전문학술지인 한국노년학이 발간되었다. 또한 사단법인 민간연구기관으로서 한국노인문제연구소가 1973년 발족되었다.

면, 노인 문제를 여타 사회제도와 연결하는 이해하는 접근이 미흡하다. 대부분의 연구가 노인의 욕구 분석에 초점 지워져 있다. 근대화론, 교환론, 상호작용론이 노인 연구의 주요 이론들로 이용될 뿐, 노인 연구에 있어서 이론의 빈곤화 문제는, 노인문제와 계급, 성, 이데올로기, 조직과의 깊은 연결을 밝히는데 무력함을 드러내고 있다.

연구 내용이 몇 개의 주제로 편향된 것은 노인 연구 자료의 불충분한 상황을 반영한다(<표 1>). 정부, 민간 연구기관에서 노인을 주제로 실시한 조사는 보건사회연구원의 <노인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가 유일하다. 이 밖에 노인에 관한 포괄적인 조사항목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는 찾아보기 힘들다. 결국, 많은 연구가 개별 연구집단의 직접 조사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연구결과의 공유나 축적을 기대하기 힘들다.

<표 1> 노인 연구에 활용되는 자료

자료	조사기관, 시기 및 대상	조사영역
인구주택총조사	기관: 통계청 시기: 매 5년 전수조사, 대상: 조사시점 상주인구	가족: 가구원표, 가구주와의 관계, 혼인상태, 자녀거주장소(2000년 총조사에 한함) 경제: 경제활동상태, 종사상지위, 산업, 직업 건강: 거동여부(2000년 총조사에 한함)
국민건강영양조사	기관: 보건사회연구원 시기: 1998년 대상: 전국 일반가구 13,523	가족: 가구원표, 가구주와의 관계, 혼인상태, 생활수준 경제: 직업, 종사상지위 건강: 이환여부, 장기활동제한, 의료이용, 주관적건강상태, 생활습관, 건강행위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기관: 보건사회연구원 시기: 1994, 1998 대상: 총조사 조사구에 기초, 일반가구 9,355 가구와 조사된 가구 중 노인 2,335명 (1998년 기준)	가족: 가구주와의 관계, 혼인상태, 자녀의 근접성, 자녀/형제/친척/친구와의 연락정도, 가구생활수준, 노후부양관, 부양의 교환 경제: 수입, 경제활동, 직업, 주요소득원, 지출 건강: 건강 및 의료 기타: 사회참여, 복지서비스 이용 욕구
노동패널조사	기관: 노동연구원 시기: 1998년, 이후 매년 조사 대상: 전국, 비농촌지역 가구(5,000)와 15세 이상 개인 13,738명	가족: 가구주와의 관계, 혼인상태, 가구소득수준 경제: 업종, 직종, 종사상지위, 수입 건강: 2001년 패널조사에 참가
도시가계연보	기관: 통계청 시기: 매월 대상: 전국 도시, 거주 2인 이상가구 (약 5,000 가구 표본)	가족: 가구원에 관한 사항 경제: 개인 단위가 아닌, 가구 단위의 소득, 지출
경제활동인구조사	기관: 통계청 시기: 매월 대상: 전국 상주인구 중 15세 이상	가족: 가구원에 관한 사항, 혼인상태 경제: 취업, 구직, 전직에 대한 다양한 항목

비록, 노인을 주제로 실시된 조사는 아니지만, 노인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주요 자료를 정리한 것이 <표 1>이다. 먼저 <인구주택총조사자료>를 이용하여, 가족 및 경제활동을 부분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총조사자료에서 가장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조사항목은 가구원표이다. 가구원표는 현재 함께 거주하고 있는 모든 가구원에 대하여 가구주와의 관계, 연령, 혼인상태, 경제활동 등의 정보를 묻고 있기 때문에, 이 자료를 이용하여 가족관계를 다양하게 분석할 수 있다. 또한 매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행되는 조사이므로, 중장기적인 가족관계, 경제활동 변화를 분석할 때 유용한 자료이다.

아직 인지도가 별로 높지 않지만, 건강과 관련하여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자료 중의 하나가 <국민건강영양조사>이다. 이 조사는 보사연과 복지부가 분리하여 실시하였던 건강조사와 영양조사를 통합하여 1998년 새로이 실시되었다. 가구원표를 이용하여 기존 가족, 경제생활 특성을 파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환여부, 장기활동제한, 의료이용, 건강 행위 등 건강과 관련하여 포괄적인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경제활동과 관련해서는 <노동패널조사> 자료와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추천하고 싶다. <노동패널조사>는 한국노동연구원이 비농촌지역의 가구와 15세 이상 개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패널자료이다. 처음 조사는 1998년 실시되었다. 이 자료는 노동, 소득, 은퇴과정의 시간적 변화를 추적하는데 유용성이 매우 크다. 특히, 2001년 실시된 조사는 은퇴와 건강에 관한 특별주제를 포함하여, 건강, 은퇴의 관한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 <경제활동인구조사>도 패널조사로서, 통계청이 매월 전국 상주인구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자료이며, 취업, 구직, 전직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이 밖에, 가구 단위 소득, 소비수준을 연구하는 경우 <도시가계조사>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Ⅲ. 노인인구의 변화

최근 몇 십년 사이 65세 이상 노인집단의 인구학적 특성 변화를 살펴보자. <표 2>에서 요약하고 있듯이, 65세 이상 노인집단은 74세 이하의 전기노인(young-old)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런데, 차츰 전기노인의 비율이 감소하고 있고, 75세 이상의 후기 노인(old-old)의 비율은 증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65세 이상 74세 이하의 노인의 비율은 1970년 72.1%, 1990년에는 69.1%, 2000년에는 68%로 점차 감소하고 있다. 반대로 75세 이상 후기노인(old-old)의 비율은 1970년 27.9%, 1990년 30.9%, 2000년에는 32%로 증가하고 있다. 앞으로 고령화가 더욱 전개되면서, 후기 노인의 비율은 계

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1년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결과에 따르면, 80세 이상 고령자가 65세 이상 인구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00년 13.8%에서 2030년 22.7%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통계청, 2001).

<표 2> 65세 이상 인구의 연령분포

	연도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65-69세	41.8	45.0	42.9	41.3	41.6	39.5	40.8
70-74세	30.3	27.0	29.4	28.7	27.5	28.9	27.2
75-79세	16.9	16.9	15.9	17.8	17.4	17.3	17.8
80-84세	8.1	7.5	8.2	7.9	9.0	9.3	9.0
85세이상	2.9	3.6	3.7	4.3	4.4	5.0	5.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KOSIS 인구주택총조사

고령자는 주로 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2000년 65세 이상 인구의 성비는 여성 100명 대비 남성이 61.8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특히 나이가 많아질수록 성비불균형은 심하다. 2000년 시점에서, 65세에서 69세 연령집단의 성비는 75.9명이며, 75세-79세 연령집단에서는 61.1명, 80-84세 연령집단에서는 54.3명, 85세 이상 연령집단에서는 29.8명으로,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 성비가 크게 떨어지고 있다(<표 3>). 시기적으로 큰 변화가 보이지는 않지만, 75세 이상 연령집단에서 성비불균형은 최근으로 올수록 조금씩 완화되는 경향을 나타낸다.

<표 3> 연령별 남녀구성 (여성 100인 대비 남성 명)

	65-69세	70-74세	75-79세	80-84세	85세이상	계
1980	72.5	61.5	47.8	36.4	26.9	59.5
1985	73.7	61.3	49.6	35.6	25.0	59.4
1990	71.6	64.5	51.3	39.1	24.9	60.0
1995	67.5	62.6	54.4	40.7	27.4	58.5
2000	75.9	61.1	54.3	44.9	29.8	61.8

자료: KOSIS 인구주택총조사

고령자의 혼인상태는 성별로 차이가 크다. 2000년도 남성 노인의 유배우자 비율은 5분의 4 이상이지만, 여성 노인의 유배우자 비율은 3분의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표 4>). 이와 같이 유배우자 비율이 남녀별로 차이가 큰 것은 남녀 생존률에 차이가 크고, 또한 주로 남편이 연상인 배우자 연령구조에 비롯한다. 시기적으로 살펴보면, 유배우자 비율이 남녀 모두 크게 증가하였다. 65세 이상 인구 중 유배우자 비율은 1970년 41.6%에서, 2000년 52%로 크게 증가하였다. 남녀별로 살펴보면, 남성노인의 유배우자 비율은 같은 기간동안 73.5%에서 85.4%로 12% 정도 증가하였다. 여성노인의 유배우자 비율은 같은 기간 21.7%에서 31.3%로 약 10% 정도 증가하였다.

<표 4> 성, 연령별 유배우자비율

		연도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전체	65 - 69세	52.8	55.9	57.0	60.3	59.3	60.5	67.0
	70 - 74세	41.0	43.6	44.9	48.2	48.5	48.9	52.0
	75 - 79세	29.7	32.4	32.6	36.9	36.6	37.7	40.0
	80 - 84세	20.4	22.1	21.8	24.4	24.5	25.1	28.3
	85세이상	13.3	14.8	12.7	15.7	13.1	13.4	15.3
	계	41.6	44.6	45.0	47.9	47.2	47.6	52.0
남	65 - 69세	82.9	85.7	87.3	89.2	89.0	90.1	91.0
	70 - 74세	73.6	77.1	80.0	82.4	83.6	85.2	86.7
	75 - 79세	61.6	66.8	69.6	74.0	75.3	77.7	80.5
	80 - 84세	48.8	53.4	56.9	60.9	63.6	66.0	70.1
	85세이상	35.6	39.8	41.2	46.7	47.5	50.5	53.2
	계	73.5	77.6	79.9	82.3	82.6	83.7	85.4
여	65 - 69세	31.3	34.0	35.0	38.9	38.0	40.6	48.8
	70 - 74세	20.7	23.1	23.4	27.2	25.8	26.2	30.8
	75 - 79세	12.7	15.1	14.9	18.5	16.8	15.9	18.0
	80 - 84세	7.3	9.4	9.0	11.3	9.2	8.5	9.5
	85세이상	4.4	6.5	5.0	7.8	4.5	3.3	4.0
	계	21.7	24.3	24.3	27.5	26.0	26.5	31.3

자료: KOSIS 인구주택총조사

현 노인집단의 교육수준은 매우 낮다. 2000년 현재, 10명 중 8명이 초등 이하의 교육수준에 머물러 있다. 특히 여성노인의 교육수준은 매우 낮아, 10명 중 9명이 초등이하의 교육수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비록 대다수 노인의 교육수준이 매우 낮지만, 점차적으로 교육수준이 개선되고 있음에 주목할 수 있다. <표 5>에서 제시하고 있듯이, 비록 10년간의 다소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노인 집단의 교육수준은 크게 개선되어 왔다. 지난 1960년대 이후 한국인의 교육수준이 크게 향상되어 온 것을 고려할 때, 65세 이상 고령자의 교육수준도 앞으로 계속해서 크게 개선될 것이다.

<표 5> 65세 이상 인구의 교육수준

	전체			남			여		
	1990	1995	2000	1990	1995	2000	1990	1995	2000
무학	63.7	53.3	44.3	44.7	32.5	23.0	75.1	65.5	57.5
초등	25.9	31.9	33.9	34.3	38.3	36.2	20.9	28.1	32.4
중학교	4.9	6.4	8.4	9.5	11.8	14.0	2.1	3.2	4.9
고등학교	3.3	4.9	8.0	6.3	9.1	14.4	1.5	2.5	4.1
대학이상	2.2	3.5	5.4	5.2	8.3	12.3	0.5	0.7	1.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KOSIS 인구주택총조사

IV. 가족구조와 가족관계

1. 노인 가구 특성의 변화

가족구조와 가족관계는 노인 인구 특성에서 가장 크게 변화된 부분이다(<표 6>). 1990년에서 2000년으로 10년 간의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가구주와의 관계에 있어서 변화가 뚜렷하다. 우선, 가구주와 가구주의 배우자 구성비가 증가하였다. 구체적으로 65세 이상 노인 중 가구주의 비

율은 1990년 44.5%에서 2000년 51.8%로 증가하였다. 남녀별로 살펴보면, 여성노인의 가구주 비율이 특히 크게 상승하였다. 가구주의 배우자 비율은 전체적으로 같은 기간 11.5%에서 16.2%로 상승하였으며, 이 또한 주로 여성 노인 구성변화에 따른 것이다. 가구주나 가구주의 배우자 비율이 감소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가구주의 부모인 비율은 전체 38.4%에서 27.3%로 감소하였다. 남녀별로 구분해 살펴보면, 남성노인 중 가구주의 부모비율은 17.2%에서 12.4%로 감소하였으며, 여성노인에서는 51.2%에서 36.4%로 감소하였다. 위와 같은 변화에 비추어 볼 때, 가구구성의 변화는 남성노인에 비해, 여성노인에서 훨씬 크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표 6> 65세 이상 인구의 가구주와의 관계

	전체			남			여		
	1990	1995	2000	1990	1995	2000	1990	1995	2000
가구주	44.5	47.4	51.8	80.2	81.6	84.7	23.1	27.4	31.5
가구주의배우자	11.5	13.3	16.2	0.3	0.5	0.7	18.3	20.8	25.8
가구주의부모	38.4	33.4	27.3	17.2	15.4	12.4	51.2	44.0	36.4
배우자의부모	2.0	2.8	2.7	0.7	1.0	1.3	2.8	3.9	3.6
기타	3.5	3.0	1.9	1.7	1.4	0.8	4.6	3.9	2.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KOSIS 인구주택총조사

가구주와의 관계에서 가구주나 가구주의 배우자인 노인의 비중이 크게 증가한 것은 노인가구의 규모가 점차 작아지며, 세대구성도 단순해짐을 반영하고 있다(<표 7>). 삼세대 이상의 확대가족형에 속하는 노인의 비율은 크게 감소하였다. 한편 노부부 중심의 1세대 가구나, 1인 단독가구에 속하는 노인의 비율은 크게 증가하였다.

대체로 1세대 가구에 속하는 비율은 남성노인에서, 1인 단독가구에 속하는 비율은 여성노인에서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유배우, 무배우 노인 모두에서 자녀와의 동거율이 크게 감소한 것을 반영한다. 다시 말하여, 유배우의 경우에는 부부단독의 가구형태로, 배우자를 사별하였을 때는 자녀

와 떨어져 혼자 사는 노인의 비율이 크게 증가하였음을 반영한다. 그 결과 대부분 배우자가 있는 남성노인에서는 1세대 가구에 속하는 비율이 크게 증가하였고, 대부분 사별한 여성 노인에서는 1인 단독가구에 속하는 노인 비율이 크게 증가한 것이다.

<표 7> 65세 이상 인구가 속한 가구의 세대구성

	전체			남			여		
	1990	1995	2000	1990	1995	2000	1990	1995	2000
1인단독가구	8.9	13.3	16.2	3.4	4.9	6.2	12.2	18.2	22.4
비혈연가구	0.7	0.8	0.4	0.4	0.8	0.3	0.8	0.8	0.5
1세대가구	16.9	23.3	28.7	29.4	39.9	45.8	9.4	13.5	18.1
2세대가구	23.4	23.0	23.9	29.4	26.0	25.9	19.7	21.2	22.6
3세대가구	47.6	38.4	29.9	35.9	27.6	21.2	54.7	44.7	35.3
4세대가구	2.0	1.2	0.9	1.1	0.7	0.5	2.5	1.6	1.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KOSIS 인구주택총조사

2.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의 특성

비록 현재에도 많은 수의 노인이 자녀와 함께 살고 있지만, 분명 과거에 비해 그 비율은 크게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자녀와의 동거가 당연하게 인식되었던 과거와는 달리, 점차적으로 자녀와의 동거가 생활조건, 기회, 개인들의 가치, 태도에 따라 상황적으로 형성되고 있는 경향을 반영한다. 그렇다면, 어떠한 노인이 어떠한 상황에서 자녀와 동거할 개연성이 높은가? <표 8>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자녀와의 동거는 연령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된다. 연령효과는 한편으로 보다 나이 많은 세대에서 자녀와 동거율이 높은 결과로 설명할 수도 있지만, 동일 개인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녀와 동거하는 개연성이 증가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코호트 효과인지, 개인의 고령화(aging effect)효과를 반영하는가는 시계열적 자료와 종단적 분석을 종합할 때 가능한 것으로, 현재의 연구 수준을 넘어선다.

혼인상태의 효과도 자녀와의 동거가 생애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임을 시사한다. 유배우 노인에 비해 무배우 노인은 자녀와 동거할 개연성이 통계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교육수준도 자녀와의 동거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 대다수의 노인의 교육수준이 무학 혹은 초등수준인 코호트 특성을 전제할 때, 현 중학교 이상 교육수준을 받은 노인은 동 코호트의 일반 태도와는 대조되어 독립적인 생활을 선호하거나, 사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을 가졌을 개연성이 크다.

노년기 자녀와의 동거는 경제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부양 필요에 의해 이루어질 개연성이 크다. 분석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건강상에 장애가 있는 노인일수록 자녀와 동거하는 개연성이 크다. 또한 수입이 되는 일을 하고 있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자녀와 떨어져 사는 경향이 유의하게 크게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거주지 이동이나 거주지의 효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은 지난 5년 기간동안 거주지 이동을 경험한 개연성이 크다. 이는 다음의 절에서 보다 상세히 살펴보겠지만, 노인이동의 원인이 주로 자녀와의 결합을 위해 이루어지는 것과 연관된다. 도시에 거주하는 노인은 농촌에 거주하는 노인에 비하여 자녀와 함께 살 개연성이 유의미하게 높다.

정리하면, 노년기 자녀와의 동거는 노후생활에 흔히 수반되는 신체, 경제적 측면에서의 지원의 필요나, 가치관, 그리고 거주지의 경제, 환경적 자원에 의해 달라지는 자녀세대와의 접근 가용성, 그리고 여기에서는 분석할 수 없었지만, 자녀의 생활조건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형성된다.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은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으며, 무배우자이며, 건강에 장애가 있으며, 교육수준이 낮으며, 비취업상태에 있으며, 도시에 거주하거나, 거주지 이동을 경험한 특성이 강하다. 이는 고령기의 혼인상태, 건강상태의 변화와 같이 노년기의 생활조건의 변화에 따라, 자녀와의 가족관계가

새로이 형성되고, 변화됨을 함축한다. 물론, 이 분석은 단일시점에서의 횡단적 조사에 기초하므로, 생활주기 변화에 따른 가족관계의 변화를 직접적으로 분석하지는 못하고 있다.

<표 8>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 비율에 대한 로짓분석

		1980년		1990년		2000년	
		b	S.E.	b	S.E.	b	S.E.
성	남	<u>0.42</u>	0.04	<u>0.22</u>	0.03	<u>-0.09</u>	0.02
연령	70-74세	<u>-0.11</u>	0.03	<u>-0.09</u>	0.03	<u>-0.15</u>	0.02
	75-79세	-0.01	0.04	<u>0.13</u>	0.03	-0.02	0.02
	80세이상(기준:65-69세)	<u>0.10</u>	0.05	<u>0.45</u>	0.04	<u>0.48</u>	0.03
혼인상태	유배우(기준:무배우)	<u>-0.61</u>	0.03	<u>-0.60</u>	0.03	<u>-0.73</u>	0.02
ADL장애	있음(기준:없음)					<u>0.44</u>	0.04
교육수준	초등(기준:중학교이상)	<u>0.13</u>	0.06	<u>0.26</u>	0.04	<u>0.13</u>	0.02
취업상태	취업(기준:비취업)	<u>-0.84</u>	0.04	<u>-0.80</u>	0.03	<u>-0.47</u>	0.02
5년간 거주지이동	이동(기준:비이동)	<u>-0.28</u>	0.04	0.02	0.03	<u>0.18</u>	0.02
거주지	동	<u>0.33</u>	0.04	<u>0.55</u>	0.03	<u>0.72</u>	0.02
	읍(기준:면)	-0.00	0.04	<u>0.11</u>	0.04	<u>0.21</u>	0.03
상수		<u>1.47</u>	0.07	<u>0.52</u>	0.05	<u>-0.26</u>	0.03
Pseudo R2		0.04		0.07		0.08	
N		30,595		43,882		67,858	

자료: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

주: __ 친 계수는 $p < 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 종속변수의 기준범주는 자녀와 따로 사는 경우임. 회귀계수는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비율(p)의 로짓값($\log(p/(1-p))$)의 크기를 나타냄.

3. 1인 단독가구 노인의 증가 요인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혼자 사는 단독가구 노인의 비율이 매우 크게 증가하였다. 어떻게 단기간에 그렇게 큰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었는가? 독거 가능성이 큰 노인의 구성이 증가해서인가? 아니면, 독거 가능성을 조성한 요인들의 효과가 시기적으로 증폭되어서인가? 먼저 후자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독거율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효과의 시기적 변화에 주목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1980년에서 1990년 기간동안 독거 가능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효과를 분석해보았다²⁾. 분석결과에 따르면, 독거 경향을 조성한 요인으로서, 그 효과가 시기적으로 증가한 요인은 혼인상태, 거주지이며, 반대로 그 효과가 감소한 요인은 성, 연령, 취업상태, 거주지 이동이다. 이들 공변인의 효과변화를 종합해보면, 독거 경향을 조성한 요인의 효과가 시기적으로 크게 증폭되었다고 판단하기 힘들다. 또한, 비록 무배우자 노인과 농촌노인은 과거 어느 때보다 혼자 사는 경향이 높지만--다시 말하여, 혼인상태, 거주지의 효과가 최근으로 올수록 증가하였지만, 이들 노인이 현재 혼자 사는 노인의 전부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더욱이 유배우자 비율이 증가하였고, 도시거주노인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듯이, 단독 거주 경향이 상대적으로 낮은 노인집단의 구성비가 증가하고 있다.

그렇다면, 인구구성의 변화가 단독 거주 노인 증가에는 얼마나 크게 기여하였을까? 앞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연령, 혼인상태, 건강상태, 교육수준, 취업상태, 거주지 이동, 거주지의 구성분포는 변화되어 왔다. 또한 이러한 구성분포의 변화는 단독 거주율을 증가 혹은 감소하는 방향으로 작용하였다. 노인 인구의 구성상의 변화가 단독 거주율 변화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는가를 분석하기 위하여, 요인분해 방법을 이용하였다. 여기서는

2) 지면의 제한 상, 구체적 분석결과는 본문에 제시하지 못하였다. 보다 상세한 분석자료는 필자에게 개별적으로 요청할 수 있다.

Kitagawa의 분해방법(Kitagawa, 1955; 1964)과 이를 보완한 Das Gupta의 분해방법(Das Gupta, 1978)을 이용하였다.

<표 9>는 1 요인 분해 방법과 2 요인 분해방법을 통해 분석한 각 요인들의 구성비 변화 효과와, 구성비 변화를 통제한(표준화한) 비율효과, 그리고, 두 시점사이의 총변화를 요약하고 있다. 요인들의 효과가 모두 양일 때에는 요인들의 수치값을 해석하기가 쉽다. 이 때, 각 효과의 값은 총변화에 대한 상대적 기여도로 해석할 수 있다. 모든 요인이 양이 아닐 때는, 해석은 좀더 복잡해진다. 예를 들어, 비율값이 총변화를 보다 크다면, 요인들 중 적어도 한 요인의 값은 음이다. 이 경우, 총변화 구성비는 총변화로 나타난 비율변화의 구성비를 의미한다. 음의 값을 띤 요인효과는 이 요인의 구성비 변화에 의해 상쇄된(은폐된) 비율변화의 비로 해석할 수 있다.

표에 제시되었듯이, 모든 분해방법에서 비율 효과의 값이 절대적으로 큰 수치임이 확인된다. 이는 혼인상태, 교육수준, 취업상태 등의 구성변화에 관계없이 모든 집단에서 독거비율이 크게 상승하였음을 의미한다. 또한 대부분의 요인분해 결과에서, 총변화 값보다 비율변화 값이 큰데, 이는 요인들의 구성비 변화가 비율변화를 다소나마 상쇄하는 방향으로 작용하였음을 의미한다. 요인들의 구성비 변화 효과가 가장 큰 요인은 혼인상태이다. 1요인 분석결과에 따르면, 혼인상태의 변화는 전체 비율변화의 약 10%를 상쇄한 것으로 계산된다. 다시 말하여, 지난 20년 간 유배율의 증가는 독거율 증가 효과의 약 10%를 상쇄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교육수준, 취업상태를 통제한 2요인 분해 결과에서는 혼인 상태 구성변화 효과가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혼인상태 다음으로는 거주지 변화효과의 영향력이 크게 나타난다. 1요인분석에서, 비율변화의 7.9%를 상쇄한 것으로 계산되며, 2요인 분석에서도 비슷한 수준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표 9> 1인 단독가구 노인비율 변화의 요인 분해 (decomposition)

요인수	요인효과						비율 효과	총효과
	연령	혼인 상태	교육 수준	취업 상태	거주지 이동	거주지		
1	0.004						11.998	12.01
		-1.346					13.353	12.01
			-1.061				13.064	12.01
				0.0478			11.939	12.01
					-0.033		12.025	12.01
						-1.035	13.040	12.01
2	-0.197	-1.553					13.759	12.01
	-0.006		-1.063				13.079	12.01
	0.036			0.073			11.876	12.01
	-0.008				-0.048		12.044	12.01
	0.004					-1.046	13.050	12.01
		-0.822	-0.524				13.352	12.01
		-1.048		0.311			12.723	12.01
		-1.409			-0.093		13.489	12.01
		-1.511				-1.193	14.718	12.01
			-1.070	0.052			13.006	12.01
			-1.069		-0.021		13.111	12.01
			-0.907			-0.847	13.757	12.01
			0.036	-0.044		11.996	12.01	
			-0.138	-1.290		13.415	12.01	
				-0.042	-1.019	13.048	12.01	

자료: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

결론적으로 독거 노인의 비율이 증가한 것은 노인집단의 구성비 변화나 집단내 차이의 변화와는 별개로 이루어진 변화이다. 정확히 말하여, 노인인구집단의 연령, 혼인상태, 거주지 등의 구성분포의 변화는 독거율을 증가시킨 방향이 아니라, 감소시킨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독거 경향은

거주지에 따라, 혼인상태에 따라, 연령, 건강, 취업생활의 차이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가진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노인 집단 내 차이가 전체 독거울 변화에 미친 영향은 부분적이다. 결국, 인구구조상의 변화나, 동일 코호트 내 혼인상태, 교육수준, 거주지와 같은 집단 간 차이는 서로의 효과를 상쇄하여, 독거울의 총변화에는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독거울 증가의 주된 요인은 모든 집단에서 급격하게 상승한 독거울 자체에 있다.

V. 경제생활

1. 노년기의 소득원과 소득수준

현 노인의 소득수준은 매우 취약하다. 1998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자료에 따르면, 우리사회 65세 이상 노인 중 전혀 소득이 없는 노인이 3.9%이며 50만원 미만인 노인은 74.8%에 이르고 있다(정경희 외, 1998).

노년기 빈곤문제의 심각성은 사회보호 정책의 주요 대상으로 노인집단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데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생활보호대상자 가구로서 65세 이상 노인이 존재하는 가구의 비율은 1990년 14.1%에서 1999년 27.4%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2000년 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생계보조 혹은 자활지원을 받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24.2%에 이르고 있다(보건복지부, 2000; 2001).

이렇게 노인 빈곤문제가 심각한 것은 현 노인집단의 고유한 세대특성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 집단이 청장년기였을 때 우리 사회의 경제발전정도는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농업중심의 산업구조에서, 대다수가 소득축적의 기회가 적은 농어업에 종사하였다. 노후에 이르러서는 노령연금과 같은 소득보완제도의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 현재 노령연금의 혜택을 받고 있는 노인집단의 비율은 매우 낮다. 1995년 60세

이상 노인 중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비율은 0.9%에 불과하였다. 2000년에는 9.3%로 크게 증가하였지만, 여전히 수급권자의 비율이 매우 낮은 상태이다(보건복지부, 2001).

2. 노동력의 고령화와 연령별 직종분리³⁾

지난 20년 기간동안 고연령층의 경제활동 참여도는 증가하였다. 전체 경제활동인구 중 15-39세의 청중년층의 구성비는 남녀 모두에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그런데, 55세 이상 고연령층의 경제활동참여 구성비는 증가하고 있다. 1980년 전체 남자 경제활동인구 중 5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10.4%이었지만, 2000년에는 15.4%로 증가하였다. 여성 경제활동인구 중 5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같은 기간에 10.3%에서 17.1%로 증가하였다(통계청, 2002).

경제활동 참여율이나 취업률을 살펴보면, 우리 사회 고연령층의 취업기회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높은 듯이 보인다. 그러나, 고연령층의 취업생활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높은 취업률이 좋은 노동조건을 반영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종사업종이 농업부문이나 단순노무직, 임시직에 제한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고연령층이 종사하는 산업과 직업은 다른 연령층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 직업구조의 커다란 변화과정에서, 청중년층과 고연령층의 업종분포는 유사한 방향으로 변화되어왔다. 전체적으로 농어림비율이 감소되어 왔으며, 제조업의 비율은 1990년대 중후반부터 감소하고 있다. 도소매, 음식/숙박, 금융부동산, 사회개인서비스 등 서비스 부문의 비율은 증가하였다.

청중년층, 고연령층의 취업구조가 유사한 방향으로 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 복지법 관련하여 고령자는 일반적으로 65세 이상 인구로 규정하고 있지만, 고령자고용촉진법과 같이 노동 관련 법규정에서는 고령자를 55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기업에서 55-59세를 정년으로 정하고 있다. 노동법규나 노동시장내 정년관행을 고려하여, 여기서는 55세 이상 인구의 경제활동을 분석하고자 한다.

하고, 각 연령집단의 업종분포의 대조는 지속되고 있다. 1980년에서 2000년 전 기간을 통해, 농어림에 종사하는 취업자의 비율은 고연령층에서 그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청중년층 취업자의 구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제조업, 도소매 서비스업에서도 연령분리가 지속되고 있다.

직업분포에 있어서도, 연령분리현상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직종에 따라 그 분리정도에 차이가 존재한다. 전문/기술직에서의 연령분리정도는 심화되고 있다. 사무직 종사자의 비율도 두 연령집단에서 차이가 크며, 그 차이는 최근으로 올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농어림 종사자의 비율은 고연령층에서 월등히 크며, 그 차이가 지속되고 있다. 흥미롭게도 생산단순노무직에서는 연령분리현상은 완화되어 왔다. 1980년 당시만 해도 생산단순 노무직 종사자의 비율은 15-54세에서 훨씬 높게 나타났지만, 이후 고연령층 집단에서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비율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연령집단별 취업률차이가 줄어들어 온 것이다.

연령집단별 직업분포의 차이를 좀더 분명하게 고찰하기 위해서, 직종분리지수를 계산해 보았다⁴⁾(<표 10>). 먼저 전체 직업에서, 취업자의 연령구성비의 평균편차값(R)을 살펴보면, 그 값이 최근으로 올수록 커지고 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연령집단의 직업분리가 강화되었음을 가리킨다. 전체 차이지수를 남녀별로 살펴보면, 차이지수는, 비록 그 정도가 다르지만, 남녀 모두에서 1985년 이후 다소 완화되다가, 1990년대 이후에 다시 심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그리고 차이지수값이 남자보다 여자에서 큰데, 이는 연령집단별 직업분리경향이 남자보다 여자에서 더 심함을 반영한다.

4) 차이지수는 두 가지로 측정하였는데, 먼저 R은 두 연령집단의 취업자비의 평균편차로

서, 청중년층 취업자 대비 고연령층 취업자 비의 평균값($1/I \sum_{i=1}^I \ln(F_i/M_i)$)과 각 직업에서 취업자의 연령비의 차이(편차)를 평균화한 값이다. 취업자의 연령구성이 모든 직종에서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면, R값은 0에 가까울 것이다. 반대로, R값이 클수록, 연령집단의 직종분리가 심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 하나의 차이지수 R_i는 개별 직업 i에서 취업자의 연령비가 평균비와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를 나타내는 값이다. 음의 값은 평균분포에 비하여 고연령층의 비율이 과소반영된 경우를 가리키며, 양의 값은 평균분포에 비하여 고연령층의 비율이 과다반영된 경우를 가리킨다. 음, 양의 절대값이 클수록, 그 직업의 연령구성이 한 방향으로 편향된 정도가 심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10> 연령별 직종차이지수

연도	차이지수		직업별 차이지수(R _i)					
	R	exp(R)	전문/ 기술	행정/ 관리	사무직	판매 /서비스	농어림	생산/ 단순노 무직
1980	0.70	2.01	-0.08	0.54	-1.21	0.19	1.36	-0.80
1985	0.74	2.10	-0.07	0.58	-1.33	0.13	1.58	-0.83
전체 1990	0.70	2.01	-0.27	0.35	-1.08	0.01	1.74	-0.74
1995	0.80	2.22	-0.65	0.28	-1.43	-0.17	2.11	-0.14
2000	0.84	2.31	-0.88	0.16	-1.47	-0.17	2.35	0.00
1980	0.61	1.84	0.00	0.41	-1.00	0.13	1.30	-0.84
1985	0.68	1.98	0.06	0.45	-1.13	0.08	1.46	-0.91
남자 1990	0.62	1.85	-0.07	0.24	-0.85	-0.03	1.61	-0.89
1995	0.70	2.02	-0.51	0.16	-1.01	-0.27	1.95	-0.32
2000	0.74	2.09	-0.66	0.07	-1.17	-0.20	2.15	-0.19
1980	1.12	3.08	-0.22	0.56	-2.61	0.81	2.00	-0.55
1985	1.19	3.29	-0.41	0.92	-2.69	0.60	2.05	-0.47
여자 1990	1.02	2.78	-0.70	0.31	-2.28	0.46	2.31	-0.09
1995	1.31	3.71	-1.21	0.49	-2.72	0.29	2.64	0.51
2000	1.24	3.46	-1.58	0.21	-2.14	0.13	2.81	0.57

자료 : 인구주택센서스 2% 표본

$$R = 1/I \sum_{i=1}^I | \ln(F_i/M_i) - [1/I \sum_{i=1}^I \ln(F_i/M_i)] |$$

I : 직업범주수, F_i : i직업에 종사하는 55세 이상 인구, M_i : i직업에 종사하는 15-54세 인구

$$R_i = \ln(F_i/M_i) - [1/I \sum_{i=1}^I \ln(F_i/M_i)]$$

연령집단의 분리정도는 직종별로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고연령층이 과소반영된 전문/기술직에서의 차이지수 절대값이 최근으로 올수록 커지고 있다. 이는 전문기술직에서 젊은 연령층 집중현상이 강화되고

있음을 가리킨다. 행정/관리직에는 고연령층이 상대적으로 과다반영되었지만, 연령분리정도는 최근으로 올수록 완화되고 있다. 사무직에서는 고연령층이 계속해서 과소반영되어 있다. 판매서비스직에서는 고연령층이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하였지만, 최근으로 올수록, 청중년층으로 대체되고 있다. 농어림에서 고연령층의 과다반영경향은 최근으로 올수록 심화되고 있다. 고연령층이 과소반영된 생산/단순노무직에서는 점차적으로 고연령층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정리하자면, 1980-2000년의 다소 최근의 기간에서도, 경제활동인구 중 고연령층 노동력의 특징과 관련하여, 몇 가지 중요한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선, 전체 경제활동 인구 중 55세 이상 고연령층의 상대적 구성비가 증가하고 있다. 고연령층의 경제활동참여 기여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 고연령층인구 크기가 다른 집단보다 빨리 성장한 결과에 비롯한다.

또한 청중년층, 고연령층 두 연령집단의 취업자가 종사하는 산업, 직업 분포의 차이가 여전히 심한 특징을 지적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고연령층의 비율이 큰 농어업에는 고연령층이 계속해서 과다반영되어 있는 반면, 전문기술직에서는 최근으로 올수록 젊은층의 집중현상이 강화되고 있다. 전체 취업자 중 생산/단순노무직이나,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율은 감소하고 있는데, 청중년층에서는 그 감소가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고연령층에서는 그 속도가 완만한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VI. 고령화의 지역화 (the Localization of aging)

과거에 비하여 훨씬 많은 비율의 노인이 도시에 거주하고 있지만, 노인의 도시 거주율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이다. <표 11>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시도구역의 연령분리정도는 최근으로 올수록 커지고 있다.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등 광역시는 전국의 평

균분포에 비하여 노인비율이 과소반영된 지역들이다. 특히 울산지역은 전국적으로 노인비율이 가장 적은 지역에 속한다. 1980년에서 2000년 기간동안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지역에서의 연령분리정도는 완화되고 있다. 한편, 경기도를 제외한 모든 도지역은 전국평균에 비해 노인비율이 과다반영되어 있다. 특히, 전라남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지역은 상당히 고령화된 지역이다.

동읍면 단위로 노인구성비를 분석해보아도, 연령분리정도가 최근으로 올수록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 읍지역에는 노인구성이 점차적으로 과소반영되고 있는 반면, 면지역에서는 노인구성비가 더욱 과다반영되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비율의 변화가 가장 큰 지역은 전라남도, 경상북도, 충청남도, 강원도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광역시와 일반 도지역에서, 그리고, 동읍면 지역별로 노인인구의 구성비가 차이가 나는 것은 과거 연령선별적으로 진행된 인구이동의 영향이 크다. 60년대에서 80년대에 이르기까지의 엄청난 이촌향도 현상과 현재에도 지속되는 농촌에서 도시로의 인구이동현상은 젊은 연령층에 의해 주도되었다. 농촌에는 이동성향이 약한 노년층이 주로 남게 되어, 정주민구의 고령화가 크게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표 11> 시도구역의 연령분리 정도

분리지수	연도				
	1980	1985	1990	1995	2000
전체 R	0.22	0.30	0.33	0.35	0.38
exp(R)	1.24	1.34	1.39	1.41	1.46
지역별 Ri					
서울	-0.50	-0.44	-0.46	-0.46	-0.38
부산	-0.63	-0.60	-0.50	-0.38	-0.26
대구		-0.38	-0.36	-0.39	-0.28
인천		-0.43	-0.43	-0.40	-0.34
광주			-0.32	-0.28	-0.33
대전			-0.22	-0.34	-0.40
울산					-0.70
경기도	-0.19	-0.07	-0.17	-0.33	-0.33
강원도	0.07	0.16	0.18	0.22	0.30
충청북도	0.25	0.34	0.33	0.23	0.26
충청남도	0.16	0.21	0.41	0.51	0.52
전라북도	0.16	0.28	0.35	0.38	0.46
전라남도	0.19	0.21	0.40	0.60	0.68
경상북도	0.09	0.45	0.50	0.49	0.50
경상남도	0.13	0.06	0.07	0.01	0.18
제주도	0.15	0.22	0.21	0.14	0.13

자료: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

$$R = 1/I \sum_{i=1}^I | \ln(O_i/Y_i) - [1/I \sum_{i=1}^I \ln(O_i/Y_i)] |$$

I : 시도수, O_i : I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Y_i : I시에 거주하는 64세 이하 인구

$$R_i = \ln(O_i/Y_i) - [1/I \sum_{i=1}^I \ln(O_i/Y_i)]$$

VII. 맺음말

이 연구에서는 1980년에서 2000년 기간동안 노인인구의 변화를 살펴보

고 있다.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와 노인이 속한 가구를 선택하여, 노인 개인의 특성 및 가구특성을 조명하고 있다. 주요 연구 부분으로서 노인 인구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노인생활의 주요 변화를 반영하는 가족, 경제 생활, 지리적 이동의 주요 특징과 변화를 분석하였다.

노인인구의 기본 인구학적 특성의 주요 변화를 간략히 정리하면, 고령자 집단의 고령화가 점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유배우자 비율이 크게 개선되었으며, 교육수준이 크게 개선되고 있다.

무엇보다 가족관계에서 큰 변화가 이루어졌다. 과거에 비해 자녀와 함께 사는 노인의 비율이 크게 감소한 반면, 노부부 혹은 1인 단독으로 사는 노인의 비율이 크게 증가하였다. 주의해야 할 것은, 그 동안의 인구구성 변화는 실제로 일어났던 가족변화의 크기를 다소나마 완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하였다는 것이다. 독거 노인 비율 증가의 요인을 분해한 결과에 따르면, 유배우자 비율의 증가 및 도시거주 비율의 증가는 독거 노인 비율의 증가를 어느 정도 상쇄한 것으로 나타난다. 단일 요인의 효과를 살펴볼 때, 혼인상태에 따른 독거율 차이가 과거에 비해 훨씬 크게 나타나는 것도 흥미로운 발견이다. 과거에는 많은 유배우 노인이 자녀와 동거하였지만, 최근으로 올수록, 자녀와 떨어져 살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자녀와의 동거는 과거에는 규범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최근으로 올수록, 상황적으로 구성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요컨대, 노년기 자녀와의 동거는, 노년기 겪게 되는 배우자 상실, 건강장애 상황에 대응하는 생활적응 양식으로 취해지고 있다. 또한, 자녀와의 동거는 흔히 노부모의 도시로의 거주지 이동을 통해 취해지고 있다. 자녀와의 동거가 상황적으로 구성되는 경향이 증가한 것과 동시에, 자녀와 떨어져 사는 경향도 커지고 있다.

현 노인집단의 주요 소득원은 일과 자녀로부터의 경제적 지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공공 국민연금이나, 민간 보험으로부터 소득을 얻고 있는 노인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65세 이상 노인 5명중 한 명이 기초생활 보호대상자라는 사실 또한 현 노인집단의 절대적 빈곤상황을 잘 보여준다.

사회보험의 미성숙, 자녀로부터의 지원의 한계 상황에서, 많은 노인이 일자리를 통한 소득창출을 구하고 있다. 실제, 우리 사회 노인의 경제활동참여도는 두 가지 의미에서 중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첫째, 전체 경활인구 중 고연령층 노동력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15-39세의 청장년층의 노동력 비중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40세 이상 연령집단의 노동력 기여도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55세 이상 고연령층의 노동력 기여도가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점에 유의할 수 있다. 두 번째, 고연령층의 취업률이 다른 사회에 비해 훨씬 높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IMF 위기 직후 55세 이상에서 60대 초반 고연령층의 취업률이 다소 큰 폭으로 감소하였지만, 60대 후반의 취업률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이러한 두 가지 다소 낙관적인 모습 이면에는 노동시장의 연령차별구조가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다. 분석결과 따르면, 직업, 업종별 연령분리정도는 최근으로 올수록 심화되고 있다. 또한 고연령층 중 실제 55세 후반에서 60대 초반의 전기 고령층의 취업기회는 조기정년, 명예퇴직 제도에 의해 더욱 제약받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많은 고령자가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것은, 연령차별적 노동시장의 구조 속에서도, 빈곤의 위협 때문에 매우 주변적이고, 임시적인 노무에 종사할 수밖에 없는 노인이 많음을 반영한다.

연령분리 현상은 지역수준에서 관찰되고 있다. 고령화의 속도는 시도에 따라 차이가 크다. 광역시는 노인비율이 과소반영된 반면, 경기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도지역은 노인의 구성비가 전국 평균보다 높다. 동읍면으로 살펴보면, 동지역은 노인인구가 과소반영된 반면, 면지역에는 노인인구가 과다반영되어 있다. 더욱이, 이와 같은 지역별 연령분리현상은 최근으로 올수록 심해지고 있다. 농촌지역에 남아 있는 인구에서 고령화가 매우 빠르게 전개되고 있는 것은, 이 지역에서 젊은 인구가 계속해서 빠져나간 결과이다. 젊은 인구의 불균형적인 전출을 결과한 경제, 생활기회의 지역격

차는 지역불균형과, 세대간 고립을 재강화하고 있음에 주목하자.

결론적으로, 지난 몇 십년간의 노인집단의 주요 변화 모습은 결코 낙관적이지 못하다. 그런데, 노인, 연령이라는 범주에 기초하여, 구조적으로 행사되는 다양한 불평등 현상은 근대화론이 주장하듯이 사회발전의 대가로 치를 수 밖에 없는 약간의 상실, 혹은 주변적인 문제가 아니다. 노년기의 빈곤, 지역과 노동시장에서의 연령분리, 점차적으로 가족으로부터 고립된 노인의 증가의 원인은 복합적이며, 중층적이다. 이는 생애, 가족, 노동시장, 사회복지, 지역격차와 같은 우리의 생활을 중요하게 규제하는 제도, 관계에서 형성되고 있다. 결국, 연령통합적인 생애과정과, 세대 연대의 기초를 살찌우는 사회구조의 개혁이 노인문제 해결의 중요한 관건이 된다.

VIII. 참고문헌

- 보건복지부, 2000, 2001. 『보건복지통계연보』. 보건복지부
- 정경희 외, 1998. 『전국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보건사회연구원
- 통계청, 2001. 『장래인구추계』. 통계청.
- _____. 2002. KOSIS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청
- _____. 2002. KOSIS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청
- _____. 1980, 1985, 1990, 1995, 2000.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 통계청.
- Kitagawa, Evelyn. 1964. "Standardized Comparisons in Population Research." *Demography* 1: 298-311.
- Kitagawa, Evelyn. 1955. "Components of a Difference Between Two Rates." *Journal of the American Statistical Association* 50: 1168-94.
- Das Gupta, Prithwis. 1978. "A General Method of Decomposing a Difference between Two Rates into Several Components." *Demography* 15:99-109.

제12장

지역 간 인구분포와 국내 인구이동

최진호

(아주대학교)

I. 연구 목적

- 이 연구의 목적은 인구센서스 자료를 이용하여 1960-2000년 40년간 한국의 지역간 인구분포와 인구이동의 변화를 분석하는 것임.

- 인구이동은 센서스의 5년전 거주지 항목을 이용하여 인구이동의 양, 이동방향, 이동의 선별성 등을 분석하되 수도권의 인구집중에 초점을 맞춤

II. 지역간 인구분포

1. 시·도 인구분포 추이

- 우리나라의 시·도 인구분포는 1990년을 기점으로 변화함

- 즉 1990년까지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과 광역시에서 인구의 절대수와 전국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일관성있게 증가해 이들 지역으로의 불균형적인 인구집중이 가속화됨.

-그러나 1990-95년에는 처음으로 서울의 인구 절대수가 감소하고 부산은 인구 절대수는 증가하나 그 비중은 감소함.

-1995-2000년에는 부산의 인구 절대수가 감소하고 대구의 비중이 감소하기 시작함.

-거꾸로 도지역은 경남을 제외하고는 1970년부터 1990년까지 일관성있게 인구의 절대수가 감소하였으나 1990-95년에는 충북의 절대수가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1995-2000년에는 전남·북을 제외한 모든 도지역에서 인구의 절대수가 증가하였음.

<표-1> 시·도별 인구분포 변화 (단위: 천명, %)

시·도	1960	1970	1980	1990	1995	2000
전국	24,989(100.0)	31,434(100.0)	37,436(100.0)	43,411(100.0)	44,609(100.0)	46,136(100.0)
서울	2,445(9.8)	5,525(17.6)	8,364(22.3)	10,613(24.4)	10,231(22.9)	9,895(21.4)
부산	1,164(4.7)	1,876(6.0)	3,160(8.4)	3,798(8.7)	3,814(8.5)	3,663(7.9)
대구	677(2.7)	1,081(3.4)	1,605(4.3)	2,229(5.1)	2,449(5.5)	2,481(5.4)
인천	401(1.6)	643(2.0)	1,084(2.9)	1,818(4.2)	2,308(5.2)	2,475(5.4)
광주	314(1.3)	484(1.6)	728(1.9)	1,139(2.6)	1,258(2.8)	1,353(2.9)
대전	229(0.9)	407(1.3)	652(1.7)	1,050(2.4)	1,272(2.9)	1,368(3.0)
경기	2,348(9.4)	2,710(8.7)	3,850(10.3)	6,156(14.2)	7,650(17.1)	8,984(19.5)
강원	1,637(6.5)	1,865(5.9)	1,791(4.8)	1,580(3.6)	1,466(3.3)	1,487(3.2)
충북	1,370(5.5)	1,480(4.7)	1,424(3.8)	1,390(3.2)	1,397(3.1)	1,467(3.2)
충남	2,229(9.2)	2,451(7.8)	2,304(6.2)	2,014(4.6)	1,767(4.0)	1,845(4.0)
전북	2,395(9.6)	2,432(7.7)	2,228(6.1)	2,070(4.8)	1,902(4.3)	1,891(4.1)
전남	3,239(13.0)	3,511(11.2)	3,052(8.2)	2,507(6.8)	2,067(4.6)	1,996(4.3)
경북	3,171(12.7)	3,475(11.1)	3,350(9.0)	2,861(6.6)	2,676(6.0)	2,725(5.9)
경남	3,018(12.1)	3,119(9.9)	3,322(8.9)	3,672(8.5)	3,846(8.6)	3,998(8.7)
제주	282(1.1)	365(1.2)	463(1.2)	515(1.2)	505(1.1)	513(1.1)

자료: 경제기획원, 1960, 1970, 1980 각 연도 인구센서스 보고서.

통계청, 1990, 1995, 2000년 인구주택 총조사 보고서

- 이와같은 인구분포변화는 도시화의 진전과 대도시 중심의 광역대도시권의 형성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도 이제 도시화의 단계에서 점차 상대적 분산 단계에 진입한 것을 시사하는 것임.

-따라서 향후에는 인구분포를 현재의 행정구역 중심으로 파악하는 것에서 벗어나 광역대도시권 단위로 분석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공식적인 대도시권의 설정이 필요함.

2. 수도권 인구집중

- 1990이후 서울의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인구의 급증에 힘입어 수도권 전체 인구는 계속 증가해 전국인구에서 차지하는 수도권 인구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어 수도권 인구집중 억제책의 효과가 미약함.

<표-2> 수도권 인구집중 (단위: 천명, %)

	1960	1970	1980	1990	1995	2000
서울	2,445	5,525	8,364	10,613	10,231	9,885
경기도	2,749	3,354	4,934	7,974	9,958	11,459 ²
수도권 ¹⁾	5,194	8,879	13,298	18,587	20,189	21,354
전국	24,989	31,434	37,436	43,411	44,609	46,136
서울/전국	9.8	17.6	22.3	24.4	22.9	21.5
경기도/전국	11.0	10.7	13.2	18.4	22.3	24.8
수도권/전국	20.8	28.2	35.5	42.8	45.3	46.3

주: 1) 수도권 = 서울+경기도

2) 인천포함

자료: 경제기획원, 1960, 1970, 1980 각 연도 인구센서스 보고서
통계청, 1990, 1995, 2000년 인구주택 총조사 보고서

<표-3> 수도권 인구증가분 (단위: 천명, %)

	1960-70	1970-80	1980-90	1990-2000	1990-95	1995-2000
서울	3,080	2,839	2,249	-718	-382	-336
경기도	605	1,580	3,040	3,485	1,984	1,501
수도권	3,685	4,419	5,289	2,767	1,602	1,165
전국	6,445	6,002	5,975	2,725	1,198	1,527
서울/전국	47.8	47.3	37.6	-26.3	-31.9	-22.0
경기도/전국	9.4	26.3	50.9	127.9	165.6	98.3
수도권/전국	57.2	73.6	88.5	101.5	133.7	76.3

- 그러나 수도권 인구집중 추세는 1995년을 고비로 상당히 완화되는 경향을 보임. 전국인구 증가분에 대한 수도권 인구증가분의 비율을 보면 1995년까지는 매년 그 비율이 증대되며 1990-95년에는 133.7%에 이르렀으나 1995-2000년에는 76.3%로 대폭 감소하였음.

Ⅲ. 국내 인구 이동

1. 인구이동 추이

<표-4> 한국의 인구이동 추이 (단위: 천명, %)

	총이동자수	시·도내이동	시·도간이동	기타이동	이동을		
					총이동	시·도내	시·도간
1965-70년	4,394 (100.0)	1,918 (43.7)	2,457 (55.9)	20 (0.5)	162	7.1	9.1
1975-80년	7,658 (100.0)	3,879 (50.7)	3,739 (48.8)	40 (0.5)	228	11.5	11.1
1985-90년	9,871 (100.0)	4,380 (44.4)	5,435 (55.1)	55 (0.6)	246	10.9	13.5
1995-00년	9,711 (100.0)	4,191 (43.2)	5,386 (55.5)	134 (1.4)	23.1	10.0	12.8

자료 : 경제기획원, 1970, 1980. 각 연도 인구 센서스 보고서
통계청, 1990, 2000년 인구주택 총조사보고서

- 전국의 시·군·구를 이동단위로 하고 센서스와 그전 5년간의 이동을 보면 이동을 1990년까지는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해 85-90년에는 5세이상 전체 국민의 24.6%가 이동을 하였으나 1995-2000년에는 다소 감소해 23.1%를 기록함.

-이동을 시·도내 이동과 시·도간 이동으로 구분하였을 때 1975-80년 기간을 제외하고는 시·도간 이동이 시·도내 이동보다 많음.

2. 시·도간 인구이동

- 시·도간 이동으로 인한 각 시·도별 전·출입과 순 이동의 변화추세를 보면 규모가 큰 도시부터 과거의 전입초과에서 전출초과로 바뀌고, 반대로 도지역은 과거의 전출초과에서 점차 전입초과로 바뀌고 있어 인구이동으로 인한 시·도간 인구분포의 불균형이 점차 시정되어 가고 있음.

- 즉 서울은 순이동량이 65-70년을 정점으로 매년 감소하다 85-90년부터는 전출초과를 보이고 있으며, 부산은 서울보다 5년 뒤진 75-80년을 정점으로 순이동이 감소하다 1995-2000년에 전출초과로 돌아섰음.

<표-5> 시·도간인구이동 (단위:천명)

	전 입				전 출				순이동			
	65-70	75-80	85-90	95-00	65-70	75-80	85-90	95-00	65-70	75-80	85-90	95-00
서울	1,191	1,256	1,333	971	248	753	1,377	1,656	943	503	-44	-685
부산	309	539	373	216	127	221	348	400	182	318	25	-184
대구	-	-	292	201	-	-	213	248	-	-	79	-47
인천	-	-	413	339	-	-	174	279	-	-	239	60
광주	-	-	186	164	-	-	122	144	-	-	64	20
대전	-	-	199	210	-	-	96	152	-	-	103	58
울산	-	-	-	110	-	-	-	111				-1
경기	346	905	1,457	1,680	320	437	727	908	26	468	730	772
강원	103	105	123	164	184	275	299	178	-81	-170	-176	-14
충북	56	73	122	169	164	208	190	143	-108	-135	-68	26
충남	99	166	137	262	308	332	326	199	-209	-166	-189	63
전북	55	65	81	133	205	274	267	169	-150	-209	-186	-36
전남	58	89	140	171	277	429	437	226	-219	-340	-297	-55
경북	146	264	245	275	303	400	453	281	-157	-136	-208	-6
경남	98	296	360	283	307	385	372	262	-209	-89	-12	21
제주	14	22	29	36	12	25	33	31	2	-3	-4	5

자료 : 경제기획원, 1970, 1980. 각 연도 인구 센서스 보고서
 통계청, 1990, 2000년 인구주택 총조사 보고서

- 대구도 1995-2000년에 전출초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기타 광역시는 아직은 전입초과를 보이고 있으나, 순이동양은 85-90년보다 많이 감소하였음.

- 한편 도지역에 있어서는 최근 1995-2000년에 충북, 충남과 경남은 전입초과로 바뀌었고 다른 도에 있어서도 전출초과의 양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음.

- 이상의 변화추세에 예외적으로 경기도만 지속적으로 순이동의 양이 증대되고 있음.

3. 인구이동 유형

- 시·군을 이동단위로 하여 센서스의 출생지, 5년전 거주지, 1년전 거주지 그리고 현거주지를 비교하여 우리나라 국민들의 이동유형을 구분해 보면 전체 국민의 40%는 비이동자, 53%는 정착이동자로 분류될 수 있으며, 적어도 2번이상 계속 이동한 사람도 5.7%에 이르고 있음.

- 1990년과 비교해 보면 앞의 이동율에서 보았듯이 전체 국민들의 이동성향은 줄어들고 있음. 즉 비이동자비율은 증가한 반면, 1차이동자나 반복이동자의 비율은 줄어들고 있음.

<표-6> 우리나라 5세 이상 인구의 이동상 지위 (단위: %)

	1990	2000
비이동자	37.2	40.1
1차이동자	1.6	1.3
정착이동자	53.6	52.9
2차이동자	5.6	3.4
귀환이동자	2.1	2.3
계	100.0	100.0
(사례수)	(773,669)	(821,386)

자료: 통계청, 1990, 2000,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자료

- 이동유형별로 특성을 비교해 보면 연령은 1차이동자가 주로 20-24, 25-29세로 가장 젊고, 2차 이동자, 정착이동자 순으로 연령이 높아지며

- 학력수준은 2차이동자에서 가장 높고 1차, 귀환이동자 순으로 높아 학력과 이동성향간에 정(+)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줌.

- 직업에 있어서도 전문·기술직 종사자 비율이 2차 이동자에 있어 제일 높아 고급 인력의 이동이 매우 활발한 것을 알 수 있음.

<표-7> 이동유형별 이동자의 특성 (단위: %)

구분		비이동자	1차이동자	정착이동자	2차이동자	귀환이동자	총계
성	남	51.6	50.8	46.4	50.4	51.7	48.8
	여	48.4	49.2	53.6	49.6	48.3	51.2
연 령	14세 이하	25.4	20.5	8.5	9.7	23.7	15.8
	15-19세	12.7	14.1	5.1	4.1	6.1	8.2
	20-24세	8.9	17.3	5.2	10.3	8.2	7.1
	25-29세	9.0	20.3	8.7	18.5	13.5	9.4
	30-34세	6.6	10.3	11.1	19.0	15.8	9.7
	35-39세	6.0	5.6	12.8	14.0	13.1	10.0
	40-44세	6.3	3.5	12.5	8.3	7.8	9.6
	45-49세	4.8	2.0	9.2	4.5	3.7	7.1
	50-54세	4.1	1.3	7.1	3.0	2.2	5.6
	55-59세	3.8	1.2	5.9	2.4	1.9	4.8
	60세 이상	12.4	3.9	13.9	6.4	4.0	12.6
교육경도	불취학	11.2	8.1	6.5	4.6	6.4	8.4
	초등학교	25.5	14.8	17.1	11.0	19.3	20.3
	중학교	13.6	6.4	14.9	8.1	9.8	13.9
	고등학교	29.9	31.0	38.1	38.3	33.6	34.6
	전문대학교	8.4	16.2	8.5	12.7	10.7	8.7
	대학교	11.2	23.1	14.5	24.5	19.4	13.7
	대학원이상	0.2	0.3	0.5	0.8	0.8	0.4
혼인상태	미혼	40.5	51.1	18.7	25.9	28.8	27.3
	유배우	50.2	43.6	71.1	66.9	64.3	63.0
	사별	7.6	3.9	8.1	4.5	3.5	7.7
	이혼	1.7	1.4	2.2	2.7	3.3	2.0
경제활동 상태	유업자	63.0	61.0	56.9	60.7	66.1	59.7
	무업구직자	5.6	5.8	6.9	6.6	6.4	6.4
	가사 및 학생	31.5	33.3	36.2	32.6	27.5	33.9
직업	전문·기술	8.0	15.5	14.4	20.9	14.0	12.0
	행정·관리	42.3	36.2	20.0	22.8	39.5	30.3
	사무	8.2	13.5	11.9	15.2	10.8	10.5
	판매	6.6	6.3	11.8	8.9	8.4	9.3
	서비스	4.6	7.7	9.0	9.1	7.5	7.1
	농·임·어업	16.8	1.5	5.2	1.3	5.3	9.9
	생산·운수·장비·노무	13.5	19.2	27.7	21.8	14.5	21.0

자료: 통계청, 2000년 인구 주택 총조사 2% 표본자료.

4. 인구이동 이유

<표-8> 인구이동 이유 (단위:%)

이동사유	1966		이동이유	1997	
	전체이동자	가구주		전체이동자	가구주
구직/생활고	13.1	30.0	직업	19.3	36.4
직장/사업	17.9	41.6	교육	7.1	10.4
취학/교육	9.2	4.9	주택	13.2	22.9
주택	9.2	15.8	가족	56.2	23.5
가족	47.9	5.5	주거/근린환경	2.7	4.5
건강	0.4	0.4	자연환경/기타	1.5	2.3
기타	2.3	1.7	계	100.0	100.0
계	100.0	100.0			

자료: 최인현, 박재수, 1966 특별인구조사 결과 및 개요, 1969
통계청, 1997년 인구이동 특별조사 보고서, 1998

- 개인적인 수준에서의 이동의 사유는 지난 30년 동안에 많은 변화를 보이는데 구직, 직장, 사업 등 취업관련 이유는 대폭 줄어들고 그 대신 주택관련이유나 가족관련이유가 과거에 비해 많이 늘어나고 있음.

- 이는 과거에는 이동이 주로 농촌에서 대도시로 경제적인 이유로 유인되었으나 요즘에는 대도시 중심의 광역 대도시권이 형성되면서 직장을 옮기지 않고 주거만 바꾸는 이동이 활발한 것을 보여줌.

- 특히 이러한 경향은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 근교의 대규모 신도시나 주택단지 개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

IV. 수도권 의 인구이동

1. 수도권 인구이동 추이

- 수도권 지역의 인구이동도 1995년 이후 주요한 변화를 보임. 즉 수도권으로의 전입은 1985-90년을 정점으로 최근 감소추세로 돌아섰으며 반면 수도권외로의 전출은 매년 증가해 순이동은 1990년까지는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최근 대폭 감소하였음.

<표-9> 수도권 의 인구이동

(단위: 천명, %)

	1965-1970년	1975-1980년	1985-1990년	1995-2000
수도권내 이동	373	747	1,666	1,962
경기→서울	251	311	440	432
→인천	-	-	102	122
인천→서울	-	-	64	65
→경기	-	-	65	119
서울→경기	122	436	825	1,098
→인천	-	-	160	126
수도권의 전입	1,164 (100.0)	1,414 (100.0)	1,547 (100.0)	1,130(100.0)
서울←	940 (80.8)	945 (66.8)	829 (53.6)	535 (47.3)
인천←			151 (9.8)	96 (8.5)
경기←	224 (19.2)	469 (33.2)	567 (36.6)	499 (44.2)
수도권의 전출	195 (100.0)	443 (100.0)	622 (100.0)	881(100.0)
서울→	126 (64.6)	317 (71.6)	392 (63.0)	432 (49.0)
인천→			45 (7.2)	95 (10.8)
경기→	69 (35.4)	126 (28.4)	185 (29.8)	354 (40.2)
수도권 내외간 순이동				
수도권	969 (100.0)	971 (100.0)	925 (100.0)	249 (100.0)
서울	814 (84.0)	628 (64.7)	437 (47.2)	103 (41.4)
인천	-	-	106 (11.5)	1 (0.04)
경기	155 (16.0)	343 (35.3)	382 (41.3)	145 (58.2)

자료 : 경제기획원, 1970, 1980. 각 연도 인구 센서스 보고서
통계청, 1990, 2000년 인구주택 총조사 보고서

- 또 수도권 전입자의 목적지도 60년대에는 대부분이 서울이었으나 점차 서울의 비율이 줄어들어 이제는 오히려 경기도를 목적지로 한 전입자가 서울보다 많음.

- 따라서 순이동의 양도 1995-2000년을 기점으로 서울보다 경기도가 훨씬 많아지게 되었음.

- 현재 우리나라의 시·도간 총이동의 74%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는데 36%는 수도권내에서의 이동이며 21%는 수도권으로의 전입, 16%는 수도권외로의 전출로 나타남.

2. 수도권 전입자의 전거주지

<표-10> 수도권 전입자의 前거주지별 비율 (단위: %)

	1965-70년	1975-80년	1985-90년	95-2000년
부산	58	55	76	98
대구	-	-	43	63
광주	-	-	41	56
대전	-	-	32	62
울산	-	-	-	24
강원	102	123	127	104
충북	93	86	75	65
충남	220	182	135	95
전북	132	136	127	95
전남	180	203	148	89
경북	134	127	87	78
경남	68	60	70	64
제주	0.5	0.8	1.1	1.6
외국 및 미상	0.9	2.0	2.7	9.0
계	1000	1000	1000	1000
전입자(천명)	1,163	1,415	1,549	1,134

자료 : 경제기획원, 1970, 1980. 각 연도 인구 센서스 보고서
통계청, 1990, 2000년 인구주택 총조사 보고서

- 수도권 전입자의 시·도별 전거주지비율을 보면 1990년까지는 전남·북, 충남, 강원 등의 비율이 높아 이들 지역에서 많은 인구가 수도권으로 유입됨.

- 그러나 최근 5년간에는 강원과 부산의 비중이 두드러지며 전체적으로 광역 시에서의 전입비중은 증가하는 추세인 반면 도지역에서의 전입은 줄어들고 있음.

- 또 각지역에서의 수도권 유출율을 비교해 보면 강원이 가장 높고 충남, 전북 등의 순으로서 상대적으로 영남지역의 수도권전출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음.

- 각지역의 수도권 전출율은 1990년까지는 증가하다가 그이후 감소하고 있어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 압력이 최근 완화되고 있음.

3. 수도권 이동자의 선별성

- 수도권 이동자의 특성을 알기 위해서 전입자, 전출자 그리고 거주자를 상호 비교해 보면 우선 성별로 전입자 중에는 여자가 많고 전출자 중에는 남자가 많으며, 연령별로는 전입자와 전출자 모두에서 거주자에 비해 젊은 연령층의 비율이 높는데 전입자가 전출자보다 더 젊은 것으로 나타남.

- 학력 수준은 전입자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전출자, 거주자 순이나 전출입자와 거주자간의 학력차이가 큼. 이는 고학력자 중 이동자가 많기도 하지만 고등 교육의 이수가 이동의 목적이 되기 때문.

- 한편 직업에서는 전문·기술직 종사자 비율이 전입자에서 현격히 높아 아직도 수도권으로는 고급 인력이 상대적으로 많이 유입되고 있음.

<표-11> 수도권 이동자의 특성 (단위: %)

	구분	진입자	전출자	거주자
성	남	47.5	50.9	49.4
	여	52.5	49.1	50.6
연 령	14세 이하	13.7	20.0	22.4
	15-19세	6.4	4.5	7.6
	20-24세	15.7	7.2	6.4
	25-29세	22.1	14.4	9.1
	30-34세	14.3	17.6	9.6
	35-39세	9.8	14.4	9.9
	40-44세	6.5	8.1	9.4
	45-49세	3.4	4.0	6.7
	50-54세	1.9	2.4	5.2
	55-59세	1.3	2.0	4.3
	60세 이상	4.9	5.5	9.4
교육정도	불취학	5.4	7.0	13.3
	초등학교	12.2	17.2	16.6
	중학교	7.1	9.0	12.4
	고등학교	31.0	34.5	34.6
	전문대학교	13.8	9.6	8.4
	대학교	29.5	21.9	14.3
	대학원이상	1.2	0.9	0.4
혼인상태	미혼	41.1	23.3	28.6
	유배우	52.7	70.0	63.0
	사별	4.2	4.1	6.2
	이혼	2.0	2.6	2.2
경제활동 상 태	유업자	61.7	62.5	62.3
	무업구직자	6.7	5.6	6.2
	가사 및 학생	31.6	32.0	31.6
직 업	전문·기술	25.4	12.3	13.1
	행정·관리	26.6	38.2	40.0
	사무	15.4	10.3	10.5
	판매	6.8	8.7	8.7
	서비스	7.5	8.6	6.2
	농·임·어업	0.3	5.5	2.0
	생산·운수·장비·노무	18.1	16.5	19.6

자료: 통계청,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자료.

V. 요약과 결론

- 이 연구의 목적은 센서스 자료를 이용하여 1960년부터 2000년까지 지난 40년간의 우리나라 지역간 인구분포와 인구이동 패턴의 변화를 추적하는 것임.

- 한국의 시·도별 인구분포 변화의 특징은 한마디로 1990년까지 서울과 인천, 경기도를 포함하는 수도권과 지방의 대도시로의 지속적인 인구집중임. 그러나 1990년을 기점으로 서울과 부산은 인구의 절대수가 감소하는 변화를 나타내 도시화의 단계로 볼 때 상대적 분산단계에 진입을 시사.

- 서울의 인구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서울근교 경기도의 인구집중추세는 지속되어 수도권 전체로 보면 2000년까지도 전국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증대됨. 그러나 1995년을 분기점으로 가속화되던 수도권 집중추세가 상당히 완화됨.

- 이러한 집중 추세의 반전현상은 이제 한국사회의 도시화가 거의 완성단계에 접어들었고 점차 지방대도시들이 지역거점 도시로의 역할을 수행해 나가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지며, 앞으로도 지속될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짐.

- 인구이동에 있어서도 이동의 총량은 1990년까지 지속적으로 늘어나 90년에는 구·시·군간 이동율이 24.6%에 이르렀으나 이를 정점으로 최근에는 이동율이 다소 감소하였음. 지역간 인구이동은 대도시권의 형성 영향으로 이들 권역내에서의 시·도간 이동이 증가하며, 순이동은 80년대 후반의 서울의 마이너스 순이동을 시발로 부산, 대구 등도 순이동에서 전출초과를 보이며 대도시의 전출초과 현상은 앞으로도 지속되어 다른 대도시들로도 확산될 것으로 보임.

- 전반적인 이동성향의 감소현상은 전체인구를 이동유형별로 구분해 보았을 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비이동자의 비율은 늘어나는 반면 1차나 2차이동자의 비율은 감소하고 있음.

- 개인적인 수준에서의 이동사유도 지난 30년 동안에 많은 변화를 보여 취업 등 경제적인 이유의 비중은 감소하고 주택과 결혼, 분가 등 가족관계 이유의 비중이 증가하였음. 그런데 이동이유에서의 이와같은 변화 역시 대도시권화의 진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대도시의 주택 부족현상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음.

- 수도권인구가동양상은 몇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변화를 나타내는데 우선 95년을 기점으로 순이동의 양이 급속히 감소해 수도권 인구집중 추세가 완화되고 있으며 수도권내의 목적지도 과거 서울 중심에서 경기도로 이동하고 있음.

- 수도권으로 인구를 유출하는 중요한 지역은 일관성 있게 전남·북과 충남, 강원이며 최근에는 부산 등 지방 대도시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

- 전반적으로 수도권 전입자의 수는 95년을 기점으로 상당히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지방에서 고학력의 고급 인력은 계속해서 수도권으로 유입되고 있음.

- 이상의 분석결과를 요약해 보면 1995년을 분기점으로 하여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 경향이 완화되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 지역간 인구분포의 불균형도 점차 시정되어 가고 있으나, 아직도 고급인력들은 선별적으로 수도권으로 유입되고 있어 정책적으로 이의 시정이 시급한 실정임.

- 따라서 이 연구결과가 시사하는 것은 향후 우리나라의 지역균형발전의 핵심은 지방의 우수인력 양성과 이들의 지방 정착이 되어야 한다는 것임. 많은 연구에서 정보화사회에서 첨단산업은 대도시에서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는 보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향후 정책은 이점을 유념해서 지방 대도시의 우수인력 양성과 정착 기반을 확충하는 데에 역점을 두어야 함.

<요약자료>

지역인구분포 및 국내인구이동

최진호

(아주대학교)

-한국의 지역 간 인구분포의 불균형은 1990년대를 기점으로 서서히 시정되어 가고 있음. 즉, 서울 등 대도시 인구는 인구 규모 순으로 인구의 절대 수가 감소하기 시작하였고, 반면에 도 지역은 인구 감소 폭이 줄어들거나 인구가 오히려 증가하기 시작함.

-수도권의 인구 집중 추세도 1995년을 분기점으로 그 집중 추세가 대 폭 완화되고 있음.

-이와 같은 지역 간 인구분포와 인구이동의 변화는 한국의 도시화가 이제는 거의 완성단계에 도달하였다는 점, 서울, 부산 등 대도시의 인구 수용 능력이 한계에 도달해 광역 대도시권이 형성되고 있다는 점, 지방의 대도시들이 지역 거점 도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 등 여러 요인의 결과로 보여짐.

-이와 같은 제반 여건의 변화로 그 어느 때 보다도 수도권 인구 집중 억제 정책이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보여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가 앞으로도 계속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재의 정책을 꾸준히 추진할 필요가 있음.

-또 광역대도시권의 형성과 발달로 대도시와 주변지역을 구분하는 현재의 행정구역은 인구분포와 인구 이동 분석에 별 의미가 없으므로 정부의 공식적인 광역 대도시권 설정이 시급하며 앞으로는 대도시권 단위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함.

제13장

도시화

장 세 훈
(국회)

I. 연구의 목적

지난 20세기를 ‘도시화의 세기’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그간 한국 사회의 도시 인구는 급속도로 증가해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도시의 성장 속도가 둔화되고 서울로의 ‘一極集中’ 현상이 완화되는 등, 도시화의 흐름이 크게 바뀌는 전환기를 맞고 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과거의 도시화 추이를 점검하고, 그 미래상을 진단해 보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맥락에서 여기서는 인구 센서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한 세기 동안 도시화가 어떠한 궤적을 그려 왔는지, 또 도시로의 인구 집중을 촉발시킨 요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도시화는 도시-농촌간, 또 도시간 관계를 어떻게 변모시켰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II. 도시화 연구의 주요 쟁점

이 글에서는 인구학적 관점에서 한국의 도시화 과정을 접근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해서 그 동안 도·농의 경계 설정 문제, 과잉도시화 문제, 도시간 불균등 발전의 문제, 도시화의 요인 설정 문제 등이 주요 쟁점으로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이들 쟁점을 간략히 소개한 뒤, 이를 중심

으로 도시화 과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도시와 농촌의 구획은 도시화 연구의 출발점이지만, 양자의 경계를 구획하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도시에 대한 조작적 정의가 이루어지게 된다.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도시를 규정짓는 방식이나(김남일·최순 외, 1997; 윤종주, 1991; 최진호·최병선, 1993), 인구 규모를 척도로 삼아 도·농을 구분하는 방식이 그것이다(송병락, 1978; 1979; Mills & Song, 1980). 그러나 이들 방식이 모두 도시와 농촌을 제대로 구획짓지 못하는 한계를 안고 있다. 따라서 ‘도시성’을 판별하고, 이에 근거해서 도/농의 구획을 나누고, 그 구획에 따라 자료를 재구성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그러나 여기서 이러한 작업을 모두 수행할 수 없는 까닭에, 이 글에서는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도시와 농촌을 구획하는 기존 방식에 입각해서 도시화를 살피고자 한다. 그러자면 두 가지 문제가 해소되어야 한다. 그 하나는 도·농의 성격이 겹쳐져 있는 ‘전이 지역’ 문제인데, 여기서는 전이 지역인 邑部의 인구를 농촌인구로 분류하고자 한다. 또 다른 하나는 도·농 통합시의 구획 문제인데, 도·농 통합시의 ‘里部’를 ‘도시화된 농촌’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농촌지역으로 구분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과잉도시화(Over-urbanization)’ 문제가 있다. 이 때 과잉도시화론은 제3세계에서 도시화가 산업화와 보조를 맞춰가는 ‘정상적인’ 경로에서 벗어나 산업화보다 앞서간다면, 이러한 제3세계적 특수성이 한국 사회에서도 발견된다고 주장한다(Golden & Davis, 1955). 그러나 이처럼 서구의 도시화를 표준으로 삼아 제3세계의 도시가 ‘비정상적인 과잉 상태’라고 일반화하는 것은 불합리하거나 무의미하다(석현호, 1986: 111; 조혜인, 1978). 따라서 이 글에서는 도시화 추세에 대한 역사적 분석을 통해 시기별로 ‘과잉’ 여부를 판별해 보고자 한다.

세 번째로 도시간 불균형 문제와 관련해서 ‘수위도시화’, ‘종주도시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한편에서는 국가 주도의 불균등 성장 전략으로 서울 및 수도권으로의 집중이 더욱 심화되면서, 수위도시화가 가속되었다고 주장한다(문석남, 1993: 47-50; 문현상·전학석, 1992: 65-76; 홍경희, 1986:

90-92). 다른 한편에서는 도시간 불균형 현상이 일시적으로 심화되기도 했지만, 서울 및 수도권 집중 추세가 다른 대도시나 지방 중소도시의 성장을 가로막지는 않았다고 본다(강명구, 1999: 77-79; 1993: 232-239). 따라서 도시 규모별 성장 추이를 통해 이 문제를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도시화를 추동하는 원인에 대한 논란이 있다. 흔히 도시화는 이농으로 설명되어 왔다. 그러나 도시의 인구 증가는 단순히 이농의 결과만은 아니다. 행정구역 개편 등으로 도시 영역이 확장되거나, 기존의 농촌지역이 도시로 지정되거나, 또는 도시의 자체 인구 재생산 과정 등을 통해서도 도시화가 가속된다(최진호, 1997; 최진호·최병선, 1993; Kwon, 1988). 그런데 이들 요인은 시기별로 그 영향력을 달리 한다. 따라서 이들 요인이 서로 어떻게 작용하며 도시화를 진행시켰는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Ⅲ. 20세기 한국의 도시화

1) ‘유예된 도시화’ : 식민지 시대의 도시화

조선시대에는 도시로의 인구 집중 현상을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다. 그런데 20세기 초반 식민지 경영을 위해 일제의 농촌 수탈과 새로운 도시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도시화가 촉진되기 시작했다. 그 결과 <표 1>에서 보듯이, 1915-1944년간 거의 정체 상태에 머문 농촌과 달리, 도시 지역은 연평균 7%의 높은 인구 성장률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1915년 전체 인구의 2.8%였던 도시 인구는 1930년 총인구의 5.6%, 해방 직전인 1944년에는 13.2%로 늘어났다.

<표 1> 일제시대 도시/농촌의 연평균 인구 변동률 (단위 : 천명, %)

연도	총인구 변동률	도시인구 변동률	농촌인구 변동률
1915-1920	0.52	3.32	0.43
1920-1925	1.14	7.29	0.91
1925-1930	1.53	6.96	1.25
1930-1935	1.69	6.18	1.40
1935-1940	1.22	11.90	0.20
1940-1944	1.60	4.90	1.14
1914-1944	1.27	6.79	0.88

* 자료 : 조선총독부. 각년도. 『통계연보』, 『국세조사보고서』.

그러나 식민지 시대의 인구이동이 국제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면서, 이농 인구가 모두 도시로 몰려들지는 않았다. 오히려 이들 중 상당 수는 일제의 엄혹한 수탈이 여전한 도시를 피해 만주, 사할린, 일본 등지로 이주했다. 실제로 1910-1940년간 해외로 이주한 인구는 약 320만 명으로 추산되는데, 국내 인구이동은 약 87만 명에 불과했다(문석남, 1993: 6; 석현호, 1987: 118). 물론 20세기 전반기 일본인의 국내 유입 인구가 70만여 명으로, 이들의 절반 이상이 도시로 정착했다는 점에서(권태환 외, 1997: 108), 전체 이동 인구 가운데 도시 유입 인구의 비중이 결코 적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농 인구의 대다수가 해외로 이주해서 도시화의 속도가 늦춰짐으로써, 도시의 급팽창이 ‘유예’되었던 것이다.

2) ‘과잉도시화’ : 식민지 해방과 전쟁, 그리고 도시화

1945-60년간의 시기는 해방을 계기로 그 동안 유예되었던 도시화의 물결이 쇄도함과 동시에, 민족분단과 한국전쟁으로 인한 대규모 인구이동 과정에서 도시로 인구가 집중되던 시기였다. 따라서 도시의 수용 능력을 넘어서는 인구 유입으로 ‘과잉도시화’ 양상이 나타났다.

먼저 해방을 맞이해서 해외동포들이 대거 유입되었다. 1945-49년간에만 일본으로부터 138만여 명, 만주·사할린 등지에서 42만여 명 등 약 180만 명이 유입되었다. 또한 남북한의 분단이 고착화되면서, 월남 인구가 약 74만여 명에 달했다. 이에 더해 한국전쟁 과정에서 약 70만 명이 사망했지만, 65만여 명의 월남민이 남한으로 이주했다(Kwon, 1977). 문제는 이들 유입 인구가 서울을 비롯한 도시 지역에 집중되었다는 점이다.

실제로 1949-55년간 도시 인구는 연평균 7.2%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347만여 명에서 528만여 명으로 늘어 도시화율이 17.2%에서 24.5%로 크게 높아졌다. 이는 국경을 자유로이 넘나들던 개방적 인구이동 시기에 도시로의 진입을 유예했던 이농 인구들이 봉쇄적 인구이동 시기로의 이행 단계에서 도시로 대거 유입되면서, 일종의 ‘도시 폭발’을 가져온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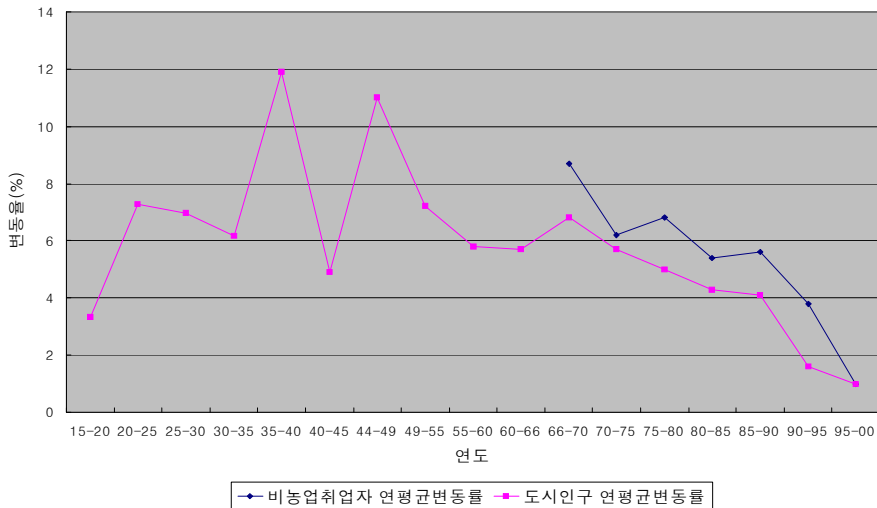
이와 같은 ‘도시 폭발’은 ‘과잉도시화’와 ‘수위 도시화’ 현상으로 이어졌

다. 우선 해방 이후의 혼란과 한국전쟁의 戰災로 말미암아 와해된 도시의 경제 기반이 복구되지 못한 탓에, 제조업 성장률이 도시의 인구증가율을 크게 밀돌아 일자리 부족 현상이 심각했다. 예컨대 1961년 현재 서울의 취업자는 약 6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23%에 불과해서, 1930년의 취업률(30%)에도 못미쳤으며, 도시의 정상 취업률(45%)을 크게 밀돌았다. 이처럼 경제성장이 뒷받침되지 못한 탓에 ‘도시 폭발’이 곧바로 ‘과잉도시화’로 나아갔던 것이다. 또한 월남 인구 가운데 62%가 서울에 집중되는가 하면, 1950년대 후반 서울의 순인구 유입량이 시·군간 순이동량의 93%에 달하는 등, 이농 인구의 대다수가 서울로 몰려들었다(윤종주, 1986: 25; Kwon, 1977: 390-395). 따라서 서울과 기타 도시간의 격차가 갈수록 벌어져 서울의 ‘수위도시화’ 양상이 더욱 굳어져 갔다.

3) ‘압축적 도시화’ : 산업화와 도시화의 병진

1960년대 이후에는 국가 주도형 산업화 전략에 따른 고도성장 과정에서 도시로의 인구 집중이 더욱 가속되었다. 1960년 28.0%였던 도시화율은 1970년 41.2%, 1980년 57.3%을 거쳐 1990년 74.4%로 급상승했으며, 1980년대에는 도시의 인구 증가(1,087만 명)가 전국 인구 증가(598만 명)를 크게 웃돌기도 했다. 이는 서구 사회가 지난 두 세기간에 밟아온 도시화의 경로를 30-40년만에 답습하는 ‘압축적 도시화’ 과정에 다름 아니다.

<그림 1> 산업화와 도시화의 추이 : 1915-2000년



* 자료 : 경제기획원/통계청. 각년도. 『인구·주택 총조사』; 통계청. 각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런데 이처럼 급속한 도시화가 제조업의 성장과 발맞추어 전개되었다는 점에서, 1960년대 이후의 도시화는 그 이전의 도시화와 구분된다. <그림 1>에서 보듯이, 1960년대 초반부터 산업화 속도는 도시화 속도를 앞섰다. 물론 1950년대 ‘도시 폭발’의 유제가 여전히 남아 신규 이농민의 도시 적응이 그리 수월하지는 않았지만, 고용기회의 증대로 도시의 이농민 수용능력이 커짐에 따라 이전에 비해 훨씬 용이해졌던 것이다. 이는 1950년대까지 농촌의 유출 요인이 이농을 크게 부추겼던 데 반해, 1960년대 이후에는 농촌의 유출 요인과 도시의 유입 요인이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키며 도시화를 가속시켰음을 뜻한다.

또한 이 시기에는 서울이 여전히 도시 성장을 주도했지만, 새롭게 건설되는 신흥 공업도시들이 또 다른 성장의 축으로 등장하는 특징도 보여준다. 즉 중화학공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남동 공업도시들이 급속도로 성장했고, 서울 주변 위성도시들도 서울의 제조업 기능 및 주거 기능을 나눠 가지며 빠르게 성장했다. 또한 지방 군소도시들도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했다. 이처럼 서울 및 신흥공업도시의 성장이 다른 지방도시의 성장을 가로막거나 정체를 부추기지 않았다는 점 또한 1950년대와 구분되는 이 시기의 또 다른 특징이다.

4) ‘성숙된 도시화로의 이행’ : 1990년대 이후의 도시화

고속 성장을 거듭하던 도시화는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성장 속도가 급속히 둔화되었다. 1960년부터 매 10년마다 20% 안팎씩 증가하던 도시화율이 1990년대에는 5.3% 상승하는 데 그쳤고, 특히 1990년대 전반 4.1% 증가했다가 그 후반에는 1.2% 증가에 그치는 등, 그 둔화 속도는 더욱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도시화의 흐름도 바뀌고 있다. 우선 서울이 ‘성장의 한계’ 상황에 부딪쳐 절대인구의 감소를 기록했으며, 다른 대도시들의 인구 집중 추세도 이완되었다. <표 2>를 보면, 서울, 부산, 대구의 3대 도시 인구가 전국 도시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70년 65.6%를 기점으로 꾸준히 감소해서 2000년에는 43.6%로 줄었다.

<표 2> 전국 도시 대비 3대 도시의 인구 비중

(단위 : 천명, %)

연도	도시 인구(A) (천명)	서울 인구(B) (천명)	부산 인구(C) (천명)	대구 인구(D) (천명)	(B+C+D)/A (%)
1960	6,997	2,445	1,164	677	61.3
1970	12,710	5,433	1,842	1,064	65.6
1980	21,434	8,364	3,160	1,605	61.3
1990	32,309	10,613	3,798	2,229	51.5
2000	36,755	9,895	3,663	2,481	43.6

* 자료 : 경제기획원/통계청. 각년도. 『인구·주택 총조사 보고서』.

그러나 <표 3>에서 보듯이, 서울의 절대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지역의 인구는 절대적으로나 상대적으로 증가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도시 인구 집중의 기착지로 기능하던 서울이 이제는 도시간 인구 이동의 새로운 출발지, 또는 도시간 인구 이동의 계류지로 변모하고 있음을 뜻한다.

<표 3> 서울 및 수도권의 인구 변동 추이 : 1960-2000년

(단위 : %)

연도	전국 인구(A)	서울 인구(B)	수도권 인구(C)	B/A	C/A
1960	24,989	2,445	5,194	9.8	20.8
1970	30,882	5,433	8,730	17.6	28.3
1980	37,436	8,364	13,298	22.3	35.5
1990	43,411	10,613	18,586	24.4	42.8
2000	46,136	9,895	21,354	21.4	46.3

* 자료 : 경제기획원/통계청. 각년도. 『인구·주택 총조사』.

그러나 1990년대 수도권 인근 신도시 개발과 같이 국가 주도의 ‘돌진적 근대화’ 방식으로 ‘압축적 도시화’를 강행하는 모습이 여전히 남아 있는 등, 현단계 한국 도시화는 성숙 단계로 이행하는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IV. 도시인구 성장의 분석

이 절에서는 앞서 살펴본 도시화 과정 전반의 역사적 분석을 바탕으로, 주로 1960년대 이후 도시인구 성장 과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도·농간 관계 및 도시간 관계의 변화를 살피는 한편으로, 도시화의 動因을 검토하고자 한다.

1) 급속한 도시화와 도·농 관계의 변화

지난 40년간 도시가 폭발적 성장을 보인 이면에서는 농촌 인구의 대대적인 감축이 진행되었다. 1970년대까지 높은 출산력 수준이 유지되었지만, 대규모 이농으로 인해 이미 1966년 1,941만 명을 고비로 농촌의 절대 인구는 꾸준히 감소해서 2000년에는 1966년 인구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938만 명만이 농촌에 거주하고 있다.

<표 4> 도시/농촌의 연평균 인구 변동률 : 1960-2000년
(단위 : %)

연도	전국	도시	농촌	도시화 속도
1960-1966	2.6	5.7	1.2	3.1
1966-1970	1.4	6.8	-1.6	5.4
1970-1975	2.4	5.7	-0.3	3.4
1975-1980	1.5	5.0	-2.2	3.5
1980-1985	1.6	4.3	-2.6	2.7
1985-1990	1.4	4.1	-4.5	2.7
1990-1995	0.6	1.6	-2.9	1.1
1995-2000	0.7	1.0	-0.4	0.3
1960-2000	1.5	4.2	-1.6	2.7

* 주 : 도시화 속도 = 도시 인구변동률 - 전국 인구변동률.

* 자료 : 경제기획원/통계청. 각년도. 『인구·주택 총조사 보고서』.

도시와 농촌의 연평균 인구 변동률 추이는 이러한 도·농간 격차의 심화 양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표 4>를 보면, 도시 인구는 최근 40년 동안 4.2%의 고속성장을 거듭 해 왔다. 이에 반해 농촌 인구는 1960년대 중반부

터 감소 추세로 돌아서서, 1980년대 후반에는 -4.5%의 기록적인 감소율을 보여주었다. 최근 농촌 인구가 도시 인구의 1/4 규모로 줄어들고 이농 추세도 한풀 꺾이면서, 인구 변동률이 -1% 이하로 감소했지만, 농촌의 인구 증가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표 5> 1960년, 2000년의 도·농간 연령별 인구 구조 비교
(단위 : %)

연령구조	1960년		2000년	
	도시	농촌	도시	농촌
0-9세	28.0	29.9	14.7	12.8
10-19세	22.2	20.3	15.2	12.8
20-29세	17.9	16.4	18.1	13.9
30-39세	13.5	11.3	18.8	15.0
40-49세	9.0	8.8	15.6	13.0
50-59세	5.3	6.6	8.9	11.1
60-69세	2.7	4.3	5.5	12.4
70세 이상	1.4	2.4	3.2	8.9
합계	100.0	100.0	100.0	99.9
총수	6,999,746	17,992,494	36,642,448	9,342,841

* 자료 : 경제기획원/통계청. 각년도. 『인구·주택 총조사 보고서』.

이와 함께 인구 구성에서도 상당한 변화가 일어났다. 우선 <표 5>에서 1960년과 2000년의 연령구조를 비교해 보면, 1960년에는 도·농간의 연령구조가 거의 유사했다. 그런데 대규모 이농이 거의 완료된 2000년에 이르면, 농촌의 노령인구 비중이 크게 늘어나 농촌 지역이 인구 노령화의 온상으로 자리잡은 한편, 49세 이하 전 연령층에서 도시 인구의 비중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나고 있다.

가임여성인구의 비중에서도 같은 양상을 발견할 수 있다. <표 6>을 보면, 농촌 인구의 전반적인 감소로 면부의 가임여성인구는 40년 사이에 1/3 수준으로 줄었다. 특히 1960년대 일시 증가를 기록했을 뿐, 1970년대부터 정체되어 이후에는 그 비중이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다. 이 같은 가임여성인구의 비중 감소는 농촌 인구의 감소 추세를 더욱 부추겨, 향후 인구 재생산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표 6> 1960-2000년간 가임연령 여성인구의 변동 추이
(단위 : 천명, %)

구분 연도	가임연령 여성인구			가임연령 여성인구의 비중		
	시부	읍부	면부	시부	읍부	면부
1960	1,816	531	3,551	51.8	47.1	45.4
1970	3,467	652	3,178	63.0	55.0	49.2
1980	6,218	1,148	2,500	66.1	58.0	49.4
1990	9,756	950	1,669	66.8	57.7	47.7
2000	11,021	974	1,159	65.8	57.4	43.6

* 자료 : 경제기획원/통계청. 각년도. 『인구·주택 총조사 보고서』.

지난 40년간의 급속한 도시화는 이처럼 도시와 농촌간의 격차를 더욱 벌려놓았을 뿐 아니라 앞으로 그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어, 그에 따른 농촌사회의 와해가 우려된다.

<표 7> 도시-농촌간 인구이동 : 1965-2000년
(단위 : 천명, %)

기간	기간	도시		농촌		도시로의 순이동
		전입	전출	전입	전출	
이동인구	1965-1970	3,359	1,919	1,037	2,476	1,440
	1970-1975	4,029	2,833	1,122	2,318	1,196
	1975-1980	6,379	4,536	1,239	3,082	1,842
	1980-1985	7,008	5,472	1,358	2,893	1,535
	1985-1990	8,705	7,119	1,111	2,697	1,586
	1990-1995	8,893	8,703	1,194	1,384	190
	1995-2000	8,338	8,117	822	1,043	221

* 주 : 센서스 자료의 한계로 도·농 통합시의 읍·면을 도시 지역으로 간주함.

* 자료 : 김남일·최순 외(1997: 26); 경제기획원/통계청. 각년도. 『인구·주택 총조사』.

2) 도시 인구의 성장 요인 : 이농과 도시화

그간 거대한 이농의 물결은 급속한 도시화의 주축이나 다름없었다. <표 7>에서 보듯이, 1965년부터 2000년까지 35년간 농촌 지역에서 유입된

순이동인구는 770만명에 달했다. 특히 1965-90년 사이에는 연평균 30만 명씩 농촌 인구가 도시로 유입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이농이야말로 압축적 도시화의 견인차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지난 40년간의 도시화 추이를 살펴보면, 이농의 효과는 시기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표 8>를 보면, 1960년대 후반 농촌 인구의 유입은 도시화의 3/4 가량을 설명했으며, 1980년대까지도 이농은 도시 인구 성장의 40% 안팎을 차지했다. 그러나 1990년대에는 그 영향력이 10% 수준으로 격감했다.

이와 달리 도시 인구의 자연 증가는 도시화의 꾸준한 원동력이었다. 즉 1960년대 후반을 제외한다면, 도시 인구의 자연 증가는 일관되게 도시 인구 성장의 40% 안팎을 차지해 왔다. 특히 이농인구의 절대 규모가 격감한 1990년대에는 도시화 과정을 사실상 주도하고 있다.

<표 8> 도시 인구의 성장 요인 : 1960-2000년

(단위 : 천명, %)

연도	도시인구 증가 (천명)	도시인구 증가 요인(%)			
		자연증가	순이동	권역 확대	시 승격
1960-66	2,709	42.1	40.6	9.3	8.0
1966-70	3,223	26.8	73.2	0.0	0.0
1970-75	3,842	47.2	45.1	2.5	5.2
1975-80	4,638	45.7	39.7	4.1	10.5
1980-85	5,506	44.4	36.8	1.3	17.4
1985-90	5,866	36.3	27.0	6.2	30.4
1990-95	2,727	72.8	7.0	1.3	19.0
1995-00	1,719	62.2	12.9	0.0	24.9

* 주 : 도·농 통합시의 읍·면은 농촌 지역으로 간주함.

* 자료 : 이한순·이우리(1983: 125); 최진호·최병선(1993: 11); 경제기획원/통계청. 각년도. 『인구·주택 총조사』; 한국행정문화원. 각년도. 『한국행정구역총람』.

그렇다고 해서 행정구역 개편의 효과를 간과할 수는 없다. 그 동안 수차례의 행정구역 개편 조치로 1960년 27개였던 도시 수는 2000년에는 79개로 늘어났다. 그 결과 1980년대 이후 도시의 신설은 도시 인구 증가의

20-30%를 설명하는 요인으로 자리잡았다.

결국 거대한 이농의 물결이 ‘압축적 도시화’ 시기의 초기 국면에서 도시화의 흐름을 주도하며 그 이후로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지만, 일관되게 도시의 인구 성장을 이끌고 간 것은 도시의 자체 인구 재생산 및 공간적 확장이었으며, 이농의 효력이 약화됨에 따라 이러한 도시 내부 요인들의 영향력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표 9> 도시 규모별 도시 성장 추이

	고도성장도시	성장도시	저성장 도시	낙후도시
1960년대 (27)	S C:1 (2)	A:1, B:1, C:6, D:9 (17)	C:3, D:5 (8)	(0)
1970년대 (32)	A:1, B:1 C:7, D:2 (11)	S, A:1 C:7, D:9 (18)	D:2 (2)	D:1 (1)
1980년대 (40)	A:2, B:2, C:15 (19)	S, A:1 C:6, D:2 (10)	C:6, D:3 (9)	C:1, D:1 (2)
1990년대 (71)	A:3, B:7, C:21, D:4 (35)	B:1, C:4, D:4 (9)	A:1, C:4, D:7 (12)	S, A:1, C:2, D:11 (15)

* 주 1) S:서울, A:인구 100만명 이상의 대도시
 B:인구 50-100만명의 도시, C:인구 10-50만명의 도시,
 D:인구 10만명 미만의 소도시.
 2) 고도성장도시 : $i > u \ \& \ i > n$; 성장도시 : $n < i < u$;
 저성장도시 : $0 < i < n$; 낙후도시 : $i < 0$
 n: 전국의 연평균 인구성장률,
 u: 도시 전체의 연평균성장률, i: 개별 도시의 연평균성장률
 * 자료 : 경제기획원·통계청. 각년도. 『인구주택총조사』.

3) 수도권 집중과 도시간 관계의 변화

1960년대까지 서울은 이농민의 대다수를 흡수하는 괴력을 발휘했지만, 1970년대부터 그 영향력이 약화되다가, 1990년대에는 아예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다. 그러나 서울의 집중 완화로 도시간 불균형 문제가 다소 완

화되기는 했지만, 지역간 불균형 문제가 해소된 것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서울의 집중’이 ‘수도권 집중’으로 변형되었기 때문이다. <표 3>에서 보았듯이, 서울의 절대적 규모나 상대적 비중은 줄어들었지만, 수도권은 이제 전국 인구의 절반 가까이를 끌어안은 거대한 공룡으로 변모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의 집중에 뒤이은 수도권 팽창 추세에도 불구하고 지방도시의 성장이 결코 지체되거나 중단되지 않고 있다. 정부가 공업도시로 개발한 지역이나 서울로부터 ‘성장의 세레’를 받아 급성장한 수도권 도시들 뿐만 아니라 지방의 중소도시들도 예외가 아니다. 물론 <표 9>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중·대형 도시들이 도시화의 물결을 주도한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소규모 도시들도 고도성장도시로부터 낙후도시까지 고르게 분포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급속한 도시화 과정에서 도시간 관계가 결코 ‘零合關係’의 형태를 취하지 않았음을 새삼 확인시켜준다.

결국 급속한 도시화가 도시간 관계에 적지 않은 변화를 불러 왔지만, 특정 지역의 집중과 지방 중소도시의 발전이 병행하는 도시화의 기본 골격을 바꿔놓지는 못했던 것이다. 이처럼 집중과 분산 발전이라는 서로 상반된 추세가 병존하는 한국의 도시화는 수위도시화의 길로 나아가는 제3세계 국가들의 도시화 경로나 지역간 균형 발전의 길을 밟아간 서구의 도시화 경로와 뚜렷이 구분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V. 결론 : 분석의 함의

이상에서 20세기 한국 사회의 도시화 과정을 역사적 차원과 구조적 차원으로 나눠 살펴보았는데, 이러한 논의를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론적, 실천적 함의를 얻을 수 있다.

먼저 ‘과잉도시화’, ‘수위도시화’, ‘이농과 도시화의 관계’ 등의 문제에서 보듯이, 외국 현실을 근거로 만들어진 특정한 이론적 가정에 한국의 도시화 과정을 억지로 꿰어 맞추기도 어렵거니와 그래서도 안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는 한국 사회에서 단기간 내에 도시

화가 이루어지면서, 그 안에 도시화의 여러 단계들이 중첩되어 있음에 주목해서, 한국적 도시화의 시기별, 단계별 특수성을 밝히는 데 보다 주력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실천적인 차원에서 이상의 도시화 논의는 기존의 도시정책을 되짚어보면서, 새로운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우선 도시화 과정의 복잡성 및 다차원성에 대한 이해 없이 국가가 강압적으로 각종 도시 문제를 해소하려는 노력은 성공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그 동안 도시의 인구 급증에 따른 각종 도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갖가지 정책 수단을 실험해 왔지만, 이러한 정책 실험이 별다른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했다(국토개발연구원, 1996; 장세훈, 1998b). 물론 이러한 정책 실패는 여러 원인이 복합된 결과이지만, 도시화에 대한 정책 당국의 편견과 권위주의적이고 관료적인 정책 행태에서 그 주된 요인을 찾을 수 있다. 즉 정부가 ‘국가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자기 과신에 사로잡혀 시민사회와 시장의 원리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에, 도시 문제가 온존되거나 조장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향후의 도시정책은 도시화의 역사적 역동성과 압축적 도시화의 추이를 면밀히 파악하는 한편, 민·관 협력 등과 같은 시민사회와의 협력 방안을 통해 도시정책의 유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둘째로 기왕의 도시(인구)정책은 이농에 따른 도시의 과부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도시 인구의 재배치 대책에 국한되었다. 따라서 압축적 도시화의 초기에는 도시 인구 증가의 진양지였던 농촌의 과잉 문제에 무관심했고, 최근에는 도시 과밀화 문제에 버금 가는 농촌 과소화 문제를 등한시하고 있다. 그러나 도시 문제와 농촌 문제는 동전의 앞뒷면처럼 서로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 따라서 향후의 도시화 대책은 농촌을 아우르는 전국적 단위의 정책으로 확장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로 지금까지의 도시정책은 과거 지향적 정책 노선을 밟아왔다. 즉 ‘과잉도시화’, ‘압축적 도시화’ 과정에서 빚어진 각종 도시 문제를 ‘사후적으로’ 해소하는데 주력했다. 따라서 인간적인 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미래

지향적 정책 노선에 대한 탐색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향후에는 이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방향으로 도시(인구)정책을 추진해 간다면, 압축적 도시화에 따른 도시화의 부정적 폐해를 극복하면서, 도시화의 긍정적 기능을 극대화해서 보다 인간적인 도시의 건설을 좀더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명구. 1997. “지방자치와 도시정치 : 행위자 중심적 해석을 위한 이론적 연구”. 『한국정치학회보』 31권 3호.
- 강명구. 1999. “1960년대 도시 발달의 유형과 특징 : 발전주의 국가의 공간 조작”. 한국정신문화연구원(편). 『1960년대 사회변화 연구 : 1963-1970』. 백산서당.
- 경제기획원. 각년도. 『인구센서스 조사보고서』.
- 국토개발연구원(편). 1996. 『국토 50년』. 국토개발연구원.
- 권태환. 1980. “도시화와 인구”. 한국사회과학연구소(편). 『한국사회론』. 민음사.
- 권태환·전광희·은기수. 1997. 『서울의 전통 이해 : 인구와 도시화』. 서울학연구소.
- 김남일·최순 외. 1997. 『인구이동과 농촌 지역 인구 특성 변화』. 통계청.
- 김인. 1983. “한국의 도시 체계와 성장도시”, 『환경논총』 제12권.
- 문석남. 1993. “한국의 도시화 : 그 유형과 특성”, 『전남대 지역개발연구』 제29집.
- 문현상 외. 1992. 『도시화 문제와 대책에 관한 국제 비교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문현상·전학석. 1992. “수도권 인구 집중의 추이, 요인, 문제점”. 문현상 외. 『도시화 문제와 대책에 관한 국제 비교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석현호, 1986. “한국의 도시화와 사회변동”, 『成大 사회과학』 제25집.
- 윤종주. 1986. “해방 후 우리 나라 인구 변동의 사회사적 의의”. 인구문제연구소(편). 『인구문제논집』 제27호.
- 윤종주. 1991. “해방 후의 인구 이동과 도시화”. 한국정신문화연구원(편). 『해방 후 도시 성장과 지역사회의 변화』.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이한순·이우리. 1983. “한국 내 인구이동의 패턴 변화에 관한 계량적 연구 : 1960-1980년을 중심으로”, 『인구문제논집』 24집.
- 장세훈. 1998b. 「수도권 정비 정책의 쟁점과 향후 과제」(현안분석 제170호). 국회도

서관 입법조사분석실.

- 조혜인. 1978. “한국 사회의 과잉도시화 여부에 관한 고찰”, 『한국사회학연구』 2집.
- 최진호. 1997. “인구 이동 패턴의 변화 : 1960-1990”. 한국인구학회(편). 『인구 변화와 삶의 질』. 일신사.
- 최진호·최병선. 1993. 『지역간 인구 불균형 분포의 원인과 결과』. 통계청.
- 통계청. 각년도. 『인구·주택 총조사 보고서』.
- 홍경희. 1986. “한국의 도시화 : 인구 면으로 본 1970년대(1970-1980)의 도시화”, 『경북대 논문집』 제42집.
- 朝鮮總督府. 각년도. 『統計年報』, 『國勢調査報告書』.
- Davis, K. & H. Golden. 1955. "Urbanization and the Development of Pre-Industrial Areas". *Economic Development and Cultural Change* Vol3 No.3.
- ESCAP(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1980. *Migration, Urbanization and Development in the Republic of Korea*. Bangkok : ESCAP.
- Kwon, Tai-Hwan. 1977. *Demography of Korea : Population Change and Its Components 1925-66*, Seoul : Population and Development Studies Center(PDSC) in Seoul National University.
- Mills, E. & Song, Byung-Nak. 1980. 『성장과 도시화 문제』. 한국개발연구원.
- Wirth, L. 1938. “Urbanism as a Way of Lif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50.

<요약자료>

도시화

장 세 훈

(국 회)

지난 100여년간 한국의 도시화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1. 일제 시대 이농민의 해외 이주로 일시 유예되었던 도시화가 1950년대 해방과 분단·전쟁 상황에서 일거에 이루어짐에 따라, 당시 산업화가 동반되지 않은 도시 인구 집중, 즉 ‘과잉도시화’ 현상이 심각했다. 그러나 1960년대 이후 급속한 산업화로 ‘과잉도시화’ 문제는 곧 완화되었다.

2. 서울 및 수도권의 인구 집중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지만, 1990년대부터 서울, 부산과 같은 거대도시에서 절대 인구가 줄어드는 ‘역도시화 Counter-urbanization’ 양상이 나타나고, 지방 중소도시의 성장이 꾸준히 이어져 왔다는 점에서, 한국의 도시화는 지역간 균형 발전이 일어나는 서구의 도시화나 ‘수위도시화’ 문제가 심각한 제3세계의 도시화와 달리 ‘압축적 도시화’ 과정에서 집중과 균형 발전이 병존하는 독특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3. 그 동안 이농을 통해 농촌의 인구 과잉 문제가 크게 완화되었지만, 도시로의 인구 이동이 청·장년층을 대상으로 급속도로 진행된 탓에 농촌의 과소화 문제가 치유하기 어려울 정도로 과도하게 진행되었다.

4. 1960-70년대 이농은 인구의 도시 집중을 추동하는 원동력이었지만, 농촌 절대인구의 감소와 도·농간 격차 확대 등으로 1990년대부터 그 효과가 크게 감소한 반면에, 도시 내부의 인구 재생산과 도시의 신설 등과 같은 ‘도시 내적인’ 요인의 영향력이 꾸준히 강화되고 있다.

5. 도시화의 양상이 최근 들어 이처럼 급변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도시정책은 과거와 같이 급속한 도시화에 따른 도시 문제에 대응하는 ‘사후적 대처’에 급급하기보다는 ‘인간적인 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미래 지향적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데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제 14 장

한국의 종교¹⁾

은 기 수

(한국정신문화연구원)

I. 연구목적과 대상

이 연구는 1985년과 1995년 등 두차례의 센서스에서 조사된 종교에 관한 자료를 분석하여 한국의 종교구조를 밝히고자 한다. 종교에 관한 실증적 자료가 많지 않기 때문에 두 차례에 걸친 센서스의 종교조사는 조사 결과의 신빙성에 관한 의문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종교분포에 관한 매우 귀중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학계에서는 1985년과 1995년에 이루어진 센서스의 종교자료를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않다.

일차적으로 이 연구는 이 연구는 1985년과 1995년의 센서스 표본 원자료를 분석하여 한국의 종교구조를 개인적인 수준에서 밝히고자 한다.

이 연구는 인구센서스의 종교변수를 분석한다는 일차적인 목표 외에 한국의 종교연구가 개인적인 수준에서 뿐만 아니라 가족, 가구 수준에서의 고찰이 꼭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가구 수준의 종교일치도도 함께 분석하려고 한다.

II. 자료 및 분석대상

이 연구에 가장 적합한 자료는 5년마다 통계청이 조사하는 인구주택

1) 이 연구의 일부분은 서울대 사회학과 김경동교수 정년기념논총인 『진단과 대응의 사회학』에 발표되었다.

총조사 자료이다. 인구센서스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전수조사로서 자료의 신뢰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인구센서스는 가구를 단위로 가구에 속한 모든 개인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모으고 있는데, 특히 1985년과 1995년의 인구센서스는 개인의 종교도 모두 조사한바 있다. 따라서 인구센서스자료를 분석할 경우 개인적인 수준에서 우리나라 인구의 종교현황을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구를 단위로 가구에 속한 개인의 종교를 모두 파악할 수 있어서 가족내 종교의 동질성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이 연구는 1985년과 1995년 인구센서스의 2% 표본 원자료를 직접 분석한다.

이 연구에서는 양적 분석방법을 이용한다. 그러나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 사회에서 개인적인 수준의 종교분포 및 가구내 종교구성을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술통계의 빈도분석과 같은 아주 기초적인 양적 분석방법을 이용해서 자료를 분석한다. 개인적인 수준에서 종교인구의 분석을 위해서는 만 7세 이상으로 연령을 한정하여 분석한다. 만 7세 이하의 경우 자신의 종교를 분별할만한 나이에 이르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나이인 만 7세 이상의 인구만을 대상으로 종교분포를 분석한다.

III. 개인적인 수준에서 한국의 종교분포

이 절에서는 개인적인 수준에서 한국의 종교분포를 알아보자. 다음의 <표 3-1>은 1985년과 1995년의 종교분포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1985년에 종교가 없다는 무종교인은 전체 인구의 55%를 차지하고 있었다. 반면에 불교 인구는 21.8%, 개신교 인구는 16.4%, 천주교 인구는 4.7%를 차지하고 있었다. 유교를 비롯한 기타 종교가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낮다. 유교를 자신의 종교라고 말한 사람은 전체 인구의 1.4%에 불과하다. 그외 종교의 비율은 원불교 0.25%, 대순진리회 0.12%, 천도교 0.08% 등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

<표 3-1> 7세 이상 인구의 종교분포의 변화, 1985-1995

종교	1985	1995
불교	21.83	24.94
개신교	16.37	19.64
천주교	4.74	6.75
유교	1.40	0.48
원불교	0.25	0.21
천도교	0.08	0.07
대종교	0.02	0.02
대순진리회	0.12	0.14
기타	0.37	0.43
없음	54.82	47.32
합	100.00	100.00

자료: 1985, 1995 인구센서스 2% 표본 원자료

10년 후인 1995년에 무종교인은 47.3%로 10년 전에 비해 7.5% 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에 불교 인구는 24.9%로 3% 포인트 증가하고, 개신교 인구도 19.6%로 3.3% 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천주교 인구는 1985년과 1995년 사이에 2% 포인트 증가하여 불교, 개신교의 인구 증가보다는 증가량이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무종교인이 크게 감소한 대신 기성종교를 믿는 인구가 기성종교별로 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표 3-2> 7세 이상 인구의 성별 종교분포의 변화, 1985-1995

종교	1985		1995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불교	20.06 (45.00)	23.52 (55.00)	23.31 (45.46)	26.49 (54.54)
개신교	14.47 (43.28)	18.19 (56.72)	17.69 (43.83)	21.48 (56.17)
천주교	4.16 (43.00)	5.29 (57.00)	5.98 (43.10)	7.48 (56.90)
유교	1.55 (54.14)	1.26 (45.86)	0.55 (55.95)	0.41 (44.05)
원불교	0.23 (44.67)	0.27 (55.33)	0.18 (43.08)	0.23 (56.92)
천도교	0.08 (47.84)	0.08 (52.16)	0.07 (46.85)	0.08 (53.15)
대종교	0.02 (50.51)	0.02 (49.49)	0.02 (44.63)	0.02 (55.37)
대순진리회	0.12 (46.06)	0.13 (53.94)	0.13 (44.81)	0.15 (55.19)
기타	0.33 (44.73)	0.40 (55.27)	0.39 (43.43)	0.48 (56.57)
없음	58.98 (52.68)	50.83 (47.32)	51.68 (53.13)	43.19 (46.87)
합	100.00	100.00	100.00	100.00

주: 괄호 안은 각 년도 종교별 성 구성임

자료: 1985, 1995 인구센서스 2% 표본 원자료

무종교인의 비율은 1985년과 1995년 모두 여성보다 남성이 훨씬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1985년의 경우 남성 가운데 59%는 무종교인이었고 여성은 51%가 무종교인이었다. 1995년에는 무종교인의 비율이 10년전보다 감소한 가운데 남성의 52%가 무종교인인 반면 여성의 경우에는 43%만이 무종교인으로 여성들의 무종교인 비율이 크게 감소하고 있다.

불교 인구의 경우 남성이나 여성 모두 1985년부터 1995년 사이에 3% 포인트 증가하고 있다. 개신교도 남성이나 여성 모두 10년 사이에 3.7% 포인트가 증가하고 있다. 천주교는 여성의 경우 1.5% 포인트 증가하였지만, 여성의 경우에는 1.1% 포인트 증가하고 있다. 원불교와 대순진리회 및 기타 종교 등도 남성과 여성들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유교는 남성이나 여성 모두 비율이 감소하고 있다.

다음 <표 3-3>은 1985년의 경우 연령별로 종교의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표 3-3> 7세 이상 인구의 연령별 종교분포: 1985

종교	-19	20-29	30-39	40-49	50-59	60-69	70+
불교	14.30 (20.86)	18.50 (18.70)	25.38 (19.33)	30.30 (17.57)	31.57 (12.61)	30.21 (7.06)	28.17 (3.87)
개신교	17.92 (34.85)	16.48 (22.21)	17.92 (18.21)	14.93 (11.54)	13.00 (6.92)	12.93 (4.03)	12.23 (2.24)
천주교	4.50 (30.23)	4.67 (21.78)	5.59 (19.64)	4.85 (12.96)	4.30 (7.91)	4.48 (4.82)	4.21 (2.66)
유교	0.71 (16.12)	0.93 (14.67)	1.14 (13.55)	2.01 (18.16)	2.92 (18.14)	3.23 (11.72)	3.58 (7.64)
원불교	0.19 (23.65)	0.23 (20.10)	0.25 (16.81)	0.28 (13.87)	0.37 (12.94)	0.38 (7.59)	0.42 (5.05)
천도교	0.05 (20.69)	0.08 (22.84)	0.08 (16.24)	0.07 (12.21)	0.12 (13.07)	0.14 (9.48)	0.14 (5.46)
대종교	0.02 (25.00)	0.01 (13.27)	0.02 (13.78)	0.03 (15.31)	0.04 (17.35)	0.05 (10.71)	0.03 (4.59)
대순진리회	0.09 (24.62)	0.12 (22.53)	0.17 (22.53)	0.13 (13.76)	0.12 (8.60)	0.15 (6.15)	0.07 (1.81)
기타	0.28 (23.93)	0.33 (20.16)	0.34 (15.65)	0.40 (13.84)	0.56 (13.27)	0.71 (9.82)	0.41 (3.32)
없음	61.95 (35.97)	58.63 (23.59)	49.10 (14.89)	46.99 (10.85)	47.01 (7.48)	47.74 (4.44)	50.73 (2.77)
합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주: 괄호 안은 종교별 연령 구성임
 자료: 1985, 1995 인구센서스 2% 표본 원자료

모든 연령층 가운데 무종교인의 비율이 가장 높은 연령층은 10대이다. 7세 이상 19세까지의 인구가운데 62%가 무종교인이라고 자신의 종교를 밝히고 있다. 19세까지의 인구 가운데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경우 개신교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10대 가운데 개신교인이 18%로 가장 높고 천주교인은 4.5%로 나타났다. 개신교인과 천주교인을 합하면 10대의 22.5%가 기독교인인 것이다. 10대 가운데 불교인은 14%를 차지하고 있다.

20대의 경우 10대보다 무종교인의 비율이 약간 감소하여 58.6%가 무종교인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10대와 달리 20대에서는 종교인 가운데 불교인이 가장 많다. 불교인은 20대 인구의 18.5%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에 개신교인은 이보다 적은 16.5%를 차지하고 있고 천주교인은 4.7%로 10대와 거의 같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개신교인과 천주교인을 합하면 21%로 불교인구의 비율보다 높다.

30대는 10대와 함께 모든 연령층에서 기독교인의 비율이 가장 높은 연령층이다. 30대 가운데 17.9%가 개신교인이라고 밝히고 있고 천주교인의 비율도 5.6%로 가장 높게 나타난다. 개신교인과 천주교인을 합한 기독교인은 23%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30대 불교인은 25.4%로 10대 및 20대 보다 더 높은 비율을 나타내며, 개신교와 천주교를 합한 비율보다도 더 높다. 30대에 이르러 불교인의 비율이 기독교인의 비율을 넘어서고 있다. 또 30대에 이르러 무종교인의 비율은 50%로 이하로 감소하고 있다.

40대에 이르러 불교인의 비율이 30%에 이르고 있다. 개신교인은 15%, 천주교인은 4.9%로 기독교인의 비율이 20%에 못미치고 있다. 40대의 무종교인의 비율은 47%로 모든 연령층에서 가장 낮다.

50대와 60대에서도 불교인의 비율이 30~31.6%를 차지하고 개신교인의 비율은 13%대로 더 낮아져 있다. 천주교인의 비율도 4.3~4.5%로 50대와 60대가 비슷한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무종교인의 비율은 50대보다 60대에 0.7% 포인트 증가하고 있다.

70대 이상의 고령인구에서는 무종교인의 비율이 51%로 증가하고 있다. 반면에 불교인의 비율이 30% 이하로 감소하고 있고, 기독교인의 비율은 60대나 별 차이가 없다.

1995년에 이르면 종교의 연령구조가 10년 전에 비해 상당히 달라진 모습으로 나타난다. <표 3-4>를 보면 불교, 개신교, 천주교 등 기성 종교의 연령구조가 10년 전에 비해 약간 더 나이 든 구조로 변한 것을 알 수 있다. 불교, 개신교, 천주교 모두 10대와 2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감소하고 있다. 불교는 1985년에 비해 1995년에 10대의 비율이 4.1% 포인트, 개신교는 7% 포인트, 천주교는 5% 포인트가 감소하고 있다. 20대의 경우에도 불교는 3.7% 포인트, 개신교는 4.2% 포인트, 천주교는 5.8% 포인트나 감소하고 있다.

반면에 30대부터는 1985년에 비해 1995년의 경우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불교, 개신교, 천주교 모두 30대 이상의 연령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1985년보다 1995년에 크게 늘고 있다. 1995년에 이르러 개신교의 경우에도 50대 이상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18%에 육박하고 있고, 천주교는 20%에 달하고 있다. 불교의 경우 1995년에 50대 이상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28.5%로 역시 10년 전에 비해 크게 증가하고 있다.

<표 3-4> 7세 이상 인구의 연령별 종교분포: 1995

종교	-19	20-29	30-39	40-49	50-59	60-69	70+
불교	17.59 (16.76)	19.37 (15.01)	24.82 (21.57)	31.90 (18.15)	34.85 (14.30)	34.45 (9.22)	30.01 (4.99)
개신교	22.97 (27.78)	18.30 (18.02)	19.91 (21.97)	20.06 (14.50)	16.54 (8.62)	15.72 (5.34)	17.86 (3.77)
천주교	7.13 (25.09)	5.59 (16.01)	6.99 (22.45)	7.90 (16.61)	6.35 (9.63)	6.21 (6.14)	6.63 (4.08)
유교	0.18 (8.91)	0.27 (10.74)	0.25 (11.31)	0.45 (13.35)	0.97 (20.73)	1.58 (22.05)	1.48 (12.90)
원불교	0.17 (19.97)	0.14 (13.02)	0.17 (18.41)	0.23 (15.90)	0.29 (14.46)	0.34 (11.15)	0.35 (7.08)
천도교	0.06 (19.41)	0.06 (15.38)	0.07 (19.58)	0.07 (13.99)	0.09 (13.11)	0.12 (10.84)	0.14 (7.69)
대종교	0.02 (19.77)	0.02 (15.25)	0.02 (17.51)	0.03 (15.82)	0.03 (15.25)	0.04 (10.73)	0.03 (5.65)
대순진리회	0.11 (18.67)	0.15 (20.77)	0.16 (24.68)	0.15 (15.30)	0.16 (11.29)	0.13 (6.19)	0.11 (3.10)
기타	0.39 (21.33)	0.36 (15.93)	0.45 (22.60)	0.44 (14.51)	0.48 (11.27)	0.54 (8.34)	0.63 (6.02)
없음	51.37 (25.79)	55.74 (22.77)	47.16 (21.60)	38.77 (11.63)	40.24 (8.70)	40.87 (5.76)	42.77 (3.75)
합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주: 괄호 안은 종교별 연령 구성임
 자료: 1985, 1995 인구센서스 2% 표본 원자료

한국의 종교분포는 지역별로 큰 차이가 있다. 한국의 종교분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분포를 반드시 살펴보아야 한다. 다음 <표 3-5>와 <표 3-6>은 1985년과 1995년의 시도별 종교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표 3-5> 7세 이상 인구의 시도별 종교분포: 1985

시도	불교	기독교	천주교	유교	원불교	기타	없음
서울	19.90 (22.08)	24.77 (36.64)	6.77 (34.61)	0.51 (8.79)	0.18 (16.85)	0.59 (24.44)	47.29 (20.89)
부산	35.30 (14.10)	9.99 (5.33)	3.77 (6.94)	0.44 (2.73)	0.21 (7.42)	0.59 (8.80)	49.70 (7.91)
대구	29.98 (6.92)	11.21 (3.45)	5.95 (6.33)	0.30 (1.09)	0.07 (1.40)	0.94 (8.09)	51.54 (4.74)
인천	14.33 (2.16)	22.95 (4.62)	7.88 (5.48)	0.62 (1.46)	0.07 (0.92)	0.62 (3.51)	53.51 (3.21)
경기	19.06 (9.91)	19.55 (13.56)	5.65 (13.56)	2.54 (20.58)	0.13 (5.88)	0.65 (12.53)	52.42 (10.86)
강원	20.15 (3.97)	11.93 (3.13)	3.64 (3.30)	1.36 (4.16)	0.09 (1.49)	0.49 (3.58)	62.34 (4.89)
충북	18.76 (3.02)	10.83 (2.32)	4.01 (2.97)	0.71 (1.78)	0.09 (1.23)	0.21 (1.26)	65.39 (4.19)
충남	19.34 (6.58)	15.51 (7.04)	3.70 (5.81)	1.96 (10.39)	0.24 (7.20)	0.60 (7.61)	58.64 (7.95)
전북	8.92 (2.30)	19.02 (6.54)	3.75 (4.45)	0.71 (2.83)	1.34 (29.88)	0.34 (3.22)	65.93 (6.76)
전남	11.63 (5.01)	14.88 (8.54)	3.24 (6.43)	4.27 (28.57)	0.36 (13.47)	0.43 (6.92)	65.18 (11.17)
경북	28.06 (9.53)	10.14 (4.59)	2.77 (4.34)	2.09 (11.03)	0.16 (4.56)	0.60 (7.61)	56.17 (7.60)
경남	32.55 (12.65)	7.16 (3.71)	2.66 (4.76)	0.92 (5.55)	0.26 (8.82)	0.75 (10.87)	55.71 (8.62)
제주	31.69 (1.77)	7.16 (0.53)	3.96 (1.02)	1.22 (1.06)	0.18 (0.88)	0.75 (1.55)	55.05 (1.22)
합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주: 괄호 안은 종교별 시도 구성임
 자료: 1985, 1995 인구센서스 2% 표본 원자료

불교인구의 비율이 가장 높은 시도는 대구, 부산 및 경남, 경북 지역이다. 1985년에 부산 인구의 35.3%가 불교인이었고 무종교인이 49.7%였다. 즉 부산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무종교인 아니면 불교인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 정도다. 부산을 에워싸고 있는 경남지역도 무종교인의 비율이 55.7%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불교인으로 32.6%를 차지하고 있다. 대구의 경우에도 전체 인구의 30%가 불교인이고, 경북지역에

<표 3-6> 7세 이상 인구의 시도별 종교분포: 1995

시도	불교	기독교	천주교	유교	원불교	기타	없음
서울	19.57 (18.12)	26.56 (31.24)	8.57 (30.70)	0.27 (13.19)	0.15 (16.78)	0.56 (19.34)	43.92 (21.44)
부산	40.80 (14.24)	10.72 (4.75)	4.58 (5.90)	0.16 (2.93)	0.16 (6.76)	0.75 (9.77)	42.83 (7.88)
대구	35.26 (7.89)	11.52 (3.27)	6.59 (5.45)	0.20 (2.32)	0.07 (1.94)	0.92 (7.67)	45.44 (5.36)
인천	15.95 (3.29)	24.73 (6.48)	9.48 (7.23)	0.28 (3.04)	0.07 (1.82)	0.75 (5.75)	48.73 (5.30)
광주	16.12 (1.83)	22.24 (3.21)	9.43 (3.96)	0.53 (3.15)	0.32 (4.45)	0.61 (2.57)	50.76 (3.04)
대전	25.84 (2.89)	20.70 (2.94)	6.31 (2.61)	0.17 (0.97)	0.19 (2.63)	0.72 (2.99)	46.07 (2.72)
경기	20.10 (13.54)	23.88 (20.42)	7.94 (19.76)	0.44 (15.43)	0.10 (8.14)	0.83 (20.68)	46.70 (16.57)
강원	24.58 (3.30)	16.37 (2.79)	5.32 (2.64)	0.61 (4.28)	0.12 (2.00)	0.58 (2.89)	52.42 (3.71)
충북	25.84 (3.24)	14.92 (2.37)	5.83 (2.70)	0.28 (1.80)	0.11 (1.63)	0.50 (2.34)	52.53 (3.47)
충남	20.95 (3.35)	18.65 (3.79)	4.84 (2.86)	0.99 (8.29)	0.16 (3.19)	0.51 (3.01)	53.90 (4.55)
전북	13.82 (2.38)	25.86 (5.67)	5.91 (3.77)	0.80 (7.19)	1.64 (34.44)	0.57 (3.66)	51.40 (4.67)
전남	15.33 (2.87)	20.41 (4.85)	4.64 (3.21)	1.72 (16.77)	0.36 (8.08)	0.48 (3.33)	57.06 (5.63)
경북	32.90 (7.82)	12.45 (3.76)	3.96 (3.48)	0.83 (10.26)	0.03 (1.00)	0.57 (5.06)	49.25 (6.17)
경남	39.66 (13.53)	9.29 (4.02)	3.56 (4.49)	0.52 (9.29)	0.17 (6.89)	0.75 (9.47)	46.06 (8.28)
제주	36.06 (1.70)	6.95 (0.42)	7.15 (1.24)	0.44 (1.08)	0.04 (0.25)	0.84 (1.48)	48.52 (1.21)
합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주: 괄호 안은 종교별 시도 구성임

자료: 1985, 1995 인구센서스 2% 표본 원자료

서도 전체 인구의 28%의 불교인인 등 경상도 지역의 인구 가운데 불교인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1995년에 더 심화되고 있다. 1995년에 부산의 불교인구 비율은 40.8%로 훨씬 더 높아지고 있고 반면에 무종교인의 비율은 42.8%로 감소하고 있다. 경남지역의 경우에도 1985년에 32.6%의 불교인구가 1995년에는 39.7%로 증가하고 있다. 대구, 경북의 경우에도 1985년

에 비해 1995년에 불교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더 증가하고 있다. 즉 경상도 지역에서 불교인구는 계속 증가 추세를 기록하고 있다.

전국에서 불교인구의 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전라도 지역이다. 1985년에 전북지역에서 불교인구의 비율은 8.9%에 불과하다. 그러나 1995년에는 불교인구가 전북지역에서도 13.8%로 증가하고 있다. 전남의 경우 1985년에 불교인구가 11.6%였는데 이 역시 1995년에 15.3%로 증가하고 있다. 그래도 경상도 지역에 비해 전라도 지역의 불교인구 비율은 매우 낮다.

반면에 전라도 지역은 기독교인구의 비율이 높다. 1985년에 전북지역의 개신교인 비율은 19%였는데 1995년에는 25.9%로 증가한다. 마찬가지로 전남지역의 개신교인 비율은 1985년 14.5에서 1995년 20%로 증가하면서 불교인구보다 더 높은 비율을 기록한다.

서울과 경기지역에서도 기독교 인구가 더 높게 나타난다. 서울의 경우 1985년에 개신교인은 24.8%이고 불교인은 19.9%인데 1995년에는 개신교인이 26.6%로 증가하는 반면 불교인은 19.6%로 소폭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인천지역의 경우에도 1985년에 기독교인이 23%이고 불교인이 14.3%였는데 1995년에는 기독교인 24.7%, 불교인 16%로 기독교인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IV. 가구 수준에서 한국의 종교분포

이 절에서는 가구 수준에서 종교구성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살펴본다.

1. 부부의 종교 일치와 불일치

다음 <표 4-1>은 1985년과 1995년 현재 한국의 부부 사이에 얼마나 종교가 일치하고 있는지 아니면 불일치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²⁾

2) 종교의 일치도를 분석하기 위해서 이 연구에서는 종교가 없는 경우도 무종교라는 범주로 간주하였다. 따라서 종교가 없는 사람들끼리는 종교가 일치한다고 보고, 종교가 없는 사람과 기성종교를 지닌 사람이 함께 있으면 종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로 간주하였다.

<표 4-1> 부부사이의 종교 일치 및 불일치

일치여부	종교 구성	1985	1995
일치	무	44.6	38.9
	불교	23.6	26.0
	개신교	13.5	16.7
	천주교	4.0	5.7
	기타	2.3	1.3
불일치	무+ 불교	4.6	3.9
	무+개신교	4.2	4.3
	무+천주교	1.5	2.1
	기타	1.7	1.1
합		100.0	100.0

자료: 1985, 1995 인구센서스 2% 표본 원자료

<표 4-1>에 따르면 1985년에 부부 모두 종교가 없는 부부는 전체 부부의 44.6%를 차지하고 있다. 부부가 불교로 일치하는 부부는 23.6%, 개신교로 일치하는 부부의 비율은 13.5%, 천주교로 일치하는 비율은 4.0%이다. 전체 부부의 88%가 종교가 없음으로 일치하거나 종교가 있으면서 동일한 종교를 믿는 부부들이다.

반면에 부부간에 종교가 일치하지 않는 부부는 12%인데 이중 부부 가운데 한 쪽은 무종교인이지만 다른 한 쪽은 불교인인 경우가 4.6%, 개신교인인 경우가 4.2%, 천주교인인 경우가 1.5%로 나타나고 있다.

1995년의 경우 무종교인으로 일치하는 부부의 비율이 크게 감소한다. 1995년 현재 부부 모두 종교가 없는 부부는 전체 부부의 38.9%를 차지하고 있다. 두 부부가 모두 불교인 경우는 전체 부부 가운데 26%, 그리고 부부 모두 천주교를 믿는 경우가 5.7%를 차지하고 있다. 종합하면 1995년 현재 전체 부부 가운데 종교가 없거나 혹은 종교가 있으면서 동일한 종교를 공유하고 있는 부부는 전체 부부 가운데 88.6%를 차지하고 있다. 부부 10쌍중 거의 9쌍의 부부는 종교가 없거나 종교가 있다면 동일한 종교를 공유하고 있는 셈이다.

반면에 1995년에 부부 사이에 종교가 서로 다른 부부는 전체 부부 가운데 11%를 차지하고 있다. 10쌍의 부부 가운데 한 쌍 정도의 부부만이 종교가 다른 셈이다. 부부중 한 쪽은 무종교, 다른 한 쪽은 불교를 믿는 경우가 전체 부부의

4%이고, 무종교와 개신교를 믿는 부부가 4.3%, 그리고 무종교와 천주교를 믿는 부부가 2.1%를 차지하고 있다. 부부가 각각 불교, 개신교, 천주교 등 서로 다른 기성 종교를 믿거나 그 외의 종교를 믿는 부부의 비율은 거의 무시할 수 있는 정도임을 알 수 있다.

2. 가구내 종교 일치 및 불일치

이 소절에서는 가구내 구성원들 사이에 종교가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를 살펴해보려고 한다. 다음 <표 4-2>는 부부 및 다른 가구구성원을 모두 포함하여 가구내에서 종교의 일치 및 불일치 정도를 보여주고 있다.

<표 4-2> 가구구성원들의 종교 일치 및 불일치

일치여부	종교 구성	1985	1995
일치	무	40.8	36.2
	불교	12.2	16.6
	개신교	10.5	14.7
	천주교	3.1	4.8
	기타	1.1	0.9
불일치	무+불교	15.4	13.0
	무+개신교	9.1	7.7
	무+천주교	2.5	3.0
	불교+개신교	0.7	0.7
	불교+천주교	0.1	0.2
	개신교+천주교	0.3	0.2
	기타	4.2	2.0
합		100.0	100.0

자료: 1985, 1995 인구센서스 2% 표본 원자료

<표 4-2>에 따르면 1985년의 경우 가구원 모두 종교가 없는 무종교인으로 일치하는 비율은 전체 가구 가운데 41%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에 가구원이 모두 불교로 일치하는 가구의 비율은 12.2%, 개신교로 일치하는 비율은 10.5%이다. 가구원 모두 천주교인 경우는 전체 가구의 3.1%를 차지하고 있다. 전체 가구 가운데 67.7%의 가구가 가구원의 종교가 일치하는 경우이다. 반면에 가구원의 종교가 무종교와 불교로 섞여 있는 가구의 비율은 전체 가구 가운데 15.4%를

차지하고 있다. 무종교와 개신교가 섞여 있는 가구의 비율은 9.1%, 무종교와 천주교의 가구 비율은 9.1%이다.

1995년의 경우 어떤 가구의 구성원이 모두 종교가 없는 가구는 전체 가구의 36%를 차지하여 10년 전보다 5% 포인트나 감소하고 있다. 가구구성원 모두 불교를 믿는다고 응답한 가구는 전체 가구 가운데 17%를 차지하여 10년 전에 비해 4.4% 포인트가 증가하고 있다. 가구구성원이 모두 개신교인 가구는 14.7%로 10년전에 비해 4.2% 포인트 증가하고 있으며, 천주교인 가구는 4.8%를 차지하여 1.7% 포인트 증가하고 있다. 기성 종교 외의 한 종교를 가구구성원이 모두 공유하고 있는 가구는 전체 가구 가운데 약 1%를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가구구성원들이 모두 종교가 없거나, 종교가 있는 경우 동일한 종교를 지녀 가구내에서 종교의 동질성을 유지하고 있는 가구는 전체 가구 가운데 73.2%에 달하고 있다. 10년 전에 비해 가구의 종교적 동질성의 비율이 5.5% 포인트나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1995년에 가구구성원들 사이에 둘 이상의 종교가 있는 가구는 전체 가구의 26.8%를 차지하고 있다. 가구내에서 종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무종교와 불교로만 이루어진 가구가 전체 가구의 13%, 무종교와 개신교로 이루어진 가구가 7.7%, 무종교와 천주교로 이루어진 가구가 3%에 달하고 있다.

<표 4-1>의 부부사이의 종교일치도 분석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한 가구 내에 기성 종교가 두 개 이상 혼재되어 있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불교와 기독교가 공존하고 있는 가구의 비율은 전체 가구 가운데 0.7%이고 불교와 천주교가 함께 있는 가구는 0.2%, 그리고 개신교와 천주교가 혼재해 있는 가구도 0.2%에 그치고 있다.

<표 4-2>에 나타난 결과를 <표 4-1>에 나타난 결과와 비교해보면 가구내 구성원의 종교일치도는 부부의 종교일치도보다 훨씬 낮음을 알 수 있다. 부부의 종교일치도는 부부 10쌍 중 아홉쌍에 달하고 있지만 가구구성원의 종교일치도는 이보다는 낮아 1985년의 경우에는 100 가구당 68가구, 1995년에는 100가구당 73 가구만이 종교의 일치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부부사이에서와 마찬가지로 가구내에서 종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두 개 이상의 기성 종교가 혼재되

어 있는 경우는 극히 적고 무종교와 하나의 기성 종교의 결합이 대부분임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부부의 종교 불일치도에 비해 가구내 종교의 불일치도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말에서 받을 수 있는 부정적 인상, 즉 종교가 다름으로써 겪는 갈등 등의 문제는 생각만큼 그리 크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알 수 있다.

원칙적으로는 한국 사회에서 개인이 종교를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표 4-1>과 <표 4-2>의 결과는 이러한 생각이 옳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 부부 및 가구내 종교의 동질성은 매우 높다. 부부 혹은 가구내에서 종교가 이질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경우에도 대부분의 경우는 무종교인의 존재에 의해서이다. 무종교 아닌 서로 다른 종교가 부부 혹은 가구내에 혼재해서 종교의 불일치율을 높이는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다. 무종교 집안에 종교를 택하는 사람이 생겨서 부부 혹은 가구내 종교 불일치가 일어나거나, 종교의 동질성이 확보되었던 부부나 가구내에서 누군가가 무종교 혹은 종교를 선택하면서 종교의 불일치가 생겨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나타나고 있다.

3. 지역별 부부 및 가족내 종교의 일치와 불일치

다음 <표 4-3>은 1995년의 경우 지역별로 부부내 종교일치도 및 가구내 구성원의 종교일치도 사이의 비유사성지수를 보여주고 있다.

<표 4-3>을 보면 비유사성 지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경남(23.4), 부산(22.0), 대구(19.7), 제주(19), 대전(17.0), 경북(16.5)의 순으로 나타난다. 이들 지역 가운데 경남, 부산, 대구, 제주, 경북은 모두 불교가 강한 지역이다. 이들 지역에서 부부는 모두 불교인으로 종교의 일치도가 높지만 가구내 구성원들이 모두 불교인으로 종교가 일치하는 정도는 현격하게 낮아지는 특징을 가진 곳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4-3> 부부의 종교분포 및 가구내 종교분포에 따른 비유사성 지수, 1995

지역	비유사성 지수
서울	13.5
부산	22.0
대구	19.7
인천	11.1
광주	12.3
대전	17.0
경기	12.2
강원	11.4
충북	15.7
충남	13.6
전북	13.2
전남	12.7
경북	16.5
경남	23.4
제주	19.0

자료: 1995 인구센서스 2% 표본 원자료

V. 결 론

이 연구에 따르면 한국의 부부 및 가구내에는 강한 종교적 동질성이 존재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부부 혹은 가구구성원들은 모두 종교가 없는 것으로 종교적 성향이 일치하거나, 종교가 있다면 동일한 종교를 지니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부부의 종교 일치도는 매우 높으며 가구내 종교일치도도 비교적 높게 나타난다. 부부의 종교일치도에 비해 가구내 종교일치도가 더 낮게 나타나는데, 대부분의 종교의 불일치는 무종교로 인해 나타난다. 즉, 무종교+불교, 무종교+개신교, 무종교+천주교 등 무종교와 하나의 기성 종교의 혼합으로 이루어진 종교불일치가 가장 흔한 종교불일치 유형이다.

참고문헌

- 강인철. 1997. "한국 무종교인에 관한 연구" 사회와 역사. 제52집. 문학과 지성사.
- 노치준. 1998. 한국 개신교사회학. 한울.
- 은기수. 2002. "한국 가족의 종교정체성: 종교백화점?" 호산 김경동 교수 정년기념논총위원회 엮음. 진단과 대응의 사회학. 박영사.
- 전성표. 2001. "우리 사회 종교갈등의 실태와 잠재력: 1991-2000" 한국사회학회 2001년도 전기사회학대회 발표논문.
- 최종철. 1996. "종교의 일상사회학" 일상문화연구회 엮음. 한국인의 일상문화. 한울.
- 통계청. 1997. 1995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제1권 전국편. 통계청.
- _____. 1995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 원자료.

<요약자료>

한국의 종교

은 기 수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 1985년과 1995년 사이에 우리나라 7세 이상 인구 가운데 무종교인은 55%에서 47%로 감소하였음. 반면에 불교인은 22%에서 25%로, 개신교인은 16%에서 20%로, 천주교인은 5%에서 7%로 증가하여 종교를 믿는 인구가 증가하였음.
2. 유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에서 남성보다는 여성이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그러나 거의 모든 종교에서 남성 대 여성의 비율은 거의 비슷함.
3. 10대와 20대 등 젊은 연령층에서는 무종교인의 비율이 높음. 그러나 나이가 증가하면서 종교인구가 늘어남. 불교, 개신교, 천주교 가운데서 불교를 믿는 인구 가운데 고령인구의 비율이 가장 높고, 개신교는 세 종교 중 가장 젊은 인구구조를 지니고 있음.
4. 우리나라는 지역에 따른 종교분포가 뚜렷함. 불교는 부산, 대구를 비롯한 경상도 지역에 불교인구가 많음. 반면에 기독교는 서울, 인천, 경기 및 전라도 지역에서 기독교 인구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5. 우리나라 부부 사이에는 종교의 일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부부 10쌍 중 9쌍은 종교가 일치하고 있음.
6. 가구 수준에서 전체 가구원의 종교가 일치하는 경우는 부부의 종교일치도보다는 낮음. 그러나 가구원의 종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도 불교, 개신교, 천주교 등의 기성종교가 섞여 있는 경우보다는 기성 종교 하나 및 무종교인이 함께 사는 경우의 불일치가 대부분의 형태임.

제15장

한국의 정보화

최 순
(동아대학교)

I. 연구목적 및 배경

지식기반사회에서 정보화는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이 가능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여러 차원에서 많은 혜택의 기회를 준다. 그러나 정보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는 정보화의 당초지향과는 달리 정보통신을 활용할 수 없는 정보소외계층이 생겨나게 된다. 학자들은 이 같은 정보매체의 접근과 이용의 차별화로 인해 또 다른 형태의 사회적 불평등이 나타나게 된다고 전망한다. 이처럼 정보격차현상은 경제의 생산성과 정보통신체제 구축을 통한 생산적 복지의 실현가능성을 저해시키며, 동시에 사회통합의 문제를 야기하는 것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정보격차문제는 정보화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관심사의 하나가 된다. 따라서 어느 사회에서나 정보화 사회로 진입하는 단계에서는 정보격차의 해소 문제가 가장 기본적으로 고려되는 정책적 관심사가 되고 있다.

그러나 정보격차의 해소는 정보격차현상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 점에 착안하여 여러 기관에서 정보화와 관련 된 일련의 내용에 관한 전국규모의 표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한국에서 정보화와 관련된 실태조사는 1980년대 후반부터 간헐적으로 수행되기는 했지만, 2000년을 전후한 시기부터 본격적으로 조사·집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조사기관이 발표하고 있는 한국의 정보화 수준과 관련된 일련의 통계 정

보를 접하는 경우, 각 조사기관이 발표하는 통계수치가 서로 일치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사의 내용과 방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은 크게 당황할 수밖에 없다. 이 상황에서 2000년 인구주택 총 조사에서 정보화 관련 항목을 기본조사항목에 포함시켜 조사했다는 사실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2000년 인구주택 총 조사 자료의 재분석은 한국의 정보화 수준과 정보격차와 관련하여 일반화할 수 있는 결론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점을 감안하여 이 연구는 2000년에 실시된 센서스 자료 가운데 정보화 관련 자료를 재분석하고, 그 결과를 유사한 시점에 조사된 다른 조사 자료와의 비교검토를 통해 일반화할 수 있는 한국사회의 정보화 수준과 인구의 특성에 따른 정보화 격차를 기술하는데 일차적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이 글에서는 먼저 전반적인 정보화의 접근수준을 측정하는데 이용된 조사문항과 표본조사 자료의 비교·검토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의 정보화 수준이 어느 수준에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게 된다. 그 다음 한국에서는 현재 구체적으로 어떤 인구층이 정보화를 선도하고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정보화 접근수준을 측정하여 비교·분석한다. 이 과정에서 정보화를 선도하는 사람들과 비교적 소외되고 있는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람들인지 여부를 분석해 보게 된다. 그밖에 이 글에서는 사회·인구학적 특성이 정보화수준의 차별현상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해 보게 된다. 이 분석은 인구특성에 따른 정보격차현상이 혁신(innovation)의 초기 전과단계에서 관찰되는 일시적 현상인지 아니면 구조화되는 과정에 있는지 여부에 초점을 두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분석을 통해 얻게 되는 지식과 정보는 앞으로 한국의 정보화 수준과 격차, 그리고 이들 변화를 관찰하는데 기준정보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II. 자료 및 분석

이 연구는 기본적으로 2000년 인구주택 총 조사에서 수집·집계된 정보화 관련 자료를 분석하게 된다. 그러나 2000년 한국의 인구·주택센서스에서 조사된 정보화 관련 조사항목은 인구센서스의 특성상 몇 개의 조사항목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한국의 정보화 수준 및 사회·인구학적 특성별 정보화 격차와 관련된 실상을 분석할 수 있는 인구센서스 자료는 가구원별로 컴퓨터와 인터넷 활용상태, 그리고 개인휴대용 통신기기 보유여부 등을 알아보기 위한 3개의 기본질문을 하고 있으며, 그밖에 가구별로 팩스, 인터넷 회선, 케이블 TV 등 통신기기 보유현황을 조사하고 있다.¹⁾

이 경우, 컴퓨터와 인터넷의 활용상태는 완전하지는 않지만 정보이용 및 활용능력 지표로서, 그리고 개인 휴대용 통신기기 보유여부 및 가구별 정보통신기기 보유현황은 정보의 접근성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서 통계적 의의를 갖는다. 다른 사회지표와 마찬가지로 사회의 정보화수준과 격차를 관찰할 수 있는 정보화 지표는 최소한 단순성과 표준화, 그리고 포괄성이란 특성을 가져야 한다. 이 점을 감안하면 2000년 인구주택 총 조사에

1) 2000년 인구주택 총 조사에서 포함된 이들 조사항목은 각각 다음과 같은 질문을 통해 조사되었다.

- ① ①①·① 컴퓨터 활용상태: 평소 컴퓨터(PC)를 얼마나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까?
(2000년 인구센서스에서는 학교, 직장 및 PC방에서 사용하는 것도 포함되며, 4개월 이상에 1번 정도 사용하는 경우는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정의했음)
- ② · 인터넷 활용상태: 평소 인터넷을 얼마나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까?
(2000년 인구센서스에서는 학교, 직장 및 PC방에서 사용하는 것과 휴대폰을 통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했으며, 4개월 이상에 1번 정도 사용하는 경우는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정의했음)
- ③ · 개인휴대용 통신기기보유여부: 이동전화기나 무선호출기(삐삐)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의 경우, 사용하지 않은 이동전화기나 무선호출기는 제외하는 것으로 정의했음)
- ④ · 가구별 정보통신기기 보유현황: 이 택에서 보유하거나 이용하고 있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통신기기로서는 팩스, 인터넷회선, 케이블TV, 지역유선방송, 위성방송수신기, 일반전화기, 개인용 컴퓨터 등이 제시되고 있음)

포함된 항목 중 컴퓨터와 인터넷의 활용상태는 주로 지표의 포괄성과 관련하여 취약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년 주기로 반복 조사되는 인구센서스의 주요항목으로 위의 네 항목이 조사된다는 사실은 아주 큰 의미를 갖는다. 정보의 접근 및 활용능력은 정보사회의 불평등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정보의 활용 능력에 대한 경험적인 자료가 부족한 현실에서 정보 활용을 통한 불평등현상이 사회전반에 걸쳐서 폭넓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는 어렵다. 이 상황에서 인구주택 총 조사의 기본 조사항목으로서 특히 컴퓨터 및 인터넷의 활용상태가 포함되었다는 사실은 이 자료가 한 사회의 정보화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로서는 제한성을 갖고 있지만 정보화 수준과 불평등현상을 주기적으로 관찰하고, 평가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이 조사항목은 앞으로 계속 인구센서스의 기본조사항목으로 조사·집계될 것이기 때문에 2000년 인구주택 총 조사자료의 분석은 다음에 실시될 일련의 센서스자료나 기타 표본조사자료를 통해 한국의 정보화 수준의 변화를 관찰하는데 비교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통계정보가 된다.

지금까지 한국에서 정보화와 관련된 전국규모의 표본조사는 거의 대부분 한국정보문화센터와 한국인터넷정보센터, 그리고 통계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들 일련의 조사는 한국의 정보화수준과 당면한 문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많은 정보를 제공해 준다. 동시에 이들 조사를 통해 발표되는 몇몇 통계정보는 조사모집단의 정의가 다르고, 조사에서 측정된 조사문항이 다르기 때문에 조사결과를 비교하는데 혼선을 야기하기도 한다. 이 상황에서 표본조사이기는 하지만, 인구주택 총 조사는 가구내의 전 가구원에 대한 정보를 조사하여 집계하고 있다. 그러므로 2000년 인구주택 총 조사 자료는 분석인구의 정의여하에 따라 다양한 통계정보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 일련의 통계적 정보가 갖는 혼선을 불식시킬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 준다. 따라서 2000년 인구주택 총 조사자료는 정보화와 관련하여 잡다하게 조사·집계되어 발표되는 일련의 통계정보를 평가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Ⅲ. 분석결과

1. 정보화의 접근수준

정보화의 접근수준은 컴퓨터나 인터넷은 물론 각종 정보통신기기의 보유여부와 이용경험 또는 능력 등 정보매체에의 접근가능성과 빈도를 기초로 측정된다. <표15-1>를 보면 누구나 한국에서는 개인용 컴퓨터의 보급이 최근에 이르면서 크게 늘어나고 있음을 알게 된다. 동시에 이 표를 접하는 사람들은 이 조사를 수행한 두 기관(한국정보문화센터 및 통계청)의 통계수치가 서로간에 일관된 흐름을 갖지 못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비슷한 시기에 조사된 동일한 조사항목에 대한 두 조사간 차이는 대체로 표본오차와 계통적 오차(두 조사의 표본설계로부터 연유하는 오차 및 도구의 효과 등), 그리고 두 조사의 실시시점의 차이에 따른 실제의 변동의 결과로 추정될 수 있다. 먼저 이들 두 기관에서 실시된 조사에서 사용한 조사항목을 비교해 보았을 때, 컴퓨터 보유가구를 측정하기 위하여 제시된 질문은 한국정보문화센터의 2001년 국민정보격차 및 정보생활실태조사와 통계청의 정보화실태조사를 제외한 일련의 조사에서 사용된 질문은 거의 동일했다.²⁾ 이 점을 감안하면 두 기관의 조사결과가 시점별로 일관성을 갖지 못한 결과를 나타내는 것을 단순히 도구효과에 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통계청에서 실시한 일련의 표본조사의 경우, 가구를 표집하고 그 가구 내에 살고 있는 모든 가구 구성원의 정보를 조사·집계하고 있다.

3) 가구나 컴퓨터보유여부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질문은 2000년까지 한국정보문화센터의 정보화 실태조사와 통계청의 2000년 인구주택 총 조사의 경우는 거의 동일하다. 그러나 통계청의 사회통계에서 사용된 질문과 2001년 이후 한국정보문화센터에서 조사한 정보화 실태조사에서 사용된 질문은 이들 조사의 경우와 약간의 차이가 있다. 2000년 인구주택 총 조사와 한국정보문화센터에서 2000년까지 사용된 질문은 “다음 중 귀하의 택(또는 가정)에서 보유하고 계시거나 이용하시는 것들이 있습니까?” 하는 질문과 더불어 각종 정보화기기를 선택지로 제시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한국정보문화센터의 2001년 국민정보생활 및 격차현황실태조사와 통계청에서 실시한 정보화실태조사에서는 집에 컴퓨터가 있는지 여부를 직접적으로 질문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한국정보문화센터에서 실시한 일련의 조사에서는 표본 가구의 수와 응답자 수가 동일하며, 표본으로 선정된 가구와 가구원의 관계, 그리고 가구원의 표집 절차에 대한 일체의 설명이 없다(한국정보문화센터, 1998; 2000; 2001).³⁾ 이 사실로 미루어 보아 한국정보문화센터에서 실시된 표본조사의 경우, 적어도 가구사항에 관한 일체의 통계정보는 상당한 수준의 계통적 오류가 개입되었을 가능성을 암시해 준다. 따라서 한국정보문화센터의 컴퓨터 보유가구와 관련된 통계자료는 변화의 흐름만을 반영할 뿐, 전체적인 보유상황을 기술하는데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일련의 문제점을 고려할 때, 한국의 경우 가구 당 컴퓨터 보유율은 대체로 2000년 하반기에 50%를 넘어섰으며 2002년 현재로는 60%를 약간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될 수 있다.

컴퓨터 보유율과 더불어 정보화의 접근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는 컴퓨터나 인터넷의 이용여부, 또는 각종 정보통신기기의 이용여부가 중요한 지표로 활용된다. 팩스나 인터넷 전용선, 케이블TV 등 가구단위로 설치가 필요한 정보통신기기의 경우, 인구집단의 연령정의와 무관하게 각 집단별로 비교적 유사한 백분율을 나타낸다. 그러나 컴퓨터 기기는 물론 컴퓨터나 인터넷의 이용, 개인휴대용 전화기 등처럼 개인의 속성에 따라 이용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지표는 인구집단의 연령정의 여하에 따라 상당한 정도의 차이를 나타낸다. 이러한 차이는 컴퓨터나 인터넷, 그리고 이동전화기 사용자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그 차이는 이들 기기의 이용능력이 연령과 밀접하게 관련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 조사항목을 기초로 지표를 구성하는 경우 인구의 연령구성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정보통신기기의 활용은 최소한 문자해독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통계를 수집하고 집계하는 과정에서는 전체인구를 기준인구로

4) 조사보고서를 보면 표본은 단지 조사모집단(예컨대, 전국 13-64세의 남녀 000명 등)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선정절차에 대한 일체의 설명이 없다. 이들 일련의 조사보고서와 조사표를 검토해 보았을 때, 이 조사에서 가구사항은 응답자 개인을 선택하고 그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에 대해 질문한 결과로 보여진다.

이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지표구성인구의 연령을 표준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령을 표준화할 경우, 상한선은 개방적으로 그대로 열어두는 대신 하한선만 정의하는 것이 변화를 측정하는데 유용한 지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2002년 정보화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는 가구는 전체가구의 60.1%를 차지하고 있으며(통계청, 2002: 5), 컴퓨터 보유가구의 67.8%가 인터넷 전용회선이나 모뎀 등 통신장비를 장착하고 있음에 비추어 이제는 컴퓨터도 각 가정에서 일반전화기 못지않게 중요한 통신장비로 자리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0년 인구주택 총조사결과를 보면 6세 이상 인구 중 컴퓨터와 인터넷이용자가 각각 51.9%와 42.2%를 차지하고 있다(표15-2 참조). 2002년에는 이 인구 중 컴퓨터의 사용이 가능한 인구의 비율이 63.0%나 되며 그 중에서 94.3%(6세 이상 인구 전체의 59.4%)가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인구이다(통계청, 2002: 6). 이러한 일련의 사실로 미루어 보아 최근 한국사회는 빠른 속도로 정보화사회로 재편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컴퓨터와 인터넷의 이용자들

인구특성에 따라 컴퓨터와 인터넷 이용자를 분석해 보면 컴퓨터나 인터넷 이용자는 모두 시 지역(동)에 거주하는 인구가 읍이나 면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보다 비율이 높으며, 가구형태별로는 비농어가 인구가 농어가 인구에 비해 이용률이 높다. 성별로는 여자보다는 남자, 그리고 연령이 어릴수록 이용률이 높다. 특히 컴퓨터나 인터넷 사용자의 연령별 이용률을 보면 30대 미만의 인구의 이용률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으며, 30대 인구의 이용률은 30대 미만보다는 낮지만 40대 이상인구에 비해서는 훨씬 높다(표15-3). 이 사실은 이 연령층의 인구의 많은 비율이 재학생 인구로서, 또는 젊은 직장인으로서 교육이나 직업상의 필요성 등으로

인해 컴퓨터나 인터넷에 접근할 기회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해 볼 수 있다.

한국에서 컴퓨터와 인터넷 사용은 대학이상 교육을 받고 있는 인구 층에서, 그리고 전문관리직과 준 전문직 종사자, 그리고 사무직종사자 등 화이트·칼러적 성격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업에서 압도적으로 높다(표15-4). 연령별로 컴퓨터나 인터넷을 주로 이용하는 계층이 30대 미만의 연령층에서 가장 높다는 점, 그리고 이 표에서 보는 바처럼 대학이상 교육을 받은 인구에서 압도적으로 높다는 사실은 이 연령층을 구성하는 인구의 많은 부분이 각급 학교에 재학중인 인구로 구성되었을 가능성을 암시해 준다. 동시에 대학이상 교육을 받은 인구에서 컴퓨터와 인터넷의 이용률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사실은 전문관리직, 준 전문직, 그리고 사무직에 종사하는 인구 중에서 컴퓨터나 인터넷의 이용률이 높다는 점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한국에서 컴퓨터나 인터넷의 이용은 학교교육과 연관되어 컴퓨터나 인터넷의 접근기회가 있거나, 직장에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컴퓨터나 인터넷을 이용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음을 시사해 준다.

먼저 6세 이상 전체인구를 학생인구와 일반인구로 분리시켜 그 구성비율을 보면 학생인구⁴⁾는 전체 인구의 28%가 된다. 그러나 학생인구의 대부분이 30세 미만의 연령에 속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연령대의 컴퓨터나 인터넷 이용자는 대부분이 학생인구로 구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학생인구는 초·중등학교 교육을 받은 경우 그 비율이 높으며,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간에서는 그 비율이 다소 떨어질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므로 교육수준별 컴퓨터나 인터넷의 이용률을 추정하여 그것을 기초로 교육수준에 따른 정보화 격차를 기술하고 해석할 경우 해석상의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있다. 이 점을 감안하여 교육수준별로 일반인구와 학생인구간의 컴퓨터나 인터넷의 이용률을 비교해 보았으며, 전체적으로 학

4) 여기서 학생인구는 각급 학교에 재학중인 인구뿐만 아니라 휴학중인 인구까지 포함한 인구를 말함.

생을 제외한 일반인구는 컴퓨터사용능력이 있는 인구가 39.9%인데 반해 학생인구는 무려 88.2%나 되며, 이러한 차이는 인터넷의 경우도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컴퓨터와 인터넷이용자를 교육수준별로 비교해 보면 교육수준에 따른 격차는 학생인구에 비해 일반인구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학생인구의 경우, 초등학교 학생의 컴퓨터나 인터넷 이용률은 중학이상에 재학중이거나 휴학중인 인구의 이용률에 비해 약간 떨어지고 있으나 그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다. 이 차이는 컴퓨터나 인터넷의 이용경험이 있는 사람의 경우뿐만 아니라 매일 컴퓨터나 인터넷을 이용하는 경우도 유사한 유형을 보여준다. 이에 반해 일반인구의 경우 이와는 다른 유형을 나타낸다. 컴퓨터 이용경험이 있는 인구의 비율은 전체적으로 39.9%에 불과하나, 이용경험자의 교육수준을 보면 학교를 다니지 않은 인구는 9.4%, 초등학교만을 다닌 경험이 있는 인구에서는 이율이 2.3%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나 중학교의 경우는 10.8%, 고등학교는 44.2%로 높아지며, 대학(4년제 미만)의 경우는 다닌 학교의 수준의 차이에 따라 76.0%에서 90.6%로 크게 높아진다. 연령에 따른 이러한 유형은 인터넷 이용경험이 있는 경우는 물론, 컴퓨터나 인터넷을 거의 매일 이용하는 경우도 단지 수준의 차이만 있을 뿐 유사한 패턴을 나타낸다.

이러한 일련의 결과는 적어도 학생을 제외한 일반인구의 경우 컴퓨터나 인터넷의 이용자가 극히 일부의 특정 인구 층에 몰려 있을 가능성을 시사해 준다. 학생을 제외한 일반인구의 경우, 컴퓨터나 인터넷의 이용능력이나 일상적인 이용은 이러한 혁신의 수용을 필요로 하는 경우 높아질 수 있는 것이다. 이 경우 필요성은 각자의 직업상의 지위와 역할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실제로 <표15-4>를 보면 전문관리직종사자나 준 전문직, 사무직 종사자의 경우 80% 이상이 컴퓨터 이용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인터넷 이용능력을 갖추고 있는 인구의 비율도 70%를 넘어서고 있다. 이들 집단의 경우, 거의 매일 컴퓨터를 이용하는 인구는 60%를 넘으며, 인터넷을 이용하는 인구도 50%에 근접하고 있다. 이

에 반해 농림·어업, 단순노무직 및 서비스 종사자는 이들 인구에 비하면 극히 얼마 되지 않는 비율의 인구만이 컴퓨터나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을 뿐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컴퓨터나 인터넷 이용자이며, 어떤 사람이 이들로부터 가장 소외된 집단인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학생인구를 제외한 20세 이상 성인인구를 중심으로 그들의 직업에 따라 컴퓨터와 인터넷 이용자를 분석해 보았다. 컴퓨터이용 경험율이 높은 집단은 컴퓨터관련 전문가(98.1%), 컴퓨터관련 준 전문가(95.9%), 교육전문가(91.5%) 등의 순으로 높은 경험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들은 모두 90% 이상이 컴퓨터 이용경험이 있는 인구집단이다. 이들의 뒤를 이어 과학전문가(89.3%), 행정·경영 및 재정전문가(89.3%), 보건의료전문가(88.5%), 공학전문가(87.4%), 보안서비스 종사자(86.4%), 기타 준전문가(86.1%) 및 문화·예술 및 방송관련전문가(85.1%) 등이 뒤따른다. 이처럼 컴퓨터 이용률이 높은 직업은 실제로 컴퓨터를 이용해 업무를 수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직업에 집중되고 있다.

이와는 달리 컴퓨터이용률이 낮은 집단은 농림·어업관련 단순노무자(5.6%)가 가장 낮고, 농업숙련노동자(6.3%), 어업숙련노동자(9.0%) 등이 10%미만의 이용률을 보이고 있다. 그 뒤를 이어 광업·건설·운송관련 단순노무직(15.8%), 기타 기능원 및 관련종사자(21.3%), 서비스관련 단순노무직(21.5%), 조리·음식서비스(22.0%), 제조관련 단순노무직(22.6%), 임업숙련종사자(22.7%) 등의 순으로 낮다. 이들 직종의 직업종사자들은 전체인구 중 컴퓨터 이용가능자가 25%가 안 되는 인구집단이다. 이들 직업종사자들이 갖는 공통점은 일상적인 직업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컴퓨터사용이 별로 필요하지 않은 직업종사자란 점이다. 이러한 일련의 결과는 적어도 성인인구에서는 직장과 같은 일터의 작업환경이 컴퓨터나 인터넷의 이용여부와 밀접하게 관련된 있음을 암시해 준다.

3. 인구특성에 따른 정보화 격차

한국에서 정보화를 선도하는 인구는 앞서 본 바처럼 학교에서 정보화 교육을 받고 있으며, 실제로 컴퓨터나 인터넷 시설에의 접근이 용이한 학생이나 직장인이다. 따라서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중심으로 정보격차현상을 기술하고자 할 경우, 각 집단 내에서 학생인구구성비율의 차이가 격차로 기술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그러므로 정보화 격차의 존재여부의 기술은 20세 이상의 성인인구 중에서 학생인구를 제외한 일반인구에 관한 자료를 분석하는 것이 더 적절한 것으로 보았다.

학생을 제외한 20세 이상 성인인구 중에서 컴퓨터나 인터넷 이용자는 컴퓨터나 인터넷의 사용경험자나 매일 사용중인 사람 구분 없이 모든 범주에 걸쳐서 유사한 특성의 인구가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즉 거주지는 동(도시)이, 가구특성은 비농가, 남자, 20대, 전문관리직, 그리고 임금·봉급근로자가 가장 이용률이 높은 집단이다. 이에 반해 면(농촌), 농가, 여자, 50대 이상, 농림어업종사자, 그리고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의 이용률이 가장 낮았다(표15-8).

학생을 제외한 인구를 기초로 집계한 컴퓨터나 인터넷의 이용경험 및 현재의 이용률 등을 보면 거주지나 가구특성, 성, 그리고 직업에 따라서는 모든 범주의 인구가 모두 전체인구의 경우와 비교하여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학생을 제외했을 경우 연령과 교육수준에 따라 영향을 받는 측면은 각 범주별로 차이가 있었다. 학생을 제외했을 경우, 각 범주별 인구 중에서 비교적 학생인구 구성비가 높을 것으로 추정되는 범주에서 가장 차이가 컸다. 예컨대, 연령이 6-19세의 경우 전체인구에서는 컴퓨터 사용경험이 있는 인구의 비율이 84.3%이나 학생인구를 제외했을 경우는 60.8%에 불과하며, 20대의 경우도 76.5%에서 70.8%로 크게 줄고 있다. 이에 반해 30대 이상의 경우는 두 자료간 큰 차이가 없었다. 교육수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경향을 보여준다. 전체인구중 학생인구가 많이 포함되었을 것으로 추측되는 고등학교이하의 경우는 학생인구를 제외했을

경우 컴퓨터나 인터넷의 이용률이 크게 줄었으나, 대학이상교육을 받은 인구의 경우 두 자료간에 차이는 거의 없었다.

마지막으로 사회인구학적 특성 각각이 다른 변수를 통제했을 경우도 독립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컴퓨터와 인터넷의 이용상태에 대한 로짓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컴퓨터나 인터넷 이용률은 응답자의 교육수준과 직업에 따라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동시에 특정 인구집단에서는 학생인구의 구성비율의 차이가 그 집단의 컴퓨터나 인터넷 이용률의 차이를 나타낼 수도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로짓회귀분석은 학생인구를 제외한 20세 이상의 성인인구만을 분석대상으로 했으며, 두 개의 회귀모형을 구성하여 분석해 보기로 하였다. 모형-1은 컴퓨터나 인터넷의 이용여부를 거주지, 가구의 특성, 성, 연령 및 교육수준에 회귀하고 있다. 그리고 모형-2는 모형-1에 응답자의 직업을 하나 더 추가하였다.

회귀모형에 직업변수가 추가되면 상당히 많은 수의 표본이 결측치로 처리되기 때문에 직업을 통제한 상황에서 교육변수의 독립적인 영향도, 그리고 교육을 통제한 상태에서 직업변수의 독립적인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모형-1에 직업변수를 추가한 별도의 모형(모형-2)을 구성하여 분석해 보았다. 컴퓨터와 인터넷의 이용률에 적용된 두 모형에 의하면 앞서 <표15-8>에서 본 바처럼 거주지특성, 가구형태, 성별 연령, 교육수준, 그리고 직업에 따른 이용률의 차이가 그대로 나타났다.

먼저 컴퓨터 이용여부에 대한 모형-1의 회귀계수의 지수 값을 기초로 각 변수의 영향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여기에서 컴퓨터를 이용할 승산비(odds)는 컴퓨터를 이용하지 않을 확률에 대비한 컴퓨터를 이용할 확률의 대수를 말한다. 우선 거주지를 중심으로 컴퓨터활용상태를 보면,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고 가정했을 때 도시(동)거주자 대비하여 읍 거주자가 컴퓨터를 이용할 승산비(odds)는 동(도시) 거주자의 91.9%가 되며, 먼 거주자의 승산비는 동거주자 대비 70.3%가 된다. 농어가대비 비농어가 출신 사람들이 컴퓨터를 이용할 승산비는 70.6%가 증가하며, 성별로는 여자 대

비 남자가 컴퓨터를 이용할 승산비는 89.6% 증가한다. 또한 연령별로는 20대 대비 30대 40대 및 50대 이상의 연령층이 컴퓨터를 이용할 승산비는 각각 55.9%, 38.9% 및 12.9%로 나이가 많아질수록 컴퓨터를 이용할 확률이 낮아진다. 그러나 교육수준의 경우는 이와 반대되는 경향을 보인다. 교육수준의 경우는 저 학력일수록 컴퓨터를 이용할 확률이 크게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대학원교육을 받은 사람 대비 대학과 고등학교, 그리고 중졸 이하의 사람들이 컴퓨터를 이용할 승산비는 각각 32.4%(=exp(-1.127)), 7.6%(=exp(-2.571)), 및 1.1%(=exp(-4.483))에 불과하다.

또한 이 모형에 직업변수를 추가했을 경우(모형-2의 경우), 읍·면 거주자, 고 연령층 및 저 교육수준 사람들이 컴퓨터를 이용할 승산비는 직업변수를 제외했을 경우에 비해 증가한다. 특히 50대 이상 사람들이 컴퓨터를 이용할 확률은 크게 증가한다(20대 대비 12.9%에서 59.2%로 증가). 이에 반해 비농가에 거주하는 사람이나 남자가 컴퓨터를 이용할 승산비는 오히려 감소된다. 이는 직업이 통제될 경우 인구특성에 따른 컴퓨터이용과 관련된 격차가 감소되고 있음을 말해 준다.

한편 인터넷 이용여부에 대한 로짓모형분석을 한 결과도 컴퓨터의 이용여부에 관한 분석결과와 마찬가지로 거주지, 가구특성, 성, 연령, 교육수준 및 직업이 모두 인터넷 이용여부를 결정하는데 유의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변수가 된다.

여기서 컴퓨터이용여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인터넷을 이용할 승산비(odds)는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을 확률에 대비한 인터넷을 이용할 확률의 대수를 가리킨다. 먼저 동부(도시) 거주자 대비 읍 및 면 거주자의 인터넷을 이용할 승산비는 각각 동부대비 83.7%, 2.6%밖에 되지 않는다. 이와는 달리 농어가 대비 비농어가, 여자 대비 남성이 인터넷을 이용할 확률은 각각 73.3%, 82.1%라는 그 폭으로 증가한다. 또한 20대 연령층 대비 30대, 40대, 50대 이상 연령층이 인터넷을 이용할 승산비는 각각 51.7%(=exp(-0.660)), 37.5%(=exp(-0.981)), 및 12.5%(=exp(-2.078))머무르고 있다. 교육수준 역시 유사한 유형이 발견된다. 따라서 연령이 많을수록, 그리

고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인터넷을 이용할 확률은 낮아진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직업변수를 모형에 포함시켰을 경우, 면(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인터넷을 이용하게 될 승산비는 앞의 모형에서 동(도시)거주자 대비 2.6%이던 것이 63.1%로 크게 증가한다. 그밖에 각 연령과 교육수준별 인터넷을 이용할 승산비는 조금씩 커지고 있는 데 반해 비농가에 거주하는 사람이나 남자가 인터넷을 이용할 승산비는 오히려 감소한다. 따라서 직업이 통제될 경우 인구특성에 따른 인터넷 이용과 관련된 격차 역시 감소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IV. 요약 및 결론

정보화와 관련하여 이용이 가능한 여러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2002년 현재 전체 가구 중 60%가 넘는 가구에서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6세 이상 인구 가운데서 반이 넘는 인구가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40%가 넘는 인구가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실만을 기초로 한국의 정보화가 만족할 만한 수준에 도달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정보화의 확산과정에서는 어느 사회나 인구집단간 정보화 수준의 격차가 실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러한 차별적 현상이 일시적인 과도기적 현상인지 아니면 구조적 차이에서 오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문제의 심각성이 달라질 수 있다. 이 점을 고려하여 이 연구에서는 주로 2000년 인구주택조사에서 처음으로 기본조사항목으로 선정되어 조사·집계된 컴퓨터와 인터넷의 활용상태를 분석함으로써 이 문제에 대한 부분적인 해답을 얻고자 하였다.

이 분석에서 컴퓨터와 인터넷의 활용상태는 컴퓨터와 인터넷의 활용경험과 현재의 이용상태를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컴퓨터와 인터넷의 활용경험은 이들의 활용능력을 반영해주는 지표가 될 수 있다고 보았으며, 이용상태는 “거의 매일 컴퓨터나 인터넷을 이용한다”는 응답한 사람을 기초로 측정했으며, 이들 인구는 컴퓨터와 인터넷이 이제 일상생활의 한 부분으로

자리잡고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일련의 분석결과를 보면 당초 많은 연구자들이 이미 분석한 바 있으며, 그 결과를 기초로 예상할 수 있었던 결과를 재차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컴퓨터나 인터넷을 활용한 경험이 있는 인구나, 이를 일상화하고 있는 인구는 농어촌보다는 도시 거주인구, 비 농·어업 가구에서 사는 사람들, 그리고 여자보다는 남자가 더 많았다. 그러나 이들을 좀더 자세히 관찰했을 때, 한국에서 컴퓨터와 인터넷의 활용경험을 갖는 인구는 극히 제한된 인구층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우선 연령상으로는 10대와 20대에 밀집되어 있으며, 이들은 주로 학생인구를 주축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직업상 컴퓨터와 인터넷을 활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직업을 가진 인구가 주요한 인구집단이었다.

흔히들 혁신이 확산되는 초기단계에서는 이와 같은 현상이 불가피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지식기반사회로 이행되는 현재의 상황에서 이 현상의 장기간 지속은 새로운 불평등을 초래하게 된다. 인구특성이 컴퓨터나 인터넷의 활용경험에 미치는 독립적인 영향력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교육수준이나 직업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특히 이 연구의 분석과정에서는 직업을 통제했을 경우, 현재 정보화가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간주되는 농어촌도 격차가 완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앞으로 새로운 교육을 받은 신세대의 인구가 배출되어 사회의 중추적인 기능을 수행하게 되고, 기술혁신과 더불어 직업상의 직무가 점차 디지털화되면 격차문제는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정보화로부터 비교적 소외되어 있는 계층은 교육수준이 낮고, 농어민이나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처럼 직무와 관련하여 정보화기기 활용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지 않는 인구층이다. 이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정부의 정보화정책은 이들에게 집중되어야 하며, 이들을 정보화대열에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단순히 정보화교육의 기회만 제공하는데 그쳐서는 안 된다. 이 시점에서는 이들로 하여금 정보화 대열에 참여동기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되며, 이 과정에서는 직무와 관련하여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이 컴퓨터나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심상완·김정석. 2001. “사회인구학적 배경에 따른 정보격차의 다원모형분석” 『한국인구학』 24: 235-253.
- 유지열. 2002. “우리나라의 정보격차에 관한 지수(Index)접근연구” 『한국사회학』 36(1):223-246.
- 통계청. 2001a. 『2000 사회통계조사결과』^{『』}
- _____. 2001b. 『2001년 정보화실태조사결과』
- _____. 2002a. 『2000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집계결과』^{『』}
- _____. 2002b. 『2002 정보화실태조사결과』^{『』}
- 한국인터넷정보센터. 2000. 『『』인터넷 이용자수 및 이용행태에 관한 설문조사 보고서』
- 한국정보문화센터. 1998. 『정보사회통계조사 10년 자료집』
- _____. 1999. 『99국민 생활 정보화 실태 및 정보화 인식 조사』
- _____. 2000. 『2000 국민생활정보화의식 및 실태조사』
- _____. 2001. 『국민 정보생활 및 격차 현황』
- Castells, Manuel. 1989. "The Information City: Information Technology." *Economic Restructuring and Urban-Regional Process*. Oxford, England: Blackwell.
- Shiller, Herbert I. 1996. *Information Inequality*. New York: Routledge.

<부록>

<표 15-1> 각 년도별 조사자료별 컴퓨터 보유가구 백분율

(단위: 가구 당 %)

조사시점	조사 명	조사 주관처	
		한국정보문화센터	통계청
1994. 3.	정보화실태 및 정보화 수용도 조사	20.7	
1997. 7.	사회통계조사		29.0
1997. 10.	정보사회 인식 및 실태조사	43.2	
1998. 12	국민정보화실태 및 정보화인식조사	44.5	
1999. 5.	국민생활정보화실태 및 정보화인식조사	51.8	
2000. 5.	국민정보생활실태 및 정보화인식조사	66.0	
2000. 7.	사회통계조사		46.4
2000. 11.	인구주택 총 조사 (2% 표본)		53.0
2001. 3.	정보화실태조사		53.8
2001. 4.	국민정보격차현황 및 정보생활실태조사	78.6	
2002. 3.	정보화실태조사		60.1

<표 15-2> 인구집단의 차별적 설정에 따른 각종 정보화지표의 비교

(단위: %)

정보화지표	인 구 집 단			
	전체인구	3세 이상인구	6세 이상인구	13-64세 인구
컴퓨터 이용	48.4	50.4	51.9	53.5
인터넷 이용	38.8	40.5	42.2	45.4
정보통신기기이용				
팩스	3.7	3.8	3.7	3.7
인터넷전용선	25.8	26.0	26.2	26.9
케이블 TV	11.7	11.7	11.6	12.0
지역유선방송	53.3	53.2	47.0	53.5
위성방송	1.6	1.6	1.5	1.5
일반전화	96.9	96.8	96.7	96.2
컴퓨터	62.0	62.3	62.4	75.1
개인휴대용 통신기기				
이동전화기(휴대폰 등)	45.8	47.8	50.1	61.3
무선호출기(삐삐)	0.2	0.2	0.2	0.2
이동전화기 및 무선호출기	0.4	0.5	0.5	0.5
없음	53.6	51.6	49.2	37.9

<표 15-3> 인구특성에 따른 컴퓨터와 인터넷 이용자

(단위: %)

인구특성	컴퓨터		인터넷		
	사용경험 있음	매일 사용함	사용경험 있음	매일 사용함	
거주지	동(시부)	56.3	36.6	46.4	28.7
	읍	44.6	28.0	34.4	19.8
	면	28.8	16.5	20.6	10.1
가구특성	비 농어가	55.2	35.7	45.2	27.7
	농어가	24.6	13.9	17.8	8.7
성별	남자	58.5	40.3	47.9	30.9
	여자	45.6	26.7	36.8	20.7
연령	6-19	84.3	60.6	65.6	43.1
	20-29	76.5	52.1	68.8	44.8
	30-39	57.0	32.6	45.8	25.4
	40-49	36.6	19.0	29.1	14.6
	50-59	16.2	7.9	12.1	5.8
	60+	3.3	1.5	2.2	1.0
6세 이상 총 인구		51.9	33.3	42.2	25.7

<표 15-4> 교육수준과 직업에 따른 컴퓨터와 인터넷의 이용자

(단위: %)

인구특성	컴퓨터		인터넷		
	사용경험 있음	매일 사용함	사용경험 있음	매일 사용함	
교육수준	무학	9.4	5.1	3.5	1.7
	초등학교	39.3	27.4	25.7	15.6
	중학교	37.1	25.3	30.2	19.6
	고등학교	51.0	27.0	40.7	20.9
	대학(4년제미만)	80.0	52.5	69.8	42.9
	대학교	84.6	62.0	77.4	53.9
	대학원	91.9	74.6	86.7	65.2
직업	전문관리직	82.8	61.7	74.6	51.4
	준전문직	79.8	56.4	70.6	46.7
	사무직종사자	81.0	60.6	71.4	48.6
	서비스종사자	33.5	16.7	26.7	12.8
	판매종사자	44.6	23.3	34.8	16.8
	농림어업	6.7	2.1	4.2	1.4
	기능직종사자	37.5	17.4	27.8	12.9
	단순노무직	20.9	8.9	15.1	6.5

<표 15-8> 인구특성에 따른 컴퓨터 및 인터넷의 활용상태*

사회·인구학적 특성	N	컴퓨터(%)		인터넷(%)		
		사용경험	매일사용	사용경험	매일사용	
거주지	동	472,758	44.6	25.8	36.7	20.6
	읍	49,965	32.7	18.1	25.3	13.3
	면	84,697	18.0	8.8	13.0	5.8
가구특성	농가	67,881	13.0	6.0	9.4	4.0
	어가	3,492	16.5	7.1	11.8	4.8
	농어가	2,346	17.1	8.0	12.8	6.0
	비농가	533,701	43.6	25.1	35.6	19.8
성	남자	286,067	46.9	29.3	38.4	23.1
	여자	321,353	33.8	17.0	27.1	13.3
연령	6-19	17933	60.8	35.2	39.9	21.6
	20-29	104657	70.8	44.9	62.3	37.7
	30-39	160435	56.6	32.2	45.4	25.0
	40-49	135,891	36.4	18.8	28.8	14.5
	50세이상	188,504	9.2	4.4	6.7	3.1
교육	중졸이하	215,752	7.0	2.7	3.7	1.3
	고등학교	239,659	44.2	20.7	33.8	15.3
	초대-대학	139,853	79.0	53.1	69.8	44.1
	대학원	12,156	90.6	72.7	85.2	63.0
직업	전문관리직	30,536	89.3	69.3	81.7	58.5
	사무-준전문직	91,859	78.2	56.3	68.6	45.3
	서비스-판매직	79,271	39.0	19.7	30.4	14.4
	농림어업	48,705	6.5	2.0	4.0	1.3
	기능직	75,492	36.9	17.0	27.2	12.5
	단순노무직	27016	19.8	8.1	14.0	5.8
종사상 지위	임금-봉급근로자	216,644	59.6	31.8	50.9	31.8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	80,832	23.8	7.8	17.2	7.8
	고용원을 둔 자영자	24,177	56.2	25.5	45.9	25.4

* 학생인구를 제외한 인구가 분석대상임

<요약자료>

한국의 정보화

최 순

(동아대학교)

우리나라에서는 2002년 현재 전체 가구 중 60%가 넘는 가구에서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6세 이상 인구 가운데서 반이 넘는 인구가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40%가 넘는 인구가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실을 기초로 한국의 정보화가 만족할 만한 수준에 도달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정보화의 확산과정에서는 어느 사회나 인구집단간 정보화 수준의 격차가 실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러한 차별적 현상이 일시적인 과도기적 현상인지 아니면 구조적 차이에서 오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문제의 심각성이 달라질 수 있다. 이 점을 고려하여 이 연구에서는 주로 2000년 인구주택조사에서 처음으로 기본조사항목으로 선정되어 조사·집계된 컴퓨터와 인터넷의 활용상태를 분석함으로써 이 문제에 대한 부분적인 해답을 얻고자 하였다.

이 분석에서 컴퓨터와 인터넷의 활용상태는 컴퓨터와 인터넷의 활용경험과 현재의 이용상태를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컴퓨터와 인터넷의 활용경험은 이들의 활용능력을 반영해주는 지표가 될 수 있다고 보았으며, 이용상태는 “거의 매일 컴퓨터나 인터넷을 이용한다”는 응답한 사람을 기초로 측정했으며, 이들 인구는 컴퓨터와 인터넷이 이제 일상생활의 한 부분으로 자리잡고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일련의 분석결과를 보면 당초 많은 연구자들이 이미 분석한 바 있으며, 그 결과를 기초로 예상할 수 있었던 결과를 재차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컴퓨터나 인터넷을 활용한 경험이 있는 인구나, 이를 일상화하고 있는 인구는 농어촌보다는 도시거주인구, 비 농·어업 가구에서 사는 사람들, 그리고 여자보다는 남자가 더 많았다. 그러나 이들을 좀더 자세히 관찰했을 때, 한국에서 컴퓨터와 인터넷의 활용경험을 갖는 인구는 극히 제한된 인구층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우선 연령상으로는 10대와 20대에 밀집되어 있으며, 이들은 주로 학생인구를 주축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직업상 컴퓨터와 인터넷을 활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직업을 가진 인구가 주요한 인구집단이였다.

흔히들 혁신이 확산되는 초기단계에서는 이와 같은 현상이 불가피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지식기반사회로 이행되는 현재의 상황에서 이 현상의 장기간 지속은 새로운 불평등을 초래하게 된다. 인구특성이 컴퓨터나 인터넷의 활용경험에 미치는 독립적인 영향력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교육수준이나 직업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특히 이 연구의 분석과정에서는 직업을 통제했을 경우, 현재 정보화가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간주되는 농어촌도 격차가 완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앞으로 새로운 교육을 받은 신세대의 인구가 배출되어 사회의 중추적인 기능을 수행하게 되고, 기술혁신과 더불어 직업상의 직무가 점차 디지털화되면 격차문제는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정보화로부터 비교적 소외되어 있는 계층은 교육수준이 낮고, 농어민이나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처럼 직무와 관련하여 정보화기기 활용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지 않는 인구층이다. 이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정부의 정보화정책은 이들에게 집중되어야 하며, 이들을 정보화대열에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단순히 정보화교육의 기회만 제공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이 시점에서는 이들로 하여금 정보화 대열에 참여 동기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되며, 이 과정에서는 직무와 관련하여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이 컴퓨터나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제16장

인구 및 가구 예측(장래가구추계)

김 형 석
(통계청)

I. 서론

매 5년마다 전국에 걸쳐 실시하는 인구주택총조사는 인구나 가구의 분포 및 인구·경제·사회적인 특성과 구조 파악을 위해 매우 유용한 수단임에 이론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이 자료는 매년 작성되지 않기 때문에 연간 인구 및 가구 추계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추계는 인구자료 이용자로부터 가장 수요가 많은 자료중의 하나이다. 정부에서는 모든 종류의 재화와 용역의 수요를 예측하는데 필요하고, 기업은 잠재적인 시장 규모를 예측하는데 필요로 한다.

추계는 일반적으로 추정(estimates)과 추계(projections)로 구분한다. 전자는 센서스이후에 작성된 인구동태나 등록자료 등 최근 과거연도의 실제 자료를 사용하는 반면, 추계는 대개 장래의 변화를 다룬다. 물론 센서스 이전(precensal)의 인구나 가구를 추정하는 것과 같이 과거에 대해서 장래추계 때와 동일한 방식으로 후진적(backward)으로 더러 사용하기도 한다. 한편 추계(projections)는 예측(forecasts)과도 구별된다고 하겠다. 예측은 특정시점에서의 추계가 현실과 맞을 거라는 전제에서만 성립하기 때문에 모든 예측은 장래추계가 되지만 그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Shryock et al., 1976). 즉, 예측은 현실적으로 타당한 가정에서 만들어지는 반면 추계는 정확하게 관련 변수들을 잘 모형화한다면 현실성이 없는 가정(예를 들면, 제

로 성장 등)에서 만들어지기도 한다(Preston et al., 2001). 다만 장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추계의 시나리오들이 예측으로 사용되기도 한다(Keyfitz, 1972).

이 글에서는 최근 통계청에서 작성하여 공표한 장래가구추계에 대해 추계방법과 추계결과에 대해 살펴보고 정책적인 함의와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정의 및 연구범위

개념적으로 가구는 친족관계로 이루어지는 가족 또는 행정등록의 단위인 세대와는 다른 의미를 갖는다. 가족은 대개 남녀의 결합으로 형성되어 자녀로 확대되는 혈연에 기반을 둔다. 물론 입양에 의한 양자(養子)를 가족개념에 포함해야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는 혈연보다는 친족관계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UN(1958)에서도 가족은 '결혼과 혈연 또는 입양을 통해 어느 정도 이상의 관계를 맺고 있는 가구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가족은 특정한 관계를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점에서 문화적으로 의미를 갖는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족은 취업, 취학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함께 살지 않는 경우가 많아 사회 전체를 가족관계로 파악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매우 어렵다.

반면에 가구는 취사, 취침 등 생계를 같이 하는 생활단위로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들도 가구를 구성할 수 있다(통계청, 2001d: 8). 가구주는 “호주 또는 세대주와는 관계없이 가구를 실질적으로 대표하는 사람을 말하며,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끼리 모여 사는 경우에는 그 중 한 사람(대표자)이 가구주가 된다”고 정의하고 있다(통계청, 2001c: 8). 한편 장래가구추계에서는 앞으로 가구형태가 복잡해지면서 가구나 가구주의 개념이 바뀔 수 있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추계기간이 너무 길지 않다면 가구와 가구주에 대한 사회적 통념이 크게 변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취지에서 이 연구는 현재 통계청의 가구와 가구주에 대한 개념적 정의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가구추정에는 인구추정보다도 더 다양한 변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장기간을 추

정하면 일반적으로 정확도가 많이 떨어질 수도 있다. 반대로 너무 단기간을 추정하면 당초 추계의 목적을 성취할 수 없다. 이런 측면을 고려하여 이 연구는 장래 가구추계의 대상 기간을 2000~2020년의 20년간으로 정했다. 또한 군부대, 교도소, 재외공관 등에 거주하는 인구와 집단 사회시설 가구를 추계대상에서 제외하고, 전국의 일반가구인 혈연가구, 비혈연 5인이하의 가구와 1인가구를 추계대상으로 하였다.

이번 추계에서 사용하는 가구 자료는 1) 가구주의 성별, 연령 5세간격별, 혼인 상태별 가구, 2) 가구주의 성별, 연령 5세간격별, 가구구성별 가구, 3) 가구원수별 가구 등을 포함한다. 연령은 인구의 노령화를 감안하여 상한을 85+까지 연장하였고, 가구구성은 「부부 가구」 「부모와 자녀」 「편부와 자녀」 「편모와 자녀」 「3세대 이상 가구」 「1인 가구」 「비혈연 가구」 「기타 가구」로 구분하였다.

Ⅲ. 가구추계기법의 종류

가구와 가족 추계 모형은 사용하는 자료의 성격에 따라 크게 정태(static)와 동태(dynamic)로 구분되는데, 정태적인 방법에는 특정시점을 기준으로 독립적으로 추계되는 인구의 구성비나 비율에 따라 가구에 인구를 할당하여 추정하며, 동태적인 방법은 가구 상태간의 변화나 전환을 측정하여, 이를 바탕으로 가구를 추정한다.

Bell et al.(1995)은 정태적 방법으로는 거시자료(macro data)를 사용하는 가구주율법(headship rate), 확장가구주율법(headship extensions), 개인 특성법(propensity methods) 등을 들고 있으며, 동태적 방법에는 거시자료를 사용하는 전이행렬법(household transition methods)과 생명표법(life tables) 그리고 개별자료(micro data)를 사용하는 시뮬레이션(simulation)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가구주율법에서 장래 가구주율을 추정하는 방법에는 수학적 모형(mathematical model), 경제적 모형(economic model), 코호트 이행 모형

(cohort progression model) 3가지가 있다.¹⁾ 수학적 모형은 가구주율이 장래에 수학적으로 표현될 수 있는 고정된 곡선을 따를(trajjectory) 것이라고 가정한다. 여기에는 판단적 외삽(judgemental extrapolation), 곡선 맞춤(curve fitting), 로그회귀(log regression), 선형회귀(linear regression), 시계열 분석(time series analysis) 등의 다양한 방법이 있다. 1958년에 미국 센서스국에서는 수정지수식(modified exponential curve)을 이용 1950-1957년 기간의 성, 연령, 혼인상태별 가구주율 추이를 1980년의 가구주율 추정에 사용하였다(UN, 1973). 그 이후 UN(1973)과 미국 센서스국(1986)은 130개 가구의 성, 연령, 혼인상태별 인구 집단별 구성비를 로지스틱 함수로 변형(logistic transformation)하였으며, Ketkar(1990)는 가구주율에 선형로그 외삽법(log linear extrapolation)을 적용하였고, Corner(1989)는 성, 연령, 가구주, 가구형태별로 시계열 외삽법(time series extrapolation)을 사용하였다.

경제적 모형은 소득, 경제활동참가율, 주택가격, 도시화 등 경제적인 요인이 가구주율에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Kent(1992)는 1961-1987년 사이의 미국 15-24세 가구주율에 대해 회귀분석을 했다. 그 결과 이들의 가구주율이 소득, 주택가격, 초혼연령, 남자의 대학교육 비율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호트 이행 모형은 전후 베이비붐과 같이 인접한 연령 코호트들 사이의 인구 차이가 클 때나 젊은 층에서 가구주율 변동이 클 때 유용한 가구추계 수단으로 알려져 있다(UN, 1993). 大江守之(1993)는 순천이율(net transition rate)을 바탕으로 가구주율을 추정하였다. 순천이율은 동일한 연령과 성 코호트의 가구주간의 생산율이다. 그의 연구 결과는 순천이율이 35세 이상에서는 가구주율보다 더 안정적이며, 35세 미만에서는 그렇지 못한 경향을 보여주었다. 그는 이 현상을 교육이나 취업기회의 확대로 여성의 혼인 연령 변화 때문인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大江守之

1) 수학적 모형은 US Census Bureau(1986), Corner(1989), Ketkar(1990), 경제적 모형은 Kent(1992), 코호트 이행 모형은 Kono(1987), Mason(1987), 大江守之(1994) 참조

(1994)는 1992년 일본의 인구추계에서 사용된 34세미만의 성별 혼인상태를 추정하여 사용함으로써 일본의 만혼 경향을 가구추계에 반영하였다. 다른 코호트 이행 모형은 Bell and Copper(1990)이 있다. 이들은 3개의 직전 기간 동안 동일 코호트의 평균 변화에 의존해 코호트별 가구주율을 추정하였다. 이때 변화치는 이론적으로 최대가 되는 가구주율값에 상대적인 값으로 측정된다.

이런 방법 이외에도 Kono(1987)의 변형된 가구주율 추정방법이 있다. 그는 가구주율 추정에 사용되는 수정지수식을 가구규모 및 연령별 가구주 비율의 분포와 가구의 혼인상태별 및 가구형태별 가구수 추정에 사용하였다. 또한 Mason(1987)은 *Homes*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구추계를 하였는데, 이 모형에서는 가구의 성 및 연령별 가구수를 추정하는 이외에 가구주, 배우자, 자녀, 손자녀, 부모 등이 가구주와 동거형태별로도 추정한다.

IV. 「2000-2020년 장래가구추계」

1. 추계방법

가구추계기법을 선정하는데는, 빠르게 변화하는 한국의 인구변천 수준과 이번 가구추계에서 사용하게 될 기초자료(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및 장래인구추계 자료)의 특성 등 2가지 요인을 주로 감안하였다.

먼저 출산 및 사망의 감소, 초혼연령의 상승, 이혼율의 증가, 노령화 등 인구변천에 민감한 추계 방법을 선택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변수들의 불변성을 가정하는 추계기법들은 검토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통합자료(aggregate data)를 사용해야 하는 자료의 한계로 이 연구는 개별자료를 이용하는 미시적 추계모형을 사용하지 못한다. 또한 개별 가구의 특성 변화를 고려해야 하는 동태 모형도 사용하지 못하는 제약이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이 연구는 거시적 정태 모형을 선택하였다.

거시적 정태 모형의 추계기법에는 가구주율법, 확장가구주율법, 개인특성법이 있다. 확장가구주율법은 가구원에 대한 특성을 고려, 가구에 대한 추가 정보를 산출하지만 개념상이나 방법론상에 어려움을 내포한다(Bell et al., 1995). 더욱이 이 기법은 가구 구성이 불변을 가정하기 때문에 우리 상황에는 적합하지 않다. 또한 개인특성법도 가구원에 관한 정보를 추정에서 이용하지만 복잡성만큼이나 추가 정보를 제공하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이유에서 이 연구는 가구주율법을 중심으로 추계기법을 검토하였다. 이 추계기법은 계산과정이나 자료요구가 단순하면서도 인구의 연령구조의 변화와 같이 가구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 민감하여 인구와 가구의 변화가 빠른 한국 사회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Bell et al., 1995).

가구주율법은 미국의 국가자원기획위원회(National Resources Planning Committee)가 1930년 미국 센서스를 토대로 가구추계에 처음 사용하였다(UN, 1993). 가구주율법에서는 성, 연령, 혼인상태별 인구자료가 필요하다. 추정에서는 각 특성별로 가구주 비율을 산출해 낸 후, 인구와 가구주 비율을 곱하면 각 특성별로 추정된 가구수가 산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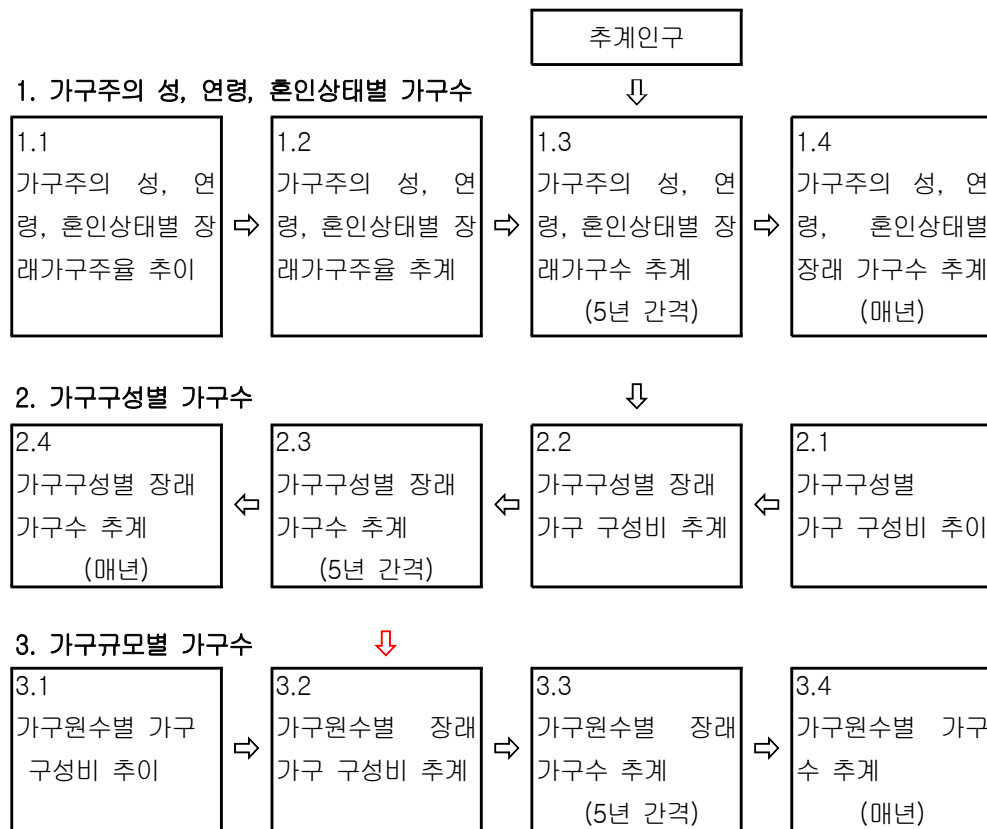
가구주율법에서 장래가구는 특정집단의 인구에 성, 연령, 혼인상태별 집단의 가구주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이를 식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H^s(x, t) = \sum_m P^s(m, x, t) \times h^s(m, x, t) \text{ -----(1)}$$

여기서, $H^s(x, t)$ 는 연도 t 의 가구주의 성 s , 연령 x 의 가구수, $P^s(m, x, t)$ 는 연도 t 의 성 s , 혼인상태 m , 연령 x 의 인구, $h^s(m, x, t)$ 는 연도 t 의 성 s , 혼인상태 m , 연령 x 의 가구주율이다. 이 식은 장래가구추계에는 단계별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러한 추계작업절차를 <그림 6-1>에 작업의 흐름도로 표시하였다.

이러한 추계작업은 크게 가구주의 성, 연령, 혼인상태별로 장래인구비

율을 추정하는 것과 이들 집단별로 가구주율을 추정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먼저 성, 연령, 혼인상태별 가구주율의 추이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집단별로 장래 가구주율을 추정한다. 이렇게 추정한 가구주율에 장래 인구수를 곱하여 집단별로 장래 가구수를 구한다. 우리나라의 인구조사는 매 5년마다 실시되기 때문에 가구수와 가구주율의 추이는 5년 간격으로 파악한다. 장래가구추계는 5년 간격으로 하게 되며, 연도별 가구추계는 연도별로 내삽(interpolation)하여 산출한다.



<그림 6-1> 장래가구추계 작업의 흐름도

그런데 우리나라의 장래인구추계는 혼인상태별로 되어있지 않다. 따라서

이번 추계작업에서는 혼인상태별로 인구를 추계하는 것이 선결과제이다. 여기서는 먼저 장래 혼인상태별 인구 비율을 추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장래 가구주율을 추정하게 된다.

장래 성, 연령 및 혼인상태별 가구주율을 추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과거의 총조사 자료를 이용해 여러 개의 대안으로 2000년 자료를 추정한 후, 이를 2000년 관찰치인 총조사 자료와 비교하여 가장 편차가 작은 추정방식을 선택하게 된다. 여기서 대안은 1개의 총조사 간격 또는 2개의 총조사 간격 및 이들의 평균을 사용한 수정지수식과 2개의 총조사 평균에 기초한 선형로그식으로 각각 계산하였다. 비교 결과 다음의 과거 2개 총조사 평균을 사용한 선형로그식이 가장 적합한 추정식으로 나타났다.

- 혼인상태 추정을 위한 선형로그식

$$p^s(m, x, t) = a \times \text{Ln}(n) + b \text{-----}(2)$$

여기서, $p^s(m, x, t)$ 는 연도 t 의 성 s , 혼인상태 m , 연령 x 의 인구구성비이고, $\text{Ln}(n)$ 은 추정간격 n 의 자연로그이며, a 는 기울기, b 는 상수이다.

장래 성, 연령 및 혼인상태별 가구주율을 추정하는 방법은 장래 혼인상태별 구성비를 추정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을 사용하였다. 다만, 여기서는 수정지수식과 선형로그식과 함께 순천이율을 사용한다. 순천이율은 가구 변동분에서 인구변동분을 뺀 것으로 식에서 인구변동을 감안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같이 인접한 연령 코호트들 사이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에 적합했기 때문이다.

검토 결과, 35세미만에서는 과거 3개년도 총조사 기준의 선형로그식이 35세이상은 2개년도 총조사 순천이율의 평균을 사용한 추정치가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35세미만은 가구변동이 많은 반면 35세이상은 가구주율이 비교적 안정적이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속성상 추정 후기 년도에 빠르게 증가하는 지수식은 우리나라처럼 조만간(2023년) 정지인구

에 도달하는 인구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추정공식은 다음과 같다.

- 가구주율 추정을 위한 선형로그식

$$h^s(m, x, t) = a \times \text{Ln}(n) + b \text{ -----(3)}$$

여기서, $h^s(m, x, t)$ 는 연도 t 의 성 s , 혼인상태 m , 연령 x 의 가구주율이고, $\text{Ln}(n)$ 은 추정간격 n 의 자연로그이며, a 는 기울기, b 는 상수이다.

- 순천이율

$$C_i^s(x, t) = \frac{H_i^s(x+5, t+5)}{H_i^s(x, t)} - \frac{P^s(x+5, t+5)}{P^s(x, t)} \text{ -----(4)}$$

여기서, $C_i^s(x, t)$ 는 연도 t 의 가구형태 i , 성 s , 연령 x 의 순천이율, $H_i^s(x, t)$ 는 연도 t 의 가구형태 i , 성 s , 연령 x 의 가구수, $P^s(x, t)$ 는 연도 t 의 가구형태 i , 성 s , 연령 x 의 인구수이다.

2. 주요결과

가. 총가구수

가구와 인구의 관계로 볼 때,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2023년(통계청, 2001b)까지는 적어도 가구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지금처럼 소가족화 및 가구의 분화, 1인가구의 증가가 계속된다면 가구는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한 이후에도 상당 기간 증가할 수도 있다.

추정결과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20년까지 우리나라의 가구는 전체적으로 증가세를 유지하겠지만, 증가폭은 점점 작아 질 것으로 전망된다.

2000년에 14,609천 가구였던 것이 2005년에는 15,789천 가구, 2010년에는 16,864천 가구, 2015년에는 17,571천 가구, 2020년에는 18,158천 가구로 각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가구 증가세 둔화로 2010년 이전에는 연간 평균 가구증가가 2000-2005년간은 매년 약 24만 가구, 2005-2010년간은 매년 약 22만 가구이지만, 2010-2015년간에는 매년 약 14만 가구, 2015-2020년간에는 매년 약 12만 가구 정도만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증가율을 인구 증가율과 비교하여 보면, 인구 증가율이 추계기간(2000-2020년)중 연간 0.67%~0.14% 수준을 보인 반면 가구 증가율은 1.57%~0.66% 수준을 보임으로써 인구 증가율을 크게 상회할 것이다.

<표 6-1> 여기에

나. 가구주의 성별 및 연령별 가구

성 및 연령별 추계결과에 따르면 2000-2020년중 가구주의 노령화 및 여성화가 크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65세 이상 노인 가구주는 전체의 12.1%에서 21.0%로, 여자 가구주는 18.5%에서 21.9%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퇴행성 질환 등 건강관리 및 유지에 초점이 맞추어지는 75세 이상의 후기노령인구의 가구주 비중이 2000년 3.1%에서 2020년에는 7.9%로 높아질 것으로 추정되어 이에 대한 사회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생산활동이 활발한 연령대의 남자(25-64세)들은 전체 가구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 84.9%에서 2020년에는 77.1%로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가구주의 평균연령은 2000년 여자 50.5세, 남자 45.8세였는데, 2020년에는 여자 56.0세, 남자 51.3세로 각각 늘어 남녀 가구주 모두 고령화되는 가운데 남녀 간 연령 차이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가구주의 노령화 및 여

성화는 앞으로 우리나라의 가족 구조나 가족 역할 관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
 <표 6-2> 여기에

다. 가구주의 혼인상태별 가구

2000년부터 2020년까지 가구주의 혼인상태별 구성비 변화를 보면, 남자는 유배우, 미혼, 이혼, 사별의 순서가 유지되는 가운데, 유배우(-2.8%p)는 감소하고 이혼(1.9%p), 사별(0.6%p), 미혼(0.4%p)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여자는 2000년에는 사별, 미혼, 유배우, 이혼의 순이었으나, 2015년부터는 사별, 미혼, 이혼, 유배우로 순서가 바뀔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미혼(-3.5%p), 유배우(-1.6%p), 사별(-0.4%p)은 감소하고, 이혼(5.3%p) 가구주는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
 <표 6-3> 여기에

라. 가구구성별 가구

우리나라에서 가장 주된 가구형태인 「부부+자녀 가구」는 2000년에는 전체 가구중 48.2%(7,035천 가구)를 차지했으나, 2020년에는 41.5%(7,537천 가구)로 비중이 점차 줄어들 전망이다. 「3세대이상 가구」의 경우에도 2000년에 총 1,223천 가구(8.4%)에서 2020년에는 852천 가구(4.7%)로 점점 줄어들 것으로 나타나 소가족화 내지는 가족의 분화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부부 가구」는 2000년 전체 가구중 비중이 12.3% (1,802천 가구)에서 2020년에는 18.9%(3,429천 가구)로 6.6%p가 늘어 날 것으로 보인다.

같은 기간 중 「1인 가구(2000년 15.5%, 2020년 21.5%)」도 6.0%p 증가하여

크게 주목을 끄는데, 이는 호주(2001년, 23%), 독일(2000년, 36%), 미국(2000년, 26%), 일본(2000년 28%, 2020년(추정) 30%) 등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다.

2000-2020년중 「편부+자녀 가구」, 「편모+자녀 가구」는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변화가 없으나, 가구수 기준으로는 각각 59천 가구, 202천 가구씩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마찬가지로 핵가족의 비율(prevalence of nuclear family)도 앞으로 20년간(2000년: 68.3%, 2020년: 68.2%) 거의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핵가족 비율은 1975년 이후 계속 68% 수준에 머물러 근대화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가족구조의 변화를 나타내지는 않는다고 봐야 한다.

.....
 <표 6-4> 여기에

「부부 가구」는 2000년 1,802천 가구에서 2020년에는 3,429천 가구로 90.3%(1,627천 가구)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노인 「부부 가구」의 증가(890천 가구)에 주로 기인한다. 연령별로 보면 「부부 가구」는 30-34세에서 첫 번째 정점을 보인 후 감소하여 40-44세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며, 이후 다시 증가하여 60대에 두 번째 정점(최고봉)에 이르게 된다. 1차적인 증가 시기는 가족생애 주기상 가족형성기(무자녀기)에 해당되는데 초혼연령의 상승으로 30세 미만의 가구는 점점 줄어드는 반면(2015년 급감은 1984-1990년 출생아수의 급격한 감소의 영향), 가구주가 30-34세인 「부부 가구」는 2005년까지는 증가, 2010년까지는 감소, 2015년까지는 증가를 보인 후 2020년에 크게 감소하는 패턴을 보이는데, 이는 출생 코호트(cohort)의 영향에서 비롯(1979-1982년생 급증, 1984-1990년생 급감)된 것으로 보인다.

가구주가 50-54세(또는 45-49세)부터의 「부부 가구」는 이른바 “빈 둥지(empty nest)”의 가족축소기에 해당하는 가구로서 이들 가구수가 증가하는 것은 출산율 저하에 따른 자녀수 감소와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자녀 출가후 부부만의 “빈 둥지” 기간이 점점 길어지기 때문이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현재 가장 전형적인 가족형태인 부모와 자녀가 함께 거주하는 가구형태인 「부모+자녀 가구」는 가구주가 혼인과 함께 자녀를 갖게되는 30-34세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여 40-44세에 절정에 달하게 된다. 앞으로는 만혼의 영향으로 점점 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진 가구의 가구주 연령층이 30-40대에서 30대 후반-50대 초반으로 옮겨 갈 것으로 보인다.

<표 6-5> 여기에

「편부모+자녀 가구」는 i) 직업 등의 이유로 부모 중 한 쪽이 같이 살고 있지 않거나, ii) 사망이나 이혼 등으로 배우자가 없거나, 또는 iii) 미혼자녀가 가구주로 부모 중 한쪽과 살고 있는 형태의 가구인데, 2000년에는 1,148천 가구였으나 2020년에는 1,409천 가구로 261천 가구 정도가 늘어 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가구주의 연령은 30대 후반부터 많이 발생하기 시작하여 40-50대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다가 점점 고령화되는 추세이다. 이들의 사회적응 및 진출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할 것이다.

이들 가구주의 평균 연령은 2000년에 「편부+자녀 가구」가 49.1세, 「편모+자녀 가구」가 47.3세였는데, 2020년에는 「편부+자녀 가구(51.9세)」「편모+자녀 가구(50.1세)」의 가구주 평균 연령이 모두 50세를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표 6-6> 여기에

「1인 가구」는 2000년 2,270천 가구였으나 2010년에는 3,109천 가구, 2020년에는 3,897천 가구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다(<표 4-9> 참조). 「1인 가구」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2000년에는 25-29세가 14.3%로 가장 높고, 이후부터는 50-54세(5.3%)까지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여 65-69세(8.4%)에 두 번째 정점을 보인 후 감소하는 패턴을 보인다.

하지만 2010년에 이르면 인구 노령화로 「1인 가구」 중 가장 주된 연령층이 70-74세 (11.0%)가 되고 2020년에는 이 비율이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체 「1인 가구」 중 65세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2000년 24.4%에서 2010년에는 33.6%, 2020년에는 40.5%에 달해 이 기간중 전체 「1인 가구」 증가(1,627천 가구)의 62.9%(1,024천 가구)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1인 가구」의 평균 연령은 2000년 47.3세에서 2010년에는 52.2세, 2020년에는 56.0세로 크게 높아지게 된다.

<표 6-7> 여기에

마. 가구원수별 가구

2000-2020년중 가구원수별 가구 구성비는 2인 이하의 가구는 증가하는 반면 4인 이상의 가구는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3인 가구는 2005년(21.0%)까지는 가구 구성비가 높아지나, 평균 가구원수가 3명 미만으로 떨어지는 2010년(20.7%)부터는 낮아지기 시작한다. 이에 따라 평균 가구원수는 2000년 3.1명에서 2020년에는 2.7명으로 소가족화가 앞으로도 더욱 진행될 전망이다. 이러한 가구규모는 호주(2001년) 2.6명, 미국(2000년) 2.6명, 일본(2000년) 2.7명과 비슷한 수준이다.

가구원수별 가구 분포를 보면 4인 가구가 앞으로도 가장 주된 유형으로 남는 가운데, 2인 가구와 1인 가구가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0년에는 4인 가구(31.1%), 3인 가구(20.9%), 2인 가구(19.1%), 1인 가구(15.5%) 순이었으나, 2010년부터는 2인 가구(22.4%)가 3인 가구(20.7%)보다 더 많아지기 시작하며, 2020년에는 1인 가구(21.5%) 또한 3인 가구(19.5%) 보다 많아질 것으로 추정된다.

<표 6-8> 여기에

5. 요약 및 함의

장래가구추계는 현재 한국사회가 가족의 형성 및 해체와 관련 있는 환경들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 먼저 장래가구추계 기법의 선정과 관련해서는 가구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에 비교적 민감하면서도 복잡하지 않은 추계기법으로 가구주율법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가구주율법에 의한 장래가구주율은 과거의 성·연령·혼인상태별 가구주율 추이를 수학적 추정모형을 만들어 추정한다. 그리고 장래 가구주율이 만들어지면, 장래인구추계 결과를 곱하여 가구수를 구하게 된다. 수학적 모형에는 수정지수식, 선형로그식, 순천이율 등을 대상으로 검토하였다. 먼저 2000년 이전의 인구주택총조사 및 장래가구추계 자료에 이들 모형을 적용하여 2000년의 추계가구수를 추정한 다음, 추정값을 실제 관측값인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의 자료와 비교하여 가장 적합한 수학적 모형을 선정한다. 그 결과 35세 미만의 경우는 선형로그식이, 35세 이상의 경우에는 순천이율이 관찰값과 가장 가까운 추정값을 산출하였다. 이것은 저연령층에서 가구형성과 관련 있는 사회적 상황이 빠르게 변화하는 반면, 고연령층에서는 가구가 안정적이 형태로 유지되는 특성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풀이된다.

한편, 우리나라의 인구추계는 혼인상태별로 구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성·연령·혼인상태별 장래 가구주율을 이용해 장래 가구수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장래인구를 혼인상태별로 재구성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여러 가지 추정방법을 검토한 결과 과거 2개년도의 총조사 자료를 이용해 추정하는 선형로그식이 가장 현실적이었다.

추계기법과 관련하여 앞으로 더욱 탐구해야 할 점들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래인구에 대한 혼인상태별 구성비 추정에서 최대한 변화를 반영하도록 하였으나 반영의 정도가 충분하지 않았다. 이러한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모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가구규모에

큰 영향을 미치는 1인 가구의 생성과 소멸에 대해서도 현실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취업이나 취학 등으로 혼자 사는 젊은 층의 거주패턴 변화나 노인들의 자녀동거에 대한 의식변화, 국가의 노인 복지정책 등 1인 가구의 형성과 소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셋째, 여성의 경제활동이 크게 늘어나는 현재의 추세에서 볼 때, 보다 현실적인 가구주 정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가구주의 정의를 미국, 호주처럼 참고인(reference person)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가구의 생계 책임자(bread winner or household maker)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많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넷째, 비혈연가구의 경우 관례적으로 5인 이하면 일반가구로 구분하고, 6인 이상이면 집단가구로 구분하여 일반가구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때 5인으로 정한 가구원수 기준에 대해서도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이들 집단가구에 대해서는 사회복지 측면에서 별도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장래가구추계를 가구통계자료의 모수로 사용하거나 지역개발 정책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시도별 가구추계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의 선행 작업으로 우리나라 인구이동에서 가구 전체 이동과 가구원 일부 이동 패턴 그리고 농촌 노인가구의 생성과 소멸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한 사전 연구가 필요하며, 그 결과를 지역별 가구추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한편 이 연구에서 작성한 우리나라의 2000-2020년(20년) 동안의 가구추계 결과를 놓고 볼 때, 다음과 같은 주요 특징과 함의들이 도출된다.

첫째, 우리나라의 가구는 지금까지 인구보다 훨씬 빠른 성장을 보여 왔으며, 장래에도 당분간은 동일한 패턴을 보일 것이다. 과거의 이농향도의 인구이동에 의한 가구분화와 소가족화 같은 가구 증가 요인들은 많이 완화되었지만, 부부가구와 같은 2인 가구 및 1인 가구의 지속적인 증가가 전체 가구 증가를 이끌어 갈 것으로 보인다.

둘째, 성 및 연령별 추계결과에 따르면 2000-2020년중 가구주의 노령화 및 여성화가 크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65세 이상 노인 가구주는 전체의 12.1%에서 21.0%로, 여자 가구주는 18.5%에서 21.9%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저출산과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빈둥지 기간의 부부가구가 크게 늘어나고 부부만의 기간이 길어 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부부관계의 질적인 향상을 위한 다양한 대책이 요구된다. 아울러 노인부부의 증가에 따른 보건·의료 서비스 및 소득보장에 대한 사회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편부모+자녀 가구」는 2000년에는 1,148천 가구였으나 2020년에는 1,409천 가구로 261천 가구 정도가 늘어 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가구의 연령은 30대 후반부터 많이 발생하기 시작하여 40-50대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다가 점점 고령화되는 추세이다. 이들의 사회 진출 및 적응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가 요구된다.

다섯째, 「1인 가구」는 2000년 2,270천 가구였으나 2010년에는 3,109천 가구, 2020년에는 3,897천 가구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다. 「1인 가구」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2000년에는 25-29세가 14.3%로 가장 높으나 2010년에 이르면 인구 노령화로 가장 주된 연령층이 70-74세 (11.0%)가 되고 2020년에는 이 비율이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노인 1인 가구는 일반적으로 건강, 생계는 물론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여섯째, 평균 가구원수는 2000년 3.1명에서 2020년에는 2.7명으로 소가족화가 앞으로 더욱 진행될 전망이다. 특히 2010년부터는 2인 가구(22.4%)가 3인 가구(20.7%)보다 더 많아지기 시작하며, 2020년에는 1인 가구(21.5%) 또한 3인 가구(19.5%)보다 많아질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가족정책은 물론 주택 등 가구내 구재 시장 등에서 1인이나 2인 가구에 초점을 맞추는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김승권, 장경섭, 이현송, 정기선, 조애저, 송인주. 2000. 《가족의 변화와 대응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형석. 2002. “가구주율법에 의한 장래가구추계.” 《조사연구》 3(1):

65-90.

통계청. 2001a. 《1999년 생명표》.

_____. 2001b. 《장래인구추계》.

_____. 2001c. 《2000 인구주택총조사 조사지침서》.

_____. 2001d. 《2000 인구주택총조사 보고서》.

厚生省人口問題研究所. 1995. 《日本の世帯数の將來推計:全國推計/都道府縣別推計 -1990年~2010年》. 동경.

大江守之. 1994. “世帯主のコーホト變化に着目した家族類型世帯数の推計手法-その2 世帯形成期の有配偶關係推計と家族類型別世帯主率推計.” 《人口問題 研究》. 第49卷 第4号: 1-22.

_____. 1993. “世帯主のコーホト變化に着目した家族類型世帯数の推計手法- その1 家族類型別純遷移率法の提案.” 《人口問題研究》. 第49卷 第3号(1993): 39-46.

Bell, M., J. Cooper, and M. Les. 1995. *Household and Family Forecasting Models: A Review*. Commonwealth of Australia: Canberra.

Bell, M. and J. Cooper. 1990. “Household Forecasting: Replacing the Headship Rate Model”, Paper Presented at the Fifth National Conference of the Australian Population Association, 19-21 November, Melbourne.

Brown, S. P. 1951. “Analysis of a Hypothetical Stationary Population by Family Units: a Note on Some Experimental Calculations.” *Population Studies* (London), vol. IV, No. 4(March): 380-394.

Corner, I. E. 1989. “Developing Centralised Household Projections for National and Sub-national Areas”. In P. Congdon and P. Batey. (eds.) *Advances in Regional Demography: Information, Forecasts, Models*, London: Belhaven Press.

Keilman, N., A. Kuijsten, and A. Vossen. (ed.) 1988. *Modelling Household Formation and Dissolution*. Oxford: Clarendon Press.

Kent, R. 1992. “Household Formation by the Young in the United States”, *Applied Economics*, Vol. 24, No. 10, October, London.

- Ketkar, K. W. 1990. "A Log-linear Approach to Disaggregated Micro-level Population Forecasts", *International Journal of Forecasting*, Vol. 6, No. 2, July, Amsterdam.
- Keyfitz. 1972. "On Future Population", *Journal of the American Statistical Association*, 67(338): 347-63
- Kim, Hyungseog. 2002. "Household Projections for Korea." A Paper Presented at the 20th Population Census Conference, June 19-21, Ulaanbaatar, Mongolia.
- _____ and Namsoo Jung. 2001. "Determinants of Entry into First Marriage in Korea." A Contributed Paper to the 53rd Session of the International Statistical Institute, August 22-29, 2001, Seoul, Korea.
- Kono, Shigemi. 1987. "The Headship Rate Method for Projecting Households," in John Bongaarts, Thomas Burch and Kenneth Wachter (eds.), *Family Demography*, Oxford University Press: 287-308.
- Mason, A. 1987. *HOMES: A Household Model for Economic and Social Studies*. Hawaii: East-West Center.
- Nishioka, H., T. Suzuki, Y. Koyama, C. Yamamoto, and K. Kojima. 2000. "Household Projections for Japan, 1995-2020: Methods and Results." *Review of Population and Social Policy*, No. 9: 65-85.
- Preston, Samuel H, H. Patrick and G. Michel. 2001. *Demography : Measuring and Modeling Poulation Processes*. Massachusetts: Blackwell Publishers
- Shryock, Henry S., Jacob S. Siegel. 1976. *The Methods and Materials of Demography*. Edward G. Stockwell (ed.). Academic Press, Inc., New York
- Suzuki, Toru. 2000. "Leaving the Parental Household in Contemporary Japan." *Review of Population and Social Policy*, No. 10: 23-35.
- _____. 1999. *Projection of Households in Japan with a Dynamic Macro- Simulation Model*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 UN. 1993. *Population and Development Planning*. Proceedings of the United Nations International Symposium on Population and Development Planning.
- _____. 1989. *Projection Methods for Integrating Population Variables into Development* (Volume 1 Methods for Comprehensive Planning).
- _____. 1973. *Method of Projecting Households and Families*. Manuals on Methods of Estimating Population (Manual VII).
- _____. 1968. *Principles and Recommendations for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es*.
- _____. 1958. *Multilingual Demographic Dictionary*.
- US Bureau of the Census. 1986. *Projections of the Number of Households and Families 1986-2000*, Washington.

<표 6-1> 가구수 추이

(단위 : 천 가구, 천 명, %)

		2000	2005	2010	2015	2020
o 가구	¹⁾	14,609	15,789	16,864	17,571	18,158
(증가)	²⁾	1,463	1,180	1,075	707	587
(연평균증가율)	³⁾	2.13	1.57	1.33	0.83	0.66
o 일반가구 인구	⁴⁾	45,427	46,978	48,181	48,849	49,194
(증가)	²⁾	1,561	1,550	1,204	667	345
(연평균증가율)	³⁾	0.70	0.67	0.51	0.28	0.14

주: 1) 2000년은 인구주택총조사 조사자료로서 누락분이 보정된 자료이며, 2005-2020년
은 추계자료임

2) 직전 기간에서부터의 순증가

3) 직전 기간에서부터의 연평균 증가율

4) 외국인, 특별조사구, 집단시설 인구 제외

<표 6-2> 가구주의 성별 및 연령별 가구수 : 2000-2020

(단위 : 천 가구, 세)

	2000	2005	2010	2015	2020
남 자	11,901	12,713	13,408	13,840	14,179
0 -14	1	1	1	0	0
15 - 19	40	34	38	35	30
20 - 24	171	147	118	130	116
25 - 29	822	689	640	492	528
30 - 34	1,586	1,600	1,410	1,387	1,125
35 - 39	1,908	1,829	1,787	1,627	1,647
40 - 44	1,917	1,913	1,836	1,838	1,670
45 - 49	1,446	1,824	1,873	1,774	1,789
50 - 54	1,159	1,336	1,755	1,770	1,704
55 - 59	940	1,062	1,250	1,625	1,662
60 - 64	806	837	957	1,120	1,477
65 - 69	552	680	714	814	974
70 - 74	304	425	540	566	664
75 - 79	167	209	308	390	420
80 - 84	63	94	126	190	246
85+	20	33	55	80	125
평균 연령	45.8	47.1	48.5	49.9	51.3
여 자	2,708	3,076	3,455	3,730	3,979
0 -14	1	1	1	0	0
15 - 19	40	33	36	34	29
20 - 24	189	196	161	184	176
25 - 29	202	202	217	182	211
30 - 34	163	191	184	193	160
35 - 39	210	222	238	219	226
40 - 44	275	301	310	313	290
45 - 49	248	333	356	354	356
50 - 54	232	275	373	380	371
55 - 59	232	252	300	396	402
60 - 64	251	240	257	292	378
65 - 69	250	279	282	300	347
70 - 74	205	267	338	349	393
75 - 79	133	172	238	299	327
80 - 84	55	81	112	158	200
85+	22	31	51	76	112
평균 연령	50.5	51.5	53.2	54.6	56.0

<표 6-3> 가구주의 성 및 혼인상태별 가구추이 : 2000-2020

(단위 ; 천 가구, %)

가구주 혼인상태	2000		2005		2010		2015		2020	
	가구	구성비	가구	구성비	가구	구성비	가구	구성비	가구	구성비
계	14,609	100.0	15,789	100.0	16,864	100.0	17,571	100.0	18,158	100.0
유배우	10,963	75.0	11,556	73.2	12,119	71.9	12,458	70.9	12,718	70.0
사별	1,594	10.9	1,730	11.0	1,964	11.6	2,152	12.2	2,352	13.0
이혼	564	3.9	805	5.1	1,005	6.0	1,144	6.5	1,241	6.8
미혼	1,487	10.2	1,697	10.8	1,775	10.5	1,817	10.3	1,847	10.2
남자	11,901	100.0	12,713	100.0	13,408	100.0	13,840	100.0	14,179	100.0
유배우	10,514	88.3	11,058	87.0	11,566	86.3	11,878	85.8	12,120	85.5
사별	228	1.9	255	2.0	292	2.2	323	2.3	359	2.5
이혼	251	2.1	362	2.8	455	3.4	520	3.8	568	4.0
미혼	908	7.6	1,038	8.2	1,095	8.2	1,119	8.1	1,133	8.0
여자	2,708	100.0	3,076	100.0	3,455	100.0	3,730	100.0	3,979	100.0
유배우	449	16.6	498	16.2	552	16.0	580	15.6	598	15.0
사별	1,366	50.5	1,476	48.0	1,672	48.4	1,828	49.0	1,993	50.1
이혼	313	11.6	443	14.4	550	15.9	624	16.7	674	16.9
미혼	579	21.4	659	21.4	681	19.7	698	18.7	714	17.9

<표 6-4> 가구구성별 가구 : 2000-2020

(단위 ; 천 가구, %)

가구구성	2000		2005		2010		2015		2020	
	가구	구성비	가구	구성비	가구	구성비	가구	구성비	가구	구성비
계	14,609	100.0	15,789	100.0	16,864	100.0	17,571	100.0	18,158	100.0
부부	1,802	12.3	2,185	13.8	2,597	15.4	2,987	17.0	3,429	18.9
부부+자녀	7,035	48.2	7,435	47.1	7,666	45.5	7,688	43.8	7,537	41.5
편부+자녀	225	1.5	242	1.5	266	1.6	279	1.6	284	1.6
편모+자녀	923	6.3	1,005	6.4	1,080	6.4	1,112	6.3	1,125	6.2
(핵가족) ¹⁾	9,984	68.3	10,868	68.8	11,609	68.8	12,066	68.7	12,375	68.2
3세대 이상	1,223	8.4	1,152	7.3	1,073	6.4	964	5.5	852	4.7
1인 가구	2,270	15.5	2,677	17.0	3,109	18.4	3,493	19.9	3,897	21.5
비혈연	163	1.1	160	1.0	150	0.9	143	0.8	136	0.7
기타	969	6.6	933	5.9	922	5.5	905	5.2	898	4.9

주 : 1) 「부부 가구」, 「부부+자녀(미혼) 가구」, 「편부+자녀(미혼) 가구」, 「편모+자녀(미혼) 가구」의 합계

<표 6-5> 「부부 가구」 : 2000-2020 (단위 : 천 가구, %)

	2000	2005	2010	2015	2020
계	1,802	2,185	2,597	2,987	3,429
15 - 19	1	1	1	1	1
20 - 24	17	17	12	12	10
25 - 29	185	164	159	125	138
30 - 34	184	201	191	200	169
35 - 39	77	82	87	84	88
40 - 44	64	72	75	80	76
45 - 49	85	121	137	140	149
50 - 54	131	167	237	253	256
55 - 59	190	236	295	403	427
60 - 64	283	319	383	467	639
65 - 69	269	349	384	450	554
70 - 74	172	248	325	348	411
75 - 79	98	134	198	256	283
80 - 84	36	57	81	122	158
85+	11	17	31	46	71

<표 6-6> 「부모+자녀 가구」 및 「편부모+자녀 가구」 : 2000-2020

(단위 : 천 가구, 세)

	2000			2005			2010			2015			2020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계	7,035	225	923	7,435	242	1,005	7,666	266	1,080	7,688	279	1,112	7,537	284	1,125
15-19	0	0	1	0	0	1	0	0	2	0	0	2	0	0	2
20-24	13	1	10	10	1	13	7	1	12	6	1	14	5	1	14
25-29	279	3	43	213	3	45	182	4	48	129	3	40	127	3	47
30-34	1,018	10	74	1,022	11	82	884	11	77	857	11	81	683	9	68
35-39	1,442	25	119	1,397	20	117	1,375	19	119	1,251	16	111	1,267	16	115
40-44	1,453	45	166	1,471	44	164	1,423	43	159	1,425	43	160	1,296	39	146
45-49	1,047	44	148	1,326	55	180	1,360	58	181	1,292	56	169	1,296	57	167
50-54	764	37	128	882	42	147	1,158	57	190	1,165	58	188	1,120	57	179
55-59	522	26	99	590	29	108	700	34	123	917	45	157	941	46	157
60-64	309	17	69	313	17	66	354	19	70	414	22	78	545	28	98
65-69	128	9	38	139	10	47	138	10	48	148	10	53	169	12	63
70-74	41	4	17	49	5	24	54	6	32	50	6	34	52	6	40
75-79	15	2	7	16	2	9	21	3	13	23	4	17	23	4	19
80-84	4	1	2	5	1	3	6	2	4	9	2	6	10	3	7
85+	1	0	1	1	0	1	2	1	1	3	1	2	4	2	3
평 균 연 령	43.9	49.1	47.3	44.6	49.6	47.7	45.6	50.4	48.5	46.4	51.1	49.3	47.1	51.9	50.1

주 : 1) 부부+자녀, 2)편부+자녀, 3) 편모+자녀

<표 6-7> 「1인 가구」 : 2000-2020

(단위 : 천 가구, %, 세)

가구주 연령	2000		2005		2010		2015		2020	
	가구	구성비	가구	구성비	가구	구성비	가구	구성비	가구	구성비
계	2,270	100.0	2,677	100.0	3,109	100.0	3,493	100.0	3,897	100.0
0 - 14	1	0.0	1	0.0	0	0.0	0	0.0	0	0.0
15 - 19	47	2.1	42	1.6	49	1.6	47	1.3	42	1.1
20 - 24	201	8.8	204	7.6	174	5.6	204	5.8	195	5.0
25 - 29	324	14.3	310	11.6	320	10.3	266	7.6	305	7.8
30 - 34	239	10.5	271	10.1	266	8.5	284	8.1	244	6.3
35 - 39	185	8.2	199	7.4	217	7.0	213	6.1	229	5.9
40 - 44	169	7.5	189	7.1	202	6.5	218	6.3	211	5.4
45 - 49	132	5.8	185	6.9	210	6.8	216	6.2	230	5.9
50 - 54	119	5.3	152	5.7	218	7.0	234	6.7	237	6.1
55 - 59	132	5.8	158	5.9	198	6.4	270	7.7	286	7.4
60 - 64	167	7.4	181	6.7	211	6.8	252	7.2	338	8.7
65 - 69	192	8.4	256	9.5	280	9.0	326	9.3	400	10.3
70 - 74	172	7.6	254	9.5	342	11.0	372	10.7	446	11.4
75 - 79	119	5.2	162	6.0	246	7.9	323	9.3	363	9.3
80 - 84	51	2.3	82	3.1	118	3.8	180	5.1	235	6.0
85+	20	0.9	33	1.2	59	1.9	87	2.5	135	3.5
25미만	248	10.9	246	9.2	223	7.2	251	7.2	237	6.1
25-64	1,468	64.7	1,644	61.4	1,842	59.2	1,953	55.9	2,082	53.4
65세 이상	554	24.4	787	29.4	1,044	33.6	1,289	36.9	1,578	40.5
평균 연령	47.3		49.7		52.2		54.2		56.0	

<표 6-8> 가구원수별 가구 : 2000-2020

(단위 : 천 가구, %, 명)

	2000		2005		2010		2015		2020	
	가구	구성비	가구	구성비	가구	구성비	가구	구성비	가구	구성비
계	14,609	100.0	15,789	100.0	16,864	100.0	17,571	100.0	18,158	100.0
1인	2,270	15.5	2,677	17.0	3,109	18.4	3,493	19.9	3,897	21.5
2	2,787	19.1	3,280	20.8	3,781	22.4	4,220	24.0	4,692	25.8
3	3,049	20.9	3,314	21.0	3,491	20.7	3,557	20.2	3,546	19.5
4	4,540	31.1	4,835	30.6	4,994	29.6	5,008	28.5	4,909	27.0
5	1,473	10.1	1,332	8.4	1,209	7.2	1,078	6.1	949	5.2
6	352	2.4	260	1.6	212	1.3	167	1.0	133	0.7
7인 이상	137	0.9	92	0.6	66	0.4	48	0.3	32	0.2
평균	3.1		3.0		2.9		2.8		2.7	

제17장

한국의 인구정책

박 상 태

(서강대학교)

I. 서론

우리 나라에서 인구 증감과 인구구조에 대한 논의가 공론화 되고 이에 대한 논쟁이 시작된 것은 1953년 한국전쟁 휴전 이후부터이다. 이것은 물론 한국전쟁 이후 급격한 인구증가가 가장 큰 이유였다고 생각된다. 이 장에서는 1950년대 이후 우리 나라에서 주로 논의되었던 인구문제와 이에 대한 정부 시책의 발전과정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정책적 함의를 찾아보고자 한다.

우리 나라가 지난 50년간 인구의 규모와 구조상 큰 변화를 겪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표1 참조). 특히 단기간에 출생률과 사망률이 선진국형의 낮은 수준으로 저하되고 이에 따른 인구증가율의 저하는 전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는 적절한 시기에 정부가 정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한 것에 기인하며 이에 못지 않게 민간단체의 노력과 더불어 기혼부부들의 개인적인 욕구와 이들에게 내면화된 가치관의 변화가 동시에 수반되었기 때문이었다.

우리 나라는 유럽, 북미와 일본 등 선진국들과 더불어 인구학적 선진국으로 분류되며 선진국과 같이 이른바 인구변천과정을 모두 겪었다 (표2 참조). 사회경제적 발전과 인구변천과정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통설이다. 즉 이들은 상호 대응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출생 및 사망률이 전통적인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서 높은 수준의 사회경제적 발전이 이룩될 수 없으며, 사회경제적 발전 없이 출생 및 사망률이 낮은 수준으로 저하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이론은 중국의 경험 등에 의해 수정되고 있다. 예컨대 입구가설(threshold hypothesis)의 경우 선진국과 일부 개발도상국의 경험에 의하면 사회경제적 발전을 어느 정도 이룩되어 사망률은 저하했다 하더라도 바로 출생률이 떨어지지 않고 발전의 수준이 일정한 정도를 넘어서야 그때부터 출생률

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하여 출생 사망 모두 낮은 수준에서 안정화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었던 발전의 지수는 문자 해독률(문맹률)과 도시거주인구비(도시화의 정도)였다 (UN, 1973, 95-96). 그러나 중국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문자해독률과 도시인구비를 가지고도 급격한 출생률 감소현상을 보여주고 있었다.

따라서 인구정책은 다른 정책과 달리 기존이론에 의해서 일정한 모형을 따르기 어려운 점이 강조된다.

II. 인구정책과 인구사상

II-1. 인구정책의 정의와 범위

이 장에서 인구정책이라 함은 인구의 구조(크기, 분포, 구성)와 변화과정(출생, 사망, 이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책만을 대상으로 한다.

II-2. 현대이전 인구사상에서의 낙관적전통과 비관적전통 간략히 설명

II-3. 정책적 함의

UN의 최근 추계에 의하면 지구상의 전 인류는 2050년쯤 그 인구변천 단계를 모두 거치고 인구안정기에 들어설 것이라고 한다. 바꾸어 말하자면 거의 모든 인구의 출산율이 대체수준 또는 그 이하로 떨어지고 동시에 사망률도 낮아져 인구증가율이 미미한 ZPG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 국가간 또 지역간의 차이는 있겠으나 이 같은 현상은 인류역사상 초유의 현상이다. 물론 ZPG 상태에 어느 정도 오래 머물게 되는가의 여부는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서 좌우된다.

인구와 자원과의 관계에서 논의되는 주요 논제는 지구의 부양능력(carrying capacity)이다. 그 부양능력 중 재생될 수 없는 자연자원에 대해서는 대체가 가능하다고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식량을 포함한 생활 필수품의 생산능력이다. 과거 수렵채취사회에서의 생산능력으로는 현 지구상 인구의 1%도 부양하기 어려웠을지 모른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고도의 식량 및 생활필수품 생산능력으로는 부양능력에 대한 다른 계산이 가능하며 적정인구에 대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수 있다고 보여진다. 어떤 방식으로 부양능력을 계산하던 지구상의 인구수와 부양능력 간의 평형관계는 늘 새로운 형태를 취하게 마련이다.

지난 20세기 다양한 배경의 학자들이 지구의 인간 수용능력을 추계해 보았다. 그런데 그 숫자는 참으로 다양하여 적게는 10억에서 많게는 1000억을 넘고 있다. 지구상에 몇 명의 인구가 살 수 있는냐는 매우 복잡하고 예민한 문제로써 물질적 수준과 복지적(사회적) 수준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달려있다. 지구의 인구수용능력은 단순히 자연자원의 한도에 의해 추계될 수도 있으며 현재의 우리와 장래 우리 후손들이 결정할 수도 있다. 즉 인구와 경제성장, 인구와 환경, 인구와 사회발전 등 여러 가지 함수관계에 의해 결정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일정한 수준의 인구성장이 일부 국가나 지역사회에서는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나 다른 지역에서는 오히려 바람직한 현상일 수도 있다. 역사적으로 인구성장에 대한 비판론과 낙관론이 교차되어 왔음은 이를 경험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이제 각 국가별로 그 사회의 발전계획에 부합되는 인구정책이 필요한 시점에 도달했다. 특히 긍정적인 전망에 따른 정책수립과 과감한 실행은 장래문제 해결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60년대 초반 우리 나라 국민의 교육수준이 현재에 비해 월등히 낮고 또 전통적인 가치가 지배하던 시기 과감한 정부의 가족계획 정책이 우리 나라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음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 인구수와 관련된 기본적인 목표는 연령 및 성 구성의 안정에 두어야한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출산수준의 대체수준 유지가 필수적이라고 생각되며 이에 대해서는 다음절에서 논의해 보고자 한다.

Ⅲ. 출산력에 대한 인구정책

Ⅲ-1. 저출산- 새로운 사회문제

우리 나라는 1960년대 초부터 정부와 민간단체가 주도-협력하여 실시한 가족계획사업을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출산율의 억제에 성공한 대표적인 나라로 손꼽힌다. 1960년대 초까지만 해도 출산조절-산아제한이란 표현의 사용은 거의 금기로 여겼으며 가족계획이란 완곡한 표현조차도 사용하기 조심스러웠다. 1960년 우리 나라 가임 여성의 합계출산율은 근대 이전의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던 수준인 6.0명이었다. 이 율은 지속적으로 그리고 급격히 저하하여 통계청에서 추계, 발표한 자료를 인용하면, 1970년 4.5명, 80년 2.8명, 90년 1.6명, 2000년 1.3명(2002년 8월 26일 통계청 발표 참조)으로 특히 지난 10년 이상 출산수준이 대체수준을 밑돌고 있으며 이는 선진국 평균 수준보다도 낮기에 우리를 놀라고 당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이제 우리는 저출산을 걱정할 수밖에 없는 사회에 살게 된 것이다.

III-2. 세계적인 출산력의 붕괴현상과 정책적 선회

2001년 현재 지구상 인구 중 40% 이상의 인구가 재생산 수준 이하의 출산력 수준을 보이고 있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또한 이 비율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출산장려정책은 20-30년 이내 세계 여러 나라에서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 (이하생략)

두 차례에 걸친 세계대전 기간을 전후하여 독일과 이태리, 일본 등 군국주의 국가와 당시 벌써 출산률이 매우 낮았던 프랑스의 출산장려정책은 Spengler (Spengler, 1938), Glass (Glass, 1940), Taeuber (Taeuber, 1958) 등의 연구에서 보여 주듯이 현금이나 현물의 가족수당, 차별적 세금적용, 모자보건 혜택 등 금전적인 보상의 형태와 훈장 등 사회적인 명예를 수여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들 보상은 자녀를 갖고 양육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대가로서 너무 작았기에 가시적인 효과가 없었으며 더구나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기간 중 실시된 것이어서 당시 사회적 상황이 매우 불안하고 경제가 불안정했던 것 등의 이유로 그 효과를 나타내기 어려웠다.

동구의 사회주의의 몰락 후 신 출산장려주의 정책과 프로그램이 마련되었으나 동구의 경우도 정치적 경제적 상황이 매우 불안정했다. 인기 없는 독재정권, 경제적인 불황 등의 어려운 상황에서 장래가 불확실했기에 이들 정책의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못했다. 즉 강압적인 정책 이외의 자발적인 유도를 통한 출산장려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웠던 것이다 (Ross and Frejka, 2001).

III-3. 정책적 함의

현재 우리 사회에는 만혼, 독신, 이혼, 별거 등 혼인력을 낮추는 혼인양식이 제도화되고 있다. 이에 더하여 다 자녀 기피현상과 더불어 소 자녀에 대한 가치가 내면화되어 있다. 출산율이 증가할 수 있는 여건을 위한 제도적 변화는 찾아보기 힘든 불리한 조건에 놓여 있다. 출산을 증가시키기 위한 정책에 드는 비용이나 노력은 과거 출산을 감소시키기 위해 들였던 비용이나 노력보다 더 크게 들것으로 예상된다. 우리의 의식구조나 가치관을 과거와 같은 유형으로 되돌린다는 것은 정치, 경제, 사회구조 등 다른 모든 조건이 변화된 상황에서 불가능한 일이다. 세계화-정보화 된 사회에서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우리 나라의 경우, 체계적인 인구정책을 마련하는 첫 단계는 국민 각자 적당한 수의 자녀를 갖는 것이 매우 바람직한 것이기에 자녀가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 비해 불리

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배려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 여러 가지 인센티브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겠으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녀는 우리 모두의 자산이기에 어린이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 전체가 책임을 지는 가치관을 공유하게 하는 것이다. 과거 농경사회에서 어린이는 친족이나 마을 공동체가 공동으로 돌봐주었다. 오늘날 북유럽 여러 나라에서 어린이를 마을 전체가 돌보는 제도가 정착하며 이혼율도 저하하고 출산율도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있는 현상은 좋은 본보기가 된다.

문화지체 현상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의식과 가치관의 변화에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함은 말할 필요가 없다. 과거 인구는 자연환경에 의한 자연적 체크와 가족, 동족, 친족에 의해서 조절되었다. 이 기능을 오늘날에 와서는 정부나 광역행정기구, 또는 지방행정기구가 감당할 수밖에 없다. 우리 나라보다 훨씬 먼저 출산율이 대체수준 이하로 떨어져 총 출산율이 1.3명을 보이고 있는 일본과 일부 선진국에서는 더 이상의 출산율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영유아 보육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있으며, 남성 육아휴직을 적극 권장하고, 불임부부에 대한 치료지원 등 다양한 정책과 더불어 15세 미만 자녀에 대한 직접적인 금전적 지원까지도 고려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현재 세계적으로 저 출산 국가에서 고려하고 있는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정책으로서 다음과 같은 정책의 입안이 논의되고 있다.

첫째, 성장한 자녀가 매년 세금으로 납부한 금액 중 상당 부분을 정부가 직접 65 또는 70세 이상 생존 부모에게 되돌려 주는 방안과

둘째, 자녀를 부양한 후 퇴직한 부모들에게 부양한 자녀수에 비례하여 연금액 수를 정해주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셋째, 경제적인 인센티브로서는 미흡할 경우 정치적인 인센티브로서 모든 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20세 미만 자녀의 투표권을 부모에게 행사하도록 하는 방안도 지나치게 낮은 수준의 저출산 국가에서 시행될 가능성이 있다.

IV. 사망률 저하를 포함한 보건정책

인류 역사상 거의 모든 국가나 인간 집단에서 건강한 삶의 유지는 그 자체 모든 사회계획이나 정책의 목표가 되어왔다. 자국이나 자გი지역 주민의 건강한 삶의 유지에 의도적으로 배치되는 정책을 수립한 나라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나 보건정책에 대한 자원의 배분이나 우선 순위는 국가마다 지역사회마다 큰 차이가 있었음은 부인할 수 없다.

보건정책은 다른 경제 및 사회정책과 상호의존관계에 있다. 소득수준과 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의료 및 보건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고 그 수요에 대한 원만한 공급이 이루어질 경우 이를 통한 노동력의 질과 생산성을 향상시켜 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됨은 주지의 사실이다. 일부 선진국의 경제학자들은 보건 의료에 대한 투자와 다른 분야에의 투자를 생산성 등 그 효용성이란 점에서 비교하여 정책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기도 한다. 우리 나라에서도 이와 같은 시도가 있었으나 정책에 반영될 정도로 포괄적이고 다양한 측정변수를 이용한 전국적인 차원의 연구는 아직 없으나 가까운 장래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21세기를 맞아 인구정책의 전환점에 서게 된 우리 나라에 있어 건강한 삶의 질을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는 치료의학 못지 않게 예방의학에 더 많은 자원을 배분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출산 전후에 있는 모성집단과 영유아집단 그리고 노년인구 등 취약집단에 대한 체계적인 보건정책이 더욱 더 요구된다.

또한 전 인구를 위한 영양학적 정책과 환경개선, 그리고 기존의 전염병은 물론 새로운 전염병에 대한 예방 등이 당면한 주요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보건정책의 수립에는 특히 인구학적 자료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필수적이다. 우리 나라는 성별 연령별 사망에 대한 자료 등 대부분의 후진국에서는 구할 수 없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통계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나 이들 자료의 완전성에 대한 좀 더 많은 자원의 배분이 필요하다. 특히 우리 나라가 인구통계 분야에서 선진국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직업별, 교육수준별 사망 및 유병 자료가 확보되어야 하며 그 차이를 면밀히 검토하여 그 원인을 밝히고 취약집단에 대한 집중적 정책시행과 더불어 평균수명의 연장은 물론 건강지수의 향상을 도모해야 될 것이다.

V. 인구 분포

V-1. 인구재배치정책의 일반적 유형

인구재배치 문제에 있어 먼저 당면했던 문제는 농촌의 빈곤문제였다. 산업화 과정 중 세 가지 문제가 이와 관련된다. 첫째, 사망률이 저하되고 높은 출생률이 계속된 농촌 특히 후진국 농촌지역에서의 과잉인구를 도시에서 충분한 일자리로 흡수하지 못해 무작정 도시로 이주한 도시빈민의 대량 양산이다. 둘째, 발전된 국가에서는 이와 반대로 농촌인구의 도시에로의 이출로 인한 농촌인구 부족 현상이 심화되었다. 셋째, 도시의 급격한 성장은 농지의 토질과 관계없이

도시 주변의 농촌에 농업이 집중되고 있어 생산성을 저하시킨 점이다. 이들 문제를 해결하고 국토의 균형적인 개발과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정책이 고안되고 실시되었다.

우리 정부는 1970년 4월 국무회의에서 ‘首都圈 人口 過密 集中 抑制에 관한 基本指針’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1, 593-5 쪽) 인구집중 해소를 위한 장기대책으로서 7가지와 법적규제 10가지를 제시했다. 또한 1971년 10월에 수립한 ‘國土綜合開發計劃’에서도 다음에 제시한 정책들을 포함하고 있다.

가. 이농민의 농촌귀환

나. 농촌개발

다. 산업시설의 분산

라. 신도시건설

마. 성장거점도시개발

V-2. 수도권 인구집중에 대한 대비되는 관점

생략

V-3. 수도권 개발과 국가발전

최근 건설교통부의 발표에 의하면 2002년 하반기에 확정할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에서 인구집중이 심한 서울 주변과 서울-인천 축과 서울-수원 축 이외에 인천-수원간의 새로운 축을 개발하여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를 실현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인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계획은 수도권내 공장과 주택 건설 등을 최대한 억제해온 기존의 1-2차 수도권 정비계획과 기본방향이 다른 것이다. (2002년 8월 3일 중앙일보 1면)

이와 같은 계획 즉 정책선회의 배경에는 장기적인 국가발전이란 기본적인 목표는 뚜렷하나 각 부처 및 수도권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이 너도나도 이런 이유와 저런 명분을 내세워 독자적인 개발계획을 세우고 있어 이미 수도권 집중억제라는 정부의 기본시책이 실효성이 없어졌다는 데 있다. 또한 정부의 시책은 실효성이 없으면서 경쟁력만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즉 공장건설을

규제하다 보니 이미 공장을 갖춘 대기업들만 유리해진다. 그런 기업들도 확장을 못해 생산성이 떨어지고 경쟁력을 잃고 있다는 것이다. 자유 시장경제 제도하의 사회에서 지역간의 균등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재정을 튼튼히 하기 위한 지방세제를 보완하고 집중지역의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지방에 배분하는 조세상의 정책과 지방 중심의 우수 고교를 설립하여 인재가 모이도록 유도하는 정책 등이 다각도로 연구되어야 한다. 현재와 같은 조세제도와 인력양성 체제하에서는 불균등한 지역발전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아마도 가장 큰 수도권 집중의 요인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정치제도의 특성이라고 생각된다. 우리 나라는 건국이래 제2공화국 단기간을 제외하면 강력한 대통령중심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61년 이후 효율적인 정책시행에 의한 경제발전에는 큰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으나 중앙집권적 독재국가이었음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정치제도가 그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만큼 이상의 권력이나 금력 또는 사회적 희소가치를 좌우할 때 나머지 제도의 어용화 현상이 일어나게 되며 정치권력이 소재한 지역으로의 집중현상은 당연하고 필연적인 현상이 된다. 모든 것이 수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때 수도권 집중을 완화시키는 일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막대한 비용과 노력이 요구되며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 된다. 다행히 김영삼 대통령 정권 이후 실시되고 있는 지방자치제와 전국민적 민주화의 노력은 독재정권들이 초래했던 유형의 수도권 인구집중을 어느 정도 완화시키리라 예상된다.

VI. 연령구조(年齡構造)와 노령화

VI-1. 연령구조의 인구학적 의미

VI-2. 노령인구 증가에 대한 사회경제적 의미

노년인구의 증가에 대한 견해는 비관적인 견해와 낙관적인 견해로 나누어져 있다.

인구가 극도로 노령화할 경우, 전체국민의 생활수준을 감소시킬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고령인구의 증가로 연금제도를 포함하는 사회보장제도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어 국가경제 및 사회의 균형적인 발전을 해치

게 한다. 노령인구 사회는 보수성이 짙어 새로운 개혁이나 진취적이고 독창적인 사고가 결여되기 쉽다. 결과적으로 젊은 연령층이 많은 사회보다 뒤지게 된다. 또한 노령인구가 급속히 증가하여 적체될 경우 주로 젊은 인구 층에 의해 이루어지는 많은 분야의 노동생산성의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 그러므로 선진공업국에서도 어느 정도의 인구증가는 사회발전에 필요한 것임을 말해 준다.

다른 한편 노령화 사회에 오래 전 진입한 미국,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일본 등지에서의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보여주고 있다(Schulz *et.al.*, 1991). 먼저 경제적인 측면에서 노인인구의 증가로 부양비가 증가하고 궁극적으로 생활수준을 저하시킨다고 하지만 실제 경제활동 참가율을 보면 1950년대 미국의 경우 65세 이상인구의 27%(남성 46%)가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었으나 1987년이 율은 11%(남성 16%)로 저하했다. 이것은 젊은 세대의 실업률로 인한 조기 퇴직의 압력에 의한 것으로서 거의 모든 선진국에서 비슷한 현상이 발견된다. 따라서 노인인구로 하여금 일에서 멀어지게 하는 경제적 상황에 의한 것이 노인들의 참가율이 자발적으로 떨어진 것이 아니었다.

다음 생산성이 저하된다는 가설이다. 노동생산성은 측정하기 어려운 지수이다. 특히 생산성은 교육정도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노년인구의 교육수준은 젊은 노동력의 교육수준보다 낮으며 경력으로 인한 높은 임금 때문에 고용을 기피할 뿐이다. 공장 작업장에서의 생산성은 노인이 젊은이에 비해 뒤진다. 그러나 판매업의 경우 노인의 생산성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도 나와 있다. 더구나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창의성, 융통성, 결근률, 사고율, 이직률 등을 고려하면 차이가 없어진다.

세째로 저축률과 투자율에 관한 것이다. 노인일수록 저축률과 투자율이 감소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통설로 되어 있으나 저축률의 경우 감소하지 않고 증가한다는 것이다. 젊은 노동인구의 가구소득은 대부분 자녀의 교육 등으로 저축할 여유가 없으나 연령이 높은 가구의 경우 노후를 위해 저축률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대체로 사회보장제도가 확립된 사회에서는 개인적 저축률은 감소하지만 전체적 즉 집단적 저축률은 연금 계획 등에 의해 오히려 증가한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다음 투자율은 노동력 참여율과 정의 상관관계를 갖는다. 따라서 여성들의 높은 참여율과 노인 자신들의 참여율 증가로 저축률 감소 현상이 미미해지게 된다.

VI-3. 우리 나라의 노령화 (생략)

VI-4. 정책적 함의

노령화현상에 대한 대처에 있어 그 시기를 놓칠 경우 지체에 대한 부담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 보다 훨씬 클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가. 노인집단의 역할에 대한 잘못된 인식 시정

나. 가족의 역할

다. 국가차원의 역할

위에 말한 개인, 가족, 국가의 원활한 역할수행을 위해서는 비정부기구(NGO)나 국제기구의 역할을 빼놓을 수 없다. 이들 단체들은 정부와의 긴밀한 협조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압력단체로서, 때로는 로비를 통해 효율적인 역할 수행을 도와 줄 수 있다.

특히 21세기에 들어와 대중 미디어의 역할은 그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현재노인은 물론 장래 노인이 될 젊은 세대에 대한 교육과 더불어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청산하고 노인이 사회에 꼭 필요한 존재라는 긍정적 이미지를 심어 주는데 앞장서도록 해야한다. 이를 위해 영화 연극 및 기타 시청각 프로그램에서 가족의 화목과 이에 대한 노인의 역할을 강조하고 노인의 허약함이나 무용성 보다는 그들의 경험과 기술이 얼마나 유용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하다.

VII. 성구조와 성평등

출생아에 대한 성 선호(남아선호를 말함) 문제는 우리 나라에서 큰 사회문제가 되어왔으며 이것은 특히 총출생률이 3.0 이하로 떨어진 75년 이후 출생시 성비에 반영되어 매우 우려되는 현상이었다. (표4 참조) 최근 이 현상은 어느 정도 완화되고 있는 듯 하지만 출생시 성비가 자연적(생물학적 결정에 의한) 수준으로 회복될지의 여부는 아직 분명하지 않으며 이것은 특히 둘째와 셋째 아이의 경우 애매하다.

성 평등 문제는 부분적으로 이혼률의 증가와도 관계되어 있다. 계속되는 이혼률의 상승세는 궁극적으로 가족의 불안정과 해체를 촉진하고 출산력 수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표5 참조)

1974년 UN에서의 회의(The World Plan of Action)에서 여성의 지위향상에 높은 우선권을 주자는 결정을 채택한 이래 각종 국제회의에서 이 문제를 계속

해서 제기하고 확인했다.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남자와 여자에 대한 역할과 기대가 다르다. 또한 남자와 여자가 주로 하는 일과 맡고 있는 책임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 급격히 변화하는 사회구조에 대한 각 사회의 반응도 다르다.

현재 우리 나라 여성의 지위를 상대적으로 비교하기 위해 세 가지의 지수를 이용하여 제시해 놓았다. (표 6 참조) 이들 세 지수는 유엔개발계획 (UNDP)에서 개발하여 추계한 것으로서 유엔은 매년 이 결과를 작성 발표하고 있다.

인간개발지수(HDI)는 세 가지 지수를 이용하여 추계한 것이다; 출생시 평균수명을 이용한 그 나라의 평균수명, 성인 문자 해독률과 취학연령군의 취학비율을 이용한 교육성취도; 인당 국내 총생산량을 가지고 계산한 생활수준 등을 말한다.

성관련 개발지수 (GDI)란 HDI의 지수 중 남성과 여성에 대한 수치들을 비교하여 조정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성권력지수(GEM)란 특히 정치 분야와 경제 분야에서의 남성에 대한 여성의 상대적 권한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경제 참여와 결정권을 측정하기 위해 두 가지 변수 즉 행정-관리직에서의 비율 및 전문직-기술적 직업에서의 비율을 사용했다. 정치 참여와 결정권의 측정은 여성 국회의원의 비율을 사용했다.

표 6에 제시된 바와 같이 여성의 지위는 우리 나라의 경우 다른 나라들에 비해 월등히 낮았다. 일부 이슬람 지역의 개발도상국을 제외하면 우리 나라 여성의 정치-경제적 권한과 지위는 비슷한 수준의 경제발전을 이룩한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매우 열악한 것이 현실이다.

최근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해 기울이고 있는 정부의 노력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새로운 정부기구가 설립되고 국가 발전에 여성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재정적 전문기술적 지원은 획기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시책들의 효과는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야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는 것이며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실행하지 않을 경우 이들 노력의 성과는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앞서 출산율의 정상화를 위한 정책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여기에서도 국민의 여성에 대한 전통적 가치관의 변화와 새로운 가치관의 형성이 필수적임은 말할 필요가 없다.

VIII. 국제이민

VIII-1. 우리나라 노동이민의 현황

1980년대에 들어와 동아시아, 특히 일부 신흥공업국가들은 경제 발전으로 다른 저개발국가와의 국민소득에 큰 차이를 갖게되어 다른 아시아의 빈곤한 국가들의 노동자들에게 매력있는 노동이민 대상국이 되었다. 우리 나라도 계속되는 호황을 누린 일본과, 홍콩, 대만, 싱가포르와 더불어 그 대상국이 되었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은 방글라데쉬, 인도, 파키스탄, 필리핀 등과 더불어 주요 노동자 수출국이였다. 그러나 한국은 주요 수출국에서 주요 수입국이 되었으며 아시아의 소위 4개의 작은 용 중 가장 큰 나라로서 계속 노동력을 계속 수입하고 있다. 한국에 이입한 노동이민들은 방글라데쉬, 인도, 파키스탄, 필리핀, 스리랑카와 조선족계 중국 노동자들이다. 지난 50년간 다양한 유형의 국제 이동의 경험을 갖고 있는 우리 나라는 이제 우리 경제의 발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의 외국인 노동자를 수용하고 있다. (Gubhaju, et.al., 2001, 53-54)

정부와 민간에서 필요에 의해 노동이민을 받아 들였다면 이들의 성공적인 우리 사회 성원으로서의 통합 문제를 도외시 할 수 없다. 물론 성공적인 통합에는 여러 요인이 작용한다. 주요 요인들은 첫째, 노동이민을 수용한 정부의 정책적 방향; 둘째, 수용국 국민들의 태도; 셋째, 이민집단 자신들의 문화적 특성과 개인적 태도 등이다. (UN, 1973, 258-261)

수용국의 실정법을 포함한 사회구조가 경직되어 있지 않고 이민집단에게 자국민과 평등한 기회를 부여할 때 이들은 잘 통합될 것이다. 19세기 북아메리카는 좋은 본보기가 된다. 이민자들은 거의 평등한 자격으로 기회의 사다리에 올라 설 수 있어 빠른 통합이 가능했다. 다음 융통성 있는 사회계층 구조와 종교적, 인종적 편견의 강도는 이민집단으로 하여금 순조로운 사회통합에 기여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브라질의 경우가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는 경우이다. 마지막으로 이민집단 자신들의 특성이다. 수용국 국민과 이민집단 간의 언어, 종교, 신체상 외모, 사회적 관습과 문화적 전통이 크게 다를 경우 통합을 저해한다. 이에 대한 예로서 인도와 중국계 이민집단을 흔히 들고 있다.

VIII-2. 외국인력에 대한 최근의 정책

2002년 3월말 현재 국내에 취업중인 외국인은 모두 33만 7천명으로 이 가운데 78.9%인 26만 6천명이 불법체류자인 것으로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정부는 2002년 7월17일 '외국인력제도 개선대책'을 확정 발표했다.(2002년 7월

18일 동아, 중앙, 조선일보 참조) 정부는 1999년 이후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급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할 경우 심각한 사회문제로 확대될 것이 우려하고 합법적 고용은 허용하되 불법취업은 엄격하게 금지한다는 방침 아래 조선족을 비롯한 외국국적을 가진 동포들이 2002년 11월 1일부터 유흥업을 제외한 음식점업, 사업지원서비스업, 사회복지사업, 청소관련서비스업 등 서비스업 분야에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게 했다.

정부의 이와 같은 방침은 해외동포를 고려한 점과 필요인력의 공급이란 차원에서 매우 환영할만한 정책이다. 그러나 농축산업, 어업 등 국내 인력이 기피하는 직종에 안정적인 취업 즉 이들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의 문제와 더불어 국내 노조의 반발을 어떻게 무마 조정하는가 등이 정책 성공여부를 좌우하게 될 것이다.

IX. 요약 및 결론

1960년대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 우리 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높은 출산율과 사망률로 인한 높은 인구증가율이었다. 그러나 최근 이런 경향은 역전되어 낮은 출산율과 사망률로 인한 전례 없었던 낮은 인구증가율과 인구구조상의 노령화 문제가 당면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한편 출산력이 대체수준 이하로 저하했다 해도 인구의 구조적 특성과 평균수명 향상의 지연된 영향력으로 인해 인구수는 상당기간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고 있음에도 주목해야 한다.

이제 인류사회는 각 국가 또는 지역별로 그 사회의 발전계획에 부합되는 인구정책이 필요한 시점에 도달했다. 이하 몇 가지 우리가 당면한 정책과제를 제시해 본다.

1) 우리 나라의 경우 인구수와 관련된 기본적인 목표는 연령 및 성 구성의 안정에 두어야 한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출산수준의 대체수준 유지가 필수적이라고 생각된다. 대체수준 이하의 낮은 출산력과 평균수명의 연장은 필연적으로 인구의 감소와 노령화를 수반한다. 과거 인구는 자연환경에 의한 자연적 체크와 가족, 동족, 친족에 의해서 조절되었다. 이 기능을 오늘날에 와서는 정부나 광역행정기구, 또는 지방행정기구가 감당할 수밖에 없다. 현재 세계적으로 저 출산 국가에서 고려하고 있는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정책으로서 다음과 같은 정책의 입안이 논의되고 있다. 첫째, 성장한 자녀가 매년 세금으로 납부한 금액 중 상당 부분을 정부가 직접 65 또는 70세 이상 생존 부모에게 되

둘려 주는 방안과 둘째, 자녀를 부양한 후 퇴직한 부모들에게 부양한 자녀수에 비례하여 연금액수를 정해주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셋째, 경제적인 인센티브로서는 미흡할 경우 정치적인 인센티브로서 모든 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20세 미만 자녀의 투표권을 부모에게 행사하도록 하는 방안도 지나치게 낮은 수준의 저출산 국가에서 시행될 가능성이 있다.

2) 사망률의 경우 비록 일부 성-연령층(예컨대, 남성 40대)의 사망률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것이 자주 보고되는 바, 이에 대비한 정책은 계속되는 과제이며, 동시에 인류공통의 과제인 건강수명을 포함한 평균수명의 연장은 노령화 과정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한편, 미국, 호주, 캐나다, 일본 등 선진국의 자료를 이용한 경제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노령화 문제는 인구학자들이 지적하는 만큼 심각한 문제는 아니며, 사회적 문제는 될지언정 생산성이나 저축율의 감소 등 경제적 면에서의 문제는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노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노인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가족에서의 역할 확대, 그리고 국가차원의 정책구성이 필요하며 이들의 원활한 역할수행을 위해서는 비정부기구(NGO)나 국제기구의 역할을 빼놓을 수 없다. 이들 단체들은 정부와의 긴밀한 협조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압력단체로서, 때로는 로비를 통해 효율적인 역할 수행을 도와 줄 수 있다. 특히 21세기에 들어와 대중 미디어의 역할은 그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현재노인은 물론 장래 노인이 될 젊은 세대에 대한 교육과 더불어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청산하고 노인이 사회에 꼭 필요한 존재라는 긍정적 이미지를 심어 주는데 앞장서도록 해야 한다.

3) 인구분산을 위한 정책의 기본 유형은 이농민의 농촌귀환, 농촌자체의 개발, 산업의 분산, 신도시의 건설, 성장거점도시개발 등 여러 유형이 있다. 우리 나라 정부는 수많은 정책을 입안-실행하여 인구분산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다.

우리 나라에서 가장 큰 수도권 집중의 요인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정치제도의 특성이라고 생각된다. 우리 나라는 건국이래 제2공화국 단기간을 제외하면 강력한 대통령중심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61년 이후 효율적인 정책시행에 의한 경제발전에는 큰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으나 중앙집권적 독재국가이었음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모든 것이 수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때 수도권 집중을 완화시키는 일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막대한 비용과 노력이 요구되며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 된다. 다행히 김영삼 대통령 정권 이후 실시되고 있는 지방자치제와 민주적 발전의 노력은 과거 정권들이 초래했던 유형의 수도

권 인구집중을 어느 정도 완화시키리라 예상된다

4) 유엔개발계획(UNDP)에서 개발한 인간개발지수(HDI)와 성관련개발지수(GDI) 및 성권력지수(GEM) 등을 비교해 보면 한국의 성평등 발전정도는 다른 발전의 지수에 비해 매우 낮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여성의 경우 작업장 조건이 남성에 비해 열악하며 가내 수공업 수준의 노동자와 낮은 수준의 서비스 산업 종사자들은 착취와 괴롭힘에 시달리고 있음은 자주 보고되어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성평등과 공정의 달성은 우리 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되고 있으며 이를 달성하지 못하고 불평등과 불공정이 계속될 경우 선진국의 대우를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 예상된다.

5) 국제이민 특히 노동이민은 이민 집단의 개인적 발전과 그들 가족에게 이익을 줄 수 있다. 일부 이민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대행업자들의 비리와 사기 등이 계속 보고되고 있지만 이를 규제하기는 쉽지 않다. 이들은 대부분 착취당하기 쉬운 집단이며 인권유린 사례도 수없이 많다. 저렴한 노동력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그리고 경제발전을 위해 정부는 이들을 수용하고 있다. 일단 정책적으로 이들을 수용했다면 이들에 대한 보호도 외면할 수 없다. 더구나 국제인구 이동의 양이 증대되고 이들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들의 성공적인 한국사회에의 통합을 위한 시책 마련이 시급하며 동시에 정부간의 의견교환과 계획수립을 위한 국제협약을 유지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6) 정부는 1996년 35년간 시행했던 인구증가 억제정책을 공식적으로 폐기했다. 이제 우리 앞에 놓여진 인구문제는 그 동안의 문제보다 더 해결하기 어렵고 복잡한 것이다. 출산율 저하로 인한 노령화의 문제, 세대간의 갈등문제, 혼인 및 출산에 대한 바람직한 가치관의 확립, 보건복지제도의 선진화를 통한 건강지수의 향상 등이 바로 우리가 개선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다. 또한 우리 나라의 인구증가율이 둔화되고 안정됐다고 해서 세계 전체의 높은 인구증가를 외면할 수는 없다. 우리는 현재 지구촌 시대에 살고 있으며 따로 떨어져 잘 살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적 도미노 현상을 우리는 IMF 사태로 경험했다. 우리가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야 될 과제는 북한을 포함한 세계 각국의 인구동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각국의 인구변화가 우리 나라 경제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이다.

표 <1> 인구수, 연평균증가율, 조출생률, 조사망률, 및
시부 인구비, 1955-2000

연 도	인구수 (000)	증가율 %	조출생률 (per 1,000)	조사망률 (%)	시부인구 (%)
1955	21,526		41	33	24.6
1960	24,989	3.0	45	16	28.0
1966	29,160	2.6	41	14	28.7
1970	30,882	1.9	32	12	41.2
1975	34,707	2.0	30	9	48.4
1980	37,436	1.5	26	8	57.3
1985	40,448	1.5	22	6	65.4
1990	43,411	1.4	15	6	74.4
1995	44,609	0.5	16	5	78.5
2000	46,125	0.7	13	5	79.7

자료:

1. 金民卿(2000), <人口센서스의 理解>, 서울: 글로벌, 부록 참조
2. 통계청(2000),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 잠정 집계 결과>, 2000. 12. 29.

표 <2> 우리 나라의 총출산율 및 성별 평균수명, 1955-2000

연도(기간)	총출산율	출생시 평균 수명		
		남자	여자	전체
1955-60	6.3	46.9	52.5	49.7
1960-65	6.0	48.1	53.5	50.8
1965-70	4.6	50.8	56.5	53.6
1970-75	4.0	55.3	59.7	57.4 (1970)
1975-80	3.0	58.8	64.9	61.8 (1975)
1980-85	2.4	62.6	69.8	66.1 (1980)
1985-90	1.6 (1990)	65.9	72.7	69.2 (1985)
1990-95	1.7 (1995)	68.5	74.8	71.6 (1990)
1995-00	1.4 (1999)	70.9	78.4	(1999)

자료:

1. 권태환, 김두섭 (1990), <인구의 이해>,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231 쪽
2. 통계청, (2000),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 잠정 집계결과>.
3. Kwon, Tai Hwan, et. al., The Population of Korea (The Population and Development Studies Center, Seoul National University, 1975).
4. 권태환, 김태현(1990), <한국인의 생명표>, 서울:서울대학교 출판부, 61-93 쪽

표<3> 우리 나라의 출산순위별 성비, 1981-1999

연도	출산순위			
	전체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
1981	107.2	106.3	106.7	109.2
1985	109.5	106.0	107.8	134.2
1990	116.5	108.5	117.0	192.7
1995	113.2	105.8	111.7	180.2
1996	111.6	105.3	109.8	166.2
1997	108.2	105.1	106.3	135.5
1998	110.1	105.9	108.0	145.6
1999	109.6	105.6	107.6	143.1

자료: 통계청 (2000), <1999년 인구동태통계 결과>.

표 <4> 우리 나라의 노인인구 비율 및 부양지수

연 도	노인인구(60세 이상)			노인인구(65세 이상)		
	수 (000)	비율 (%)	부양지수 (%)	수 (%)	비율 (%)	부양지수 (%)
1960	1,383	5.5	10.1	823	3.3	6.1
1970	1,705	5.4	10.3	1,039	3.3	6.1
1980	2,268	6.2	10.1	1,456	3.8	6.2
1990	3,353	7.8	11.7	2,195	5.1	7.4
1995	4,145	9.2	13.6	2,657	5.9	8.3
2000	5,194	11.0	16.3	3,270	7.1	10.0

자료: 통계청(1999), <인구추계>.

표 <5> 혼인 및 이혼 건수, 조혼인율, 조이혼율, 1990-1999

연도	수 (단위: 천명)		조율 (인구 천명당)	
	혼인	이혼	혼인	이혼
1990	399.3	45.7	9.3	1.1
1991	416.9	49.2	9.6	1.1
1992	419.8	53.5	9.6	1.2
1993	402.6	59.3	9.0	1.3
1994	393.1	65.0	8.7	1.4
1995	398.5	68.3	8.7	1.5
1996	434.9	79.9	9.4	1.7
1997	388.6	91.2	8.4	2.0
1998	375.6	116.7	8.0	2.5
1999	362.7	118.0	7.7	2.5

자료: 통계청 (2000), <1999년 인구동태통계>.

표 <6> 동아시아 4개국의 인구학적 및 성 관련 특성, 1999

특 성	일본	홍콩	한국	중국
인구수(백만)	126.8	6.7	46.4	1264.8
도시인구(%)	78.6	100.0	81.1	31.6
연령집단 (%)				
(0-14세)	14.9	16.8	21.2	25.3
(65세이상)	16.7	10.4	6.8	6.7
총출산율				
(1995-2000)	1.4	1.2	1.5	1.8
순위 (HDI)	9	24	27	87
(GDI)	11	23	29	76
(GEM)	31	N.A.	61	N.A
평균수명				
여성	84.1	82.2	78.4	72.5
남성	77.3	76.7	70.9	68.3
문자해독율 % (15+)				
여성	99+	89.7	96.2	75.5
남성	99+	96.4	99.1	91.2
a) 대남성수입비	0.43	n.a.	0.45	n.a.
b) 여성국회의원수				
(%)	10.8	n.a.	5.9	21.8
c) 여성 상위직	9	22	5	n.a.
종사자 (%)				
d) 여성 전문적	44	38	31	n.a.
기술적 종사자 (%)				

- a) 남성에 대한 여성의 수입 비율 추계.
- b) 국회내의 여성 의석 비율.
- c) 여성의 입법부, 행정부의 상위직 종사자 및 관리직 종사자 비율.
- d) 여성 전문적, 기술적 종사자 비율.

자료: UNDP, Human Development Report, 2001.

참고문헌

- 권태환, 김두섭(1990), <인구의 이해>,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권태환, 김태현(1990), <한국인의 생명표>,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金民卿(2000), <人口센서스의 理解>, 서울: 글로벌.
- 박상태(1999), “인구쟁점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한국인구학>, 제22권 제2호, 5-45.
- 장세훈(1998), “수도권 정비정책의 쟁점과 향후과제,” <발표문요약 집>, 한국사회학회 인구도시연구회 1998년 추계 학술대회, 53-77.
- 통계청(1999), <인구추계>.
- _____ (2000), <1999년 인구동태통계>.
- _____ (2000),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 잠정 집계결과>.
- 韓國保健社會研究院, <人口政策30年>, 1991.
- 洪北江詩文集上, 中國學術名著第六集, 第二十一冊, 臺北, 世界書局 民國七十二年.
- Chen, Pi-Chao, "Over-urbanization, Rustication of Urban Educated Youths, and Politics of Rural Transformation-The Case of China," Comparative Politics, Vol. 4, pp. 361-386, April 1972.
- Cho, Nam-Hoon and Sam-Shik Lee, "Long-Term Population Prospects and the Direction of Population Policies," in Summary Reports (Seoul: Population Association of Korea, 2001), a paper presented to the First Annual Meeting, June, 2001.
- ESCAP, Population Aging and Development, Asian Population Studies Series, No. 140 (New York: United Nations, 1996).
- Glass, David, Population Policies and Movements in Europe (Oxford: Clarendon Press, 1940).
- Gubhaju, Bhakta, K. S. Seetharam, and Jerrold Hugueta, "Demographic Dynamics in ESCAP Region," Asia-Pacific Population Journal, Vol. 6, No. 1 (March 2001), pp. 45-66.
- Harbison, Sarah H. and Warren C. Robinson, "Policy Implications of the Next World Demographic Transition," Studies in Family Planning, Vol. 33, No. 1 (March 2002), pp. 37-48.
- Kwon, Tai Hwan, et. al., The Population of Korea (The Population and

- Development Studies Center, Seoul National University, 1975).
- Ross, John and Thomas Frejka, "Paths to Sub-replacement Fertility: The Empirical Evidence,"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Vol. 27, pp. 213-254.
- Schulz, James H., Allan Borowski, and William H. Crown, Economics of Population Aging (New York: Auburn House, 1991).
- Spengler, Joseph J., France Faces Depopulation (Durham, North Carolina, Duke University Press, 1938).
- Taeuber, Irene B., The Population of Japan (Princeton, N. 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58).
- United Nations, The Determinants and Consequences of Population Trends (New York: United Nations, 1973).
- United Nations Development Plan, Human Development Report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 Replacement Migration, Is It a Solution to Declining and Aging Populations?, 2000.

<요약자료>

인구정책

박 상 태

(서강대학교)

1960년대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 우리 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높은 출산율과 사망률로 인한 높은 인구증가율이었다. 그러나 최근 이런 경향은 역전되어 낮은 출산율과 사망률로 인한 전례 없었던 낮은 인구증가율과 인구구조상의 노령화 문제가 당면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한편 출산력이 대체수준 이하로 저하했다 해도 인구의 구조적 특성과 평균수명 향상의 지연된 영향력으로 인해 인구수는 상당기간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고 있음에도 주목해야 한다.

이제 인류사회는 각 국가 또는 지역별로 그 사회의 발전계획에 부합되는 인구정책이 필요한 시점에 도달했다. 이하 몇 가지 우리가 당면한 정책과제를 제시해 본다.

1) 우리 나라의 경우 인구수와 관련된 기본적인 목표는 연령 및 성 구성의 안정에 두어야 한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출산수준의 대체수준 유지가 필수적이라고 생각된다. 대체수준 이하의 낮은 출산력과 평균수명의 연장은 필연적으로 인구의 감소와 노령화를 수반한다. 과거 인구는 자연환경에 의한 자연적 체크와 가족, 동족, 친족에 의해서 조절되었다. 이 기능을 오늘날에 와서는 정부나 광역행정기구, 또는 지방행정기구가 감당할 수밖에 없다. 현재 세계적으로 저 출산 국가에서 고려하고 있는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정책으로서 다음과 같은 정책의 입안이 논의되고 있다. 첫째, 성장한 자녀가 매년 세금으로 납부한 금액 중 상당 부분을 정부가 직접 65 또는 70세 이상 생존 부모에게 되돌려 주는 방안과 둘째, 자녀를 부양한 후 퇴직한 부모들에게 부양한 자녀수에 비례하여 연금액수를 정해주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셋째, 경제적인 인센티브로서 미흡할 경우 정치적인 인센티브로서 모든 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20세 미만 자녀의 투표권을 부모에게 행사하도록 하는 방안도 지나치게 낮은 수준의 저출산 국가에서 시행될 가능성이 있다.

2) 사망률의 경우 비록 일부 성-연령층(예컨대, 남성 40대)의 사망률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것이 자주 보고되는 바, 이에 대비한 정책은 계속되는 과제이며, 동시에 인류공통의 과제인 건강수명을 포함한 평균수명의 연장은 노령화 과정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한편, 미국, 호주, 캐나다, 일본

등 선진국의 자료를 이용한 경제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노령화 문제는 인구학자들이 지적하는 만큼 심각한 문제는 아니며, 사회적 문제는 될지 언정 생산성이나 저축율의 감소 등 경제적 면에서의 문제는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노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노인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가족에서의 역할 확대, 그리고 국가 차원의 정책구성이 필요하며 이들의 원활한 역할수행을 위해서는 비정부 기구(NGO)나 국제기구의 역할을 빼놓을 수 없다. 이들 단체들은 정부와의 긴밀한 협조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압력단체로서, 때로는 로비를 통해 효율적인 역할 수행을 도와 줄 수 있다. 특히 21세기에 들어와 대중 미디어의 역할은 그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현재노인은 물론 장래 노인이 될 젊은 세대에 대한 교육과 더불어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청산하고 노인이 사회에 꼭 필요한 존재라는 긍정적 이미지를 심어 주는 데 앞장서도록 해야한다.

3) 인구분산을 위한 정책의 기본 유형은 이농민의 농촌귀환, 농촌자체의 개발, 산업의 분산, 신도시의 건설, 성장거점도시개발 등 여러 유형이 있다. 우리 나라 정부는 수많은 정책을 입안-실행하여 인구분산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다.

우리 나라에서 가장 큰 수도권 집중의 요인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정치체도의 특성이라고 생각된다. 우리 나라는 건국 이래 제2공화국 단기간을 제외하면 강력한 대통령중심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61년 이후 효율적인 정책시행에 의한 경제발전에는 큰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으나 중앙집권적 독재국가이었던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모든 것이 수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때 수도권집중을 완화시키는 일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막대한 비용과 노력이 요구되며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 된다. 다행히 김영삼 대통령 정권 이후 실시되고 있는 지방자치제와 민주적 발전의 노력은 과거 정권들이 초래했던 유형의 수도권 인구집중을 어느 정도 완화시키리라 예상된다

4) 유엔개발계획(UNDP)에서 개발한 인간개발지수(HDI)와 성관련개발지수(GDI) 및 성권력지수(GEM) 등을 비교해 보면 한국의 성평등 발전 정도는 다른 발전의 지수에 비해 매우 낮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여성의 경우 작업장 조건이 남성에 비해 열악하며 가내 수공업 수준의 노동자와 낮은 수준의 서비스산업 종사자들은 착취와 괴롭힘에 시달리고 있음은 자주 보고되어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성평등과 공정의 달성은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되고 있으며 이를 달성하지 못하고 불평등과 불공정이 계속될 경우 선진국의 대우를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 예상된다.

5) 국제이민 특히 노동이민은 이민 집단의 개인적 발전과 그들 가족에게 이익을 줄 수 있다. 일부 이민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대행업자들의 비리와 사기 등이 계속 보고되고 있지만 이를 규제하기는 쉽지 않다. 이들은 대부분 착취당하기 쉬운 집단이며 인권유린 사례도 수없이 많다. 저렴한 노동력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그리고 경제발전을 위해 정부는 이들을 수용하고 있다. 일단 정책적으로 이들을 수용했다면 이들에 대한 보호도 외면할 수 없다. 더구나 국제인구이동의 양이 증대되고 이들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들의 성공적인 한국사회에의 통합을 위한 시책 마련이 시급하며 동시에 정부간의 의견교환과 계획수립을 위한 국제협약을 유지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6) 정부는 1996년 35년간 시행했던 인구증가 억제정책을 공식적으로 폐기했다. 이제 우리 앞에 놓여진 인구문제는 그 동안의 문제보다 더 해결하기 어렵고 복잡한 것이다. 출산율 저하로 인한 노령화의 문제, 세대간의 갈등문제, 혼인 및 출산에 대한 바람직한 가치관의 확립, 보건복지제도의 선진화를 통한 건강지수의 향상 등이 바로 우리가 개선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다. 또한 우리 나라의 인구증가율이 둔화되고 안정됐다고 해서 세계 전체의 높은 인구증가를 외면할 수는 없다. 우리는 현재 지구촌 시대에 살고 있으며 따로 떨어져 잘 살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적 도미노 현상을 우리는 IMF 사태로 경험했다. 우리가 끊임 없이 관심을 가져야 될 과제는 북한을 포함한 세계각국의 인구동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각국의 인구변화가 우리 나라 경제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이다.